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김규륜
김성철 김화성
여인곤 이평래
임강택 전병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김규륜
김성철 김화성
여인곤 이평래
임강택 전병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관계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 박종철 [등]저 — 서울: 통일연
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12)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36-1 93340 : ₩10,000

349.1-KDC4

327.5-DDC21

CIP2005002840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3
2. 연구방향	8
II. 연구배경과 분석틀	21
1. 이론적 배경	23
2. 유럽연합의 시사점	40
3. 지역협력의 인프라 지표: 국가 및 지역차원	45
III. 국가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53
1. 한국	55
2. 중국	89
3. 일본	125
4. 러시아	167
5. 몽골	215
6. 북한	255
7. 미국	271

IV. 분야별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287
1. 경제분야	289
2. 안보분야	323
3. 정치분야	371
4. 문화분야	387
V. 동북아협력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419
1. 동북아 정체성	422
2. 경제협력	435
3. 안보협력	452
4. 정치협력	467
5. 문화협력	485
6. 정책방향	501
VI. 요약 및 종합	513
1. 국가별 인프라 실태	516
2. 분야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519
3. 전문가 인식조사 종합평가	523
4. 유럽사례를 통해 본 동북아지역협력의 문제와 과제	525

참고문헌	533
〈부록 I〉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551
〈부록 II〉 전문가 인식조사 응답자 명단	573
〈부록 III〉 국가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지표	581
〈부록 IV〉 분야별 동북아협력 인프라 실태 지표	665
최근 발간자료 안내	689

표 목 차

<표 II-1> 지역협력의 인프라 측정을 위한 주요지표	49
<표 III-1> 한국의 동북아국가들과의 군사교류	62
<표 III-2> 남북 군사회담	66
<표 III-3>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79
<표 III-4>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112
<표 III-5> 일본의 노동력	129
<표 III-6> 1990년대 이후 일본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148
<표 III-7> 미·러의 동북아역내 무기수출(1999~2003)	178
<표 III-8> 동북아지역의 주요 영토분쟁 이슈와 갈등 정도	188
<표 III-9> 러시아 연방하원(국가두마) 의석분포	200
<표 III-10> 1990년대 이후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201
<표 III-11> 인플레이션 증가율	217
<표 III-12> 무역액/수출액·수입	225

<표 III-13> 몽골과 미국의 합동훈련 “Balance Magic”	232
<표 III-14>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259
<표 III-15> 북한의 수출입 총액	260
<표 III-16>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262
<표 III-17> 1990년대 이후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265
<표 IV-1> 역내 국가의 무역의존도	292
<표 IV-2>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의존도	293
<표 IV-3> 국가별 역내 무역의존도	294
<표 IV-4>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296
<표 IV-5> ASEAN+3 정상회의	302
<표 IV-6>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동북아 항만심포지엄 개최 실적	308
<표 IV-7> ARF의 운영구조	328
<표 IV-8>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구조	334
<표 IV-9> 미·러의 핵무기 감축합의	342
<표 IV-10> 동북아 역내에 대한 무기수출 현황(2000~2004)	362

<표 IV-11> 1989~2002 분쟁의 단계별-연도별 추이	363
<표 IV-12> 갈등과 분쟁 현황	364
<표 IV-13> ASEAN+3 정상회의 역대 회의 주요 결과	378
<표 IV-14>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	381
<표 IV-15> 한국과 동북아국가와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	391
<표 IV-16> 한국의 일본 및 중국과의 청소년교류 인원	403
<표 IV-17> 한국의 자매결연 대상국가 현황	404
<표 V-1> 동북아지역의 포함 국가	423
<표 V-2> 동북아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공유 정도	427
<표 V-3>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동질성	430
<표 V-4> 동북아공동체 국가간의 역사적 경험과 동질성에 대한 교차분석	431
<표 V-5>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공동이해관계	433
<표 V-6>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437
<표 V-7>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과 자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441
<표 V-8>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점 분야	442
<표 V-9>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	445

<표 V-10> APEC의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 가능성	448
<표 V-11>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국가	449
<표 V-12>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 평가	454
<표 V-13> 동북아안보공동체의 지역안정 기여도	457
<표 V-14>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국의 중점 분야 ..	459
<표 V-15>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461
<표 V-16>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대한 ARF의 기여도	463
<표 V-17>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의 장애국가	465
<표 V-18> 정부간 대화 진행에 대한 의견	469
<표 V-19> 동북아공동체에서의 갈등 야기 국가	471
<표 V-20> 언급한 국가의 갈등 야기 이유	474
<표 V-21>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와 갈등요인의 교차분석	475
<표 V-22> 향후 동북아공동체의 문제해결 방식	476
<표 V-23> 'ASEAN+3'의 효과에 대한 인식	477
<표 V-24>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가장 노력해야 하는 국가	480
<표 V-25> 동북아공동체에 '갈등유발 국가'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인식	481

<표 V-26> 동북아 문화교류 수준	486
<표 V-27>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489
<표 V-28>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선 교류분야	493
<표 V-29>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도기관	497
<표 V-30> 동북아지역 협력 현황	502
<표 V-31>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	504
<표 V-32> 동북아공동체 형성 가능 시기	507
<표 V-33>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공동체의 관련성	509
<표 V-34> 동북아공동체의 개방성	511
<표 VI-1> 국가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517

그림 목차

<그림 I-1> 지역통합에서 대안적 전략	11
<그림 III-1>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 측정	78
<그림 III-2> 중·러간 해결된 영토 분쟁지역	190
<그림 III-3> 러·일간 북방영토 분쟁지역	194
<그림 III-4>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 비율(1989=100%)	218
<그림 III-5> 대몽골 해외 직접투자 지표	226
<그림 III-6> 각국별 해외 직접투자 비율	226
<그림 III-7> 2004년 몽골의 수출입 구성비율	228
<그림 IV-1> 국제테러의 연도별 추세	349
<그림 V-1> 2003년도 국가별 동북아지역내 무역의존도	439
<그림 VI-1> 국가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519

I

서론

1. 문제제기*

냉전 종식 이래 동북아 질서는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 소련 및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세계구조의 변화와 경제협력증대, 군비경쟁, 영토분쟁 등과 같은 새로운 지역이슈의 등장이 서로 맞물려 동북아지역의 기존 균형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질서는 안정과 불안정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질서변화의 과정에서 냉전시기 안보구조의 특징이었던 양자관계의 기본 틀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며, 또 한반도의 긴장상태와 미·중 및 중·일간의 갈등 잠재력 등 군사안보적으로 냉전의 유산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은 향후 동북아 질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변화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지역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의도는 미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지역내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되는 현실은 지역협력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실제로 동북아는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1990년대에 들어와 역내 교역 및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¹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 이러한 경제적

*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정리를 위해 박소영 석사, 홍순식 석사가 수고하였음.

¹ 강명세,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가능할 것인가?,”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 18~20 참조.

² 세계경제에 있어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에서 1990년 16%였던 것이 2010년에는 27%로 증대할 것이며, 총생산 면에서도 1999년 19%에서 2020년에는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세계에서 차지하는 물동량 비중도 1998년 27.0%에서 2000년 28.1%, 2006년 30.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현석,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추진전략과 과제,” 참여정부시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변영전략 (민주평통, 한국동북아학회, 호남국제정치학회 공동학

역동성을 바탕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내 상호의존은 지역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 및 경제분야의 협력기구 창설에 대한 다양한 구상과 제안이 줄을 잇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실천되기도 한다. 비록 이 현상이 장차 유럽 통합처럼 지역공동체를 향한 발전의 발판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지만,³ 협력의 제도화 요구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기반으로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동북아시아협력의 제도적 발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협력은 문화적 차원의 협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국제정치에서 경제와 안보문제에 대해 국가정체성과 문화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요인을 공유함으로써 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다양성에 토대를 둔 공존의 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역사해석과 문화적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적 가치가 논의되고 사회문화영역에서 인적 교류와 공동행사 등이 증가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상호이해와 동질성 형성이 도모되는 것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초 출범한 한국의 「참여정부」는 외교·안보·통일·경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고, 동북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원대한 구상아래 지역협력의 발전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술회의 발표논문, 2003. 6. 12), p. 65 참조.

³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이한 견해와 관련하여 다음 논문 참조. 홍용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pp. 257~266.

그러나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외교자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과연 지역협력을 어느 정도 촉진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동북아 협력의 전망을 지역 강대국들 사이의 새로운 안보 균형 여부에서 찾는 현실주의자들의 시각을 염두에 두면, 그러한 의문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장기적 국가전략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초석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북아지역협력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될 때, 동북아에서 지역협력의 제도적 발전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협력의 제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전략 내지 정책대안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아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과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와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협력의 여건과 조건을 인프라라고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여건을 국가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 안보협력, 문화협력간의 상관관계를 이론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에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협력이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주의의 이론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특히 경제, 안보, 정치, 문화영역의 의미와 상

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동북아 협력의 다층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준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북아지역협력의 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협력의 인프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지표 개발에는 항상 그렇듯이 두 가지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협력의 선례들에서 경험적인 지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적인 특수성을 염두에 두면, 다른 지역의 경험을 그대로 동북아지역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성의 문제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나름대로 일반화된 설명 틀을 제시하는 지역협력 이론들에 의존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론들에서 제시된 지역협력의 조건들은 인프라 지표를 마련하는 데 훌륭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론에 기대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서로 경쟁하는 이론적 패러다임에 따라 지역협력의 개념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실주의는 지역협력을 세력, 균형, 동맹, 패권 등의 개념에 부수하는 현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화·번영정책’이 구상하고 있는 지역협력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통합의 관점에서 지역협력의 조건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자유주의 계열의 이론들은 ‘평화·번영정책’의 의도에 비교적 가깝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첫째, 지역협력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 논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특히 개념 차이에 따라 지역협력의 목표는 물론이고, 결국 인프라 지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협력의 모델로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

를 토대로 뒷부분에서는 자유주의 이론들이 제시하는 협력의 조건들을 활용하여 인프라 지표의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둘째, 국가별 인프라 및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별 협력 인프라와 지역차원의 분야별 협력인프라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분야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미국의 7개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인식조사를 하고자 한다. 관련국의 전문가에게 동북아정체성, 경제협력, 안보협력, 정치협력, 문화협력, 정책방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동북아협력의 현황에 대한 국가별 인식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이상에서 제기된 이론적 문제, 유럽연합과 동북아협력의 비교, 국가별 차원의 협력인프라 실태, 지역차원의 인프라 실태,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향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협력에 연구의 쟁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동북아협력인프라 실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동북아협력 개념의 정의에 대한 것이다. 동북아협력, 통합, 공동체라는 개념이 명확한 구분없이 혼용되고 있다.⁴ 또한 협력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에 대한 심층연구 없이 상위의 제도화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인 지역통합이나 지역공동체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통합이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통합 또는 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되는 동북아협력의 실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동북아의 지리적 범위와 참여국가의 범위도 쟁점이다. 동북아지역의 범위에 대해 특정 국가의 행정구역까지 자세하게 구분하는 견해와 심리적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의 정체성 인식까지 논의하는 견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동북아지역의 지리적 범위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포함한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범위를 기능적 차원으로 확대할 경우, 미국도 포함된다.

셋째, 유럽통합사례의 적실성 여부이다. 유럽과 동북아는 역사, 문화, 종교, 인종, 민족, 국가형성 및 정치체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유럽통합의 경험을 그대로 동북아에 적용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의 이론적 전제, 통합사례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유럽통합사례의 시사점을 동북아지역통합에 원용하고자 한다.

⁴ 한국동북아지역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3). 이 책에서도 공동체, 통합, 협력이 혼용되고 있다.

넷째, 인프라에 대한 심층연구의 필요성이다. 많은 연구들이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나 비전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형성의 기본토대인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 연구는 각 분야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가능성이 높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 분야별 협력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제분야, 안보분야, 문화분야의 협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총체적 논의를 형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기경제와 안보는 현실적으로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서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각 분야별 개별적 협력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경제, 안보, 문화 영역의 관련성을 조망하고 이들간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에서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의 목적, 범위,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가. 동북아협력의 개념

동북아협력 연구에서 협력, 통합, 공동체의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주권이양의 수준, 제도화 수준, 현상유지와 목적 지향성 사이의 비중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협력과 통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며, 협력과정을 생략한 채 외연이 가장 넓은 공동체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우선 협력의 개념은 통합과 공동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협력은 단순한 거래 및 교류의 양적 증가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동북아지역통합이나 동북아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은 과정을 생략한 채 목적을 제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협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력은 양적 증가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협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은 “행위자들이 정책조정과정을 통해 타국의 실질적 또는 예측된 선호들에 맞춰 타국의 행동을 조정할 때”⁵ 발생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협력은 정책조정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로서 독자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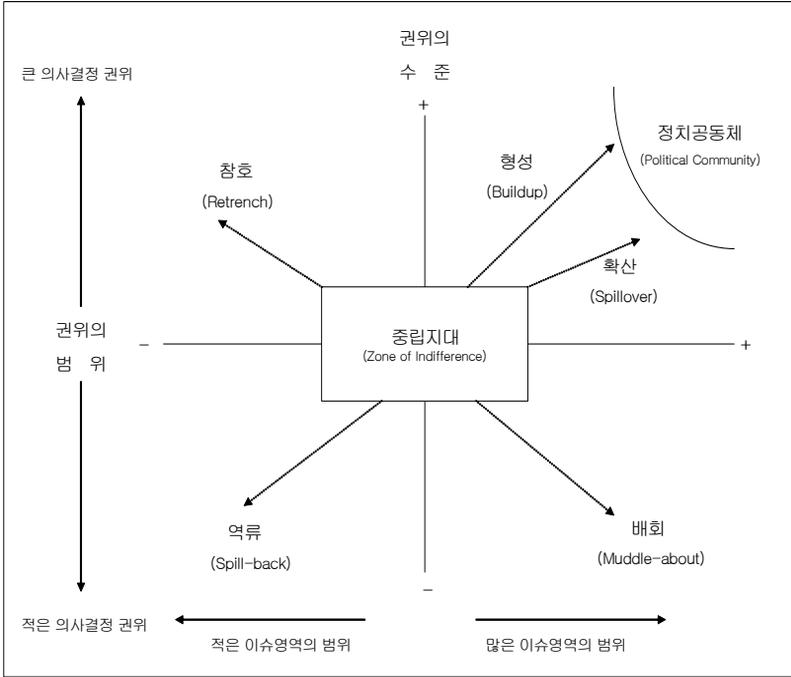
지역통합은 “기존의 민족국가를 넘어 제도(institution)가 사법성을 요구하거나 소유하는 새로운 과정으로 특수한 국내환경에서 정치행위자들은 충성심과 기대, 그리고 정치적 활동에서의 변화를 설득하는 과정”⁶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통합 개념에 의하면, 초국가적인 제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제도는 민족국가의 주권의 일부를 공유하는 틀(frame)로서 활용된다. 또한 “지역통합은 다차원적 합병(merge)의 과정이다. 지역통합현상은 영토, 정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합병”⁷을 포함한다. 유럽통합의 심화과정을 보면, EEC의 출범,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통합동맹 순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는 정치통합을 앞두고 있다. 정치통합이 완성되어야만 기나긴 통합과정을 끝내고 비로소 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다.

⁵ Helen Milner,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World Politics*, Vol. 44, No. 3 (1992), p. 467.

⁶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p. 16.

⁷ Donald J. Puchala,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Region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4, No. 4 (Autumn, 1970), p. 740.

<그림 I-1> 지역통합에서 대안적 전략



위의 그림은 지역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속변수들을 모형화 시켰는데, 권위의 수준과 권위의 범위에 따라 참호, 형성, 확산, 역류, 배회 등 다양한 조합들이 형성될 수 있다.⁸ 정치통합을 목전에 둔 유럽통합은 현재 주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침체와 국가간 경제수준의 양극화, 주권이양의 정도를 놓고 배회하고 있다.

지역공동체는 지역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정치통합이 완성된

⁸ Philippe C. Schmitter, "A Revised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4, No. 4, *Regional Integration: Theory and Research* (Autumn, 1970), p. 845.

단계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동안 제도와 습관(practice)은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로운 변화’의 ‘믿을 수 있는 기대들’을 보장”⁹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식, 정체성, 관습들이 공동체를 이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민족, 종족, 인종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하게 된다.

한편, 동북아협력을 위해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양적 증가가 자동적으로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출입 증가나 역내 국가들의 여행객 증가 등 양적 부분이 협력 여건을 형성하는 측면은 있지만, 물질 및 양적 교류의 증가가 협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양적 증가는 갈등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다. 더욱이 양적 증가는 협력을 이루는 하부인프라의 한가지일 뿐이며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안보, 문화적 영역에서 협력토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동북아협력은 관련 국가간 정책조율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국가들의 협력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추진전력이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얻어야 협력의 진전이 가능하다. 지역협력 자체가 다자적 구도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 이슈에 대해서 다자적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동북아의 범위와 참여국가

동북아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엄격한 지리적 개념에 입각하여 동북아지역의 범위를 개

⁹ Karl Deutsch,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 2.

별 국가의 행정구역까지 고려하여 정의하는 입장이 있다. 이 경우 “협의(狹義)의 동북아에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의 극동지역, 몽골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일본학자와 중국 동북 3성의 학자,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협의의 동북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광의(廣義)의 동북아를 상정하는 개념에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동·서 시베리아, 홍콩, 대만 등이 포함된다.¹⁰ 이와 같은 지리적 구분법은 지도를 놓고 세밀하게 구분한 유형에 속한다.

둘째, 지경학적 차원(geo-economical dimension)에서 지역협력의 범위를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자연지리가 아니라 경제교류·협력이 진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제지리를 의미한다.¹¹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경제 GDP에서 동북아지역의 비중이 1/5를 점유하는 현상이 주목된다.¹²

셋째, 지문화적 차원(geo-cultural dimension)에서 지역협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견해가 있다. 싱가포르의 전 수상 이광요와 말레이시아의 전 수상 마하티르가 한·중·일을 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교를 모태로 한자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문화를 한자 문화권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유교 혹은 도교 공동체로 보든지 그 기저에는 문화적 공통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동아시아를 하나로 엮어낼 수 .

¹⁰ 이창재 외,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9-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p. 21.

¹¹ 양길현,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추진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제2호 (2004), p. 5.

¹² 안충영, “동북아경제통합의 비전과 FTA추진,” 외교, 제69호 (2004), p. 74.

있는 문화적 자원이라는 것이다.¹³

그러나 동아시아국가들의 문화적 동질성은 허상이며 과거 전통과의 단절, 역사의식의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⁴ 또한 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어느 나라들을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복잡해진다. 중국, 일본,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 아시아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광의의 동아시아에는 불교국(베트남, 태국)과 이슬람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시아가 매우 다양한 문화와 종교, 경제적 체제와 정치적 체제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적 가치는 수사학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¹⁵ 아시아는 오직 지역적 단어이며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도 있다.¹⁶ 동북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집단화 된 “순한’ 단일 문명(이나 문화)을 공유한 한 덩어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권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서로 경쟁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¹⁷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문화적 요인을 지역협력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¹³ 김명섭·이동운,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제21호 제2호 (2005), p. 23.

¹⁴ 고병익, “동아시아 나라들의 상호 소원(疏遠)과 통합,”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pp. 23~40.

¹⁵ Xiaorong Li, “Asian Values’ an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ww.puaf.umd.edu/IPPP/li.htm>.

¹⁶ Edward Friedman, “Asia as a fount of Universal human rights,” in Peter Van Ness, eds., *Debating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1999).

¹⁷ 백영서, “중국에 ‘아시아’가 있는가?: 한국의 시각,” 정문길 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p. 71.

넷째 유형은 마음속의 가상 공간에서 형성된 가공적 이미지를 토대로 동북아지역을 설정하는 견해다. 이것은 심상적 지도로서 동북아를 의미하는데, 동질성의 측면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공의 공간인 마음에서 이루어진 개념이고, 영토에 근거한 국민 국가의 출현과 서구 중심적 세계체제에 편입되면서, 지리적 의미에서 동질적인 측면이 있는 한 지역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동북아의 지리적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일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상상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섯째, 상호관계의 관련성과 연결망의 형성 차원에서 지역협력의 범위를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딜릭은 동북아지역의 변화들을 촉발시킨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관계 및 인간 활동에 비추어 이 지역의 범위와 구조(그리고 그 개념화)에 일어난 변화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한 지역이란 지리적으로 구분된 것이 아닌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¹⁹ 그의 주장을 토대로 지리적 개념을 보완하면 특정지역 및 지리는 인간 활동의 산물로서 상호교류 및 이해관계의 반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삶의 지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도에 나타난 위치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교류와 이해관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지리를 의미한다.

지역협력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 상호관련성과 연결망 차원에서 지역협력의 대상을 정의한 견해가 효용성이 크

¹⁸ 이진영, “아이덴티티 정치와 동북아지역 협력,” 한국과 국제정치, 제17권 제1호 (2001), p. 209.

¹⁹ 아리프 딜릭,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 지역 구조 창설에 있어서 현실과 표상의 문제,”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pp. 41~72.

다. 이해관계의 중첩과 상호관계의 연결망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협력의 유형으로 경제협력, 안보협력, 문화협력 등이 망라된다. 바꾸어 말하면 상호관련성과 연결망을 기준으로 한 지역협력의 정의는 지정학적 연계, 지경학적 연계, 지문화적 관련성을 포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의 범위로 일차적으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을 설정한다. 그리고 지리적 근접성은 떨어지지만 동북아국가들과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이 지역의 협력에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역외국가인 미국도 포함시켰다. 엄밀히 말해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지리적 범위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인종이나 문화 또한 이질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측면에서 동북아국가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국은 북한핵문제나 대만문제와 같은 안보이슈 뿐만 아니라 지역질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한·미, 미·일 양자동맹관계는 지역질서의 가장 중심적인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동북아 6개국 수출이 2003년 14.8%에 불과하지만 한국·중국·일본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이유에서 역외국가인 미국을 동북아협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지역협력의 기준을 지리적 구분기 아니라 인간 활동의 상호교류 및 이해관계의 반영으로 설정할 경우, 미국이 동북아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지역협력의 인프라

동북아협력에 관한 연구들은 대체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이 FTA를 형성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득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조정과정을 거쳐 동북아국가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지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특히 경제분야의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한·중·일 삼국의 FTA 형성에 따른 부수 이익에 대해 다양한 예측이 제시된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FTA와 관련된 산업 분야별 잠재력이나 국내 정치경제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협력여건과 토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방안과 정책만 공허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통합의 중점추진분야에 대해서 금융, 운송, 물류를 우선 추진분야로 제시하는 주장도 있고,²¹ 물류중심 육성 전략을 추천하는 견해도 있고,²² 한상(韓商)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²³도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전개되는 이유의 한 가지는 동북아지역통합에 토대가 되는 인프라에 대한 심층연구 없이 조율이 안 된 정책대안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합의 토대가 되는 기초여건, 즉 인프라

²⁰ 이영광,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 한·중·일 FTA의 기대효과와 추진방안,” 공공정책연구, 제14호 (2003), p. 45; 안충영, “동북아경제통합의 비전과 FTA추진,” 외교, p. 73.

²¹ 우정은,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창작과 비평, 제31권 제2호 (2003), p. 27.

²² 김원배, “동북아중심 구상의 재검토,” 창작과 비평, 제31권 제2호 (2003), p. 32.

²³ 양길현,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추진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제2호 (2004), p. 23.

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이(Nye)는 지역통합과정과 외부의 다양한 정치상황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을 정교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나이는 지역협력을 경제, 사회, 정치, 안보의 네 가지 하부유형으로 해체(disaggregating)시켜 지역통합과 각 하부유형의 지표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²⁴ 본 연구는 나이의 분석과 유사하게 하부유형을 구분하여 협력지표를 경제, 안보, 정치, 문화로 구분하였다.

라. 분야별 협력의 연계

동북아시아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논의들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각 분야별로 분리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부터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는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하고 나머지 한가지만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점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다.”²⁵ 특히 동북아시아만큼 경제와 안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은 세계에서 찾기 힘들다.²⁶ 예를 들면, 동북아경제중심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전략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 연계전략이 필요하다.²⁷

²⁴ Joseph S. Nye,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2, No. 4 (1968), pp. 855~880.

²⁵ 안병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아시아공동체인가, 태평양공동체인가,” *사상* (1996, 여름호), p. 133.

²⁶ Admiral Charles R. Larson, “Cooperative Engagement and Economic Security in Asia” (Press Office USIS, US Embassy, Korea, Backgrounder March 19, 1993), p. 1. (재인용); 안석교, “동북아시아협력의 필요성과 접근방식,” 세종연구소(編),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과 한국* (1994), p. 206.

동북아협력은 정치, 경제, 안보, 문화의 각 영역이 연결된 총체적 산물이다. 특히 경제와 안보를 매개할 수 있는 변수를 찾아야 한다. 경제와 안보를 연계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정치와 사회문화 영역이다. 정치영역에서 정부나 비정부단체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 및 회담을 통해 타결된 원리, 원칙, 규칙, 규범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경제와 안보의 연계방안에 대해 비공식적인 정부간 협의와 비정부단체의 상호교류를 통해 증진된 공동이해와 공동협력이 중요하다. 동북아지역의 경제와 안보협력이 정치적 결정이 배제된 채 자동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없다. 또한 정치, 경제, 안보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영역의 촉진제가 필요하다. 경제와 안보를 연계할 수 있는 매개변수인 정치와 문화분야의 협력을 국가 차원과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종합적 틀이 필요하다.

²⁷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서울: 아르케, 2004), p. 136.

II

연구배경과 분석틀

1. 이론적 배경

가. 지역협력의 개념과 이론적 접근의 수준

지역협력의 개념은 명쾌하게 규정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경제적 상호의존에 따른 지역화, 지역 정체성 내지 공유의식, 정부간 협정 및 레짐 형성을 통한 지역국가간 협력, 국가주도의 지역통합, 지역응집성 등의 의미가 포괄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한 의미로 한정되기도 한다.²⁸ 이론적 맥락에서 보면, 그러한 의미들은 국제정치이론의 각 패러다임에 내재된 핵심적 세계관을 각각 반영하고 있다.

지역협력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접근은 국제정치학의 주류이론인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주도되었다. 양 이론은 특징상 각각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어느 한 분야를 설명하는데 강점을 보이며, 서로 경쟁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강화, 국제레짐 및 제도의 확산, 그리고 유럽통합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출현 등으로 자유주의 이론들이 대체로 지역협력을 설명하는 데 더욱 강점을 가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경제이슈와는 상이한 성격을 갖는 안보이슈에 있어서 지역협력의 문제는 자유주의 이론으로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간과할 수

²⁸ 여기서 지역협력은 지역주의(regionalism)와 대등소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허펠이 말하는 지역주의의 다의성이 지역협력에도 적용될 수 있다. Andrew Hurrell,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by Louise Fawcett & Andrew Hurrell,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Oxford Univ. Press, 1995), pp. 39~45 참조.

없다. 이러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양 이론은 합리주의 이론으로서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인간행위와 상호작용이 개입되는 물질세계의 형성 방법은 물질세계에 대한 규범 및 인식론적 해석에 달려있다”²⁹고 보는 구성주의가 대두된 이래 지역협력에 대한 이론은 더욱 풍부해졌다. 구성주의는 상호주관적 지식, 정체성, 규범, 문화 등 사회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합리주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다른 부분을 이해·해석하려 하는 한편,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물질과 이념이 모두 주목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었다.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구성주의는 사회적·문화적 지역응집성에 주목하며, 이는 도이취(K. Deutsch)나 하스(E. Haas)와 같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이론의 전통을 새롭게 이해·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³⁰ 나아가 구성주의는 지역 개념의 확장에 기여했다.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현실이 영토적·공간적 지역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능적인 지역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탈냉전 및 세계화 시대에 지역협력은 공간적 지역을 넘어 기능적 지역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³¹ 예를 들면, 공간적으로 동북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²⁹ Emanuel Adler,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3 (1997), p. 322 참조.

³⁰ Emanuel Adler,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 Reg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6, No. 2 (1997) 참조.

³¹ Raimo Väyrynen, “Regionalism: Old and New,” *International Studies*

미국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능적 지역 개념 때문이다.

지역협력에 대한 상이한 이해는 이론적 접근의 상이한 수준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허렐(A. Hurrell)은 지역주의에 관한 이론들을 크게 세 수준, 즉 세계수준에서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체계이론, 지역주의와 상호의존의 밀접한 연결에 주목하는 지역수준의 이론, 그리고 국내적 관점에서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국내적 수준의 이론으로 구분하고 있다.³² 체계이론에는 대체로 세력균형, 동맹, 패권 등의 개념을 내세우는 현실주의적 접근과 세계체제와 지역주의의 상관성을 밝히는 구조적 상호의존과 세계화 이론이 속한다. 이들 접근은 대체로 체계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이익형성은 물론이고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이에 비해 지역수준의 이론에는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통합의 과정에 대한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이론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이론은 행위자의 협력 과정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지나, 특히 세계수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국내적 수준의 접근은 행위자 내부의 조건과 선호형성의 관점에서 지역협력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약점을 갖는다.

이상과 같이 세 수준의 이론들에 내재된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면, 지역협력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수준의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물론 지역

Review. No. 5 (2003), pp. 26~28 참조.

³² Andrew Hurrell, "Regionalism in Theoretical Perspective," pp. 47~70 참조.

협력의 대상 이슈와 목표설정에 따라 수준별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각 이론의 적실성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협력의 대상 이슈와 목표설정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각 수준에서 적절한 인프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동북아 협력의 주요 이슈와 목표 설정

지역협력의 대상 이슈는 매우 광범위하며, 산업화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제와 안보이슈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또 협력의 성과가 계량적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회문화 및 인적 교류, 환경협력 등의 이슈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범경제 및 안보이슈와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제와 안보이슈를 논의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동북아지역에는 어떤 다른 이슈보다 경제협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국가이외 다양한 행위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각국 정부의 통제력이 점점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제 정부의 권능은 상호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경제공동체형성과 같은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서만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동북아 협력이 강조되는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안보와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증진의 필요성이 함축되어 있다. 특히 훨씬 손쉽고 가능성이 높아 보

이는 경제협력의 제도적 발전을 발판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고시키는 가운데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려는 기능주의적 구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협력에 대해 두 가지 상이한 접근태도가 존재한다.³³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가에 따라 인프라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태도는 국가중심적 접근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을 국가의 절대적 이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지역 규범과 세계(global) 규범 사이의 구분이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며, 중요한 것은 국가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협력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범위설정이 필요없는 일반적인 국제협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태도는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다른 국가나 지역의 접촉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협력을 이해한다. 이 경우에는 지역외부로부터의 영향과 이에 대한 지역국가들의 공동대응 양식(제도화)이 더욱 중요시된다.

두 가지 이론적 접근은 현실세계에서 온전히 분리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진전될수록 첫 번째의 이론적 설명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필요성이든 지역외부로부터의 영향이든 제도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비록 자동적이지는 않더라도,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은 그만큼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증대될 국제제도의 자율성이 국가의 결정력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협력 인프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첫 번째 이론적 접근에 근거하여 국내적 수준에서만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³³ Raimo Väyrynen, "Regionalism: Old and New," p. 36 참조.

지역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마땅히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제도화 수준을 측정하려면, 방법론적으로 우선 최종적인 제도화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협력의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전철을 밟아나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표가 동북아의 현실에서 너무 이상적이고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EC)와 같은 유럽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공동체를 포괄적인 의미의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목표설정의 어려움은 안보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에서 제시된 지역안보협력의 주요 모델들을 정리해보면, 통합(integration),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강대국간 협조(concert of great powers), 세력정치(power politics)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어떤 모델의 지역안보협력이 형성될지는 지역내의 역사적 경험, 지역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이고 지역 밖에서 오는 위협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또 모델에 따라 협력의 성격과 밀도 역시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각 모델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에 제도적 형식을 갖춘 안보협력의 경험이 있는 경우, 다음에는 더욱 밀도가 높은 안보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³⁴ 이 모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통합과 안보공동체의 형성은 지역안보질서의 안정 및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내 전략인

³⁴ David A. Lake & P.M. Morgan, eds.,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State Colleg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p. 16 참조.

데 반해 강대국 협조, 세력균형 및 패권 등은 거의 예외없이 지역외부의 세력이 개입되는 경향을 보인다.³⁵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프라 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동북아의 안보협력으로서 어떠한 모델을 목표로 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답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 변화의 소용돌이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설정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론적 시각과 관련하여 너무 이상주의적인 것도 문제지만, 너무 현실주의의 시각에만 집착하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안보협력이 평화의 형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모든 행위자들의 신뢰와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자세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면, 위의 모델들 가운데 냉전시기 비록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불안의 근원이었던 세력균형은 탈냉전과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동북아지역안보협력의 목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목표는 통합이지만, 현 상황에서 너무나 멀리 있는 목표로서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 경제협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 통합 자체보다 통합을 향한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이 맥락에서 도이취(K. Deutsch)가 말하는 ‘다원적 안보공동체’는 현 실정에서는 아직 먼 목표이긴 하나,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 안보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³⁶ 이에 비해 집단안보는

³⁵ Raimo Väyrynen, “Regionalism: Old and New,” p. 35 참조.

³⁶ 도이취의 ‘안보공동체’는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평화적 변화와 경제적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³⁷ 협력의 증진이 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목표가 되기에는 미진하다. 강대국간 협조(concert)는 동북아지역에 이미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모델은 지역세력들 간의 잠재적 갈등이 있는 곳에서 질서안정을 위해 선택되곤 한다. 특히 안보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경제적 상호이익의 증대가 어려울 경우, 그러한 협조 모델이 선호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공유이데올로기의 부재로 인해 온전한 의미의 협조(concert)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³⁸ 만약 동북아의 현 상황에서 이 모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거나 해도 지역안보질서의 안정에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러한 협력방식이 중·장기적 목표로 바람직

번영에 대한 공동의 기대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 공동체”라고 요약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EU, NATO, 미국과 캐나다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이익과 이념을 동시에 공유하는 동맹체제와 유사성을 가지기도 한다. Emanuel Adler,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p. 250 참조.

³⁷ 집단안보의 경우, ‘연쇄적 패거리 짓기’(chain-ganging)으로 동맹국의 갈등에 끌려들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하여금 패권국으로 등장하려는 국가를 견제토록 하는 ‘책임전가’(buck-passing)의 현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omas J. Christensen &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1990), pp. 137~168 참조.

³⁸ 19세기 유럽에서 협조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모겐소는 공동의 가치와 문화기반 위에 형성되었던 지적 동질성과 도덕적 합의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H.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5th Edition) (N.Y.: Alfred A. Knopf, 1973), pp. 202~221; Susan L. Shirk, “Asia-Pacific Regional Security: Balance of Power or Concert of Power?,” David A. Lake & P.M. Morgan, eds., *Regional Orders*; M. Alagappa, “Asian Practice of Security: Key Features and Explanations,” M. Alagappa, ed.,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8), p. 643 참조.

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어떤 안보협력모델이 목표로 설정되면, 이것의 실현과정에는 전략적 행위를 통한 구조변화가 필요하며, 또 구조변화가 전략적 행위를 촉진하는 방식의 제도 변화, 그리고 양자의 지속적 상호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안보협력에 앞서 있는 지역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의 경험은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 협력이 상호 독립 내지 종속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저위정치’(low politics)인 경제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그 결과가 ‘고위정치’(high politics)인 안보협력으로 파급(spill-over)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믿음에는 자동적인 파급의 보장이 전제되지만, 현실에는 항상 파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환원(spill-back-reduction)작용도 수시로 발생한다.

지역경제협력과 지역안보협력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양 이슈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이슈 자체의 성격 측면에서 그러하다. 안보는 한번의 협력실패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경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따라서 경제협력의 경우, 반복을 통한 학습의 결과로서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지만, 안보협력의 경우에는 반복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학습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단, 신뢰가 구축되어 있거나 협력의 이탈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군사기술적 능력이 전제된다면,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가능하다.³⁹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위자의 성격도 차이가 있다. 지

역안보협력의 행위자는 주로 국가인 데 반해, 지역경제협력의 경우에는 기업(국내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중심적 행위자로 급부상한다. 특히 자유무역이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은 현 세계경제 체제에서 지역경제협력을 세계화의 다양한 압력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해할 경우에는 그 현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지역안보협력에서는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반해, 지역경제협력에서는 사업가 및 경제지도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게다가 지역안보협력은 대체로 물리적 경계(영토)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데 반해, 지역경제협력은 물리적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점차 기능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특히 국제체계의 상호작용 능력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범위는 점차 공간적 기준에서 기능적 기준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보인다.⁴⁰

이러한 지역안보협력과 지역경제협력의 차이 탓에 양자의 상호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이하며, 각 시각에 따라 인프라 지표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익계산에 초점을 맞추는 합리주의 이론에 따르면, 주로 물질적 이익 추구과정의 갈등과 분배의 문제가 주요 지표를 형성할 것이다. 이에 비해 이익계산의 이면에 신뢰 및 집단정체성의 변화가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주목하는 구성주의에 따르면, 이념, 가치, 규범 등의 문화적 지표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이익, 경제이익, 신뢰 및 집단정체성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

³⁹ Charles Lips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Vol. 37 (Oct. 1984), pp. 14~16 참조.

⁴⁰ *Ibid.*, p. 27 참조.

서 언급했듯이 지역공동체를 동북아 협력의 목표로 삼을 경우에 그러한 태도는 더욱 더 필요하다.

다. 지역공동체 구축에 관한 기존 이론의 검토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북아 협력의 인프라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협력에 관한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협력의 조건 및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주의보다는 대체로 자유주의 계열의 통합이론과 거래주의 이론이 밀도 높은 협력을 위한 조건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통합이론군(群)에 속하는 대다수 이론의 핵심 내용은 실제로 어떠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보다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건을 규명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경우, 통합이론가들은 초국가 공동체(supranational community)가 반드시 갈등을 해소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요 통합이론들을 중심으로 협력의 조건들을 찾아볼 것이다.

(1) 연방주의

연방주의 통합이론에 따르면,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능주의적 통합은 개인주의와 이기심 탓에 성취되기 힘들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목표 및 가치에 대한 대중들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또 때로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지도자의 정치역량이 필요하다. 이는 곧 엘리트들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의미한다.⁴¹ 국가간 통합의 경우, 각국 정치

엘리트는 가능한 짧은 시간내 공동체에 적합한 새로운 헌법을 창출하고 여기에 새로운 중앙정치적 권능을 부여할 때 비로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 중앙정치의 권능을 갖는 새로운 헌법은 반대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통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⁴² 이 맥락에서 보면, 연방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지역협력의 주요 조건은 정치적 리더십의 능력과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신)기능주의

기능주의의 기본구상은 고도산업사회에서 영토를 넘어 복잡하게 서로 얽힌 사회·경제적 기능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인간의 자유적·합리주의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기능주의의 태두인 미트라니(D. Mitrany)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국민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간 기술적 차원의 협력 내지 상호의존관계는 공동의 이익을 유발시키고, 비정치적인 기술적 차원의 공동이익은 파급효과를 야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⁴³

그러나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국내정치의 작동원리를 무시함으로써 파급효과의 자동적 생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비

⁴¹ Carl J. Friedrich, *Europa-Nation im Werden* (Bonn: Europa Union Verlag, 1972), p. 27 참조.

⁴² Ernst-Otto Czempiel, *Friedensstrategien: Systemwandel durch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Demokratisierung und Wirtschaft* (Paderborn: Schöningh Verlag, 1986), pp. 66~67 참조.

⁴³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 1943), p. 38 참조.

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스(E. Haas)는 신기능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하스는 ‘저위정치’에 초점을 맞추었던 미트라니와 달리, 점차 경제와 정치의 상호의존이 증대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정치의 역할에도 일정부분 비중을 할애함으로써 신기능주의의 장을 열었다. 신기능주의의 특징은 통합은 단순히 사회경제적 이익에 의해서라기보다 실제로는 통합을 찬성하는 사회적 ‘합숙과정’에 의해 추동된다는 것이다. 즉 파급을 통한 ‘점진적 정치화 모델’이 실제로 통합에 기여하기보다 정치적인 국제제도가 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사실 하스에게 있어서 통합은 정치공동체 형성을 의미했다.⁴⁴ 다원주의적·탈이데올로기적 사회에서는 어떤 이익집단에 의해 표방된 개별적 효용극대화 목표가 달성되려면, 초국가적 권능을 가진 중앙기구가 필요하며, 여기로 사람들의 정치적 충성이 이전됨으로서 정치공동체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공동체의 성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그는 능동적인 이익집단의 존재와 사회의 다원주의적 구조, 그리고 엘리트의 집단적 기대와 정책결정의 관료화 등에 있어서 국가상호간에 유사성, 즉 낮은 수준의 거래비용을 들고 있다.⁴⁵

그러나 하스의 신기능주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를 간과했다. 첫째, 너무나 많은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통합과 이익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또한 외부행위자의 영향력은 통합을 정체

⁴⁴ Erne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p. 5

⁴⁵ *Ibid.*, pp. 9~10; Erne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5, No. 4 (1967), p. 32 참조.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모든 정치의 분야에서 엄청난 복잡성과 교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스가 생각한 것처럼 통합이 단순하게 진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초기 유럽통합과정을 대표적으로 설명해왔던 신기능주의는 1970년대 중반 쇠퇴했으며, 민족국가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는 ‘정부간 협력’ 접근이 신기능주의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3) 거래주의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도이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신)기능주의 이론보다 지역협력 문제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보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두 가지 형태의 안보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융합된 안보공동체’(amalgamated security community)와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munity)가 그것이다. 전자는 미국의 예에서 찾을 수 있듯이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모여 하나의 확대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이며, 후자는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평화적 변화에 대한 공동의 기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는 각 구성원이 공동의 제도와 상호간 상응성(responsiveness)에서 연원하는 핵심적 가치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을 때 더욱 발전할 수 있다.⁴⁶ 도이취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자이다.

도이취의 안보공동체는 단순히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제도의 형성보다 근본적으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개념이다. 그에게 있어서 ‘안보공동체’란 통합된 국민들

⁴⁶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p. 5 참조.

의 집단이며, ‘통합’이란 주어진 영토 내에서 평화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확인시킬 수 있는 ‘공동체 의식’(a sense of community)과 제도 및 실천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⁴⁷ 여기서 도이취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간주하는 요소는 공동체 의식, 즉 ‘우리라는 감정’이다. 그는 무역, 이민, 관광, 문화 및 교육교류 등의 상호거래와 의사소통 시설의 확산을 통해 정치엘리트 및 대중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주입되고 사회적 유대가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⁴⁸ 이처럼 안보공동체의 시작은 미천할 수 있지만, 시작단계에서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서로 보완적이기만 하다면, 공동체 의식 형성에 필요한 문화적 친근성의 발전과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원적 안보공동체의 형성과정은 첫째로 심리학적 학습과정의 결과로서 국경을 넘나드는 연대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이 국제제도들 통해 더욱 잘 충족되고, 둘째로 이러한 국제제도들이 환류과정을 통해 축적되면서 기능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서 그 제도에 대한 충성심이 발생하고, 충성심은 다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의 일차적 행위자로서 권력엘리트 내부의 아웃사이드를 들고 있다. 즉 권력자로서 별로 잃을 것이 없으며, 동시에 통합정책에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력을 소유한 자가 핵심적 행위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의 핵심 분야로는 더욱 크고, 강하며, 정치적·행정적·경제적·교육적으로 진일보한 정치적 단위들이라고 말한다. 대개의 경우 통합과정은 이러한 힘의 중심부 근처에

⁴⁷ *Ibid.*

⁴⁸ *Ibid.*, p. 36.

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합과정이 진일보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일반 주민이 동참하게 된다.⁴⁹

도이취는 이러한 안보공동체의 형성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①의사소통의 증대, ②상호거래의 양적 확대, ③공동의 규범적 틀과 행위양식을 창출하는 학습과 사회화 과정, ④약소국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권력의 핵심’, ⑤안보공동체의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선행 제도들, ⑥정책 결정능력을 가진 엘리트들의 지도력, ⑦통합된 지역에서 높은 수준뿐만 아니라 비교적 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성장, ⑧엘리트 층원의 개방성을 들고있다.⁵⁰

(4) 사회학적 통합이론

에치오니(A. Etzioni)는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 네 가지 통합구도를 제시하고 있다.⁵¹ 첫째, 행위자로서 엘리트와 이익집단이다. 둘째, 조건으로서 통합체 내부 및 외부의 조건이다. 셋째, 통합과정으로서 수단과 결과이다. 넷째, 과정의 발전단계로서 ①통합이전(preunification) 상태, ②강화된 상호의존, ③이륙(take-off), ④통합과정(unification process), ⑤최종통합 상태의 다섯 단계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통합과정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사회관계의 형태 및 기능이 별개로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치적·강제적 형태로서 무력의 원천과 권위적인 결정과정에 관한 통합단위

⁴⁹ *Ibid.*, p. 38.

⁵⁰ *Ibid.*, p. 47 참조.

⁵¹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5); Jürgen Bellers, *Der schöne Schein der EU* (Siegen: Scylda Verlag, 2004), p. 173에서 재인용.

를 통제하는 형식을 띠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효율적 형태로서 통합에서 공동 및 경제적 이득의 형식을 띠는 것이다. 셋째, 규범적·동일적 형태로서 통합구도에 대한 시민의 동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그는 역동적이고 안정적이며 통합된 사회에서 통제와 동의의 정도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통합의 효율성 내지 성공과 관련하여 에치오니는 엘리트의 역할에 주목한다. 첫째, 엘리트 수가 많은 통합체보다 제한된 엘리트에게 결정 및 통제력이 주어진 통합체가 강력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둘째, 엘리트들이 공동체를 위한 충성심과 경제이익을 더욱 강하게 동원할 수 있을수록 통합의 성공도는 높아진다. 셋째, 통합체내 강요의 수준이 높을수록 통합은 불안정하다. 넷째, 엘리트와 주민간의 의사소통 채널이 효율적일수록, 그리고 엘리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통합의 성공도는 높아진다.

(5) 통합에 대한 체계이론적 접근

나이(J. Nye)는 통합과정의 메카니즘으로 크게 7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전반부의 3가지는 핵심적이고, 후반부의 4가지는 부수적 조건이다.⁵² ①의도적으로 구축된 연계나 연대형성, 즉 관련된 문제들을 기술적인 단순성이 아니라 유사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생각에 기반을 두고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교화된 파급’(cultivated spill-over), ②엘리트들의 통합과 관련한 사회화, ③통합영역을 포괄하는 비정부집단의 형성, ④통합과정에 참여하는 단위들의 대칭성 또는 경제적 균질성, ⑤통합을 통해 이룩한

⁵² Joseph Nye, *Peace in Parts*, 2nd edition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Jürgen Bellers, *Der schöne Schein der EU*, p. 174에서 재인용.

이익배분의 인식적 평등성, ⑥통합을 지향하게 만드는 외적 강요에 대한 인식, ⑦낮은 통합 비용 또는 비용을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다.

2. 유럽연합의 시사점

유럽통합과정은 유럽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경제적 세계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발전해온 것으로서 유럽지역 환경과 매우 상이한 동북아시아 환경에 그대로 이식될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부분적으로 이식될 수 있다하더라도 실질적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유럽통합의 성립 및 발전 동력을 이해함으로써 중·장기적 맥락에서 동북아시아공동체건설을 위한 창조적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유럽통합의 동력을 기준으로 동북아의 현황을 진단해봄으로써 동북아공동체발전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데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럽통합은 애초 통합의 최종 목표를 미리 설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통합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물론 통합의 ‘창시자’들 중에는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 of Europe)에 대한 비전을 가진 자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국가연합의 수준에서 유럽통합을 이해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실 유럽통합의 성립에서부터 지금의 유럽연합(EU)으로 발전하기까지 전 과정은 적지 않은 굴곡으로 점철되어 있다. 여러 난관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과정

이 성립하고 발전하게 된 동력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찾을 수 있다.

가. 국제환경 요인

기본적으로 유럽통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이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냉전적 블록대결이라는 보다 직접적·현실적인 요인이 존재했다.⁵³ 사실 유럽통합에 대한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특히 1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제안되었으나,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다. 1차 세계대전과 달리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냉전으로 인한 동서로 분단되고 미·소 중심의 블록대결 구도에 빠져들게 되면서 서유럽국가들은 소련에 대항하여 동맹의 결속력을 갖추어야 할 상황적 강요에 직면하여 통합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유럽통합의 발전과정 역시 국제환경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1970년대 초반 정치통합이 시도되고, 유럽공동체(EC)가 확대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긴장완화와 동·서독관계 정상화로 인한 독일의 재발흥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⁵⁴ 1980년대 중반 단일유럽의정서(SEA)를 바탕으로 유럽공동체가 새로운 통합의 모멘텀을 추구한 것은 개별국가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의 한계와 세계경제의 지역별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이었다.⁵⁵ 또한 마스트

⁵³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서울: 푸른길, 1999), pp. 35~38 참조.

⁵⁴ 위의 책, p. 66.

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연합이 탄생하고 통합의 심화와 확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냉전종식으로 인한 유럽지역의 안보 및 경제적 상황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 독·불의 화해 및 상호이익추구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은 독일통일전쟁(1866년~1871년), 제1차 세계대전(1914년~1919년)과 제2차 세계대전(1939년~1945년)의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쟁을 경험했으며, 그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가 그 모든 전쟁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따라서 유럽의 지식인과 정치가들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화해·협력하는 유럽통합구도가 실현될 경우, 유럽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희망과는 별개로 프랑스의 정치인들은 독일이 다시금 패권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독일을 통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패전국인 서독은 당시 전후 복구를 위한 경제부흥이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탈나찌화, 국내적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소련의 팽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세계로의 통합이 절실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⁵⁶ 이 맥락에서 당시 석탄과

⁵⁵ 이미 198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유럽동맹경화증’이란 말이 널리 유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⁵⁶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pp. 41~43; Clive Archer & Fiona Buther, *The European Union: Structure & Process*, 2nd Edition (London: Pinter, 1996), p. 21 참조.

철강은 중화학공업의 핵심기반으로서 군수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던 것을 감안하면,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설립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독일의 재발흥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와, 경제력의 증대 및 정치적 위상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주변국가들에게 과거 나찌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독일의 노력은 이후에도 유럽통합을 발전시키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초반 정치통합의 시작이라든지, 1990년대 초반 유럽연합으로의 발전 등은 독일의 위상제고와 이에 대한 프랑스의 견제의지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내재해 있다.⁵⁷ 이 맥락에서 따라서 독일과 프랑스를 유럽통합의 ‘기관차’로 일컫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 시장경제체제의 확대 및 발전

유럽통합 초기의 경제통합은 안보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으나,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논리가 통합의 주요 동력으로 등장했다. 특히 1980년대 단일유럽의정서가 채택된 배경에는 세계시장의 변화 속에서 EC국가와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및 축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공동시장 통합이 급격하게 진전된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⁵⁸ 첫

⁵⁷ 이와 관련하여 당시 유럽에서는 ‘유럽화된 독일’ 또는 ‘독일화된 유럽’이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으며, 독일은 당연히 ‘유럽화된 독일’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Daniel Hamilton, “A More European Germany, A More Germa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5, No. 1 (Summer 1991) 참조.

째, 1970년대 초반 세계경제의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1970년대 유럽 각국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민주당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던 ‘민족적 케인즈주의적 성장·축적모델’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라 대안적 모델의 창출이 요구되었다. 둘째, 그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후반 각국에서 집권하기 시작한 우파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복지국가의 위기’를 강조하고 사회보장의 약화를 비롯하여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셋째, 세계 시장이 미국·일본·유럽에 의해 3분된 상황에서 서유럽국가들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소련의 개혁정책이 시작된 이후, 군사적 대결보다 경제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1980년대 중반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와 더불어 자본과 기술의 결집이 한층 요구되었다.

라. 체제 및 문화의 동질성

유럽통합의 동력은 단순히 물질적 이익 측면에서만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체제와 문화적 동질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통합의 길을 걷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앞 절의 이론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신기능주의의 대가인 하스(E. Haas)는 유럽통합과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통합과정에서 체제 및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스는 통합과정을 “궁극적으로 정치공동체를 상정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정치공동

⁵⁸ 구춘권, “유럽연합의 화폐통합에 대한 네오그람시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2), p. 301; Peter Cocks, “Toward a Marxist Theory of European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0) 참조.

체란 특정 단체들과 개인들이 어떤 다른 권위에 대해서보다 중앙 정치제도에 더욱 충성을 보이는 어떤 상태”라고 규정하며, 정치 공동체의 성립과 관련하여 두가지 핵심적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족국가들 사이에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를 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앙제도의 존재로서, 이는 민족국가의 정부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하며, 또 중립적인 중재를 할 수 있는 권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민족국가의 정부 의지로서 정부의 통합의지는 국내적으로 다원적 사회구조, 엘리트의 집단적 기대, 그리고 정책결정의 관료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호간에 유사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제고될 수 있는 것인 바, 통합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동질화와 공적·정치적 엘리트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서유럽국가들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기독교적 문화전통 등 체제 및 문화적 동질성이 앞에서 언급한 외적 동력들과 맞물림으로써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통합을 진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⁵⁹

3. 지역협력의 인프라 지표: 국가 및 지역차원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지역협력 또는 지역주의는 매우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역협력의 인프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정하기란 매우 힘들다. 그 기준은 어떤 특정한 지역협력을

⁵⁹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진시원, “유럽의 정체성: 내외적 동인과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계동 외 편, 유럽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 (서울: 오름, 2003), pp. 43~102 참조.

전제로 할 경우에 비로소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앞 장들에서 다루었던 이론적 논의는 바로 어떠한 지역협력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와 또 특정 목표를 설정했을 때, 지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협력의 조건들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실세계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상형(ideal type)을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기 어렵다. 다만 자유주의 계열 이론들에 내포된 여러 관심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지역공동체’는 목표의 포괄적인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다원적 안보공동체’는 하나의 적절한 이상형으로 부족함이 없다. “국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평화적 변화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공동의 기대를 토대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 공동체”로 규정될 수 있는 ‘다원적 안보공동체’는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유럽통합의 사례처럼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목표 설정은 지역간 차이나 현실적 괴리 탓에 오히려 목표의식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실 유럽도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통합을 목표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북아시아협력이 언젠가는 유럽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부담스러운 통합보다 지역공동체, 보다 구체적으로 ‘다원적 안보공동체’를 목표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원적 안보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삼을 경우, 인프라 측정을 위한 지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좀 더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지표를 개발하려는 의도에서 이론적 논의로부터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첫째, 어느 수준에서 지역협력의 인프라를 찾을 것인가와 관련 된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 수준과 국내 수준으로 구분했다. 지역 수준은 국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부분적으로 세계(체계) 수준과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수준은 지역 협력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 내부에 관한 것이다.

둘째, 인프라의 범주로서 에치오니의 사회학적 통합이론에서 언급된 통합과정의 세 가지 범주를 확장한 것이다. 즉 에치오니의 정치적 과정을 정치와 (군사)안보로 세분하여 경제, 안보, 정치, 문화의 네 범주로 구분했다. 이러한 양 기준을 서로 관계지우면, 지역-경제, 국가-경제, 지역-안보, 국가-안보, 지역-정치, 국가-정치, 지역-문화, 국가-문화와 같은 여덟 부분의 지표군(群)이 나타난다. 각 군(群)마다 지표로서의 기초적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지역국가 간 경제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무역, 투자, 노동, 교통·통신 등의 분야가 주목의 대상이다. 나아가 지역국가 간 경제구조의 균질성, 그리고 세계시장에 대한 공동대응 정도는 향후 지역협력의 확대·심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인프라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경제’ :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측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역내 경제활동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질적·양적 참여 수준, 정부의 정책지원 및 제도적 노력, 그리고 국가경제발전과 역내 경제교류·협력간의 상관성 등이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안보’ : 무엇보다 역내 군사적 긴장 또는 협력의 수준이

측정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내 군비경쟁 유무 및 정도, 군사교류 수준, 안보 갈등 및 협력 사례 및 통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보’ : ‘지역-안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각국의 군사안보 관련 주요 자료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정치’ : 역내 정치적 교류·협력의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정상급 정치인을 비롯한 각 분야 엘리트 사이의 교류현황, 그리고 정치협력의 시금석으로서 지역레짐의 현황이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덧붙여 지역국가 간 정치체제의 유사성과 상이성 정도 역시 지표로서 의미를 띤다.

‘국가-정치’ : 지역협력에 대한 각 국가내부의 정치적 입장들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국가수반이나 정당의 정치적 태도, 지배연합의 입장, 그리고 국민여론의 향배 등이 주목의 대상이다.

‘지역-문화’ : 역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현황과 지역국가 국민들 사이의 가치관 비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내 공동의식이나 정체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문화’ : 이 역시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국가의 정부나 사회에서 문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지표를 열거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지역협력의 인프라 측정을 위한 주요지표

수준 범주	지 역	국 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내 무역의 비중 및 집중도 ② 역내 투자비중 및 집중도 ③ 세계시장의 확대에 대한 역내 국가의 공동대응 노력(역내 시장 확대노력) ④ 역내 국가간 경제적 균질성(각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비교) ⑤ 노동의 역내이동 추이 ⑥ 역내 공동개발계획 및 추진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내 기업별 전략적 제휴현황 (횡수와 빈도) ② 역내경제협력과 경제성장의 상관성 ③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공유 또는 차이 ④ 해외투자 참여기업의 종류와 비율 ⑤ 역내 무역의 비중 및 집중도 ⑥ 역내 투자 비중 및 집중도 (in- & outward) ⑦ 역내 FTA 비율 ⑧ 주요 경제통합지역과 경제규모비교 ⑨ 무역협정의 지역별·시기별 체결 추이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내 군비경쟁 현황 ② 역내 군사교류 현황 및 횡수 ③ 냉전부터 1990년 초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갈등 및 분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기도입현황 및 추세, 군사력 순위 ② 역내 동맹현황 및 체결시기 ③ 핵과 미사일 비확산레짐 현황 (각 국가의 가입현황)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정상들간 접촉의 방식과 빈도 ② 정치엘리트 및 고위관료들의 상호 회합의 제도화 수준 ③ 기존 지역레짐의 종류 및 역할 ④ 국가간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협력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입장 ②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또는 언론의 지지여부) ③ 지역협력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 ④ 정책결정 및 행정과정의 국가별 특수성 ⑤ 동북아협력의 정치적 이유(기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역내 사회문화 분야 인적 교류의 규모(역외와 비교/유학생, 관광, 단체간 자매결연 등) ② 정부 및 민간자원의 역내 문화교류 프로그램 ③ 역사 및 문화적 갈등의 강도·빈도 ④ 역내 NGO들간 협력 수준 ⑤ 역내 주민들의 가치관 비교(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신·교통 ② 교육·관광 ③ 인적 교류를 촉진 내지 제약하는 제도(중앙정부) ④ 역내 지방정부들과의 자매결연 ⑤ 국별 역내 국가에 대한 신뢰도 ⑥ 각급학교에서 역내 국가에 대한 교육 (언어, 문화, 역사, 정치 등)

<표 II-1>에서 제시된 상위지표들이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 측정가능성, 관련된 통계의 유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각 지표군마다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북아지역국가들 모두가 분야별로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표에 해당하는 통계 자료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표별로 통계자료가 들쭉날쭉하게 수집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하며, 당연한 귀결로서 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인프라 수준은 미시적이기보다 중간범위 내지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협력의 발전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건들을 찾아보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본 글의 논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예상된다.

첫째, 자유주의 계열의 통합이론에 편향된 논의에 대한 비판이다. 즉 이러한 이론적 태도가 어느 정도 현실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혹자는 유럽통합의 초기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미국과 같이 규범제시 능력을 갖춘 패권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부각시킬지도 모르겠다. 이 비판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진다. 실제로 향후 동북아의 세력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국가가 더욱 강력한 규범제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에 따라 협력의 발전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유럽사례의 경우에서 보듯이, 일단 패권적 안정이 형성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은 자유주의 이론에서 훨씬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더욱이 자유주의 통합이론은 거의 대부분 유럽통합 사례를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약화

될 수 있다. 어쨌든 동북아 협력의 제도적 발전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불투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역 협력의 모델을 염두에 둔다면, 중·장기적 측면에서 자유주의적 이론을 지표 개발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된 지표에 대한 비판이다. 앞에서 제시된 표의 내용에서 보듯이 가급적 측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우 구체적인 지표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 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자료 확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할 경우, 제시된 지표에 알맞은 자료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용과정에서 자료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앞에서 제시된 지표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지속될 경우, 지금보다 더욱 세련되고 필요한 자료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국가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1. 한국

지정학적 위치와 지경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에 대해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해양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는 중간지대에 위치함으로써 교량국가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동북아지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수출지향적인 산업구조로 말미암아 대외무역에서 동북아지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동북아지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 경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특히 지역적 노동분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는 한편, 이와 연관된 국내 산업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안보는 일차적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지역의 안정적 안보질서 형성, 중·미간 패권 경쟁 완화 등을 위해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변화, 한국과 동북아국가들과의 양자 안보협력, 남북관계 진전,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등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이 지역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 문화적 유산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서

구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것을 한국의 문화적 유산 및 역동성과 결합하여 창조적인 형태로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의 문화적 창조성의 결과인 한류현상은 동북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가. 경제

(1) 기초 경제지표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나, 동북아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력의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몽골, 북한 등을 중간에서 연계하는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IMF 이후 경제력을 회복하였으나 GDP 실질성장률은 1993년에 6.3%였던 것이 2003년 현재 2.8%로 낮아졌다. 동북아지역 1 그룹(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 2003년 평균 GDP 실질성장률이 3.8%이고, 동북아지역 2 그룹(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의 실질성장률이 4.27%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실질성장률이 낮다. 이것은 한국이 과도성장기간이 끝났으며, 동북아지역의 고도성장국가들과 연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산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2003년 현재 농업의 비율은 4.4%, 산업 37.6%, 서비스 58%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산업 구성의 특징은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서 농업부문은 개방하는 한편, 서비스부문의 지역 거점 역할 및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록 표 III-1 참조).

<인구>

한국의 인구는 2005년 현재 4천 7백만 명이며 인구 성장률은 0.44%로 감소추세에 있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세계 전체의 평균 인구성장률인 1.21%보다 낮고, 동북아지역 1 그룹의 평균 인구성장률 0.46%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낮은 인구성장률을 감안할 때, 저임금 노동력에 입각한 노동분업의 이점은 사라졌으며, 중급 및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노동분업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력 인구는 2003년 현재 2천 2백 92만 명이다.⁶⁰ 한국의 노동력 인구를 직업별로 보면, 농업 8.8%, 산업 19.1%, 서비스 72.1% 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력 인구는 서비스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실업률은 IMF가 발생하였던 1997년 7.9%에 이르렀으나 이후 고용이 증대하여 2003년 실업률이 3.4%에 이른다. 세계의 평균 실업률이 30%이며, 산업국가의 경우 평균 실업률이 4%~12%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부록 표 III-2 참조).

<에너지>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990년대부터는 경제성장보다 더 큰 폭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서, 2002년에는 8.395 Quadrillion Btu에 달하면서 동북아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소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일인당 에너지소비도 급격히 증가했는데, 국민 한사람은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세배 가까이 많은 일본이

⁶⁰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http://globaledge.msu.edu/statistics>>.

나 유럽의 국민 한사람이 쓰는 에너지와 비슷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의 에너지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이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가 높은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자동차가 대거 보급되고 가정이나 상업부문에서도 소득 수준의 증가에 따라 각종 가전기기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도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량과 비교해 에너지의 생산량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2002년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은 8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석유소비량이 매우 크나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에너지의 부족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게다가 에너지 자원은 대부분 외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국제유가나 환율변동에 아주 취약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경우 원가상승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내 석유제품 인상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부분의 물가상승의 우려가 있고, 운송관련업체의 요금인상으로 수출업체 타격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7년의 금융위기 사태로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이 유발되며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주민의 반발이 빈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부록 표 III-5 참조).

(2) 무역 및 투자

한국의 수출액은 2003년 기준으로 2,000억 달러이며, 수입은 1,750억 달러로 25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는 IMF를 계기로 1998년 급증하여 50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2003년에는 37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국의 대외 직접 투자도 1998년에 급증하여 47억 달러에 이르렀다가 2003년에 34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동북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45.6%였던 것이 2003년에는 47.0%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대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체 대외무역가운데 한국의 대중무역의 비율은 1993년 11.6%에서 2003년 32.6%로 증가하였으며, 미국(33.9%)을 육박하고 있다. 한국의 대외무역가운데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부록 표 III-6, 7 참조).

(3) 자유무역 협정(FTA)

한국은 그동안 전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만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통해, 한국은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

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 싱가포르의 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현재 20여개국의 주요 유망대상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일본과는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시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여,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2005년 2월부터는 ASEAN과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협상이 예상대로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최소 80%의 품목수에 대해서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여타 품목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FTA와의 FTA 협상도 2005년 1월에 개시되었다.

또한 멕시코, 인도, MERCOSUR와의 FTA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으며, 캐나다와는 2005년 1월말 FTA추진에 관한 사전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밖에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참여하는 FTA나 한국, 중국간의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공동연구가 진행중이거나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이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한층 올리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부록 표 III-15 참조).

나. 안보

(1) 군사력

한국의 국방비는 2002년 기준으로 131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비는 미국(3,296억 달러, 1위), 중국(484억 달러, 2위), 러시아(480억 달러, 3위), 일본(371억 달러, 5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국방비 비율은 2.8%로 북한(25%), 러시아(4.8%), 중국(4.1%), 미국(3.3%)에 비해서 낮다. 또한 국민 1인당 국방비 규모를 비교하면, 한국의 국민 1인당 국방비 비율은 266 달러로 미국(1,138 달러), 러시아(333 달러), 일본(290 달러)에 비해 낮지만, 중국(37 달러), 북한(31 달러)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병력 규모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병력은 69만 명으로 중국(220만 명), 미국(140만 명), 북한(100만 명), 러시아(99만 명)에 비해 적다.

한국은 2003년 현재 약 3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3,600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다(부록 표 III-16, 17 참조).

(2)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

<한·미군사동맹>

한국의 대외관계는 일차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일 뿐만 아니라 외교와 대외경제관계의 기본 골격을 결정짓는 틀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정책과 국제적 협력은 한·미동맹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대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과 다자안보협력의 추진

은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위상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미간에는 한·미동맹을 제도적 운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우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간 최고위 안보분야 정책협의기구로서 양측의 국방장관이 대표이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한다. 「한·미 2+2회의」는 한국측의 국방장관 및 외무장관, 미측의 주한미사령관 및 주한미대사를 대표로 하며 주요 안보현안에 관한 의견교환 및 공조를 위한 비공식협의체이다. 그리고 부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정책검토위원회」, 「한·미·일 3자회의」, 「차관보급회의」가 있으며,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회의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구조조정 및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2002년부터 미래한·미동맹(FOTA) 정책구상 협회가 개최되고 있다. FOTA에서는 주한미군의 배치조정, 용산기지 이전, 연합토지관리계획,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한·미연합군사능력 발전, 주한미군 감축 등 한·미동맹의 기본 골격 및 운영의 미래상이 협의되고 있다(부록 표 III-35 참조).

<표 III-1> 한국의 동북아국가들과의 군사교류 (단위: 횡수)

	1993~1996				1997~2000				2001~2005			
	국방장관		그 외		국방장관		그 외		국방장관		그 외	
	방한	To	방한	To	방한	To	방한	To	방한	To	방한	To
미국	-	-	-	-	7	3	9	7	-	4	13	-
일본	1	2	4	5	2	2	11	7	4	1	13	13
중국	-	-	1	5	-	1	2	6	1	1	12	9
러시아	-	-	3	3	1	1	6	6	2	2	8	11
북한	-	-	-	-	-	-	-	-	-	1	30	
몽골	-	-	-	-	-	-	-	-	-	-	1	-

<한·일 안보협력>

한국은 일본과 군인사교류, 군사학교 학생 교환방문 등 인적 교류와 함께 군 지도부의 상호방문, 정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군사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1994년 이후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교환방문 형태로 매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한·일안보정책협의회 등 각종 실무회의를 통하여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유사법제 입법 등 관심사와 함께 북핵문제, 대북정책,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편성 관련 협의사항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있다(부록 표 III-33 참조).

<한·중 안보협력>

한국과 중국과의 안보협력은 2003년 7월 양국 정상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9년 당시 조성태 국방부장관이 한국의 국방장관으로는 처음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츠 하오티엔 중국 국방부장이 중국 국방부장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또한 양국의 군 지도급의 인사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측에서는 2003년에 합참의장, 2004년 해군 참모총장, 2005년에는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측에서는 2003년 총참모장과 군사대표단, 2004년에는 총참모부 군사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였다(부록 표 III-32 참조).

<한·러 안보협력>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다음해인 1991년 양국의 무관부가 개설되었으며, 군지도급 인사의 상호교류, 군사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보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3년 4월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부장관의 방한식 군사교류협력의 증대방안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3년 7월 한·러 공군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2003년 8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 주최 인도주의적 해상 공동수색구조 훈련에 한국은 일본과 함께 참가하였다. 2004년 2월에는 러·일 전쟁 100주년 행사의 하나로 러시아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되었으며 양국 함정간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간에는 군사교류·협력에 관한 협정들이 체결되었다. 한·러간에는 1997년 한·러 방산군수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98년에는 군인사교류 합의각서, 2001년에는 해양실무 협력의정서가 체결되었으며, 2002년에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2004년 8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원회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실질적인 문제가 논의되었다.⁶¹ 2005년에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러시아 측에서는 3월 발루에프스키 총참모장과 8월 키슬락 군축차관 방한했다. 또한 9월에는 한국에서 한·러 본부장회의 및 합동군사회의가 열렸다(부록 표 III-34 참조).

<남북군사회담>

남북한간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1992년 『남북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3년 북핵문제의 대두로 인해 남북한간 군사분야 회담을 전면 중단되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⁶¹ 국방부, 200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4), pp. 102~103.

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우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남북국방장관회담(2000. 9)이 개최되었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문제,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의한 철도 및 도로 연결의 실무문제 협의, 남북관할구역 설정, 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와 관련된 군사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군사실무회담과 남북군사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군사회담에서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및 「보충합의서」가 채택되어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군사적으로 필요한 업무협조와 세부사항이 합의되었으며, 남북관리 구역내 경비초소의 설치 및 운영문제가 논의되었다.⁶²

그리고 2004년 2차례에 걸쳐서 남북장성급회담이 개최되어 「서해 북방한계선의 무력충돌방지 대책」과 「군사분계선에서 선전·비장행위 금지」와 관련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5년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및 군사분계선의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이 협의되었다.

⁶² 박종철,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8~15.

<표 III-2> 남북 군사회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군사분야 (33건)	남북국방장관회담	1	-	-	-	-	-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3	2	3	2	-	-
	남북군사실무접촉	-	-	6	4	-	-
	군사통신선실무자접촉	-	-	1	-	-	-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	-	-	2	-	-
	장성급실무접촉	-	-	-	-	2	-
	장성급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	-	-	-	-	3	2
	장성급 군사통신접촉	-	-	-	-	2	-

(3) 지역 분쟁 및 갈등

한국은 일본과 독도문제와 관련한 영토분쟁이 있다. 독도문제는 한·일간 일본의 과거사문제, 역사해석문제 등과 함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독도문제의 갈등정도는 중국·러시아간 국경분쟁, 중·북간 국경문제, 중·타지키스탄간 국경분쟁보다는 심각한 정도이며, 중·일간 도서분쟁, 일·러간 도서분쟁과 비슷한 정도이다(부록 표 III-42, 43 참조).

(4) 다자안보협력

냉전이 종식되면서 한국은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여러 방면에서 타진하고 있다. 동북아의 강대국들로 둘러 싸인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자안보협력을 상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강대국간 갈등을 방지하고 한국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해답을 다자안보협력에서 찾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의 북동지역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보다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지니고 있다. 물론 한국은 ARF 등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다자안보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고 통일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동북아공동체가 보다 적절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동북아다자안보 구상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지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동북아안정의 균형자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을 중시한다. 아울러 한국의 동북아 다자안보 구상은 ASEAN, APEC, EU 등 여타 지역협력체와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는 열린지역주의를 지향한다.⁶³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인 관심은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화되었으며, 점차 그 목적과 추진구도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동북아 6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동북아평화협의회」(Consultative Conference for Peace in Northeast Asia)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⁶⁴ 노태우 대통령은 미·소 대립 완화, 일·소 영토분쟁 해결,

⁶³ 배궁찬, 동북아시아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전략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4. 7).

중·소 화해, 남북한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지역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동북아다자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동북아 평화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 확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 달성,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개막으로 다자간 협력장치 마련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장기목표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수립을 추구하되, 일차적 목표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설정하였다. 한국은 1988년 11월 19일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추진을 위하여 외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2년 9월 22일 유엔 총회 참석시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동북아에서의 상호이해 및 신뢰증진을 위해 당사자들간에 대화와 협력의 장이 필요함을 재차 역설하였다.⁶⁵

동북아 평화협의회 구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적극적인 주도하여 한반도문제를 동북아지역구도와 연관시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 제안은 사실상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최초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이러한 기조는 이후 정부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동북아평화협의회』 제안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북방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노태우정부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고르바초프의 동북아 다자안보

⁶⁴ 박홍규, 6자 동북아평화협의회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88~86, 1988); 김국진, 동북아평화협회의의 구현방안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89~08, 1989).

⁶⁵ 자세한 내용은 Korea: A Nation Transformed, Vol. 2, *Selected Speeches of President Roh Tae Woo* (Seoul: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1993), p. 149 참조.

구상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일본과 러시아의 환영에도 불구하고 한·소 및 한·중간 국교 미수립, 동북아시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과 중국의 미온적 태도, 북한의 명시적인 반대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의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1993년 3월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발언을 통해 다시 부각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한·미동맹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제26차 태평양 연안 경제협의회(PBEC)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외교 정책방향으로 항구적 지역평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양자 안보협의체제를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다자안보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⁶⁶

그리고 한승주 외무장관은 1993년 5월 31일 외교협회 연설을 통해 군비통제나 분쟁예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와 같은 광역 차원의 안보 협의체보다는 지역적 유사성이 존재하고 공동의 안보이익 도출이 용이한 소지역 차원의 안보협의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mini-CSCE(유럽안보협력회의) 형식의 동북아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⁶⁷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1994년 5월 제1차 ARF 고위관리회의의 (ARF-SOM)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 Northeast

⁶⁶ 이상균,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 구축방안: 유럽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국가전략 (1997년 봄·여름호), pp. 200~201; 홍규덕, “21세기 동북아 안보 협력체 구상에 대한 전망과 과제,” 외교, 제53호 (2000. 4), p. 15.

⁶⁷ Sung-Joo Han, “Fundamentals of Korea’s New Diplomacy: New Korea’s Diplomacy toward the World and the Future,”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7 (Summer 1993), p. 239.

Asia Security Dialogue)를 제안하였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는 1993년 7월 한승주 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2+4' 형태의 6자회담에 의해서 한반도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이 공식화된 것이었다. 한국은 NEASED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대만간 긴장관계, 동북아의 군비경쟁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NEASED 제안은 관련국의 무관심과 여건미비로 실행되지 못했다. 미국은 동북아의 양자동맹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자안보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도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다자대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⁶⁸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2월 김종필 당시 자민련 명예총재는 중국 방문시 장쩌민 국가주석에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친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성공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김종필총재는 1975년 헬싱키선언처럼 동북아 6개국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한반도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북아 다자대화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을 위해 4자회담과 병행하여 동북아 6개국으로 구성된 다자대회를 추진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1998. 10), 한·중정상회담(1998. 11), 한·러정상회담(1999. 5) 등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⁶⁸ 엄태암, 안보정책 논총 2 4자회담 활성화 및 동북아 6자회담의 활용방안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2), pp. 329~331.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주력함으로써 동북아 다자대화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차원의 협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동북아평화가 한반도평화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여긴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평화를 위한 대북한 정책임과 동시에 대동북아정책이다. 평화번영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고려하여 동북아안보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 북한핵문제와 한반도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동북아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동북아안보협력은 북한의 국제사회로의 진입과 개방·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안보협력은 다자적 방식에 의해서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체제생존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은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역내 국가간 영토분쟁이나 무역마찰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의 안보상황은 불안하게 되고 한반도평화유지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동북아 안보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안보대화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은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동북아안보협력이 진전될 경우 동북아의 지역적 협력메카니즘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에 관한 협력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대외관계를 조정하고

통일한국의 안정과 발전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동북아안보협력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변영정책은 동북아차원에서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평화변영정책은 동북아차원으로 시야를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아울러 평화변영정책은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⁶⁹

한편, 한국은 동아시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안보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기구는 ARF이다. ARF는 1994년 ASEAN을 모태로 형성된 기구인 만큼 동남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에 대해서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한반도문제나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ARF에 적극 참여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를 위한 다자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한국은 1996년부터 ARF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외무장관회의(ARF-FMM)와 차관보급의 고위관리회의(ARF-SOM), 신뢰구축조치에 관한 회기간 그룹회의(ISG)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분야별 회의인 국방대학 총장회의, 전쟁법 세미나, PKO 세미나, 국방언어학교 회의, 해적퇴치 워크샵, 재난구호회의, 예방외교 워크샵, 아·태지역 포괄안보 협력에 관한 회의, 마약·컴퓨터범죄·돈세탁·테러리즘 등 분야별 워크샵에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아·태지역의 지역안보에 관한 민간대화기구인

⁶⁹ 박종철,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 박종철 외,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31~33.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의 구성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3년 CSCAP이 설립된 직후인 1994년 CSCAP한국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준정부기구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여하고 있다. NEACD에는 외통부, 국방부, 통일부의 관리와 민간학자가 참여한다.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비핵화를 위한 비정부간회의인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LNWFZ-NEA)에 참여하고 있다.

(5) 다자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한국의 노무현정부는 출범 초기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이러한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동북아경제협력의 허브로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동북아경제중심 국가전략’을 추진했다. 그러나 동북아경제중심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경제협력이 안보협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동북아지역에서 북·미관계, 미·중관계, 중·일관계 등을 비롯한 양자관계의 역동성은 동북아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외적 요인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 영토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 안보문제는 동북아경제협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한국은 동북아경제협력을 거시적으로 외교·안보협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경제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던 대통령자문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가 2004년 7월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모색하는 『동북아시아대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한국의 동북아시아 구상은 탈냉전, 경제적 상호의존, 문화적 동질감 등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패권 경쟁, 일

본의 재무장, 영토분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연계망의 중심고리이자 물적 교류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고 동북아지역의 상생에 공헌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⁷⁰

노무현정부는 동북아에서 경제협력과 평화협력이 상호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번영의 공동체」와 「평화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자 한다.⁷¹ 한국의 장기적 목표는 동북아지역의 국가간 갈등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 포럼(6자회담의 발전, 동북아 평화군축센터 설립 등)을 구성하는 한편, 동북아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평화협력 및 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진출을 유도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북한의 체제붕괴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리적 행위자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고, 남북간 군사신뢰구축과 동북아 안보협력을 병행추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남북경협도 동북아 경제협력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남북경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주변국과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동북아차원의 경제협력과 유기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고, 동북아경제협력은 남북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경

⁷⁰ 배궁찬, 동북아시아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전략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분석, 2004. 7).

⁷¹ 노무현대통령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2003. 2. 25).

제협력은 동북아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남북경제협력의 구체적 사업을 계기로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적 경제협력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관심을 두고 있는 동북아경제협력의 주요 이슈는 철도협력, 에너지 및 환경협력, IT협력, 금융협력, FTA 등이다.⁷² 한국은 동북아 철도망연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 철도연결을 바탕으로 이를 TSR, TCR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북한간 물리적 차원의 철도연결을 넘어 남북철도 시스템의 표준화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해 동북아 철도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경통과 및 운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 및 환경협력과 관련하여 시베리아의 석유·가스 및 전력원을 공동개발하고 에너지의 수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에너지 협력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고, 황사문제, 공동해역개발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IT협력을 위해 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보교류 및 공동기술개발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금융협력을 통해 외환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북아 경제협력 및 역내 시장 확립을 위한 기반을 공고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양자 및 다자차원의 FTA 체결을 통해 역내 교역을 자유화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 및 싱가포르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정부차원의 공식협

⁷²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3), pp. 53~54.

상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한·중 FTA, 한·중·일 FTA 등을 토대로 동북아지역을 포괄하는 형태의 포괄적인 FTA를 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남아의 ASEAN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형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⁷³ 현실적으로 동북아에서 FTA형성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ASEAN+3의 틀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을 정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일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견해도 있다.⁷⁴

한편, 한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 핵문제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양자 및 다자간 안보협력, 상호신뢰구축(CBM) 및 군비통제, 반테러·환경·마약규제 등 비전통적인 안보이슈이다. 우선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 협력의 확대 및 심화를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에 주력하는 한편, 중·러와의 협의도 중시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한국은 다자안보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동북아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양자적 안보협력을 확대·심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동북아다자안보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한국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성공할 경우, 이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남북한간, 중·일간, 미·중간 등 양자적 CBM 및 군비통제에서 출발하여, 중

⁷³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제7차 ASEAN+3 정상회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12).

⁷⁴ 안효승, 동북아지역 FTA 추진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7).

장기적으로 이를 다자간 군비통제로 확대·발전시키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탈냉전기 포괄적 안보개념에 상응하여 테러, 마약, 국제범죄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자 한다.

(6) 국제군비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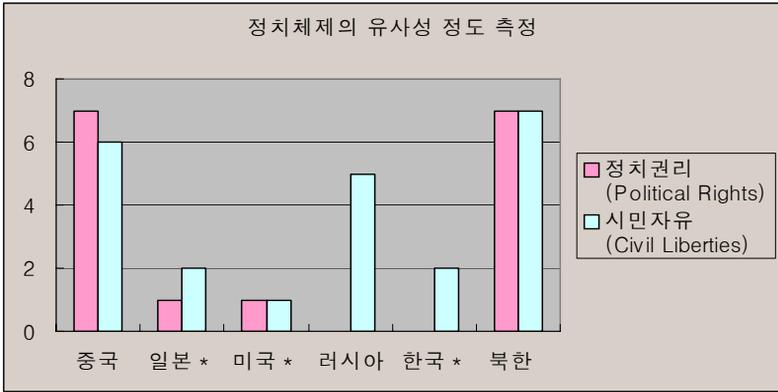
한국은 BWC, CCW, CTBT, CWC, MTCR, NPT 등 국제군비통제체제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공해상에서 검색·검문을 위한 PSI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부록 표 III-44 참조).

다. 정치

(1) 정치체제의 유사성

<부록 표 III-46>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나타낸 시민자유와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관한 정치권리를 기준으로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정치권리는 가장 자유로운 1등급이며, 시민자유는 2등급을 기록했다. 정치권리와 시민자유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며, 대체로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III-1>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 측정



(2) 지역내 정치협력

한국은 동북아국가들과 매우 활발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각 국가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정치협력은 역내 협의체나 레짐이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양자간의 정치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 역시 한·미, 한·일, 한·중, 남북, 한·몽의 양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각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협력을 모색해 왔다.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동북아국가들 간의 정치지도급 인사교류를 보면, 한·미간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이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미관계는 한·미동맹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면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어 왔다. 한·일 정치관계는 빈번히 발생하는 역사왜곡에 대한 두 국가의 입장 차이와 정치적인 마찰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어 왔다. 중국과의 관계도 1992년 관계정상화 이후

정치지도자와 고위급 관료들의 상호 방문이 있어왔다. 북한과는 2000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각종 남북대화가 개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북핵·군사문제 등 회담 외적 요인과 북한의 일방적인 회담 지연 등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과 동북아국가들과의 정상회담과 관료회담은 유엔, APEC, ASEAN, AR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부록 표 III-47~52 참조).

<표 III-3>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1990~1995		1996~2000		2001~현재(2005.7)	
	정상 회담	장관급 회담	정상 회담	장관급 회담	정상 회담	장관급 회담
일본	-	-	8	11	12	16
중국	4	16	6	20	6	14+a
북한	-	-	1	4	-	10
미국	8	15	10	17	8	18
러시아	4	3	1+a	7	2+a	3+a
몽골	1	2	1	1	2	2

(3) 국내적 요인

한국 내에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은 한국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평화체제 정착, 남북경협,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동북아 환경조성 등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변화하는 동북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한·미동맹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재편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보완할 수 있는 안보장치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국이 한·미동맹 외에 다른 안보장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지역패권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외교·군사적 역량 발휘를 기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내문제 해결 후 국제적 위상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 한·미동맹을 보완할 수 있는 안보메커니즘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는 동북아 안보와 동북아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려는 강한 의욕과 구체적 계획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욕과 이익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APEC, ARF, NEACD, CSCAP 등 동아시아차원의 다자안보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자안보대화와 관련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한국은 정부차원과 정부관련 연구기관, 개인적 차원에서 동북아다자안보대화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는 한편,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자안보대화에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다자안보 활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구는 「동북아시아위원회」이다. 「동북아시아위원회」는 설립 목표 자

체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 것이며, 남북관계팀, 경제협력팀, 문화협력팀 등을 가동하고 있다.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장·단기 과제와 자유무역협정, 동북아개발은행, 에너지 사업, 철도사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정착,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와 함께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6자회담의 제도화, 제주도평화거점 개발, 동북아평화건축 센터 등과 같은 과제들도 연구되고 있다.⁷⁵

정부관련 연구소 가운데 외교통상부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동북아시대의 개념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안보연구원은 「OSCE의 최근 발전 현황, 동북아에서의 OSCE 경험 적용문제, 한반도에서의 CSBM 적용」(2003. 9)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유럽의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외교안보연구원은 「동북아다자안보 협력추진방안: 현황 평가 및 대안 모색」(2004. 7)이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아·태지역의 안보협력체 가운데 대표적인 ARF, NEACD, 6자회담을 동북아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은 동북아시대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공동으로 동북아시대의 개념과 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2004. 7)하였다. 그리고 외교안보연구원은 소속 교수들이 다자안보회의의 참석 결과를 보고하는 소규모 모임도 수시로 갖고 있다.⁷⁶ 또한 외교안보연구원은 다자안보

⁷⁵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시대의 도전과 우리의 선택” (2004. 7).

⁷⁶ 김성한, “제5차 동북아 평화 심포지엄 결과 보고” (2004. 4. 6); 이서향, “ARF

협력에 관한 연구물도 발간하고 있다.⁷⁷

통일연구원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통일연구원은 동북아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동북아의 군비통제, 동북아다자안보협력방안 등 안보문제와 동북아경제협력, 남북경협 등 경제문제를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출판하였다.⁷⁸ 통일연구원은 2005년에 동북아경제공동체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방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라는 주제하에 미·일·중·러·몽골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동북아협력의 중요 목표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을 위한 국제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이와 관련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연구소는 국가전략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모색하는 국가전략차원에서 동북아협력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일환

예방 외교 워크숍 참가 결과” (2004. 4. 21); 김태효, “CSCAP 제13차 포괄 안보협력분과 작업반 회의결과” (2004. 4. 27); 이서향, “제15차 NEACD 참가 결과” (2004. 5. 6); 이서향, “다자안보기구 관련 연구소 방문결과 보고” (2004. 6. 1).

⁷⁷ 배궁찬, 아세안+3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1. 4); 배궁찬, 동아시아 정세성 창출방안연구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2. 2); 이재승,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협력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4. 8); 배궁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3. 12); 안효승, 동북아시아 FTA 추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3. 8); 배궁찬, 동북아 경제중심구가 건설을 위한 외교적 대책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3. 3); 이서향, ARF 평가와 발전과제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2. 9).

⁷⁸ 박종철 외, 동북아안보·경제협력체제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으로 「8차 국가전략 포럼」(2002. 8)은 「21세기 세계화 도약을 위한 세계화전략」이라는 주제하에 동북아협력의 다자외교, 환경 및 에너지의 국제협력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10차 국가전략 포럼」(2003. 9)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보, 동북아번영과 평화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11차 국가전략 포럼」(2004. 6)은 「참여정부의 국가전략 평가」라는 주제하에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 북핵문제, 주변국 외교전략 등과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협력」(2003. 11)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 FTA와 동아시아통화체제, 동북아경제중심과 한·중협력, 남북한 관계발전과 지역협력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그리고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도 동북아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2003. 12)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비전, 동아시아경제통합, 동아시아 안보와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한편, 민간차원의 평화운동단체들은 동아시아의 평화 및 세계평화와 한반도평화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추진한다. 민간 평화운동단체들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는 않지만 한·미동맹을 대체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평화운동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자 한다.⁷⁹ 동북아차원에서 시민단체의 평화활동과 국제

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단체들로 「동북아시아민사회포럼」, 「동북아 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국내에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제약요인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다. 우선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강조가 직간접적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불안정한 동북아정세를 감안할 때, 확실한 안보장치인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고 애매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볼 때, 한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한국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실현시킬만한 정책적 수단이나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더욱이 한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강대국인 주변국들을 설득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면상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이 여러 가지 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내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통해 한국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제기된다. 한국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달성하려는 목표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 자체인지, 한반도평화를 위한 환경조성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틀 내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⁷⁹ 박순성, “한국 평화운동의 발전방향과 아시아 평화연대” (정전 50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주최세미나 발표문, 2003. 7. 26).

그리고 노무현정부가 동북아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데 이것은 국제화(노태우정부), 세계화(김영삼정부), 동아시아화(김대중정부)에 비해 한국의 대외활동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이 한편으로는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소한 지역적 구도인 동북아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대체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동북아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동북아역내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동북아지역에 대해 강조하기보다는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개방화와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라. 사회·문화

(1) 통신·교통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신망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다. 한국은 유선 통신망뿐만 아니라 이동전화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한국은 이러한 통신망 발달을 토대로 동북아지역이 IT구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IT구축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지닌 IT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동북아지역의 정보통

신망의 허브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부록 표 III-68 참조).

한국의 교통망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86,990km이며, 철도의 총연장 길이는 3,125km이다. 한국은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도망 및 도로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은 한반도차원의 철도망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철도와 시베리아철도, 중국철도와의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철도와 시베리아철도 및 중국철도가 연결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개통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물류 및 인적 이동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한국은 교통·물류면에서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항공망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2002년 기준으로 일본이 1위(44,243회)이며, 미국(34,292회), 중국(29,018회)순이다. 1993년에 비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한·중간 교류가 대폭 증가했음을 입증한다. 한국과 동북아 1지역(한국, 북한, 일본, 중국)과의 항공기 운항 횟수가 전 세계 운항 횟수의 약 1/2에 근접함으로써 한국과 동북아지역과의 항공운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표 III-70 참조).

(2) 교육·관광

한국학생들의 해외유학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1999년도에 총 120,170명이었던 한국 유학생 수는 2004년에 187,683명으로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한국 유학생은 동북아지역 국가들, 특히 일본, 중국,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전체 유학생 수에서 동북아국가로 유학한 학생들은 55% 정도였는데

2001년에는 61%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52% 정도이다. 이 가운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수는 1999년 6,279명에서 5년 후인 2004년에는 그 두 배 이상인 16,832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동북아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유학생 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수가 급증하여 1999년의 1,182명에서 2004년에는 7배 이상 증가한 8,677명에 달했다. 2004년 동북아지역내에서도 중국의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1%로 가장 높다(부록 표 III-71 참조).

한국의 관광 통계를 보면, 2003년 현재 입국면에서는 일본이 압도적 우위이며, 그 다음 중국, 미국, 러시아 순이다. 출국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며, 그 다음 미국, 러시아 순이다. 전세계와 비교하면, 입국면에서는 동북아지역 1이 전세계 입국자의 약 1/2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출국면에서는 동북아 1이 전세계 출국의 1/2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1지역 국가들의 한국 입국이 많은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출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표 III-75 참조).

마. 소결

한국의 동북아지역협력과 관련한 인프라 지표를 살펴본 결과, 경제, 안보, 정치,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 정도로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보적인 면에서도 다자간 안보기구를 통해 한국은 취약한 안보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6자회담을 통해 지역 국가들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한국과 동북아국가들과의 양자관계가 정치지도자나 고위급관료들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왕래 및 교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실태는 한국이 동북아시아협력에 앞장서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물류중심지, 정치안보적으로는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동북아시대위원회」도 구성되었다. 동북아시대 위원회는 국가의 중장기 외교안보전략 구상, 남북협력 방안 모색, 동북아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증진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하면서부터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요시해왔다. 경제·문화적으로는 유기적이며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만,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평화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안정과 평화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중장기적인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이다.

한국이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

며, 경제·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왔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역내의 안보불안이다. 동북아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가들 간의 경쟁이 다른 지역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동북아지역의 중심국이 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세력다툼이 경제적·사회적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핵개발 등 군사적이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공동체를 주도할 만큼의 경제적·정치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장기적인 목표는 동북아 질서의 균형자적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가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공동체의 전망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와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잘 이용한다면,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협력보다는 동아시아지역의 협력을 중시한다. 중국이 인식하는 지리적인 동북아지역은 협의의 개념으로 중국의 동북지구, 러시아의 극동지구, 한반도와 일본이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몽골과 중국의 화북, 화동지역을 포함시킨다. 반면에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중국의 동부와 러시아의 동부, 일본, 한반

도, 홍콩, 대만을 포함하며 광의의 동아시아는 여기에 동남아시아를 포함시킨다. 따라서 중국이 인식하는 지리적인 동북아지역은 동아시아지역에 포함된다.

중국이 동북아지역의 협력보다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더 중시하는 이유는 중국이 추진해온 경제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북아지역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 군사, 안보적인 각축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지역은 일본과 한국 및 대만, 홍콩 그리고 동남아로 이어지는 국제분업 질서를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시기의 구도가 잔존해있고,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전개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적 협력으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면, 동북아지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하되, 정치군사적 협력은 점진적이고 서두르지 않는, 즉 증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비교적 적극적이다. 중국은 최근 ‘동북진흥발전전략’을 공식 선포하는 등 중국의 동북3성 지역에 대한 경제개혁과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연계를 기획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이 지역이 경제적 상호보완성과 무궁한 자원 및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력의 부상과 ‘책임대국론’, ‘화평굴기(和平崛起)론’을 제기하는 등의 자신감도 동반되어 있다. 다만, 중국을 견제하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지역패권을 다투는

일본의 존재는 역내 정치군사적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소극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중국에 유리한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안보를 중시해온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이 지역의 정치안보협력에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 경제

(1) 기초지표

<GDP>

중국은 1978년 11기3중전회 이후 지금까지 27년 동안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는 가운데에도, 중국은 1992년 사회주의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공식 선포하였다. 시장화와 사유화의 경제개혁에 따라 경제성장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1993년 중국의 GDP 실질성장률은 13.4%에 달했으며, 1998년 7.8%, 2003년에는 9.1%의 고도성장을 유지했다. 이는 2003년 기준 동북아시아 1그룹 국가(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의 전체 평균성장률인 4.04%와 동북아시아 2그룹 국가(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의 전체 평균 성장률인 4.3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구매력(ppp) 기준 중국의 GDP도 3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3년 2조 6천 100억 달러였던 중국의 GDP가 5년 뒤인 1998년에 4조 4천 200억 달러로 2003년에는 6조 4천 4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년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비중도 크게 증대하였다. 동북아지역 1그룹 국가의 전체 GDP는 10조 8,990억 달러로서, 이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동북아지역 2그룹 국가의 전체 GDP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로서, 중국경제의 규모는 동북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였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생산 비중에서도 변화를 보여, 1차 산업인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9%에서 2003년 14.5%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차 산업인 공업의 비중은 49%에서 51.7%로,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32%에서 33.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이나 선진국형의 산업구조와 비교했을 때, 중국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공업의 비중이 높아 전형적인 개발도상국가의 유형에 해당된다. 이 점은 중국의 1인당 GD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매력 기준 중국의 1인당 GDP는 1993년에 2,200달러에서 1998년에 3,600달러, 2003년에는 5,000달러로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동북아 1그룹 국가의 평균인 10,70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동북아 2그룹 국가의 평균인 14,314달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부록 표 III-1 참조).

이처럼 중국경제는 최근 10년간 고도성장을 꾸준히 유지해오며 따라 경제규모도 놀라운 속도로 증대하였고, 동북아지역의 경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성장은 중국부상의 핵심적 근거가 되어 왔으며,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동북아지역의 협력에서 중국의 비중 및 발언권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세계 최다 인구 보유국이다. 많은 인구는 강대국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등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1가구 당 1자녀만을 허용하는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인구성장률은 크게 감소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1.08%이던 인구성장률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0.88%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0.65%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절대인구는 1995년에 12억을 돌파하더니 다시 10년 후인 2005년에 13억을 돌파하여 약 13억 1,584만명을 기록하였다. 2005년 기준 중국의 인구는 동북아 1그룹 국가의 총인구인 15억 1,688만명의 86%를 차지하며, 동북아 2그룹 국가의 총인구에서도 67%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러한 중국의 인구는 중국의 1인당 GDP를 동북아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규모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또 동북아의 인적, 문화적 교류에 엄청난 비중을 갖는다는 점에서, 중국의 인구는 주목된다(부록 표 III-2 참조).

구체적으로 중국의 많은 인구는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해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2004년 기준 중국의 노동력은 7억 7,810만 명으로서 여전히 저임금의 노동집약형 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2001년 기준 전체 노동자 중 농업 종사자가 50%, 공업 종사자 22%, 서비스업 종사자가 28%인 노동력의 구성을 감안하면, 농업분야에 잉여노동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⁰ 이 점은 중국의 노동력이 일정 기간 동북아지역에서

⁸⁰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at Michigan

비교우위를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잉여노동력은 산업구조의 조정과 더불어 취업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의 실업률은 1993년 2.3%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0%로 증가하여 체제전환 중인 중국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또한 절대인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의 실업률은 동북아의 노동력 교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따라 에너지 수급 상황도 전환되었다. 즉, 1993년까지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섰으나, 1998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월하기 시작했다. 2002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43.177 Quadrillion Btu로써 41.852 Quadrillion Btu의 생산량을 초월했다. 2002년 일일 원유 소비량도 516만 bbl로써 338만 bbl의 생산량을 초월했다. 2002년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유소비국이 된 중국은 원유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초월하고 있다.⁸¹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동북아 1그룹 국가 전체의 57%, 원유 소비량은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적지 않다(부록 표 III-5 참조).

이러한 중국의 에너지 소비추세는 향후 더욱 증대할 전망이어서 에너지 공급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에너지 공급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해외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가 국가안보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

State University <<http://gloaledge.msu.edu/statistics>>.

⁸¹ 門洪華, 构建中國大戰略的框架 (北京: 北京大出版社, 2005), p. 154.

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2) 무역 및 투자

중국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무역 및 투자액도 증가하였다. 1993년 중국의 수출액은 920억 달러였으나, 1998년 1,838억 달러로 5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4,361억 달러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5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3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액은 동북아 1그룹 국가의 총 수출액인 10,860억 달러의 약 40%를, 동북아 2그룹 국가의 총 수출액인 19,349억 달러의 약 22%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수입액은 1993년에 1,040억 달러, 1998년에 1,401억 달러, 2003년에 3,974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동안 4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3년 중국의 수입액은 동북아 1그룹 국가의 총 수입액인 9,223억 달러의 약 43%를, 동북아 2그룹 국가의 총 수입액인 22,571억 달러의 약 17%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한국 등이다. 2003년 중국의 상위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콩, 일본이, 상위 수입 대상국은 일본, 대만,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1997년에 중국으로 귀속된 홍콩과 중화권 국가인 대만을 제외할 경우 미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 중국의 무역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증가하였는데,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27억 9,900만 달러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1998년에 454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3년에 535억 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3년의 대중국 해외

직접투자액은 같은 해 동북아 1그룹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 중에 84%를 차지하였고, 동북아 2그룹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 중에서도 52%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2003년 한·중·일 3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의 5%에 불과한 18억 달러에 그쳤다(부록 표 III-6 참조).

(3) 국가간 수출입 matrix

1993년, 1998년, 2003년에 중국과 동북아국가간 수출 실적을 보면, 북한과 몽골을 제외하고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북아 6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도 1993년에 389억 9,500만 달러에서, 1998년에 761억 7,400만 달러로, 2003년에는 1,788억 1,4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기간 중국과 동북아국가간의 수입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동북아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도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1998년에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 다시 증대한 점과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대한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중국의 총 무역액이 크게 증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 동북아 6개국의 무역액 증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중국의 총 무역액 중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1993년 42.8%, 1998년 43.3%, 2003년 40%로, 10년간 40%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동북아국가간 무역 중에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은 일본, 미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들 상위 3개국의 비중은 2003년의 경우 약 95%를 차지할 정도로 막중하다.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46.7%, 1998년 41.4%, 2003년 39.3%로 소폭 감소된 반면, 한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9.8%, 15.2%, 18.6%로 약 2배 증대하였다. 반면에 중국의 대동북아 경제교류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은 1993년 9.2%에서 2003년 4.6%로 감소되었고, 특히 북한과 몽골의 비중은 0.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교류는 한국, 미국, 일본 3국과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부록 표 III-8 참조).

(4) 자유무역협정(FTA)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이 체결되었고, 각국 별로 FTA의 체결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데 반해 동북아국가간의 FTA 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 홍콩 및 마카오와 각각 2003년 6월과 10월에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화권 국가라는 점에서 다소 의미가 반감된다. 하지만 2002년 11월에 아세안과 FTA 체결에 합의한 사실은 중국이 FTA 체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현재 뉴질랜드와 2004년 12월부터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호주, 인도, 한국, 일본, 칠레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걸프 6개국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 동북아국가인 한국과 일본과의 FTA 체결은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척도가 될 수 있는 지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동북아시아의 정치·안보적인 갈등으로 인해 현재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부록 표 III-15 참조).

나. 안보

(1) 군사력

국방예산의 규모는 한 국가의 전투준비 태세를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 국방예산의 불투명성과 서방 등 외부기관의 평가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중국 국방비의 정확한 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⁸² 이를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평가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중국의 국방비는 1993년 143억 달러에서, 1998년 180억 달러, 2003년 331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대되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 역시 1993년 2.1%에서 1998년 1.9%로 감소되었다가 2002년 2.3%로 소폭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중국의 GDP가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절대 국방비의 지출이 꾸준히 상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부록 표 III-17 참조).

한편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하는 484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러시아와 일본 및 한국을 앞서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동북아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국방비 규모는 이 지역의 안보에 적지

⁸² 예를 들어 중국이 매년 3월 공식 발표하는 국방비에는 무기구입비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전력증강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門洪華, 构建中國大戰略的框架 (北京: 北京大出版社, 2005), pp. 135~136.

않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군병력은 정규군인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 그리고 민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은 1993년 303만 명, 1998년 282만 명, 2003년 225만 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러한 병력감축은 개혁개방 이후 군현대화의 일환으로 군의 개혁방향을 정병간정(精兵簡政)에 둔 결과이다. 즉, 중국은 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편제를 간소하게 조정하여 군 체제를 양에서 질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은 육군 170만 명, 해군, 40만 명, 공군 25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군인 민병은 1993년에 120만 명에서 2003년 약 60만 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인민무장경찰은 120만 명에서 2003년 150만 명으로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군병력의 감축 효과는 크지 않다.

중국군이 보유한 주요 무기와 장비를 보면, 탱크 7,180대, 18,100문의 견인포, 순양함과 구축함을 포함한 함정 63척, 전략핵 잠수함 1대를 포함한 69정의 잠수함, 전략폭격기 20대를 포함한 전투기 2,600대, 헬리콥터 45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략 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대는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부록 표 III-19 참조).

중국은 1964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풍2호(東風: CSS-1)의 개발을 시작으로 22년만에 전략 핵무기 삼각체제를 완성하였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로 대별되는 다중공중발사시스템(MIRV)을 갖추었으며, 약 4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핵의 공중발사가 가능한 창정(長征)로켓 시리즈와 인공위성인 동광홍(東

方紅), 잠사 미사일인 쥐랑(巨浪),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동풍(東風)을 개발하였다. 현재 중국은 동풍 31호와 41호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표 III-25>에 나와 있다. 아울러 2003년 5월과 2005년 10월에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우주무기개발 가능성을 열었다.

중국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의 자체 개발과 더불어 해외로부터의 무기 구매에도 적극성을 보였다. 이 점은 무기수출이 1993년 약 12억 달러에서 1998년 6억 달러, 2003년 4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무기수입은 1993년, 1998년에 약 6억 달러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2003년에 25억 4,800만 달러 수준으로 급등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주요 무기수입 국가는 구소련에서 해체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다(부록 표 III-29, 30 참조). 이러한 중국의 군비증강은 동북아지역에서 상호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적 안보환경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이 긴요함을 의미한다.

(2)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

중국과 동북아국가간의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은 북한과 유일하게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즉,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경우 군사 및 기타원조를 제공하는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1961년 7월에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중국과 북한 안보협력 관계의 주요 법적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탈냉전기의 전략적 환경변화와 중국의 실용주의 외교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속에서도 군사안보협력

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1994년 최광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과 인민무력부 외사국장인 김학산 소장이 각각 양국을 방문하였고, 1995년에는 순치상(孫啓祥)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군 외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 1996년에는 이상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외사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대북 군사원조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츠하오텐(遲浩田) 중앙군사위 부주석 및 국방부장이 방북하는 등 양국의 군사안보협력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군사협력관계는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3년 12월에 주중 한국무관부, 1994년 4월에 주한 중국무관부 개설로 시작된 한·중 군사관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국측의 소극적 입장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양국간의 군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8년 8월 중국 측의 고위군사 대표단의 방한을 시작으로 1999년 8월 조성태 국방부 장관의 중국 공식방문과 2000년 1월 츠하오텐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1년 12월 김동신 국방장관의 방중은 한·중 군사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켰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및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에 대한 중국측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양국간의 주요 군인사 교류는 <부록 표 III-32>에 정리되어 있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협력은 지역내 차원보다는 세계적인 차원을 고려해 진행되었다. 중·미간 고위급 군사교류는 탈냉전 이후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1994년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의 방중 이

후 양국 국방부장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졌고, 1997년에는 최초로 중국 항모가 미국의 본토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 미국의 전투함도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의 군사교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국의 군사교류에 활성화를 가져다 준 계기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제 반테러주의에 협력하면서부터이다. 2003년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 군 고위층의 접촉과 교류계획을 논의했고, 양국군의 교류 항목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어, 군사교류와 안보협력이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부록 표 III-38 참조).

탈냉전 이전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정상화된 바 있고, 탈냉전 이후에는 중·러간 군사안보협력은 크게 진전되었다. 왜냐하면 중·러간 안보협력은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적 지배를 견제하려는 공통의 이익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양국간의 군사협력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2000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으로 군사협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4월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차오강촨 중국 국방부장을 비롯한 중국의 군부 지도자들과 양국간 장기적인 군사 및 군사기술분야에서의 협력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4년 7월에는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귀보슝(郭伯雄)이 러시아를 방문해 합의한 공동군사훈련을 2005년 8월 실시함으로써 동북아에 새로운 냉전기류를 형성하기도 했다.

몽골은 자국의 안보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군사협력관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인

1992년 중국과 몽골의 군사관계는 중국의 국방부장 천치웨이(陳基偉)의 방몽을 계기로 정상화되었다. 1997년 몽골의 국방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몽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안보협력 관계가 정립되었다. 2000년 중국의 국방부장 츠하오텐의 방몽, 2001년 몽골 국방부장의 방중이 성사되었고, 양국이 매년 군사대표단을 상호방문하고 있다. 중국은 몽골에 군사원조를 비롯해 군의료와 군사학교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국의 군사교류협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⁸³

(3) 지역분쟁 및 갈등

중국은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다양한 분쟁 및 갈등을 겪어 왔다. 러시아와는 흑룡강 유역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북한과는 백두산을 경계로 하는 국경분쟁을 겪었고, 베트남과 타지키스탄 등과도 국경분쟁을 겪은 바 있다. 또한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동남아 각국과의 분쟁과 조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도 겪고 있다. 이중 국경분쟁은 대부분 당사국과의 협정을 통해 일정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현재 갈등 수준은 높지 않다. 예를 들면, 1992년 러시아와 국경협정을 체결하였고, 구소련에서 독립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1996년 중국의 서쪽 국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부록 표 III-42, 43 참조).

중국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⁸³ 劉清才, 21世紀東北亞地緣政治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2004), pp. 230~231.

또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제어하기 위해 국내의 안정과 통합에 치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당분간 지역분쟁 및 갈등을 야기하려하지 않고 가능한 축소 내지 봉합시키고자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동북지역의 안정과 소수민족의 통합을 위해 추진했던 ‘동북공정’(東北工程)이 한국과 역사문제로 커다란 마찰이 발생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봉합시키려 있다.⁸⁴ 그러나 조어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및 분쟁은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에너지 확보라는 문제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 일본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영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미일의 개입이 있을 경우 강경한 대응을 불사한다. 따라서 대만독립과 같은 대만문제와 조어도 영유권 문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분쟁 및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한 잠재적 요인이 된다.

(4) 다자안보협력

탈냉전 이후 중국은 소련의 공백으로 인한 미국의 단일 패권에 대항하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데 다자외교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및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대

⁸⁴ 2002년 2월 공식 출범한 동북공정이 고구려사 왜곡으로 2004년 한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야기하자, 중국은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2004년 8월에 ‘5개 구두양해사항’을 한국과 합의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인바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중국의 역사왜곡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향후 갈등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응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의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는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가치를 내걸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외교를 추진하면서 다극화전략을 구사해왔다. 중국의 다극화 전략은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미국의 단극체제 또는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극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타의 강대국과 동반자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서 다자간 외교를 중시하였다.⁸⁵

중국은 이를 통해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주변국의 경계를 완화함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책임)대국외교는 주변지역에 대한 선린외교와 병행, 전개되었다. 선린외교는 주변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로서 주변국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안보적 불안 심리를 완화시킴으로써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주변정세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15개 국가와 22,8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안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전략의 기조는 중국이 다자안보기구에 적극 참여, 창설, 주도하는 외교적 행보로 나타났다. 1991년 중국은 기존의 다자협력기구인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한 이후 1994년 발족한 ARF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1996년에는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관한 공동협력을 위해 상해협력기구(SCO)를 창설하였고, 2001년에는 우즈베키스탄도 가

⁸⁵ 聶資魯, “論江澤民同志的外交思想,” 中國外交 (2002年, 1期), pp. 22~24.

입시켰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1997년 제1차 10+1(ASEAN+중)회의에 참석하고 상호 동반자관계를 건립하였다. 1999년에는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10+3(ASEAN +한, 중, 일)의 창설을 주도하고 매년 정상회담을 통해 지역 다자협력체로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⁸⁶

한편, 2001년 발발한 9·11테러 사건 이후 중국은 국제테러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반테러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에도 치중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완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시행정부와 안보협력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창청(長城) 2003’이란 반테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03년 8월에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과 함께 ‘연합 2003’이란 반테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2002년 10월 발생한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2003년 4월 북경에서 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개최하고 주변 지역인 동북아의 안정적 환경 조성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중재노력은 2003년 8월에 남북한 및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2004년 2월과 5월의 2, 3차 6자회담을 거쳐 2005년 7월과 9월의 4차 6자회담까지 연이어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은 6자회담의 유지, 존속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6자회담을 통한 다자협력이 완중국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켜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미국의 주도를 일정 수준 견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

⁸⁶ 門洪華, 构建中國大戰略的框架, pp. 274~276.

서 중국은 한국이 제안한 바 있는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6자회담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6자회담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⁸⁷

(5) 다자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과 뒤이은 사회주의권 붕괴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제와 이념을 단속한 후,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였다. 경제발전을 통한 종합국력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실용주의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경제협력을 중시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체인 WTO에 대한 가입을 시도해왔고, 2001년 가입에 성공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협력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계되어 주변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개방 초기부터 중국에 진출한 해외자본의 대부분은 홍콩과 대만 및 동남아 지역의 화교자본이었으며, 이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에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국제분업 질서를 주목하고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는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했다.⁸⁸ 실제로 이들 국가간의 무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경제적 상호 협력이 강화되었다.

⁸⁷ 朱鋒, “朝鮮問題六方會談前途分析,” 現代國際關係 (2005年, 第1期), pp. 26~33.

⁸⁸ 1990년대 초반 중국은 이를 ‘동아모델’(東亞模式) 혹은 ‘동아현대화’로 분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羅榮渠 現代化新論 (北京: 北京大出版社, 1993) 참조.

따라서 중국은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시해왔다. 다만, 중국은 이를 동북아로 국한시키지 않고 동아시아로 폭넓게 인식하고 포용하였다. 중국이 인식하는 동아시아는 지리적 구분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역사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즉, 중국은 한국이 제기하는 남북한 및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개념과 달리 동아시아에 중국을 포함시킨다. 중국이 규정하는 동아시아 국가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북한 및 일본, 몽골, 러시아 동부와 동남아국가를 지칭한다.⁸⁹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는 동아시아에 포함되며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이 그 기저에 흐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적극적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주변국이 우려하는 ‘중국위협론’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완화시키면서 평화적 부상(和平崛起)을 달성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즉, 주변국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의 강화를 통해 상호의존도를 증대시켜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창출하고, 이것을 상호 안보협력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11월 중국이 아세안과 FTA의 설립에 합의한 것이다. 중국은 1992년 아세안의 협상 파트너에서 1996년에 전면적인 대화파트너로 발전하였고, 1997년 10+1(아세안+중국)의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동반자관계를 건립하였다. 특히 외환위기시 중국은 동남아 국가에 협조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2001년 10+1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간의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합의하고, 2002년에 2010년까지 전면

⁸⁹ 약간의 견해차가 있으나 대부분은 미국을 동아시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러시아도 일부지역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楊貴言, 當代東亞問題研究簡論 (北京: 人民出版社, 2004), pp. 6~18.

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⁹⁰ 2003년에는 동남아국가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연합선언’에도 서명하였다. 반면에 동북아와의 다자간 경제협력에는 다소 소극적이다. 한·중·일 3국의 FTA 논의에는 참여하고 있으나, 일본을 의식해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2003년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진흥계획’을 결정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⁹¹ 따라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국의 경제협력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는 중국이 2003년에 SCO 회원국과 경제무역협력 요강을 비준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데서도 나타난다. 또한 미국에 대응해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중국은 2004년 9월에 경제무역과 에너지 협력 방안에도 합의함으로써 경제와 안보협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러시아의 세력 약화를 기회로 미국이 몽골과의 관계를 강화하자,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우려해 몽골에 대한 경제협력과 투자를 강화한 것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사례로서 지적할 수 있다.⁹²

이처럼 중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상호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경제협력의 경험과 ARF, 10+3정상회의, 6자회담 등의 경험을 축적해 동아안보

⁹⁰ 전병곤, “중국의 다자주의 지역전략: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0권 1호 (2003, 봄), pp. 133~150.

⁹¹ 李學林, “中國大陸振興東北老工業基地 之研析,” *展望與探索*, 第2卷 第8期 (2004. 8), pp. 18~31.

⁹² 몽골 국방부 산하 전략연구소 부소장과의 인터뷰, 2005년 7월 27일.

공동체를 달성하려 한다.⁹³ 다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사, 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고 정치체제와 이념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로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경쟁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동북아시아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동아시아공동체라는 큰 틀의 하위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중국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고자 한다.

(6) 국제군비통제

중국은 BWC, CCW, CWC, CTBT, NPT 등 국제군비통제체제에 가입하였다(부록 표 III-44 참조). 북한을 고려해 PSI에 대한 가입을 유보하고 있으나, 2004년 5월에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개최된 핵공급그룹(NSG)에도 가입하였고, MTCR(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대한 가입의사도 여러 가지 경로로 밝혀왔다.⁹⁴ 중국은 국제적 위상의 증대와 WMD확산 방지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협조를 위해 국제군비통제체제에 적극적인 가입과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다. 정치

(1) 정치체제의 유사성

중국의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3개의 기본제도는 인민대표대회제와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협력제 그리고 정치협상제이다. 중국은 현

⁹³ 蔡建國, 21世紀的東亞:機遇,挑戰與創新 (上海: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4), pp. 242~244.

⁹⁴ 2004~2005 동북아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p. 37~38.

법에서 인민민주독재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 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성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해방군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며,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이 된다. 5년 임기의 전인대에서 국무원을 비롯한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구성한다.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중국의 모든 국내외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정부이다. 국무원의 수반은 총리로서 국가주석의 추천에 의해 전인대에서 선출된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체제는 인민공화정체와 회의제정부로 구성된다.

두 번째로 공산당 지도하의 다당협력제는 독특한 중국의 정당제도를 설명한다. 중국의 정당 정치는 일당제, 양당제, 다당제와 달리 중국공산당이 중국내에 존재하는 여러 정당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통치하는 것으로서, 헌법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의 정치협상제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각 정당, 인민단체, 소수민족, 사회 각계인사들이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협상하고 정책을 집행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27년간 추진하면서 시장화, 사유화, 다원화라는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는 여전히 자유 민주국가와 다른 공산당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는 여타의 자유민주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다. 동북아국가의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를 분류한 다음 표를 보면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정치권리와 시민자유를 측정한 것으로서, 각각 1등급이 가장 자유롭

고 7등급이 자유롭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권리는 최하 등급인 7등급이고, 시민자유는 그 아래 등급인 6등급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된다. 동북아국가중에서 북한이 이 두 개의 분야에서 모두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받아 가장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중국이 그 다음의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된다(부록 표 III-46 참조).

(2) 지역내 정치협력

<표 III-4> 1990년대 이후 중국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1990~1995		1996~2000		2001~현재(2005. 7)	
	정상 회담	장관급 회담	정상 회담	장관급 회담	정상 회담	장관급 회담
중국	4	-	6	2	6	7
한국	-	-	8	11	12	16
북한	-	-	-	-	2	1
미국	-	-	-	-	14	10
러시아	2	-	6	4	9	9
몽골	1	3	4	3	2	2

<중·미관계>

탈냉전 이후 중국은 소련의 공백을 메움으로써 미국의 단일패권을 견제하고자 하였고, 미국은 잠재적 위협국으로 중국을 경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양국은 대만문제, 인권문제, 무역마찰문제, 무기판매문제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마찰을 보였다. 그러나 1997년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미와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의 방중 등 양국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

다.⁹⁵ 한때 보수적인 공화당의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관계는 경색되기도 하였으나,⁹⁶ 9·11테러 사건 이후 양국은 반테러 국제주의에 협력하면서 관계를 복원시켰다.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2002년 2월과 10월에 3차례에 걸친 장쩌민 국가주석과 부시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적 차원에서 상호협력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2003년 6월과 2004년 11월에 후진타오 주석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과 상호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하였고,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한 역내 안보문제에서도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은 상호 경계심을 유지한 채 전면적인 대립을 자제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부록 표 III-57 참조).

<중·일관계>

탈냉전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실용주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투자와 기술을 필요로 했고, 일본은 중국의 광활한 시장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등 쌍방이 모두 양국관계에서 실리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8년 11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은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1999년 7월의 오부치 일본총리의 방중, 2000년 10월 주용기 총리의 방일, 2001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중 등 정상들의 잇단 방문으로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양국간의

⁹⁵ 중·미관계는 3대 공동선언문에 기초하고 있다. 즉, 1972년 ‘상해공동선언’과 1979년 ‘수교공동선언’ 그리고 1998년 장쩌민과 클린턴의 ‘공동선언’이 그것이다.

⁹⁶ 2001년 4월의 중·미 군용기 충돌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역사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동북아에서의 상호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마찰도 병행되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문제와 군사,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불신 등으로 최근까지 최고위층의 상호방문이 성사되지 않고 있어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다(부록 표 III-53 참조).

<중·북관계>

탈냉전기 초기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호관계를 유지했으나,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양국관계는 냉각상태로 접어들었다. 특히, 탈냉전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주던 중소분쟁이 사라지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실용주의 외교를 전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과 북한 간에 강조되던 혈맹관계도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90년대를 관통했다. 중·북관계가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된 것은 1999년부터였다. 1999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1991년 김일성 주석의 중국방문 이후 총리급 이상으로는 8년만의 방중이었다. 북한은 경제난을 비롯한 체제위기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동요를 방지하고자 했고,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관계복원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북한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었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양국은 활발한 상호교류를 추진해왔다(부록 표 III-56 참조).

<중·한관계>

1992년 8월 중국은 한국과 정식 국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수교 후 초기의 양국관계는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외교 및 사회·문화 부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중을 시작으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방중했고,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이 1995년 방한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특히,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과 더불어 양국관계는 ‘21세기를 향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수립했고,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 양국은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중수교 이후 양국의 정상회담과 총리급 회담이 거의 매년 각기 10여 차례씩 이루어졌고, 50여회에 걸쳐 양국 외무장관 회담이 성사되어 국제무대에서 양국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주요 인사가 상호방문한 내용은 <부록 표 III-47>에 정리되어 있다.

<중·러관계>

중국은 러시아와 탈냉전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이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에는 러시아와 ‘국경협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해묵은 영토문제에 합의했으며, 1994년에는 건설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1995년에는 러시아 외무장관과 국방부장이 중국 외무부장과 리펑 총리가 상호방문을 하였고, 1996년에 러시아 대통령 엘친이 북경을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1997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대항하는 중·러간의 안보조약 확인으로 양국관계는 더욱 확고해졌으며, 2001년 장쩌민 주석의 러시

아 방문을 계기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에 협조할 것을 표방하였다. 특히, 최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과 공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통상관계가 중국과 미·일의 그것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이 향후 협력관계의 확대 발전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부록 표 III-54 참조).

<중·몽관계>

중국과 몽골은 역사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며, 소련의 영향아래 놓여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1989년 중·소관계가 정상화되었고, 뒤이어 소련이 몰락함에 따라 몽골과 중국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다. 1994년 리펑(李鵬)총리가 몽골을 방문하여 ‘중·몽 우호협력관계’를 정립한 후 1998년 몽골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은 ‘선린우호협력관계’로 발전하였다. 1999년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몽으로 양국관계는 ‘선린·상호신뢰 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였다. 특히 부시행정부 이후 미국이 중앙아시아 진출과 함께 몽골과도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몽골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2003년에 후진타오가 몽골을 방문하여,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몽골의 기반시설 건설과 자원개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유도 무상으로 원조하였다. 더욱이 양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도 체결함으로써, 중국은 몽골의 최대 투자국이 되었다⁹⁷(부록 표 III-55 참조).

⁹⁷ 劉清才, 21世紀東北亞地緣政治, pp. 227~230.

(3) 국내적 요인

동북아 다자협력을 촉진하는 중국의 국내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성과를 계속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의 달성을 국가목표로 상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주변환경과 함께 주변국과의 경제안보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의 다자간 경제안보협력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비록 중국이 동아시아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의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협력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목표를 위한 정책화와 정책수행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중국공산당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은 “선린동반자 관계를 견지하여 지역협력을 강화하며, 주변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적극적으로 다자외교 활동에 참여하여 UN 및 기타 국제기구 혹은 지역성 기구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개발도상국가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⁹⁸

이러한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의지는 국무원을 통해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반영되는데, 국무원의 직속 사업단위인 중국사회과학원과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에서 정책연구를 거친다. 특히,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산하기구인 세계발전연구소에서는 공동연구 및 학

⁹⁸ 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2002), p. 47.

술회의 등 국제교류와 협력에 적극적이며, 세계발전연구, 세계발전상황 등의 간행물을 통해 동북아협력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게재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산하에 아주태평양연구소,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일본연구소, 미국연구소 등에서 동북아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산하에 러시아연구소, 미국연구소, 일본연구소, 세계경제연구소 등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연구실에서 동북아안보기제, 조선핵위기와 동북아안보 등의 연구성과물을 내고 있다.

이밖에 북경 외교학원의 동아연구센터와 상해사회과학원 및 국제문제연구소 등에서 동아시아 협력 관련 연구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동북지역의 경제안보 협력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지방의 특성상 동북지방 소재 사회과학원과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이 대표적이다. 상술한 연구기관들을 포함해 1990년대만 40여개의 동북아 정치·안보에 관한 연구기구와 학술단체가 새로 출범할 정도로 중국 내 동북아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주요 연구기구와 단체들은 대체로 3개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북지방에 약 20개, 북경 등을 포함한 화북지역에 59개,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방 및 기타지역 약 24개 등이다.⁹⁹

한편 동북아지역에 대한 민간성격의 연구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성립된 연구단체나 학회에서 주도하는데, 대부분 대학 혹은 사회과학원 내에 그 조직을 두고 있다.¹⁰⁰ 이들의 연구와 대외

⁹⁹ 金熙德, 中國的東北亞研究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1), pp. 93~95.

¹⁰⁰ 물론 이들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며, 경제적 지원과 그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위로부터 아래로'와 '아래로부터 위로'형 성되는 중국내 민간조직의 분류를 따르면, 이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형성된

교류의 주요 방향을 보면, 일본연구와 중·일관계가 제일 많고, 한반도연구와 중한관계가 그 다음이며, 동북아 전체에 대한 연구는 제일 적다.¹⁰¹

반면에 중국의 동북아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내부 요인들도 적지 않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요인은 중국이 스스로 구축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관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동북아지역에 국한된 협력보다는 동남아지역까지 포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중화사상에 기반한 중화질서를 구축했었고, 자기중심의 천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CO를 통한 중앙아시아지역과의 다자경제안보협력과 남아시아의 인도와도 경제협력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동북아지역은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전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반일감정이 동북아 다자경제안보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동북아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체제의 특성 및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의 성과를 통해 체제의 합법성과 당 지배의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은 당-국가(party-state)체제라는 레닌주의 특성이 여전히 건재한 국가이다. 이러한 체제와 이념의 상이성은 동북아 다자협력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등장한 지역간·계층간 격차 및 부정부패, 소외된 농민과 소수민족의 통합문제 등 경제발전의 부작용이다. 이는 중국인민의 불만과 동요를 낳아 체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² 따라서 중국은 당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간연구의 성격이 있다. 王名, 中國民間組織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1), p. 5.

¹⁰¹ 金熙德, 中國的東北亞研究, p. 95.

¹⁰² 중국체제의 불안정 요인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을 참조.

지배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내부문제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¹⁰³ 이 점은 중국이 동북아 다자경제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라. 사회·문화

(1) 통신·교통

중국 통신·분야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2002년 통신업 총생산량은 5,052억 위안(元)으로 전년도에 비해 23.2% 성장했다. 이동통신을 포함한 전화기 보급대 수는 4억 2,104만 개로서, 전년에 비해 29.3% 성장했다. 전화보급률은 100명당 33.6대로서 역시 전년에 비해 29.7% 성장했다.¹⁰⁴ 인터넷도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확산, 보급되고 있다. 1999년 400만 명에 불과했던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2000년 약 900만 명, 2001년 약 2,200만 명, 2002년 약 3,300만 명, 2003년에 6,8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사용자 수에 있어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나, 보급률에서는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용자의 구성도 대부분 30대 이하의 연령층과 고소득, 고학력층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북경, 상해와 같은 대도시나 광둥성, 절강성과 같은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중국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그룹이라는 점과 향후 사용자 수가 더욱 증가할

David Shambaugh, ed., *Is China Unstable: Assessing the Factors* (Armonk, New York, London: M.E. Sharpe, 2000).

¹⁰³ 이의 일환으로 중국은 당의 집권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화로운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¹⁰⁴ 張曉明·胡惠林·章建剛, 2004年: 中國文化產業發展報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p. 43.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의 확산은 중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도구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육성하는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일차적으로 모든 국제적인 인터넷 접속을 차이나 텔레콤에 국한시키고, 4개의 국영회사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허가하며, 마지막으로 공안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인터넷은 향후 중국사회의 개방화와 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율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매체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동북아협력의 활성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부록 표 III-68 참조).

중국의 육지 면적은 약 9,326,410 평방 km이며, 섬을 포함한 총면적은 9,596,960 평방 km로 한국의 44배, 세계 육지 총면적의 1/15, 아시아 대륙면적의 1/4로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이렇게 광활한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열악한 상황이다. 동남 연해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개방과 개혁으로 인해 이 지역은 비교적 발달했으나, 중서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열악한 편이라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1993년 중국의 철로는 약 5만 8천km, 도로는 108만km로 그 중 고속도로는 1,200km, 내륙하운(河運)은 11만km, 항로는 96만km로 그 중 국제선은 27만km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0년 뒤 철로는 10만km, 도로는 180만km로 그 중 고속도로는 3만km, 내륙하운은 12만km, 항로는 174만km로 그 중 국제선은 71만km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넓은 국토면적을 고려하면 여전히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다.

(2) 교육 · 관광

중국의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직업교육, 보통고등교육, 성인교육, 사범교육 등으로 분류된다. 기본교육은 초등학교(小學), 중학교(普通中學), 고등학교(普通高中), 특수교육과 유아원교육을 포함하며, 중학교까지 9년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록 표 III-72>에 보듯이, 중국의 각급 학교의 수는 인구감소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3년 기준 각급 학교의 재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억 1,689만 명, 중학교가 6,618만 명, 고등학교가 1,964만 명, 대학교가 1,108만 명에 달한다. 13억에 달하는 중국의 인구를 감안하면,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비율이 낮은 편인데, 전체 인구중에 차지하는 대졸자의 비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의 두뇌를 길러내는 대학원생과 유학생의 수를 보면, 1993년에 10만여 명에서 2003년에는 65만여 명으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외의 선진 학문을 이수하려는 유학생도 1993년에 1만여 명에서 1997년에 2만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3년에는 유학생 수가 감소했으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유학생 수는 1993년 5천여 명에서 2003년에 2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최근 교육개방을 단행했으며 유학생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동북아협력의 인적 기초와 학문적 교류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관광객만이 아니라 해외관광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해외로 출국한 중국인은 2000년도에 1,000만 명을 처음 돌파하더니, 2003년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하여 약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반면에 중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수 역시 2000년도에 1,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크게 증가하지 않고 소폭적인 증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중국 내의 관광기반산업과 시설의

미개발에 원인이 있다.

중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한국, 러시아, 미국, 몽골 순으로 많다. 일본은 2000년도에 2,000만 명을 돌파한 후 200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2000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한 후 2002년에 2배인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한·중·일간의 인적 교류가 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접국인 러시아도 2000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한 후 계속 그 선을 유지하면서 3위권에 있고,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하고 있는 미국도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어, 중국과 동북아국가와의 인적 교류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구가 240만 명에 불과한 몽골이 매년 4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부록 표 III-76 참조). 인적 교류는 국가 간 협력의 가장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북아지역 협력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마. 소결

이상에서 지역협력의 인프라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 안보, 정치, 사회·문화별 기초지표를 점검하였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과 동북아국가간의 활발한 무역 및 교류를 유지함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였고, 이러한 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아국가간 정치,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국이 경제발전에 치중하고 있고 이를 위해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주변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상호의존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창출하고, 이것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 점은 중국이 『10+3회의』와 6자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경제 및 안보협력에 일정수준 이상의 가능성을 축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지역이 아닌 동북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더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협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우선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자기중심적이고 주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치체제의 경직성이나 불안정성 등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거론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초강대국 미국의 중국견제, 중·일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정치안보 환경을 감안하면, 중국의 역내 정치안보 협력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중국의 국방력 증강 실태와 중·러, 중·북간의 긴밀한 협력, 대만문제 및 조어도 등 갈등의 잠재적 요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동아시아 협력의 큰 틀에서 동북아지역 협력을 접근하고 있으며, 역내 안보협력보다는 경제협력을 더욱 중시한다. 따라서 중국은 기능적으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역내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한 후 점차 정치·안보영역의 협력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근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협력과 함께 동아시아지역의 협력을 중시한다. 일본이 인식하는 동북아지역은 몽골, 만주,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대동아공영권에 중국과 러시아 동부를 포함한 지역이며 광의의 개념으로는 미국을 포함할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동북아지역에 동남아시아를 포함시킨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일본이 추진해온 경제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동북아지역을 정치, 안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축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동남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지역의 국제분업 질서가 일본의 경제발전과 역내 리더십 창출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은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과 경쟁·대결해야 하는 지역이고,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일본은 동북아협력에 대하여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동아시아에서 ASEAN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성을 띠는 편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동북아지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을 하되 경쟁적 요소가 상존하고, 정치군사적 협력도 점진적이고 서두르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비교적 소극적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ASEAN과 한국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또는 협상 중에 있으나, 중국과의 협상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과의 무역 투자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일본경제의 회복이 중국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있을 정도이다. 중·일간의 협력에는 양국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중국과 지역패권을 다투는 상황이라서 동북아 안보협력에 다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최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성사되어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는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다소 소극적이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빠지거나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필요한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전통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안보를 중시해온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동북아지역의 정치경제안보협력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가. 경제

(1) 기초지표

<GDP>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을 이룩하여 1980년대 말에는 미국경제에 도전할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1990년대의 장기불황을 거쳐서 서서히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의 경제특수를 누리고, 1970년대에는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면서 변동환율제로의 변화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극복하고, 1985년 플라자합의에 의한 엔고의 환율변동에 적응하면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거품경제가 무너지고 장기침체에 들어섰다.

일본의 GDP 실질성장률은 90년대 장기불황에서 1993년 0%에서 1998년 -2.6%까지 내려갔다가 2000년대 들어서 회복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2003년에는 2.3%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2003년 기준 동북아시아 1그룹 국가(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의 전체 평균 성장률인 4.04%와 동북아시아 2그룹 국가(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의 전체 평균 성장률인 4.3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일본경제의 회복 기미가 보이는 것은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실질적 경제성장도 있지만,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경제와 연계된 경제부문의 소득증대가 경제성장률로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90년대 장기불황 동안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물가와 임금의 하락현상이 나타났다. 인구는 미미한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도 증가하여 2003년 5%를 넘었다.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크게 증대하지 않았고 오일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장기불황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구매력(ppp) 기준 일본의 GDP도 점진적 성장을 기록했다. 1993년 2조 5천 49억 달러였던 GDP가 5년 뒤인 1998년에 2조 9천 3억 달러로, 2003년에는 3조 5천 6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03년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일본경제의 비중은 다소 축소되었다. 동북아지역 1그룹 국가의 전체 GDP는 10조 8,990억 달러로서, 이중에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2.7%이다. 동북아지역 2그룹 국가의 전체 GDP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4%로서, 일본경제의 규모는 동북아에서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생산 비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1차 산업인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에서 2003년 1.4%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차 산업인 공업의 비중은 38%에서 30.9%로 감소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60%에서 67.7%로 증가했다. 세계적 수준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일본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 전형적인 선진국가의 유형에 해당된다. 이 점은 1인당 GD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매력 기준 일본의 1인당 GDP는 1993년에 20,400달러에서 1998년에 23,100달러, 2003년에는 28,000달러로 점진적 성장을 기록하여, 동북아 1그룹 국가의 평균인 10,700달러의 두 배를 넘고, 동북아 2그룹 국가의 평균인 14,314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부록 표 III-1 참조).

이처럼 일본경제는 최근 10년간 장기침체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경제규모는 동북아지역의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향후 일본경제의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경우 동북아지역의 협력에서 일본의 비중 및 발언권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일본은 인구 1억 2천을 넘는 인구대국이지만 출산률은 저조하고 인구증가률은 감소해왔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0.31%이던 인구

증가율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0.25%로 감소하였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0.17%로 감소했다. 일본의 절대인구는 1995년에 1억 2천 5백만에서 10년 후인 2005년에 1억 2천 8백만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2005년 기준 일본의 인구는 동북아 1그룹 국가의 총인구인 15억 1,688만 명의 8.4%를 차지하며, 동북아 2그룹 국가의 총인구에서 6.5%를 차지했다. 일본의 인구는 동북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규모의 원천이 되고, 동북아의 인적 문화적 교류에 상당한 비중을 갖는다(부록 표 III-2 참조).

2003년 기준 일본의 노동력은 6,666만명으로서 근면하고 우수한 상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2003년 기준 전체 노동자 중 농업 종사자가 5%, 공업 종사자 25%, 서비스업 종사자가 70%인 선진국형의 노동력분포를 지니고 있다. 실업률은 1993년 4.4%에서 2003년에는 5.3%로 증가했다.

<표 III-5> 일본의 노동력

일본의 노동력	(Source: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 http://globaledge.msu.edu/statistics >
전체 노동력	66.66 million (2003)
부분별 노동력	서비스업 70%, 공업 25%, 농업 5%

<에너지>

일본은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라 에너지 수급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 2002년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21.965 Quadrillion Btu로써 4,286 Quadrillion Btu의 생산량을 훨씬 초과했다. 2002년 일일 원유

소비량도 530만 bbl로써 1만 7천 bbl의 생산량을 훨씬 초과했다.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동북아 1그룹 국가 전체의 29.4%, 원유 소비량은 41.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적지 않다(부록 표 III-5 참조).

일본의 에너지 소비추세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에너지 공급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에너지 공급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해외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로 상존해 왔으며, 일본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에너지 문제는 동북아지역의 협력에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2) 무역 및 투자액

일본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무역 및 투자액도 증가하였다. 1993년 일본의 수출액은 360.9억 달러였으나, 1998년 44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다시 5년 뒤인 2003년에는 447.1억 달러로 증가하여 10년 동안 약간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3년 기준 일본의 수출액은 동북아 1그룹 국가의 총 수출액인 1,086.064억 달러의 약 41%를, 동북아2그룹 국가의 총 수출액인 1,934.964억 달러의 약 23%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수입액은 1993년에 240.7억 달러, 1998년에 319억 달러, 2003년에 346.6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2003년 일본의 수입액은 동북아 1그룹 국가의 총 수입액인 922.331억 달러의 약 37%를, 동북아 2그룹 국가의 총 수입액인 2,257.131억 달러의 약 15%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중국, 한국, 동남아 등이며,

2003년 일본의 상위 수출 대상국에 미국, 중국, 한국이, 상위 수입 대상국에 중국, 미국,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 확실히 동북아지역에 일본의 무역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도 증가하였는데,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2,023억 2,000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가 1998년에 2,41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3년에 2,880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3년의 해외직접투자액은 같은 해 동북아 1그룹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 중에 84%를 차지하였고, 동북아 2그룹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 중에서도 52%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본이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국가임을 보여준다.

일본의 수출액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들면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대했다. 주요수출국으로는 미국이 선두이고 중국과 한국이 2위, 3위로 부상했다. 주요수입국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다. 한국이 3위이다. 직접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해외로의 투자액이 국내로의 투자액보다 훨씬 많다(부록 표 III-6 참조).

동북아공동체와 관련하여 일본은 동남아를 포함하여 ASEAN을 중시해 왔다. 일본경제에서 직접투자액을 고찰해 보면, ASEAN 4개국의 비중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ASEAN은 중국에 대한 집중 투자의 리스크 등을 고려한 경우 수출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SEAN 각국을 단위로 동종 제품 및 부품을 생산하는 등의 ASEAN에 있어서의 기존의 경영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재편성하여, ASEAN 전체를 그 대상으로 파악한 경영전략 (국가별 최적에서 ASEAN 최적으로)의 구축을 통

해서 ASEAN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한편 현재의 동아시아에서는 ①중국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계층화된 신수요 증대, ②동아시아에서의 발달된 주변 산업이나 저비용 인건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산 및 분업 체제의 최적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ASEAN,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하나의 사업 범위로 보고, 그 속에서 최적의 생산 분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공급체인 전체로서의 비용 절감을 꾀하는 방안이 일본 기업의 대아시아 진출 전략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 ASEAN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자본이 축적되어 있다(2001년의 증권 기준으로 대 중국 직접투자의 1.8배). 또한 생산거점인 중국으로 집중된 리스크를 회피하고 거점간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최적 생산분업 체계의 구축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¹⁰⁵

일본은 아세안 정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동남아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이 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일본이 중국과의 대아세안 협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파악되어 중·일간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⁰⁶

(3) 국가간 수출입 matrix

1993년, 1998년, 2003년에 일본과 동북아국가간 수출 실적을 보면, 북한과 몽골을 제외하고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일

¹⁰⁵ 中澤則夫, “東アジア經濟協力の強化と對外經濟政策の推進”(발표논문, 2003).

¹⁰⁶ 日本經濟新聞, 2003년 12월 12일.

본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동북아 6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액도 1993년에 1,451억 9,100만 달러에서, 1998년에 1,565억 1,900만 달러로, 다시 2003년에 2,115억 9,3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기간 일본과 동북아국가간의 수입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부록 표 III-9>를 보면, 일본의 동북아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1998년에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 다시 증대한 점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대한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일본의 총 무역액이 크게 증대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동북아 6개국의 무역액 증가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일본의 총 무역액 중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1993년 39.2%, 1998년 41.3%, 2003년 43.1%로, 10년간 40%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무역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과 동북아국가간 무역 중에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은 미국, 중국, 한국의 순으로 나타나며, 이들 상위 3개국의 비중은 2003년의 경우 약 98.3%를 차지할 정도로 막중하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8.8%, 1998년 67.7%, 2003년 48.8%로 소폭 감소된 반면, 중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16.1%, 20.7%, 36.0%로 약 2배 증대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대동북아 경제교류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은 1993년 1.8%에서 2003년 1.6%로 감소되었고, 특히 북한과 몽골의 비중은 0.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제교류는 한국, 미국, 중국 3국과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일본의 중국과의 수출 수입량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세추세에 있으나 일본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도 2000년대에 들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전 수출입액 중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부록 표 III-9 참조).

(4) 자유무역협정(FTA)

세계적으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등이 체결되었고, 각국 별로 FTA의 체결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데 반해 동북아국가간의 FTA 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2년 말 발표한 일본의 FTA 전략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FTA 체결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뉴질랜드, 비아시아 지역으로 멕시코를 그 다음 대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다.¹⁰⁷ 아세안 중에서 이미 싱가포르와는 2002년 초 전면적 경제협력 협정인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동반자협정’(Japan-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 JSEPA)을 체결했다. 일본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FTA 협정 체결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아세안 전체와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FTA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일본 국민의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한국을 제외하고는 경제

¹⁰⁷ 박변순,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방안” (발표논문, 2003).

동반자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FTA는 관세 및 투자 등 기본요소들 외에 무역관련 수속, 상호인증, 서비스, 인력이동과 경쟁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FTA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싱가포르와의 협정에서 농업분야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듯이 일본은 농업 분야 등 일부 취약산업에 대한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한·중·일 FTA 체결 추진 합의에 따른 3국의 참여 연구기관의 하나인 일본 NIRA의 3국 공동 비즈니스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한·중·일 3국간의 FTA 추진에 대한 3국의 비즈니스계의 찬성률이 모두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상과 달리 한국이 70.9%로 제일 낮은 비율을, 반면 중국이 85.3%로 제일 높은 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⁸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과 FTA를 체결했고,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협상중이며, ASEAN, 칠레, 인도네시아, 대만 등과의 FTA를 검토중이다(부록 표 III-15 참조).

나. 안보

최근 일본은 보통국가화에 따른 군사대국화의 추세에 따라 군사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을 견제하는 미·일간 안보동맹의 강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안보측면에서의 동북아지역협력에 비

¹⁰⁸ Kazutomo Abe,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roles of Free Trade Area* (mimeo, 2003).

교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4년 12월에 일본 각의를 통과한 신방위대강의 취지는 새로운 안전보장 환경과 일본의 평화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고, MD시스템 정비에 기초하여 방위계획 대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안전보장환경의 변화로서, 종래의 국가간 대결 외에 비국가단체의 위협이 증가하고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 및 테러와의 전쟁 등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노력과 역할이 강화되고, 세계적으로 상호의존과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증대된 반면 일본에의 본격적 침략사태는 저하되었다고 인식했다. 일본 안보의 기본방침으로 직접위협 방위와 피해 최소화, 전수 방위·민민통제·비핵3원칙 등의 유지를 제시했다. 이외에 일본의 통합적 대응, 미·일안보체제의 정비,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구상을 발표했다. 방위력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본격침략에 대처하고 국제활동에 주체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다. 방위력의 기본사항으로는 통합운동, 정보기능, 과학기술, 인적자원 등을 언급했다.

2004년 12월에 각의를 통과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년도~2009년도)에 의하면, 계획방침으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안보환경하에서 방위행정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적확하게 대응하고 통합운동 및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장비품 등의 취득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미·일안보체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재정사항을 고려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방위청과 자위대의 조직개편으로 내무부국 등의 존재형식을 검토하고, 통합운동을 기본으로 체제를 강화,

육상자위대는 5개 사단, 1개 여단, 2개 혼성단을 개편하고, 해상자위대는 호위함부대를 8개 호위대로 개편하고, 항공자위대는 경계항공대를 2개 비행대로 하고 공중급유 및 수송부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능력 등 주요사업으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의 실효적 대응, 본격적인 침략사태 준비, 국제적 안보환경 개선의 주체적 적극적 노력, 방위력의 기본 사항 등을 제시했다. 미·일 안보체제의 강화시책으로, 정보교환과 정책협의, 운용협력과 공동연습 훈련, MD방위의 협력 추진, 장비 및 기술 교류, 주일미군의 주둔 원활화, 국제사회에서의 연대강화 등을 제시했다.

(1) 군사력

일본의 군병력은 1993년 23만 7,700명, 1998년 24만 2,600명, 2003년 23만 9,900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육상 자위대 14만 8,200명, 해상 자위대 4만 5,600명, 항공 자위대 4만 4,4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군은 1993년에 4만 6,500명에서 2003년 약 4만 7,000명으로, 준군사부대는 1만 2,000명에서 2003년 1만 2,250명이 되었다.

일본군이 보유한 주요 무기와 장비를 보면, 탱크 1,020대, 870문의 견인포, 순양함과 구축함을 포함한 함정 54척, 16정의 잠수함, 전락폭격기 20대를 포함한 전투기 350대, 헬리콥터 192대를 보유하고 있다(부록 표 III-20 참조).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폭의 증가를 보여 왔다. 1993년 국방비는 398억 6천 7백만 달러였고, 1998년 413억 6천 2백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427억 2천 9백만 달러로 늘어났다(부록 표 III-17 참조). 이런 금액 산정에 미사일방어(MD)체제를 위한 미·일간 공동연구개발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

다. 또한,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술개발과 플루토늄의 구입 및 저장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90년대 말에서 부터 지금까지 일본 군사력의 변화는 크지 않은 편이다. 최첨단 항공모함인 이지스함을 4척 보유하고 있고 4척 더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수개월 내에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제조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미·일 공동연구를 통한 미사일기술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국방비 규모에서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4위이고, 병력규모에 있어서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세계 23위에 머물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핵무기 제조기술과 다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수개월 내에 다수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의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로부터의 무기 구매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이 점은 무기수출이 1993년 1천백만 달러에서 1998년 2천만 달러로 소폭 증가한 반면, 무기수입은 1993년에 21억 달러에서 1998년에 23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주요 무기수입 국가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증강은 중국의 군비증강과 함께 동북아지역에서 상호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며, 동북아지역의 평화적 안보환경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이 긴요함을 의미한다.

(2)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

일본과 동북아국가간의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을 개괄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일본은 미국과 유일하게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즉, 어느 일방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경우 군사 혹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미·일안보조약을 1952년 4월에 체결하고 1960년 6월 개정했다. 이 조약은 현재까지 유효하며 일본과 미국 안보협력관계의 주요 법적 틀로서 기능하고 있다. 탈냉전기의 전략적 환경 변화 속에서 미·일동맹은 신가이드라인을 책정하는 등 동북아의 안보환경에 적응하며 군사안보협력은 유지되어 왔다. 9·11테러 사건 이후 미·일동맹은 강화되면서 대테러전쟁에 협력을 해왔다. 또한 미·일안보조약의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미·일안보동맹을 강화시켜오면서, 양국은 일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사일방위체제(TMD)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일간의 군사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군사협력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고, 1990년대 중반부터 양국간의 군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북핵문제 및 한·미·일 공조체제의 가동으로 한·일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온 연유이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관계는 1966년 11월에 주일 한국무관부, 1967년 9월에 주한 일본무관부 개설로 시작되었다. 한·일간 국방장관회담이 1994년 이래 정례화 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상호 방문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방공실무회의는 이미 1991년 이후 정례화 되었다. 연 1회 실시되는 국방정책 실무회의는 1994년 이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공동으로 시행되는 안보정책협의회는 98년 이후, 해군 대(對) 해군회의는 99년 이후 정례화 되었다. 또한 연 1회 실시되는 합참 통막간 회의는 99년 정례화 이후 2004년 12월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보교류회의는 정보본부

와 육·해·공군간 년 2회에 교환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1995년 6월 5일에 한·일 군용기 우발사고방지 조치 합의서한이 교환되었고, 1997년 7월 3일에는 한·일 공군간 HOT-LINE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한 교환하여 1997년 9월 1일에 오산 MCRC와 후쿠오카 서부관제소 사이에 HOT-LINE이 설치되었다. 양국간의 주요 군인사 교류는 <부록 표 III-33>에 정리되어 있다.

일본과 러시아 간에는 북방 4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3년 1월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일본과 미국의 군사협력은 지역내 차원과 세계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 진행되었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양국의 군사교류에 활성화를 가져다 준 계기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협력하면서부터이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외무국방장관 (2+2)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미·일간의 안보외교 현안을 폭넓게 논의해 오고 있다. 2003년 9월 8일에 미 육군 참모총장인 Peter J. Schoomaker가, 2003년 11월 12일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인 Leon J. Laporte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몽골은 자국의 안보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력관계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한편 최근 들어 일본과 몽고간의 외교·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강화되었다(부록 표 III. 일본과 동북아국가간의 군사교류현황 참조).

(3) 지역 분쟁 및 갈등

일본은 주변국들과 도서와 관련된 영토분쟁을 치루고 있다. 한국과는 독도/다케시마, 중국과는 조어도/센카쿠열도, 러시아와는 북방 4개 도서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 및 한국

과 해양자원의 개발과 수산자원의 취득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과거사,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안보 측면에서 군사력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대만의 독립과 중국의 통일 문제를 두고 일본과 중국, 미국 간에는 첨예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부록 표 III-43 참조).

(4) 다자안보협력

일본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지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을 둘러싼 국제체제나 일본 국내의 제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점차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전환에는 냉전체제의 해체 및 경제적 지역주의의 강화, 현실주의 및 폐쇄적 민족주의에 대체한 열린 민족주의 및 자유주의 경향의 대두, 미·일동맹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안보체제에 대한 관심강화, 그리고 일본의 동아시아적 정체성강화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전환 이후 일본은 양국간 및 다국간 레벨에서, 그리고 정부 및 민간 레벨에서 활발하게 다자간 안보협력에 참가해 왔다. 기존의 미·일동맹이 일본에서 가장 중심적인 안전보장체제의 축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점차 형성되어 가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21세기에 들어 위협요인이 보다 다양해지고 불명확해지는 새로운 안보상황에서 미·일동맹의 견지라는 전통적인 안보방식과 다자간 안보협력에의 적

극참가라는 새로운 안보방식의 보완적 결합에 의해 자국을 둘러싼 중층적 안보위협요인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경제적 지역주의의 강화, 열린 민족주의 및 자유주의 사조의 대두, 그리고 협력안보개념의 발전에 기반을 둔 그 제도화への 노력들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안보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한편에 배타적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기초하여 일본의 군사력강화 및 주변제국의 위협론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저해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일국주의적인 역사해석과 군사력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폐쇄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국가주의가 그러한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¹⁰⁹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일본은 국제테러를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반테러를 위한 다자안보협력에 참가했다. 특히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적극 참여하고 아프간전쟁과 이라크전쟁의 후속 복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도 참가하고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에도 참여해 왔다.

한편, 최근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 속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수적인 국가정체성과 민족주의적인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동북아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헌법개정과 군사력증강을 통해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¹⁰⁹ 박영준, “일본의 입장,”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파주: (주)나남출판, 2005) 참조.

(5) 다자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일본은 경제와 안보 측면의 다양한 다자기구에 참여하고 창설 주도하는 외교를 취해 왔다. 일본은 APEC의 창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ARF에도 계속 참가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ASEAN+한·중·일 회의에도 참석해 왔다. 최근 매년 다양한 정상회담을 통해 지역 다자협력에 참가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와 연계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필요에 따라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정치적으로는 갈등상황이어도 경제적으로는 무역·투자 등 교류협력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여 정부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정치적 이유에서 감축하거나 중지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이 중국에게 제공한 ODA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일본은 역내 국가간 경제교류와 협력을 중시하고 이를 동북아로 국한시키지 않고 동남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로 폭넓게 인식하고 포용해 왔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은 ASEAN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이고 FTA 체결을 위해 협상중이다.

다자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는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데서도 나타난다. 경제협력을 추구하면서 안보와 연계된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한 일본은 에너지 협력방안에 적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경제와 안보협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상호의존도를 증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사·문화

적 배경이 상이하고 정치체제와 이념도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로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에게는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동아시아 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중국이 중심이 되어 주도되는 지역협력에는 불만을 가지며 되도록이면 일본중심의 지역주도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6) 국제군비통제

일본은 NPT 등 다양한 국제군비통제체제에 가입했다. 대테러전쟁을 위해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안보구상(PSI)에도 가입했다. 일본은 국제적 위상의 증대와 WMD 확산방지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협조를 위해 국제군비통제체제에 적극적으로 가입과 참여를 해왔다.

일본은 1970년대 이래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1980년대에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했다. 또한 1990년대에는 화학무기금지조약(CWC)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정책안보구상(PSI)과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도 참가하고 있다(부록 표 III-44 참조).

다. 정치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식인 차원에서 다음의 네 가지 점에 관해 전통적인 주권국가

체계를 초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첫째, 일본이 저지른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동북아시아 역의 부정적인 역사적 유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주의적 회귀와 관료적 완고함을 지닌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다른 동아시아인들의 감정에 대해 무감각한 반면, 이러한 우익적 역사해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일본 시민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째, 일본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세력은 국가주의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넘어설 정도로 힘을 얻었다. 둘째, 일본정부의 극우 교과서 승인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 및 국민의 반대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극우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국가주권의 논리에 근거한 그런 주장들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한국은 단지 국가나 정부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개별적인 한국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음악, 스포츠, 고등학교와 대학, 지방정부, 그리고 비정부 조직(NGO)등을 통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둘째로, 우리가 국가 경계선을 따라 구획 설정된 현 국제정치 구조의 주권국가 체제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의 세계에서는 경제적 삶의 기본 틀로서 국민경제의 우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세계적으로 혹은 각 지역별로 시장경제의 급속한 탈국가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 첫째, 각 개별 국가들이 시민사회의 세력화에 기초한 대내적 민주화를 증진시켜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지역적

세계적 공고화에 기초한 초국가적 민주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만약 독일이 나치 전체주의 지배 하에 있었다면 유럽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음은 명확하다. 셋째로, 정부간의 보다 밀접한 정치·경제적 협력과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간 활동의 증진이 동북아지역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 지식인 공동체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이들 간의 모든 종류의 협력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의 거리 두기 혹은 간격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거리를 두고 정치권력들과 마주하면서 건전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지적인 자율성과 성실성은 자유민주주의의 속성이다. 둘째, 경쟁적 세계시장화의 우세함은 지적인 속성과 탁월함이 우선 그 시장 가치를 통해서 측정될 위험을 야기한다. 이러한 위험은 정보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다.

넷째는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충성심과 사회적인 소속 체계의 중심부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에 우위를 뒀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개인 정체성의 확인이 정치적으로 보장되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지역화의 시대에 주권국가라는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국가의 우월성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것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의 최상위에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세계 혹은 지역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유엔이나 유럽연합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정치적 합법성의 영역을 밖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체성이 초

월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역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성취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지역 공동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적인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즉, 순수한 국가적 정체성이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혼성적 정체성(hybrid identity)이라고 부르려 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일본 국가주의자들은 마치 순수한 일본인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일본인다움 혹은 일본인의 국가적 문화적 전통과 가치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문화, 중국문화, 인도문화, 페르시아문화, 그리고 심지어 실크로드를 통해 일본에 들어온 헬레니즘 문화가 혼합된 것이다.¹¹⁰

위의 입장은 일본에서 진보적인 입장이지만 동북아지역협력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주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정치사회의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가와의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동북아공동체나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다소 주춤한 실정이다.

(1) 정치체제의 유사성

일본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로서 입헌군주제와 내각책임제를 지니고 있어 천황과 수상이 국가를 대표한다. 양원제를 지니고 있고 다당제에서 자민당이 1955년 이래 거의 줄곧 지배 정당으로 군림해 왔다. 수상선출은 국민직선제가 아니라 의원간선제로서 다수당의 지도자가 수상으로 선출된다. 일본은 한국, 미국, 몽골과 같은 정치체제를 가지고 유사

¹¹⁰ Yoshikazu Sakamoto, speech, 2001.

성을 지니고 있다. 동북아국가의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를 분류한 <부록 표 III-46>을 보면, 일본 정치체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토대로 정치권리와 시민자유를 측정한 것으로서, 각각 1등급이 가장 자유롭고 7등급이 자유롭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정치권리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이고, 시민자유는 그 아래 등급인 2등급으로서 자유 국가로 분류된다. 동북아국가 중에서 일본이 한국과 함께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었다.

(2) 지역내 정치협력

일본은 주변국들과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장관급회담을 정기적으로 거행해 오고 있다. 최근 일본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를 두고 중국 및 한국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그에따라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중국 장쩌민 주석 재임기간 중 일정기간 거행되지 않았었다. 일본과 북한 간에는 국교정상화와 납치문제를 두고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실무회의가 거행되었다. 한·일 간에는 정기적인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이 실행되고 있다.

<표 III-6> 1990년대 이후 일본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1990~1995		1996~2000		2001~현재(2005. 7)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중국	4	-	6	2	6	7
한국	-	-	8	11	12	16
북한	-	-	-	-	2	1
미국	-	-	-	-	14	10
러시아	2	-	6	4	9	9
몽골	1	3	4	3	2	2

<일·미관계>

21세기에 들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미·일 양국의 국내상황 또는 외교정책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라 하면 탈냉전이후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미·러대립이 약화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및 군사적 부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냉전 시대에 있어서 공산권에 대항하는 미·일동맹의 의의가 변하여 탈냉전시기에는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과 견제의 의미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또한 미국의 공화당 부시정권은 장기간 쌓아 온 일본과의 신뢰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일본은 전후총결산을 목표로 헌법개정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 군사력증강을 위시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해 왔다.¹¹¹ 미·일동맹관계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대등한 지위로 나아가고 미국의 역할 및 비용분담요구와 일본의 국제적 역할 및 영향력 확대추구의 이해가 합치하여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일본이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명하여 미·일동맹의 강화를 과시했다.

나카소네 전 수상은 ‘국제국가’의 주창은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주방위의 노선으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한편 헌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¹¹¹ 나카소네의 국제국가론이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으로 연결되며, 전후총결산이 오부치-모리-고이즈미 자민당 보수내각으로 이어진다. 나카소네수상과 레이전대통령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교에서는 정상외교의 비중이 크다.

이어받아 오자와는 보통국가로서 국제연합의 분쟁방지, 평화창출 및 유지활동에의 전면적 참가를 강조하고, 안보전략도 전수방위에서 평화창출로 전환하여 국제연합 및 지역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협력하도록 하고 필요한 헌법개정도 제안했다. 협력사항에 있어서 실전부대와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정세분석, 시설정비, 의료 등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보통국가와 평화국가의 이념은 융합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평화적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국제주의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한 국제주의로 일본의 외교정책이 역사적 전환을 거치고 있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정책방향이 일본정계의 보수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미국도 일본의 보통국가화 움직임을 권장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의 보다 많은 국제적 공헌과 역할 및 비용분담을 위한 대미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군사 및 외교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1세기 미국과 일본의 공동경쟁국은 중국이라는 인식하에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중국견제를 위한 미·일동맹관계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일본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테러 전쟁 등 국제분쟁의 위협이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역할을 통하여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해양수송로, 중동에서의 국제적 공헌과 함께 국제적 이익관계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정기적인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을 거행해 왔다. 1970년대 이후 미·일간의 경제마찰이 발생하면서 무역수지와 시

장개방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일본 간에 상당한 갈등을 보여 왔다. 탈냉전 이후에는 소련의 붕괴에 따라 미·일안보동맹의 실효성이 감소되었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부상하고 북한의 한 안보위협이 발생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동맹은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부시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미·일동맹이 강화되었고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중이고, 대테러전쟁과 북핵문제 등에서 미·일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표 III-61 참조).

<일·중관계>

일·중관계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정경분리로서, 많은 갈등관계 속에서도 경제교류는 지속되어 복합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문화적 공통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소유하고 일본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협력의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 일·중 양국은 1972년에 국교정상화를 한 이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안정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양국의 인적왕래 및 무역 투자 등이 확대되었고 상호의존관계가 증대되었다.

한편 일·중외교에도 전환이 일어났다. 72년의 국교정상화로부터 98년까지의 일·중관계의 기본 틀은 선린우호였고, 98년의 일·중공동선언에서는 선린우호를 대신해 ‘21세기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틀이 만들어 졌다. 이는 아시아지역의 안전보장과 경제에 공헌하기 위해 일·중이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냉전종식 후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가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아시아만의 독자적인 경제발전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다국간 협조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일·중 양국은 경제적 번영과 지역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합친다면 양국의 이익은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근대화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제적인 시장과 자본 그리고 기술로의 접근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의 성공여부는 일본과 미국과의 협조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실용주의 외교를 전개하면서 일본의 투자와 기술을 필요로 했고, 일본은 중국의 광활한 시장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등 쌍방이 교류협력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8년 11월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은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1999년 7월의 오부치 일본총리의 방중, 2000년 10월 주용기 총리의 방일, 2001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중 등 정상들의 잇단 방문으로 동반자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양국간의 역사적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동북아에서의 상호 영향력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마찰도 병행되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문제와 군사, 안보문제에 대한 상호불신 등으로 상호방문이 성사되지 않는 등 갈등관계를 보였다(부록 표 III-53 참조).

<일·북관계>

동북아질서와 세력균형을 고려할 때 중국과 견제균형의 입장에

서는 일본에게 있어서 일·북관계는 한·일관계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그대로 중국의 영향권 내에 놓아 둔다는 것이 일본에게는 불리한 것이고, 더구나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이 일본영공을 넘어서 날아간 것은 일본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일·북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국교정상화의 준비도 하고 있다.

일·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북핵문제, 북·미관계와 납치문제 등이다.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지체되는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라는 견해가 있다. 일·북관계를 주도해 온 다나카 외무심의관은 일·북교섭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북교섭에 대한 외무성내의 추진파와 신중파의 대립은 추진파인 다나카 심의관의 비밀주의에 의한 정보비공개에 기인한다고도 한다. 추진파의 권고에 따라 고이즈미 수상이 2002년 9월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납치문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일·북교섭의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공표하면서 안보없는 신뢰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일수교의 진전을 저지했다.

2004년 5월 고이즈미 수상이 전격적으로 재차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했다. 당시 야부나카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다나카 심의관 등이 동석했다. 납치가족의 기본적 송환은 해결되었으나 납치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인도적 지원의 명목으로 일본이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일본의 대북정책의 주요한 변화가 시사되었

는데, 고이즈미 수상은 북한과의 대립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경제제재의 정책을 자제하여 화해협력의 정책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북의 안건이 미·일간에 어느 정도 조율되었는지에 따라 일본과 미국의 입장의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다.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로 북한과 일본은 수차례 교섭을 진행중이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에 3차례 수교를 위한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관계를 맺어 왔다. 2002년과 2004년에는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부록 표 III-60 참조).

<일·한관계>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수교 이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장기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항상 경쟁하고 경계하면서도 협력을 이끌어 내는 관계가 중요하다. 서로 필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할 말을 하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일본이 반드시 불이익을 얻고 반대만 하지 않도록 적절히 상호의존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적 힘의 배분관계에서 일본은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적측면을 고려하여, 일본이 인식을 전환해서 패권주의로 나가지 않고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일간에 신뢰관계를 쌓아가야 한다. 한·일간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선의의 경쟁과 positive-sum game을 통한 공생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양대 경제세력권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높이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동아시아

아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한·일간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문화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문화교류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언어와 인종 및 국민의식에서 유사성이 있고, 상호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신뢰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 한반도는 타의적으로 분단되어 국제사회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면서 일본이 한반도통일을 반대하지 않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한·일협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일관계의 개선, 북·일 국교정상화의 추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북한체제의 진화와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협력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일관계가 협력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협력, 6자회담 지속과 제4차 공동선언문의 이행문제, 중유 제공, 전력 제공, 경수로 건설 등에 관한 일본의 협력, 일·북간 납치문제의 해결, 일·북관계의 개선과 국교정상화, 개성공단과 원산지역 개발 등 일본의 투자유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역사 공동연구, 역사 교과서의 공동집필 등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 한·일간에 여러 현안이 있는데 그들을 사안별로 분리하여 시기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쟁 및 식민지 피해 보상문제, 징용자 유골 반환문제,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문제 등은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한

다. 그리고 문화교류와 경제협력 및 자유무역협정도 병행해서 진전시켜 나가고,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관한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일협력은 강화시켜 나가도록 한다. 한국은 구체적 사안을 분리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은 강경하게, 부드럽게 대응할 것은 부드럽게 대응하도록 한다. 역사관련 문제와 독도문제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북간 납치문제의 해결에 중재협력을 하면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고,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한다. 한국은 북한과 일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서 장기적으로 일본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21세기를 맞아 한·일관계에도 새시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한·일간에 선린우호협력관계는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력의 차이를 넘어서 수직적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와 정보화 및 지역협력이 강조되어 가는 상황에서 세계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 한·일관계는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전근대적인 국가중심주의와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했다면 더 이상 망언을 하지 말고, 역사공동연구를 통한 공동의 역사교과서 집필에 협력해야 한다. 한·일간에 상호의존의 형태가 구성되고, 영토 및 자원과 어업분쟁 등에서 공동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2005년 9월 11일 총선에서의 고이즈미 승리 이후 일본은 국내적으로, 일본 정치체제의 개혁, 파벌정치와 정경유착 구도의 개혁, 우

정민영화를 통한 민간경제의 활성화 추진, 연금 보험 세금 등의 제도개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4년 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미·일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갈 수도 있다. 일본 정치사회의 전반적 보수우경화 속에서, 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일본의 정체성과 국가이익 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국민단합체제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일본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한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보수강경화가 대북한 강경책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혹은,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해 나올 수도 있고, 역사교과서 문제가 확대 증폭될 수도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지속될 수 있고, 군사력증강과 함께 해양자원 등의 문제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 2006년 9월 임기까지는 고이즈미 수상이 비교적 온건한 정책을 쓰면서 한국 및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일본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양면성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일본의 정치사회의 전반적 보수화 속에서 고이즈미 수상은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책입장을 취할 수 있고, 납치문제 해결과 북·일관계 개선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9월 이후 후계자 선택에서 장래 일본정치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겠고, 헌법개정문제와 미일동맹의 강화유지가 주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에게는 국내 정치경제 시스템의 개혁이 우선과제이므로 대외적으로 분쟁을 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부록 표 III-48 참조).

<일·러관계>

일본과 러시아는 안보 측면에서 북방 4개 도서를 두고 영토분쟁을 치르고 있는 한편, 경제 측면에서 에너지협력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러관계는 1991년 당시 소련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관계가 진척되었다. 1993년에는 옐친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1997년에는 옐친과 하시모토의 회담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근 2005년 5월에는 푸틴과 고이즈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부록 표 III-58 참조).

<일·몽관계>

일본과 몽고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는 적으나 최근 경제·외교 측면에서 교류가 진척되어 왔다. 1991년 가이후 수상이 몽고를 방문하면서 관계가 진전되었다. 1998년에는 몽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2000년, 2001년, 2003년에는 양국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꾸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부록 표 III-59 참조).

(3) 국내적 요인¹¹²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입장을 탈피하여 적극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안보협력의 형태도 양국간 교류에서 다자간 교류에 이르기까지, 국방수뇌급의 교류에서 민간차원에 이르기까지의 다원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냉전체제 동안에 안보문제에 관해 미·일동맹에 의존했던 일본이 한국 및 중

¹¹² 박영준, “일본의 입장,”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서울: 나남, 2005), pp. 139~178.

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과 양국간, 혹은 다자간 안보협력을 확대하게 된 이면에는, 일본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이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배경을 분석하면 몇 가지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첫째, 국제정치적으로는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소련에의 대응이라는 목적이 주어졌던 미·일동맹이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질서의 측면에서 냉전체제 와해 이후에 동아시아지역에서 새로운 위협요인, 즉 중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보다 뚜렷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패전 직후의 국가 주도적 중상주의 경제체제의 운용방식을 보완하여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여 경제적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넷째, 사상과 이념 측면에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진보세력들이 민족주의 및 현실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주의나 열린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와 안보분야에 관한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본 국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보 측면에서 기존의 미·일동맹관계를 보완하여 협력안보의 개념에 입각한 지역적 다자주의 안보관계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경제적 지역주의의 강화에 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과 주변 국가간에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경제교류 및 인적 왕래가 증대되면서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의 계기가 형성된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1978년 등소평에 의해 개혁개방정책이 표방된 이래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두드러지게 증가해 왔다. 교역량의 증대와 함께 양국간에 경제적 협력의 장치들이 구축되었다. 이 같은 2국

간 통화유통협정은 아시아지역에 16개 정도 존재하는데, 이를 일본, 중국, 한국, 동남아 국가간의 다국간 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경제교류 및 인적교류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중국, 한국 내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경제공동체의 흐름과 조응하여 동아시아 각국간에도 개별적 경제관계를 통합하여 자유경제권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2003년 1월에 발표한 신년보고서에서,¹¹³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간 경제관계를 한층 심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의 구축되어 한다고 했다. 즉, 일본, 한국, 중국, 아세안 등 13개국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자유경제권의 형성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일본도 농산물시장 개방과 외국인에게 개방된 사회의 실현이라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했다. 이러한 역내 국가간 경제교류와 인적교류의 증대는 국가간 상호의존 관계를 심화시키며, 신뢰관계를 구축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유무역경제권의 등장이나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보정책에 관여하는 행위자 차원에서도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의 개진이 있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청장관은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 테러나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소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식의 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지역내 다자 안보협력기구의 구상이 제기되고 있음을 밝혔다.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구를 제창하는 지식인들은 주로 진보적

¹¹³ 日本經濟團體連合會, 活力と魅力溢れる日本をめざして (2003).

성향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의 안보정책에 관여하는 지식인들도 일본의 국익 추구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위청장관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일본의 안보정책에 관해 제언하는 지식인들의 그룹인 방위전략연구회의는 2001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는 각국간에 주권의식과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탈국가형의 지역통합이 나타날 현실적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안전보장 측면에서 다국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고 있다. 점차 상대적으로 국력이 쇠퇴해가는 일본으로서도 다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대등한 지역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방위전략연구회의 소속지식인들은 중·일간의 안보대화나 아세안지역포럼에의 적극적 참여를 일본의 안보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자민당의 정부조사회에 설치된 국방부회도 지역내 다자안보협력을 지지했다. 일본의 유력경제인단체인 경제동우회도 2003년 4월에 발표한 헌법문제조사회의 의견서에서, 외교, 인권, 자원, 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예방외교와 인간의 안전보장을 기초로 하는 총합적이고 중층적인 안전보장체제의 구축을 과제로 제기하면서 그 실행방법으로 양국 및 다국간 안전보장협력에의 참여를 들고 있다.

한편, 일본사회 내에서 민족주의나 현실주의의 흐름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 다자안보협력에의 진전은 방해받게 될 것이다. 일본사회 내에서 현실주의의 강화나 민족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세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태평양전쟁에 관한 역사문제에 대해 재해석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역질서와 관련해서는 중국위협론을 강하게 내세우며,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질서내의 협력적 안보

보다는 일본의 일국적 안보를 위한 군비강화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다자간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역사적 양극을 간직한 일본과 주변국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에서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 역사교과서 왜곡파문과 같은 사태가 재발된다면, 일본이 추진하는 다자안보협력의 신뢰성은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2005년 4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해 중학교용 역사 및 공민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이에 대한 항의로 한국과 중국에 반일 데모가 일어났다.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배타적 국가주의세력도 동아시아의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 관점에 서서 일본의 우적(友敵)개념을 극히 배타적인 형태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이른바 중국위협론이다. 냉전체제하에서 가상의 적이었던 소련이 해체되자 그를 대체하는 적개념으로 중국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일본의 정치세력 중에는 일본의 주체적 외교론을 주장하면서 대중국 강경론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론이 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강화되는 사태가 전개된다면 다자안보협력론은 약화될 것이다. 현실주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주의자들은 일본과 주변국간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편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한국, 중국과 북방 4개 도서, 독도, 센카쿠(尖角, 중국명 釣漁島) 등의 영토를 둘러싸고 분쟁상황에 처해 있다. 영토분쟁을 주변국들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주의자들의 주장과 행위가 횡행하는 사태가 전개된다면 다자안보협력구도가 손상될 것이다.

협력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과정에서 주변국

들의 우려를 살 정도로 확장적인 군비증강을 단행할 경우, 이는 관련국들과의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다. 특히 일본은 평화헌법상 군대의 보유 및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수방위의 영역을 넘어서는 군비확장은 주변국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내에서는 자국의 헌법질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균형적 군사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부터 미국이 개발한 해상 및 지상의 미사일 방위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장거리 투사능력을 보유한 무기체계의 정비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신세기 일본의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려는 소장의원들의 모임’ 및 그 회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수방위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보정책의 추구는 다자안보협력의 구축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사회·문화

(1) 통신·교통

일본에는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비정부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 ASEAN과 같은 동아시아지역의 지역통합 움직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주도에 의한 지역통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NGO들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국제적 시민포럼을 창설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포럼이나 기구는 각국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참여하는 다층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제적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와 기업 외에 공익기관(NPO, NGO)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각 주체들이 활동하는 공공영역에는 기초 단위로 가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각 주체들을 매개할 수 있는 총괄구조로서 동북아 시민포럼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포럼은 사명감을 가진 학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내에 있는 기존 조직의 협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¹¹⁴

이러한 시민조직과 비정부주체들의 활동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이다. 일본은 컴퓨터와 인터넷, 휴대폰의 보급률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지역의 밀집도가 약하고 기상조건의 변화에 따라 한국정도의 집중적 발전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의 전화 가입자는 71,150,000명, 휴대폰 가입자는 81,120,000명, 인터넷 가입자는 57,100,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IT산업 발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부록 표 III-68 참조).

일본에는 신칸센을 비롯한 철도와 지하철, 고속도로와 항공시스템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주기적인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스템이 발달했다. 23,705km의 철도와 161,894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2) 교육 · 관광

일본의 기본교육과정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포함한다. 일본의 각급 학교의 수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

¹¹⁴ Hidetoshi Taga, *Tasks and Efforts by Non-state Actors towards Northeast Asia Cooperative Regional Society* (mimeo, 2002).

지 점차 줄어든 반면 대학교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유학생의 수를 보면, 1990년에 41,347명에서 2000년에는 64,011명으로 다소 증가하고 2003년에는 109,50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본은 세계화와 함께 교육개방을 단행하여 유학생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동북아협력의 인적 기초와 학문적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부록 표 III-73 참조).

일본은 출국관광객 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입국관광객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은 2001년도에 16,215,657 명에서 2004년에는 16,841,112 명으로 소수 증가했다. 일본으로 입국하는 관광객 수는 2001년도에 4,771,555 명에서 2004년에는 6,137,905 명으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본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국가별 구성을 보면, 한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대만, 미국, 홍콩, 중국, 영국 순으로 많다. 한국은 2004년도에 1,037,483 명이었고, 대만은 2004년도에 962,168 명이었다.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한 동맹국인 미국도 2004년도에 445,840 명을 기록했다. 홍콩과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의 관광객이 많은 것은 미국, 영국과 일본 간의 친밀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적 교류는 국가간 협력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동북아지역 협력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부록 표 III-77 참조).

일본은 천황과 조상신을 모시는 신도와 불교의 영향력이 크고,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구복신앙적인 무속신앙이 발달하였다. 기독교의 전파는 미미한 편이다. 국민의 84%가 신도와 불교를 믿고, 기독교도는 국민의 0.7%에 불과하다.

마. 소결

일본은 동북아공동체에 관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하며 지역 통합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편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와 문화문제에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일 FTA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한·중·일 FTA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일본의 경우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구상은 1920년대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을 거쳐서 1990년대에 모리시마 미치오(森嶋通夫)에 의해 새롭게 제기된 이후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모리시마는 일본의 오키나와를 독립시켜 동북아공동체의 수도로 하고 중국을 6개의 블록으로, 한반도와 일본을 각각 2개의 블록으로 그리고 대만을 한 개의 블록으로 하여 공동체 전체를 총 12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건설공동체 안을 제창했다. 하지만 모리시마의 구상은 중국을 분할하고 오키나와를 수도로 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제안이다. 최근에 제안된 동북아공동체론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와 같은 지역협력이나 실용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일본의 보통국가화 과정에서 헌법개정과 군사력증강을 추구하면서 일본의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대두하여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실제로 일본의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논의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동북아공동체와 관련하여 일본은 동남아를 포함하여 ASEAN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4. 러시아

2000년 3월 러시아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젊고 강력한 지도자 푸틴은 ‘강한 러시아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비교적 성공적인 국정을 수행하여, 2004년 3월의 제4대 대선에서 재선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26일 의회 연두교서¹¹⁵에서 2010년까지 1인당 GDP의 두 배 증가, 예산 및 세제개혁, 운송 인프라의 발전, 군 현대화 및 빈곤 극복 등을 대내적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외적 국정과제로는 CIS 통합의 심화, WTO 가입을 포함한 러시아 경제의 국제경제로의 통합, 수출 증가, 미국·중국·인도·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대화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은 CIS 국가들과의 전면적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유럽, 미국, 아·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전방위(multi-directional)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과 관련,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적절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하나 약간의 분야에서는 동북아 파트너들과 성공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러시아는 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무역과 투자에 약간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파트너들과 경제협력의 새로운 법적, 제도적 형식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극동지역에서 에너지와 운송 프로젝트의 실현이 러시아와 동북아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시

¹¹⁵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the Kremlin, May 26, 2004” <<http://www.ln.mid.ru>>.

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동북아의 군사초강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고 군사력을 단지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 러시아는 지역적 사회 인프라의 발전에는 적절한 규모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동서문화 공존의 오랜 역사 때문에 동북아에서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지역안보체제와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경제·안보·정치·사회문화 협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동북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¹¹⁶

가. 경제

(1) 기초지표

<GDP>

러시아의 구매력(PPP) 기준 GDP는 1993년 7,754억 달러이었는데, 모라토리엄 때문에 1998년 5,934억 달러로 감소되었다가 2003년 1조 2,870억 달러로 증가했다. 2003년 동북아 2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GDP 비중은 5.6%이다. 전년도 대비 GDP 성장률은 러시아 경제가 혼란스러웠던 1993년 -12.1%, 1998년 -5.0%를 기록하다가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인 2003년 7.3%를 기록하였다. 2004년 전 세계의 평균 GDP 성장률이 4.9%임을 고려하면 러시아 경제가

¹¹⁶ Alexander Fedorovskiy “Russian Case on the Infrastructure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Sep. 7~9, 2005 at KINU), pp. 18~19.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변가격에 의한 1인당 GDP는 1993년 2,700달러, 1998년 2,100달러, 2003년 3,500달러로써 러시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력 기준에 의한 2003년 1인당 GDP는 8,900달러로써 세계 평균에 달하고 있다.

GDP 구성비를 고찰하면 농업과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3차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8%로써 전 세계 평균인 64%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부록 표 III-1 참조).

<인구>

2005년 러시아 인구는 1억 4,320만 명으로 세계전체 인구의 2.2%, 아시아 전체 인구의 37%, 동북아²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성장률은 1990~1995년 -0.02%, 1995~2000년 -0.22%, 2000~2005년 -0.46%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부록 표 III-2 참조). 특히 2000~2005년 세계인구 증가률이 1.2%이고 동북아²의 인구성장률이 0.5%인 것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저출산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양육비, 교육비 등의 증가로 러시아의 신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3년 러시아 노동력은 7,168만 명으로써 이 중 농업에 12.3%, 공업에 22.7%, 서비스업에 65% 종사하고 있다. 1993년 1.4%이었던 러시아의 실업률은 경제악화로 1998년 11.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3년 8.4%를 기록하였다. 전 세계 평균 실업률이 30%임을 고려하면 러시아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는 광활한 국토를 갖고 있어 원유, 천연 가스,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이를 생산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량은 <부록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44.691 Quadrillion Btu로써 전 세계의 12.8%, 동북아2의 29.7%이었으나 1998년에는 40.400 Quadrillion Btu로 9.6% 감소해 전 세계의 10.5%, 동북아2의 25.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량 감소는 체제이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불안정과 시베리아 지역의 인구 감소,¹¹⁷ 자원의 소유권을 둘러싼 연방과 지방정부간 갈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에너지 생산량은 45.679 Quadrillion Btu로 1993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전 세계의 11.3%, 동북아2의 27.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경제회복 추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배경으로 에너지 소비량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1993년 31.964 Quadrillion Btu로써 전 세계의 9.0%, 동북아2의 18.0%이었으나 1998년에는 소비량이 19.5%, 전 세계의 6.7%, 동북아2의 13.8%로 각각 감소되었다. 2002년에는 1993년 대비 소비량이 13.9% 감소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 및 동북아2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과 같다.

오일 생산량의 경우 1993년 695만 배럴/1일로써 전 세계의 10.5%, 동북아2의 37.2%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생산량 12.6%, 전 세계의 8.2%, 동북아2의 34.4%로 각각 감소되었다. 그러나 1999년 상반기부터 나타난 오일 국제가격의 상승 때문에 2002년 생산량도 1993년 대비 10.1% 증가하였고, 전 세계와 동북아2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¹¹⁷ 1991~99년 사이에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인구는 거의 102만 6천명이나 감소했다.

10.2%와 40.1%로 증가하였다. 오일 소비량의 경우도 1993년 대비 1998년에는 33.6% 감소했다가 2003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 전 세계와 동북아2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와 7.4%이다. 전기생산량도 1993년 대비 1998년 13.9% 감소했다가 2002년 다시 회복 수준에 있다.

(2) 무역 및 투자

러시아의 무역액은 경제회복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다. 1993년 70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1,303억 달러로 1993년 대비 86%, 2003년 2,092억 달러로 1993년 대비 199%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2의 전체 무역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불과하다. 1993년 430억 달러이었던 수출은 1998년 718억 달러로 67%, 2003년 1,344억 달러로 213% 각각 증가하여 동북아 2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1990년대 초에 유럽, 북미, 일본이었고 1990년대 말에 우크라이나, 독일, 미국이었으나 2000년대 초에는 독일(7.5%), 이태리(6.9%), 네덜란드(6.7%) 등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93년 270억 달러이었던 수입은 1998년 585억 달러로 117%, 2003년 748억 달러로 177% 각각 증가하여 동북아2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와 후반에는 유럽, 북미, 일본이 주요 수입대상국이었으나 2000년대 초에는 독일(14.3%), 벨로루시(8.9%), 우크라이나(7.1%)로 변화되었다.

한편 러시아의 외국직접투자(FDI) 유치는 1992~1997년 연평균 20억 1,900만 달러이었으나 1998년 27억 6,100만 달러로 36.8% 증가하였고 2003년 79억 5,800만 달러로 294% 대폭 증가하여 동북아2

FDI 유입(inflows) 총액의 7.9%이다. 이는 러시아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연 6년간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서 투자 환경도 매우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자본 유입의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사이프러스, 스위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해외로 유출되었던 러시아의 자금이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해 다시 러시아로 흘러들어 오고 있는 점이다.

또한 1992~1997년 연평균 10억 2,700만 달러이었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utflows)는 1998년 12억 7,000만 달러로 23.7% 약간 증가하였으나 2003년 97억 2,700만 달러로 847% 대폭 증가하여 동북아² FDI 유출(outflows) 총액의 5.0%를 차지하였다(부록 표 III-6 참조). 그러나 대부분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벨라루스, 이란, 사이프러스 등에 투자된 것으로 밝혀져 아직도 상당수의 러시아 기업들이 탈세 등을 위해 자금을 해외에 반출한 뒤 러시아나 다른 국가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 국가간 수출입 matrix

<부록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동북아 역내 무역은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러시아의 동북아 역내 무역에서 중국이 38.0%, 미국이 30.2%, 일본이 23.7%를 차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미국이 52.6%로 중국의 22.5%를 앞섰다. 그러나 2003년에는 중국이 41.2%로 미국의 32.5%를 다시 앞섰다. 일본은 15.2%로 3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9.5%, 북한은 0.4%, 몽골 1.2% 수준이다. 특이한 점은 러시아의 동북아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전 세계 무역에서 동북아국가들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 20.1%,

1998년 16.7%, 2003년 14.7%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이 유럽 중심의 무역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북아 역내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수출대상국도 중국, 미국, 일본이지만 이 기간 중 대한국 수출이 가장 증가하였다. 1993년 대비 2003년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은 237%, 대미 수출은 204%, 대일 수출은 166% 각각 증가하였으나 대북한 수출은 34% 감소하였다.

동북아 역내에서 러시아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다. 1993년에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이었으나 1998년에는 한국의 대러 수출 증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변화되었다가 2003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다시 변화되었다. 결국 러시아의 동북아국가들과의 무역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이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이긴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점차 감소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자유무역협정(FTA)

구소련의 붕괴이후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1993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CIS 국가들을 묶는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1994년부터 하였다. 그러나 CIS 국가들 간의 이견으로 경제공동체 구축에 진전이 없자 양자간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역내 국가들과 FTA 체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FTA를 1994년 체결한 바 있으나 일부 품목이 무관세에서 제외되었고 양측 모두 자국 산업의 보호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국은 2002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새로운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과 2003년 9월 공동경제지대(CES: Common Economic Space)의 창설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였다.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인한 교역증대에 대한 기대로 4개국 정상은 CES의 창설에 관한 의지가 확고하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상은 CES의 창설을 위한 모든 기구를 단번에 설치하자고 주장하나 다른 정상들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¹¹⁸

신유고연방은 러시아가 CIS 이외 국가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구 유고슬라비아와의 긴밀한 역사적, 문화적 유대관계를 기초로 신유고연방과 2000년 8월 28일 벨그라드에서 FTA를 체결하였다. 양국이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¹¹⁹ 러시아는 CIS국가인 몰도바와도 2003년 6월 27일 FTA를 체결했으며, 러시아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면 다음 수순은 EU와의 FTA 체결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04년 9월 22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FTA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005년 3월 25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FTA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러시아와의 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양국 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5년 내에 추진키로 했다. 이 공동연구에서는 FTA를 포함하여 투자증진과 산업협력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아직 세계무역기구

¹¹⁸ “우크라이나가 공동경제지대 창설에 적극적인 이유” <<http://www.kotra.or.kr>>.

¹¹⁹ “Federal Government Ratifies Free Trade Agreement With Russia” (FBIS-EEU-2000-0831).

(WTO)에 가입하지 않아 양국 간 FTA 체결이 당장 가시화되긴 어렵지만 신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FTA 체결 가능성을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부록 표 III-15 참조).

나. 안보

(1) 군사력

2000년 불변가격으로 1993년 164억 달러이었던 러시아의 국방비는 옐친 대통령 집권기의 경제혼란, 군 개혁정책 등으로 1998년 71억 달러로 57% 하락하였다가 푸틴 대통령의 집권이후 경제회복으로 2003년 1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 전체 국방비의 1.5%에 해당한다(부록 표 III-17 참조). 200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록 표 III-16>에 의하면 러시아의 국방비 규모는 동북아 역내 국가 중 미국, 중국 다음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방비/GDP 비율은 1993년 5.3%에서 1998년 3.1%로 하락하였다가 2002년 4.0%로 약간 증가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부록 표 III-16>에 의하면 러시아의 국방비/GDP 비율은 동북아 역내 국가 중 북한 다음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국방비 규모 순위도 미국 다음의 2위이다.

NATO는 1991년 채택한 ‘신전략 개념’을 바탕으로 동구국가 및 CIS국가들과의 외교적, 군사적 접촉을 제도화하였다. 1992년 시작된 보스니아 내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슬라브족인 세르비아계에 대한 적대정책을 강화하였다. 옐친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고 소련 붕괴직후 보혁 대결과정에서 노정된 군의 분열상을 타파하며 군 개혁정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경

까지만 적용하기 위한 과도기적 문서로서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의 기본규정」¹²⁰이 1993년 11월 2일 채택되었다. 이 군사독트린은 그 자체가 방어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 핵사용을 허용하는 등 매우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군사독트린에 의해 병력감축, 군구와 군사력 명령구조의 재구성을 포함하는 군개혁의 제1단계가 1998년 말까지 완료되었다. 2001년까지의 다음 단계는 작전 준비태세와 장비 현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직후인 2000년 4월 21일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¹²¹을 마련하였다. 이 신군사독트린도 향후 10년간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과도기 군사독트린이고 러시아 안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 증대를 규정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 말 소련붕괴 이전까지 소련군은 약 34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붕괴이후의 탈냉전 및 옐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개혁으로 러시아전체 군 병력은 1993년 203만 명, 1998년 115만 9,000명, 2003년 96만 60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단지 공군이 1993년 17만 명에서 2003년 18만 4,600명으로, 준군사조직이 1993년 22만 명에서 2003년 40만 9,100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러시아의 병력은 99만 8,100명으로 중국, 미국, 북한에 이어 세계 및 동북아역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차, 대포, 항공모함, 해상함, 잠수함, 전투기, 헬기 등 러시아의 재래식무기는 1993년과 비교할 때 2003년 현재 상당히 또는 대폭

¹²⁰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 증소연구 , 18권 1호 (1994 봄), pp. 236~248.

¹²¹ “Draft Russian Military Doctrine”
 <209.207.236.112/nuke/guide/russia/doctrine/991009-draft-doctrine.htm>;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 증소연구 , 통권 84호 (1999/2000), pp. 224~237.

감소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일정량의 핵무기, 생화학무기, 전술 및 전략 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전략미사일, 전략폭격기, 전략잠수함은 대폭 감소되었다(부록 표 III-21 참조). 이러한 러시아의 군사력 감축 추세는 냉전종식에 따라서 강대국간 군사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러시아가 자국의 접경지대 안보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현재 러시아는 전차 22,380대, 대포 17,966문, 해상함 32척, 잠수함 53척, 항공모함 1척, 전투기 2,031대, 헬기 81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 현재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3,814기에 이른다. 이를 운반수단과 핵탄두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85기와 핵탄두 2,270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92기와 핵탄두 672개, 폭격기 78기와 핵탄두 872개이다(부록 표 III-26 참조). 그러나 대부분이 1970~1980년대 구소련시대의 핵무기들이고 단지 ICBM SS-27만이 1997년에 배치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핵무기들이 대부분 20년 이상 낙후된 것임을 의미한다.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세계의 주요한 군사무기 수출국이며, 러시아의 군사무기 수출은 증가추세에 있다. 1993년 38억 9,700만 달러이었던 러시아의 무기수출은 1998년 22억 3,300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2003년 69억 8,000만 달러로 1993년 대비 79% 대폭 증가하였다. 전 세계 무기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 8.2%, 1998년 4.7%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37.4%에 달하고 있다(부록 표 III-15 참조).

최근 러시아의 무기수출 급증은 푸틴 대통령이 외화 획득 및 군사·안보관계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

이다. 2000년 4월 채택된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은 ‘재래식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의 국가 수출능력에 대한 지원’을 국제 군사 및 군사-기술 협력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말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대한 기구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전에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무기수출기구인 「로스보오루체니예」(Rosvooruzheniye)와 「프롬엑스포트」(Promexport)로 나뉘어 있던 수출기구를 해체하고 국방부 산하에 새로운 회사 「로스보론엑스포트」(Rosoboronexport)를 창설하였다.¹²²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01년 12월 26일 안보회의에서 2001년 무기수출이 20% 정도 증가하여 총 44억 달러 규모에 달해 소련 붕괴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기수출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기수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¹²³

<표 III-7> 미·러의 동북아역내 무기수출(1999~2003)

(단위: 백만 달러)

역내 국가명	미국	러시아
중국	-	11,237
대만	3,070	-
일본	1,789	-
한국	1,698	85
북한	-	50*
합계	6,557(22.2%)	11,372(43.4%)
전 세계	29,599	26,198

* 연 \$1,000만 달러로 계산한 추정치
출처: SIPRI Yearbook 2004, p. 450.

¹²²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p. 109.

¹²³ “러 무기수출 올해 20% 증가,” 연합뉴스, 2001년 12월 27일.

1999~2003년 동북아역내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수출은 대중국 112억 3,700만 달러, 대북한 5,000만 달러,¹²⁴ 대한민국 8,500만 달러로 총 113억 7,2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의 전 세계에 대한 무기수출 261억 9,800만 달러 중 43.4%, 미국의 역내 무기수출 65억 5,700만 달러의 1.7배에 해당한다(<표 III-7> 참조).

(2)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

러시아는 탈냉전시대를 맞아 CIS국가들 이외의 외국과는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군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역내 어느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갖고 있지 않다.

구소련은 1950년 2월 14일 중국과 군사동맹조약인 『중·소 우호동맹 및 원조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약은 양국간 분쟁과 미·중 접근으로 1980년 자동 폐기되었다. 소련 붕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을 갖지 못하다가 2001년 7월 16일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¹²⁵을 체결하였다. 이는 군사동맹 조약이 아니라 ‘동등하고 신뢰있는 동반자관계 및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포괄적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다.

구소련은 1961년 7월 6일 북한과 공수동맹의 성격을 갖고 있는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는 이 조약을 유지하되 단지 방어동맹만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러시아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1996년 9월 10일 폐기하였다.

¹²⁴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약 1,000만 달러 상당의 군사무기 부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¹²⁵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pp. 1~5.

대신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보편적인 국가간 관계로 규정하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¹²⁶을 2000년 2월 9일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군사동맹조약은 아니나 ‘쌍방 중 일방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의 즉각 접촉’(제2조)을 규정하고 있다.

<러·중관계>

1980년대 말에 중·소분쟁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1990년대 러시아의 대중국 안보관계는 확대되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무기수출을 통한 경제이익을 도모하였으며,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소련 붕괴이후 동북아에서 생긴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1992년 12월 열린 대통령의 방중시 체결된 「국경병력 감축협정」은 중·러간 군사협력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6년 4월 17일 미·일의 「신안보공동선언」 직후인 4월 25일 러·중 양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립하고 안보·군사 협력관계를 심화하였다. 특히 1999년 양국은 코소보 사태와 미·일의 TMD 계획, 체첸문제, NATO에 의한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호입장을 긴밀히 조율하면서 미국의 패권정책에 공동 대처하였다.

2000년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정례 정상회담 개최, 안보관련 고위인사 상호방문,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미국의 MD 구축 계획과 국제안보질서 주도에 반대하고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지향하고 있

¹²⁶ “북-러 신조약 전문,” 연합뉴스, 2000년 11월 <3www3.yonhapnews.co.kr>.

다. 2000년 러·중 양국은 제55차 유엔총회에서 「ABM조약 준수 결의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NMD와 TMD 구축 계획을 견제하고, 대만을 TMD 체제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러시아가 적극 지지하였다. 2001년 7월 16일 양국은 동맹조약을 폐기한지 21년 만에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군사협력 강화, ABM조약의 유지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러시아는 중국과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간 협의기구를 창설하였고,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최초의 양국간 합동군사훈련을 8월 18~25일 블라디보스톡과 산둥반도 및 황해에서 약 1만 명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현재 러·중 양국은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기초로 북핵 등 동북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테러 등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SCO)」¹²⁷ 등 지역안보 기구들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무기 판매와 관련, 푸틴 대통령의 적극 정책으로 러시아는 무기판매에서 2001년 이후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0~2004년 러시아의 무기판매 총액 269억 2,500만 달러 중 중국은 111억 1,200만 달러(41%)를 차지하고 있다.

<러·미관계>

냉전종식에 따라서 열린 대통령은 (아버지)부시 미 대통령과

¹²⁷ 1996년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은 상하이에서 열린 5개국 회담에서 회원국 상호간 신뢰와 우호 증진, 각 분야의 협력 관계 구축, 역내 평화·안보·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에 합의하였다.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으로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다가 2001년 6월 14~15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6차 정상회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을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SCO로 정식 출범하였다.

1992년 2월 2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가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표명하였다. 쿠나제 외무차관은 4월 13~15일 워싱턴에서 솔로몬 미 국무부 아·태 지역담당 차관보와 가진 양국간 첫 협의에서 핵무기기술 비확산과 군사태탕트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6월에는 극동 러시아군 핵체제의 해체를 위한 양국간 협력이 논의되었다. 또한 협상 결과 1993년 1월 START II 조약이 체결되어 양국은 탈냉전시대에 상응하는 전략공격무기의 대폭적인 감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통령과 클린턴 미 대통령은 『핵무기 상호겨냥 중지협정』을 체결하였고, 6월 러시아와 NATO간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 계획』(PFP) 서명, 9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최초의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이 있었다. 그러나 NATO의 동구확대로 양국간 대립과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

엘친 대통령은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체제에 대응하는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러시아의 안보를 공고히 하였다. 엘친 대통령의 재집권이후 추진된 전방위외교에 따라서 대미관계가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미·일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에 의해 다시 갈등을 빚었다.

2000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도 미국과 우호관계의 발전을 모색하였으나, ABM 조약 개정과 NMD체제 구축 문제, 체첸, 이라크 사태 등으로 양국간 갈등이 노정되었다. 푸틴 대통령과 (아들)부시 대통령이 양국관계에 신뢰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2005년 2월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 정상회담이었다. 양국 정상은 핵무기의 비확산, 대테러 전쟁 등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북한, 중동, 구소련 공화국 문제 등 지역문제를 진지

하게 논의하였다.

국력이 약화된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WMD 확산과 테러 및 마약 방지, PSI 등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협력하는 한편, 이라크와 이란, 북한 문제 등 자신의 이해가 중대한 지역에서는 미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냉전시기에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형성되었던 군사동맹들이 탈냉전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일이 적극 추진 중인 MD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이 프로그램의 행동권에 러시아 극동 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면서 중국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부록 표 III-41 참조).

<러·일관계>

1990년대 러시아는 일본과 고위인사 교환방문, 군인사 교류 등을 통해 안보·군사 협력을 증진하였다. 그러나 북방영토 문제와 일본의 TMD구축 문제는 러·일 안보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1993년 군사독트린에서 ‘적대국가’ 부재를 선언하였고, 일본도 「1994년 방위백서」에서 러시아를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국에서 제외시켰다. 러·일 양국은 1994년 2월 외교·국방관계자가 참석하는 제2차 정책기획협의회에서 「방위정책 대강」과 군사독트린을 각각 소개하였으며,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국방정책에 대한 투명성 보장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양국은 동해상에서 합동수색 구조훈련을 9월 최초로 실시하였다. 우스이 방위청 장관이 전후 최초로 1996년 4월 러시아를 방문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상호통보, 국방정책 공표, 고위 국방당국자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합

의각서에 서명하였다. 체체바토프 러시아 극동군 사령관도 최초로 5월 방일하였다. 1999년 8월에는 국방장관 상호 교환방문과 합동훈련 지속실시 등의 「방위교류 각서」가 체결되었다.

2000년 이후 푸틴 대통령은 대일 안보·군사협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북방영토, MD 문제 등으로 통상적인 군인사 교류와 초보적 수준의 군사협력 및 러시아의 노후 핵잠수함 41척 폐기를 위한 일본의 지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9월 푸틴 대통령은 도쿄에서 모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정보 교환, 군고위급 접촉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일의 TMD 체제와 미국의 NMD 체제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의 노후 핵잠수함 해체와 폐 플루토늄의 안전한 제거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2년 6월 2일 러시아 외무부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후쿠다 일본 관방장관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3년 1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러시아를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방위교류 등에 합의하고 북한 NPT 탈퇴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상호방위교류의 일환으로 8월 러시아의 나훗카 앞바다에서 실시된 러시아의 테러대책 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최초로 참가하였고, 2004년 8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가 일본 군항을 친선 방문하였다. 10월 러시아의 퇴역 핵잠수함 1척이 일본정부 지원으로 최초로 해체되었으며 2005년에도 추가해체 문제가 논의되었다(부록 표 III-39 참조).

<러·한관계>

1990년대 러·한 안보·군사관계는 군 고위인사 교류, 정상회담, 제1차 북핵 위기시 협력 등을 통해 방산협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양국간 군 고위인사 교류는 1992년 송용섭 합참 제1차장의 7월 방러와 코코쉬 러시아 국방부 제1차관의 10월 방한으로 시작되었다. 옐친 대통령은 11월 방한하여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국제적 무력분쟁 조정기구와 지역전략 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의하였다. 양국은 WMD 감축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지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행 재확인, 러시아의 군수산업 민수화 전환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지원 등을 『한·러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또한 양국은 고위장성 상호방문, 군사훈련 상호참관, 합정 및 비행단의 상호교환 등에 관한 『1993년 한·러관계 발전을 위한 군사교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러시아는 제1차 핵위기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대북 직접 압력과 미국 등 서방과 공조를 통해 이 문제들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였다. 상기와 같은 안보·군사 관계를 기초로 1997년 11월 양국 정부간 『군사기술·방산·군수 협력 협정』, 1998년 5월 양국 국방차관 간 『상호교환방문 합의각서』가 각각 체결되었다(부록 표 III-34 참조).

2000년 이후에도 러·한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방산·군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5월 조성태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국방장관간 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증진에 합의하였다. 11월에는 제1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원회』가 서울

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군사기술·방산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2001년 2월 27일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다자대화의 실현, CTBT조약의 조기발효, ABM조약의 보존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2003년 4월 이바노프 국방장관의 방한, 제2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의 모스크바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군사적 신뢰증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가 발전되었다. 2005년 4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한·러 간 무기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방산협력 양해각서」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이후 러시아는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안전보장, 북·미 양국의 우려사항 동시해소, 대화기조 유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북관계>

1990년대 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러시아의 한국 중심 한반도정책으로 러시아의 대북한 안보·군사관계는 구소련 시대와 비교할 때 현저히 축소되었다. 로가쵸프 열친 대통령 특사는 1992년 1월 평양 방문시 1961년 동맹조약의 유지 조건으로 무력불사용과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하였다. 삼소노프 CIS 군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이 3월 방북하여 「1992~93 군사협력의정서」를 조인하고 양측간 군인사교류와 정보교환, 군사무기 부품 공급의 군사협력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제1차 북핵위기시 북한의 핵개발 중지를 위해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한편, 미국 등 서

방과 공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동맹조약을 1996년 9월 10일 사실상 폐기하고 신조약을 제시하는 한편,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 미사일이 러시아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99년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을 둘러싼 북·미간 대립시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개입과 압박적인 수단에 의한 북한 핵 강제사찰에는 반대하였다.

2000년 이후 러시아는 신조약을 기초로 북한과 정상적인 안보·군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2차 북핵위기에 즈음하여 북한의 핵개발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월 9일 조인된 신조약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에서는 이념적 연대와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배제되었으나, 급박한 상황시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이 열려져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방북하여 미·일의 TMD계획 견제와 양국간 군사협력 문제를 협의하고 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지체 없는 상호 접촉을 재확인하였다. 2001년 4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시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협력 협정』과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의 러시아 군사무기 구매문제에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7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군사무기 구매와 부품의 장기적 확보 문제, 미국의 MD계획 반대와 ABM조약의 유지 불가피성 등을 논의하였다. 김 위원장은 2002년 8월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정상회담을 갖고 주로 경제현안을 논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군시설도 시찰하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푸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03년 1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을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제안하였다. 이후 베이징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폐기 대 보상’이라는 일괄타결을 지지하고 있다(부록 표 III-40 참조).

(3) 지역분쟁 및 갈등

국토가 광대하여 여러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는 다수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¹²⁸ 이 중 러시아가 동북아 역내에서 겪고 있는 중요한 영토분쟁은 중국과 아무르강(흑룡강) 국경문제, 일본과 쿠릴열도 문제이었으나 전자는 2005년 6월 해결되었다.

<표 III-8> 동북아지역의 주요 영토분쟁 이슈와 갈등 정도

분쟁당사국	분쟁내용	현재의 갈등 정도
러시아·중국	국경분쟁	해결
러시아·일본	국경분쟁	중간

중국과의 아무르 분쟁과 관련, 제정러시아는 아편전쟁 이후 국력이 기운 청나라로부터 1858년 아이훈 조약을 통해 한반도 크기의 두 배가 넘는 아무르강 이북 땅 45만km²를, 1860년 베이징 조약을 통해 연해주 30만km²를 획득했다. 이후 중국은 이 협정들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면서 1960~80년대에 소련과 국경분쟁을 야기하였다. 1969년 우수리강의 다만스키 섬(진바오 섬) 무력충돌과 하바로프스크 인근 코르진스키 섬(바차 섬) 유혈충돌은 널리 알려져 있다.

¹²⁸ 사례는 아제르바이잔·이란·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과의 카스피해 국경분쟁,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와의 국경획정, 노르웨이와 바렌츠해 해양경계, 우크라이나와의 아조프(Azov) 해와 케어치(Kerch) 해협경계 문제 등이다.

1989년 고르바초프가 국경분쟁과 관련해 “하천 국경은 주요 항로를 중심선으로 하자”는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고 1990년부터 중소 양국이 국경에 배치된 군병력 수 십만 명씩을 감축하며 7월 진바오 섬을 소련이 중국에 이양함으로써 양국은 화해할 수 있었다. 1997년에는 중국 헤이룽장성 북부 대초원 지역부터 지린성의 두만강 유역에 이르는 동부지역 4,330km의 국경선 가운데 하바로프스크 일대 약 50km만 남기고 국경 획정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에 있는 수백 개 섬을 반환받았다.

그러나 아무르강과 아르군강에 있는 3개 섬에 대한 통제권 문제는 미해결되었다. 면적이 300km², 여의도의 35배 크기로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볼쇼이우스리스크 섬(헤이싸쯔 섬)의 경우, 러시아는 “강 주요 항로의 중심선이 섬 바깥쪽을 돌아 나가므로 이 섬은 중국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¹²⁹ 2004년 10월 14일 중·러 양국은 국경협정에서 이 문제를 완전 해결하였다. 중국은 타라바로프(Tarabarov) 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고, 양국은 볼쇼이 섬과 볼쇼이우스리스크 섬을 분할지배하기로 합의하였다(<그림 III-1> 참조). 국경협정이 양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외무장관 사이에 공식 조인된 2005년 6월 2일 섬 이양도 완료되었다.¹³⁰

¹²⁹ “-러시아에서 고개드는 ‘황화론’(黃禍論)-”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10224&clubid=11000384>>.

¹³⁰ “Sino-Soviet border conflict”
 <http://en.wikipedia.org/wiki/Sino-Soviet_border_conflict>.

<그림 III-2> 중·러간 해결된 영토 분쟁지역



출처: 동아일보, 2005년 5월 31일.

일본과의 북방4도 분쟁과 관련, 쿠릴 열도란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 남부 사이에 있는 섬들을 말한다. 여기서 남쪽 4개 섬인, 쿠나시리, 에토로후, 시코탄, 하보마이가 바로 분쟁 지역이다. 이들 4개 섬을 남쿠릴, 그 위 우루푸부터 북쪽에 이르는 18개 섬을 북쿠릴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남쿠릴이 쿠릴 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이들 섬은 따로 “북방 영토”라고 부른다. 1855년 개항을 요구하던 제정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시모다(下田)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조약으로 에토로후와 우루푸 사이가 양국 경계가 되었다. 남쿠릴은 일본, 북쿠릴은 러시아가 갖게 된 것이다. 그 후 공동 관리 지역인 사할린을 중심으로 계속 충돌이 일어나다가 1875년 상트 페테스부르크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서 북쿠릴도 일본이 가지고, 대신 사할린은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완전히 맞바꾼 셈이다.

구소련은 1945년 8월 9일 대일전에 참가하였고 일본의 항복 직후 쿠릴열도를 미국의 동의를 얻어 점령하였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단순히 일본이 “쿠릴 열도(Kurile Islands)”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고만 적혀 있고, 쿠릴 열도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적고 있지 않았다. 일본은 여기서 말하는 쿠릴 열도는 북쿠릴만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러시아는 남북 쿠릴 모두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¹

제2차 세계대전 종료이후 쿠릴열도는 소련의 관할 하에 놓였는데, 소련과 일본 양국 정부는 수교에 합의한 1956년 10월 19일 『일·소 공동선언』의 채택 당시 공동선언 조인으로부터 평화조약 체결시까지 과도기 동안 양국이 취해야 할 행위를 규정한 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 각서에 의하면 양국은 제1단계로써 시코탄과 하보마이 2개 섬의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하고, 제2단계로써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쿠나시리와 에토로후 2개 섬의 귀속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¹³² 그러나 소련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이 갱신되자 일·소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미야자와 일본 수상은 1991년 12월 27일 열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 정부가 러시아를 구소련의 법적 승계국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을 밝히고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러시아도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조약 체결의 경우 북방영토 2개섬(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의 합법성을 인정

¹³¹ <<http://blog.naver.com/boraokmi/60011330736>>.

¹³² Aleksandr Anichkin, “kurilskiy eskiz: mozhno li dogovoritsya s yaponysami,” *LZVESTIYA* (Fevralya 19, 1992), p. 5.

하고 북방영토 문제가 러시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양국 정부는 수차에 걸쳐 실무자 협상을 갖고 ‘합법성과 정의’를 기초로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를 1990년대 말까지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¹³³ 1990년대에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을 상정한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하였으나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가 평화조약 체결과 일본의 대러 경협에 대한 최대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다.

엘친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90년 1월 도쿄 방문시 소련에 의한 영토문제 존재인정, 자유무역지대로의 전환, 비군사화, 평화조약 체결, 차세대에 의한 전면적 해결이라는 ‘5단계 해결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¹³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에 의한 일·소 공동선언의 합법성 인정이 2개 섬의 자동적, 또는 즉각적인 이양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일·소 공동선언의 원칙에 따라 타협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과 군부는 민족정서, 4개섬의 전략적 가치 등을 이유로 북방영토 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 기자회견에서 “소련은 섬을 이양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1956년 선언은 어떤 조건으로, 언제, 누구의 주권이 이 영토에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일본과의 논의 주제이다”¹³⁵라고 강조했다.

2005년 2월 22일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은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수립 15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이 러시아에 영토요구를 강화할지

¹³³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March 2, 1992), p. 16.

¹³⁴ Vladimir Ovsyannikov, “USSR-Japan,” *New Times (Moscow)*, No. 6 (February 6~12, 1990), pp. 20~21.

¹³⁵ “News Agency Commentary on Russian Foreign Policy in 2004,” *ITAR-TASS* (January 3, 2005).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¹³⁶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는 러·일관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회의 주목을 환영한다. … 채택된 문서에서 불행히도 일본측은 재차 양국관계 발전의 강화를 자신의 조건대로 영토확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계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영토주장 이외에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야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¹³⁷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러시아는 정치와 경제의 어떠한 연계에도 반대하면서 일본측에 정치적 변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교역,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진전임을 상기시켜 왔으나 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1956년 공동선언이 평화조약의 역할을 완수했다고 보고 평화조약 대신 협력협정체결을 일본에 제의한 상태이다.¹³⁸ 상기와 같은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논쟁 재연으로 2005년 초로 예정되었던 푸틴 대통령의 방일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적어졌다.

¹³⁶ “Japan parliament passes doc expanding territory claims to Russia,” *ITAR-TASS* (2005. 3. 9).

¹³⁷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MFA Information and Press Department Commentary Regarding the Japanese 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Resolution Concerning 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Russian-Japanese Ties in the Light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Interstate Relations,” 358-24-02-2005 (February 24, 2004).

¹³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terview of Russian Ambassador to Japan Alexander Losyukov, Published in the *Newspaper Vremya Novostei* on January 26, 2005” <[http://www.In.mid\(26-01-2005\)](http://www.In.mid(26-01-2005))>.

<그림 III-3> 러·일간 북방영토 분쟁지역



(4) 다자안보협력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 이래로 동북아 역내의 다자안보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여 왔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전아시아 안보회의’ 구성,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남북한·소·중·일간의 5개국 국제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2년 11월 방한 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시 남북한·미·일·중·러·유엔·IAEA가 참가하는 8자회담을 각각 제안하였다. 푸틴 대통령도 2001년 2월 김대중 대통령과 서울에서의 정상회담시 동북아 다자대화의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¹³⁹ 또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11월 19일 고려대 특강에서 “한반도 통일의 대외상황 해결을 위해 남북한과 미·러·중·일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며 그 이후에 더 폭넓은 문제를 다루는 동북아 대화채널을 만들어야 한다”¹⁴⁰고 주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따라서 한국과 더불어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은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적극성은 동북아 역내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과 일·중의 군사력 증대 견제, 역내에서 타국과 동등한 발언권 확보, 역내 국가들간의 긴장완화와 협력증진 등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1993년 이래 개최되고 있는 비정부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 1994년 이후 아·태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정부차원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와 비정부차원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제2차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¹³⁹ “김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청와대 보도자료, 2001. 2. 27).

¹⁴⁰ Mikhail Gorbachev, “International Current Issues and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The Seventeenth Incheon Memorial Lecture, Korea University, November 19, 2001), p. 18.

(5) 다자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러시아는 1991년 말 소련 붕괴 이후부터 약 10년 간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으나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국 안정과 높은 국제원유가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회복 단계에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및 이 지역의 아·태경제권 편입 차원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 동북아국가들로의 원유·천연가스 공급, 한반도와의 도로 연결 등에 큰 이해를 갖고 있다. 2001년 7~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시 열차에 동행했던 폴리코프스키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리인에 의하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남북한·중·일 등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 사할린 대륙붕의 원유·가스 개발 프로젝트
- 남아쿠티야-사할린-일본, 연해주-북한-남한을 연결하는 전력 공급망 프로젝트
- 중국·몽골·북한과의 국경무역 발전 프로젝트
- 북한의 선봉 정유공장 복구 및 정유품 일부의 러시아 극동지역 공급
- 수산물 가공생산 및 어업분야의 남북한·일본 간 합작사업
- 치타-하바로프스크-나호트카 구간과 바이칼-아무르 철도 주변의 자동차 도로 건설 및 서울·평양 도로와의 연결 등¹⁴¹

러시아는 상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동북

¹⁴¹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동방특급열차: 김정일과 함께한 24일간의 러시아 여행 (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pp. 81~85.

아 역내의 주요 파트너들과 정치적, 경제적 대화를 계속 발전시킬 것인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효과적인 안보 확보와 국경의 불가침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지역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유엔과 국제법에 대한 의존, 국제사회의 단결, 다자적 안보기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⁴²

이러한 판단 하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북핵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NEACD, ARF, CSCAP, SCO 등 동아시아 다자안보대화를 매우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6) 국제군비통제

전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국제테러 및 지역분쟁과 함께 WMD 확산을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WMD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의 강화, 군축 등을 위해 선진 8개국(G8) 및 EU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관련 국제포럼이나 지역포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NPT, CWC, BTWC, CTBT, IAEA 안전조치 등과 같은 관련 국제조약과 협정이나 협약들의 효율성 증진, MTCR 같은 수출통제체제의 질적 향상과 확대, 재래식무기와 관련된 물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등에 큰 이해를 갖고 있다.¹⁴³

¹⁴²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the Kremlin, May 26, 2004" <<http://www.ln.mid.ru>>.

¹⁴³ "President of Russia: Road Map on the Common Space of External

NPT와 관련, 러시아는 188개국에 당사국인 가장 광범한 국제조약으로 핵무기 비확산, 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효율성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국제안보체제의 한 기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정부는 오늘날 NPT와 비확산 레짐이 테러 목적을 위한 핵물질 이용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¹⁴⁴

CTBT는 1996년 9월 24일 체결되었으나 핵원자로나 핵연구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44개국에 모두 비준서를 제출하면 180일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북한, 이스라엘, 인도, 이집트, 이란 등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 현재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와 ‘CTBT 조직준비위원회’ 간에 『국제통제체제 시설을 위한 조치에 관한 협정』의 조인이 2005년 3월 22일 빈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총 32개 국제통제체제 시설들 중에서 러시아는 6개의 기초 및 13개의 보조 지진 관측소, 4개의 초저주파 조사소, 8개의 방사성핵종 조사소, 1개의 방사성핵종 실험실에 관여하기로 되어 있다. 이 협정의 체결로 러시아는 CTBT 발효 시까지 ‘CTBT 조직준비위원회’와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⁴⁵

현재 러시아 정부는 CTBT의 신속한 발효, 핵무기를 위한 핵분

Security” <<http://www.kremlin.ru/eng/text/docs/88029.shtml>>.

¹⁴⁴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irty-Fifth Anniversary of Entry into Force of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ttp://www.In.mid.ru \(422-05-03-2005\)](http://www.In.mid.ru (422-05-03-2005))>.

¹⁴⁵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CTBT) Organization Signed” <[http://www.In.mid.ru \(564-24-03-2005\)](http://www.In.mid.ru (564-24-03-2005))>.

열 물질이나 기타 핵폭발 장치의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신속한 협상의 개시 등을 희망하고 있다.

PSI는 테러와 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제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다. 또한 인신매매 금지나 마약·위조지폐 등의 밀수와 마찬가지로 WMD의 밀수를 각국의 국내법으로 저지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WMD의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05년 현재 PSI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노르웨이·포르투갈·싱가포르·에스파냐·러시아 등 14개국이다.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채질하는 조치라 하여 반발하다가, 2004년 5월 31일 가입하였다(부록 표 III-44 참조).

다. 정치

(1) 정치체제 및 유사성

러시아는 공화제 정부의 연방국가로서 공식국명은 러시아연방(The Russian Federation)이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신헌법은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로 채택되었다.

푸틴(Vladimir Putin)은 2000년 3월 26일 4년 임기의 대통령에 선출되어 5월 7일 공식 취임하였고 2004년 3월 14일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정부는 프라드코프(Mikhail Fradkov) 총리 하에 1인의 부총리와 15개 주요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는 양원제로 하원은 국가두마(State Duma)로 불리우며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지역구에서 225명 그리고 정당명부제로 225명, 총 450명이 선출된다. 상원은 연방협의회(Federation Council)로 불리며 89개 지방에서 2명씩(지방행정 책임자와 지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 178명이 대표된다.

주요 정당으로는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 러시아연방공산당(CPRF), 모국(Motherland), 러시아자민당(LDPR), 자유주의 정당인 야블로코(Yabloko)와 우파연합(Union of Rightist Forces) 등이 있다. 2003년 12월 7일 실시된 하원선거 결과 여당이 72%, 야당이 11%, 중도가 17%를 각각 차지하여 푸틴 대통령은 여대야소 속에서 정국 안정을 이루고 있다.

<표 III-9> 러시아 연방하원(국가두마) 의석분포

성향	정당명	의석수
여당	통합러시아당	305석
친여당	무소속	15석
야당	공산당	51석
중도	자유민주당	36석
	조국블록	38석

출처: <<http://www.mofat.go.kr>>.

미국의 저명한 민간 인권옹호 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러시아는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판정되었다. 1등급이 가장 자유롭고 7등급이 자유가 적음을 나타내는 지수에서 러시아의 정치권리는 6으로 이전 조사 때보다 악화되었고, 시민자유는 5로 각각 분석되었다. 동북아 역내 6개국 중 러시아

의 자유등급이 4위로서 미국, 일본, 한국 보다는 덜 자유롭고 중국, 북한 보다는 더 자유로운 국가임을 나타낸다(부록 표 III-46 참조).

(2) 지역내 정치협력

<표 III-10> 1990년대 이후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1990~1995		1996~2000		2001~현재(2005. 7)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일본	2	-	6	4	9	9
중국	2	-	2	-	3	-
한국	4	3	1+a	7	2+a	3+a
북한	-	-	1	-	2	-
미국	17	10+a	10	-	13	-
몽골	1	-	1	1	3	2

<러·중관계>

1990년대 러시아는 대중 정책과 관련, 정상 및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 등을 통해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는 냉전시대에 약 30년 간을 끌었던 중소분쟁이 1980년대 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1992년 3월 방중시 1991년 5월 체결한 「동부국경선 획정 협정」의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1995년에는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활발히 이루어져 협력관계가 공고히 되었다. 5월 개최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열친 대통령과 장쩌민 국가주석은 쌍무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교역량 확대 및 동부국경선 획정의 준수 등에 합의하였다. 이어 6월 이봉 총리, 9월 전기침 외교부장 등 중국의 최고위 인사들이 방러, 열친 대통령 및 체르노미르딘 총리와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또한 양국 정상이 1996

년 4월 북경에서 양국관계를 21세기를 대비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을 표방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형성이 가능했던 것은 국경선 주둔 병력 감축협상,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한 대비책 마련, NATO 확대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 등 때문이었다.

2000년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정례 정상회담 개최, 고위인사 상호방문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모스크바에서 2001년 7월 체결되었고, 양국은 2002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 2003년 5월 후진타오 신임 국가주석의 방러 등을 통해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일련의 회담에서 세계질서 다극화를 위한 협력의 지속, 유엔안보리의 권위 유지와 국제법 원칙 준수를 위한 노력,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체첸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대응, SCO 역할과 기능의 확대·발전,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전쟁에 대한 동참 등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회담 이외에 러시아는 양국 총리와 부총리, 외무장관의 상호 초청·방문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르강과 아르군강에 있는 3개(볼쇼이우스리스크, 타라바로프, 볼쇼이) 섬에 대한 통제권 문제도 2004년 10월 양국 국경협정에서 완전 해결되었다(부록 표 III-54 참조).

<러·미관계>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직후 체제개혁을 추진하면서 1992년 약 1년간 경제난 극복을 위해 친서방 외교정책을 추진하였다. 옐친 대

통령은 (아버지)부시 미 대통령과 1992년 2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가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표명하였다. 또한 쿠나제 외무차관은 4월 워싱턴에서 솔로몬 미 국무부 아·태 지역담당 차관보와 아·태지역 문제에 관한 양국간 첫 협의를 하였다. 러·미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는 듯 하였으나, 서방의 경제지원이나 투자가 러시아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러시아는 NATO의 동구확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1992년 말과 1993년 초, 즉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미정책을 재평가하고 이후 구소련공화국과 동구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라시아정책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정상회담이나 고위 인사교류, NPT의 무기한 연장, 1994년 12월 START I 발효등을 통해 미국과 전략적으로 상호신뢰를 강화하였으나 러시아의 독자외교 강화로 START II 비준과 NATO 확대 등 국제현안에서 대립과 갈등이 부분적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체제와 이에 대응하는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미·일 대 중·러간 대립구도로 형성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러시아는 같은 해 여름 열린 대통령이 재선된 것을 계기로 강대국 지위 유지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유라시아외교를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전방위외교로 전환시켰다.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9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확대 등 6개항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NATO군이 유고 공습을 1999년 3월 단행하자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2000년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전방위외교를 계승하면서 실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 비대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문제 및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미국과 협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요청하였다. 이후 ABM조약 개정과 NMD체제 구축 문제, 체첸 사태 등으로 미·러간 갈등이 노정되었으나, 2001년 9·11사태 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공조합의 등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정례적인 정상회담이나 외무장관 회담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국간 및 세계적 차원의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WTO 가입이나 교역 등 경제문제에서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권위주의로의 복귀, 인권, 구소련공화국들의 친서방화, 이란 원전건설 문제 등은 양국 정치관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부록 표 III-64 참조).

<러·일관계>

1990년대 초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발전 및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하여 일본과의 우호관계 발전을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문제 논의에 적극성을 보였다. 옐친 대통령은 1993년 10월 방일, 평화조약 체결시 북방영토 2개 도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10월 「소·일 공동선언」 등 “기존 협정들에 입각하여 처리한다”는 「도쿄선언」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의 ‘선 경협, 후 영토협상’ 입장과 일본의 ‘정경불가분의 원칙’ 입장 대립으로 담보상태가 계속되었다. 또한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

사국 진출 모색과 관련, 옐친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개혁문제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일본과 정상회담, 고위인사 교환방문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였으나 북방영토, 유엔안보리 개혁, 일본의 TMD 구축 문제 등은 양국관계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은 북방영토문제 해결과 2000년까지 평화조약 체결을 대러 외교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했다.

2000년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과 4월 모리 일본 총리의 취임이후 공식 및 비공식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 국회의원 회담 등을 통해 양국은 정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 등 현안 해결을 모색하였다. 2001년 러·일관계가 매우 호전되어 러시아측은 대일관계가 수 년내 최고로 훌륭한 상태라고 평가하였고 일본도 양국관계 수위가 매우 훌륭한 수준이라고 만족을 표명하였다. 2003년 1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러시 양국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행동계획’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2개 도서 반환과 2개 도서 평화협정 체결후 추가 협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대규모 경협을 내세워 4개 도서 모두 반환 이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이견이 노정되는 가운데 2004년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을 담당해온 제2아시아국을 폐지하고 중국 및 한반도를 관할하는 제1아시아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5년 현재 러시아는 2개 도서만을 일본측에 반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일본이 거부할 경우 반환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일 통상조약 150주년 기념일을

맞아 2월 방일할 예정이었으나 북방영토 문제로 무기연기 되었다
(부록 표 III-58 참조).

<러·한관계>

구소련은 한국과 1990년 9월 30일 수교를 하였으나 1991년 말 구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연방이 외교관계를 승계하였다. 러시아는 당시 체제전환으로 인한 정국 불안과 극심한 경제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치관계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에 큰 이해를 가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열린 대통령이 방한하여 정치, 경제, 안보, 과학기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한·러 기본관계조약」이 1992년 11월 19일 체결되었고 양국관계는 '우호협력관계'로 특징 지워졌다. 이후 양국 외무장관, 국회의장 등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져 정치관계가 발전되는 가운데 1994년 6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를 계기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기대했던 한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 특히 대규모 지원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3~94년의 제1차 북핵 위기 해결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서 소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7월 정보외교관 상호 추방사건이 발생하여 러·한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99년 5월 28일 열린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간의 한·러 정상회담이 5년 만에 개최되어 정상관계를 회복하는 한편,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이후 양국 고위인사들의 상호방문이 다시 확대되었고, 실용주의에 기초한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여

2001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대표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와 양국간 경협에 관해 집중 협의하였다. 러시아는 군사무기 판매와 TSR-TKR 연결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2004년 한·러 양국은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20주년 및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여 외무장관의 상호 방문 및 푸틴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현재 러시아는 제2차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고, 양국 간에는 부총리, 정부 장관, 국회의원, 시장, 언론사 대표 등 고위인사들 간의 상호방문이 활성화되고 있다(부록 표 III-49 참조).

<러·북관계>

러시아의 대북한 관계는 1990년 9월 30일 한·소 수교 이후 상당히 소원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1961년 동맹조약의 제1조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재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제1차 북핵 위기에서 북한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시베리아내 북한 벌목공의 인권 및 남한으로 탈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에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인사교류가 없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양국간 관계복원이 시작되었다. 러시아내 친한국 일변도의 대한반도정책에 대한 비판, 러시아 정부의 대북한 관계 복원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도 등 때문이었다. 열친 대통령의 특사 파노프 외무차관이 9월 방북하여 정치관계 복원, 국회간 교류, 경협 확대 등 합의하였다. 이

후 양국 의회간 대표단 회담이 개최되었고, 평양과 모스크바에서는 동맹조약을 대체할 신조약에 대한 협의가 양국 실무자들 간에 이루어졌다.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의 출범과 1999년 12월 말 열린 대통령의 사임 이후 양국 정치관계는 호전되었다.

2000년 2월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신조약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이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백남순 외상간에 조인되어 10년간의 냉각기와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양국은 보편적인 국가 간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3차(2000. 7, 평양; 2001. 7~8, 모스크바; 2002. 8, 블라디보스톡)에 걸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미·일의 TMD 계획, 러·북 양국간 군사협력,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극동지역 경협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이외에 2002년에는 2월 폴리코프스키 대통령 특사의 방북, 5월 백남순 외상의 방러, 7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10월 파데예프 철도장관의 방북, 12월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 방북 등을 통해 양국간 선린협조관계가 강화되었다.

2000~2002년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협력의 토대를 마련한 러·북 양국은 현재 정상간 친서교환과 특사 파견 및 외무장관 회담 등으로 선린협조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평양에 최초의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교회’를 2004년 건립하였다(부록 표 III-63 참조).

라. 사회·문화

(1) 한국과의 문화관계

러시아와 한국과의 문화관계는 점증하는 추세이나 역내의 타국들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광관계는 점증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11만 6,821명이 입국하였으나 1998년에는 13만 5,401명으로 16%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16만 8,038명으로 1993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3년 러시아로부터 한국으로 입국자 수는 전 세계로부터 입국자 수의 3.6%, 동북아2로부터 입국자 수의 5.8%에 불과하다.

또한 1993년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로 2만 930명이 출국하였으나 러시아 정국과 경제 불안으로 1998년 1만 8,306명으로 12.5%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4만 2,982명으로 1993년 대비 105% 증가하였다. 2003년 한국으로부터 러시아로 출국자 수는 전 세계로 출국자 수의 0.6%, 동북아2로 출국자 수의 1.1%에 불과하다(부록 표 III-75 참조). 따라서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광관계는 점증되는 추세에 있으나 동북아 역내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그 비율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와 한국과의 항공기 운항횟수 면에서 볼 때, 도착과 출발 합계가 1993년 2,096회이었으나 1998년 4,335회로써 107% 증가하였고 2002년 4,949회로 1993년 대비 136% 증가하여 점증하는 추세에 있다. 2002년 러시아와 한국 간 운항횟수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운항횟수의 3.0%, 우리나라의 동북아2 운항횟수의 4.4%를 차지하고 있다(부록 표 III-70 참조). 따라서 러시아와 한국과의 항공기 운

항횡수도 점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동북아 역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아직도 미미하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하면, 2003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모두 64,520명이고 이 중 남성이 39,029명, 여성이 25,491명이다.

(2) 러시아내 소수민족 문제

러시아는 21개 공화국, 6개 지방(krai), 49개 주(obl原因), 1자치주, 10개 자치구(okrug), 2개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의 연방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이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러시아인이 82%로 대다수이고, 이외에 타타르인 4%, 우크라이나인 3%, 기타 100여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소수민족들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체첸민족 등이다.

러시아내 북 코카서스 지역에는 7개의 자치공화국들이 있는데 이들은 회교도들이다. 1991년 8월 구소련에서 보수파의 쿠데타 이후 체첸공화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두다예프는 연방조약¹⁴⁶ 체결을 거부하고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2년 10월 북 오세티아 지역에서 잉구쉬인과 북 오세티인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는 신생 러시아 출범이후 최초의 무력충돌이었다. 이와 같은 소수민족들간의 무력충돌 확산은 소연방 붕괴와 같은 러시아연방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고위인사를 파견하여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¹⁴⁶ 러시아내 21개 공화국중 19개 공화국이 연방조약을 1992년 3월 31일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연방이 성립되었다.

이 지역문제를 두고 모스크바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었다. 하나는 코카서스 산악지대로부터 러시아가 철수하여 북 코카서스인들에게 독립을 허용하고 평지 어딘가에 새로운 국경을 획정하자는 것이었다. 또 다른 견해는 코카서스 산맥은 트랜스코카서스로부터 불안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지이고 이란이나 터키와 같은 남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어지이기 때문에 코카서스 산악지대로부터 철수는 러시아의 전략적 방어에 해롭다는 것이었다. 잉구쉬-오세트를 평정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신속한 개입은 두 번째 전략개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체첸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이 지역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이었다. 러시아는 단지 이 지역 안정을 위한 역외 보장자로서 계속 남아 있기를 희망하였다.¹⁴⁷

1991년말 체첸의 독립을 선언한 두다예프 대통령의 도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군이 파견되어 1994년 12월 체첸 전쟁이 시작되었다. 1996년 4월말까지의 제1차 체첸전쟁에서 전투기와 탱크 등 대규모 화력을 동원한 러시아군이 체첸 반군들을 남부 산악지대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로 내몰 수 있었다. 그들의 끈질긴 저항에 부딪친 엘친 대통령은 휴전을 모색했으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다예프 대통령은 폭격으로 4월 사망하였다. 대선을 앞둔 엘친 대통령은 안다르비예프 신임 대통령과 5월 회담을 갖고 6월 1일부터의 휴전에 합의하였으나, 체첸 주둔 러시아군은 그러한 합의를 거부하였다. 엘친 대통령이 8월 재취임하였을 때 체첸군은 수도 그로즈니를

¹⁴⁷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1992~1993* (London: IISS, 1997), pp. 81~83.

재탈환할 수 있었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체첸 문제 특사로 임명된 레베드는 9월 체첸과의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와 체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이 협정은 군대철수와 여러 가지 재정 및 예산 업무를 감독하고 체첸공화국의 사회·경제 시설을 복구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며 주민들에게 식량과 약품을 제공할 공동위원회를 1996년 10월 1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1997년 1월까지 러시아군이 철수하였으나 러시아 정부는 체첸공화국이 러시아의 일부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 같은 달 체첸 대통령 선거에서 마스하도프가 당선되었고 그는 체첸이 이미 독립국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⁸ 따라서 러시아와 체첸 간에는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체첸 반군들이 이웃 다게스탄 마을들을 점령함에 따라서 1999년 8월 체첸에 대한 러시아군의 제2차 공격이 감행되었다. 옐친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실된 상황에서 신임 총리로 임명된 푸틴이 강경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등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그의 인기가 8~9월 2~4%에서 10~11월 30%이상으로 급상승하였다.¹⁴⁹

1999년 8월에 시작된 제2차 체첸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 수가 매우 많다. 그러나 2001년 1월 약 5,000명의 러시아군 철수는 전쟁 수행에서 변화를 나타냈다. 약간의 중장비들이 점차 철수되고 있고 비행기 및 대포 공격이 양과 규모에서 줄어들었다. 「연방보안국」(FSB)이 작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

¹⁴⁸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1996/97* (London: IISS, 1997), pp. 128~129.

¹⁴⁹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4th quarter 1999 (London: EIU, 1999), p. 6.

다. 그러나 체첸 반군들의 저항은 지속되고 있다. 체첸에서 러시아 군에 의한 인권유린은 러시아 및 외국 언론, 『유럽이사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 체첸 군사작전과 경제 재건에 대한 비용이 매우 큰데, 러시아 분석가들은 2000년에 소요된 비용을 총 330억 루블(9억 4,000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¹⁵⁰

200여년 이상 독립항쟁을 해온 체첸인들의 남부 산악지대에서의 지속적인 게릴라전으로 체첸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체첸 사태의 장기화는 푸틴 대통령에 적지 않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마. 소결

동북아 협력과 관련, 러시아는 현재 동북아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적절한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에너지, 운송, 안보, 문화 등의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갖고 있다. 러시아의 실질적인 협력인프라 실태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는 경제면에서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이 아직 미미하지만 안보면에서는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과 정책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치면에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 일면 협력, 일면 견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사회·문화면에서 한국과는 미미한 수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면에서, 러시아는 회복세에 있으나 동북아 역내에 대한 경제적 역할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러시아 경제는 급성장(2003년

¹⁵⁰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p. 108.

7.3%)하고 있으나, 2003년 동북아2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GDP 비중은 5.6%, 무역액은 5%, FDI 유출(outflows)액은 5.0%이다. 중국, 미국, 일본이 여전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긴 하지만 일본과의 교역이 점차 감소하고 한국과의 교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역내 국가들과 FTA 체결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보면에서, 러시아의 국방력은 대폭 축소되었으나 실용주의 차원에서 역내에 대한 무기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국방비(2003년 130억 달러)는 역내 국가 중 3위, 병력(99만 8,100명)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9~2003년 역내에 대한 무기수출(113억 7,200만 달러)은 미국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와 운송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다자안보기구를 통한 효과적인 안보 확보라고 판단하고 동북아다자안보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면에서, 러시아는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이후 경제회복과 여대야소 정국으로 안정을 이루고 있으나 권위주의로의 복귀 추세로 자유가 제약받고 있다. 동북아 역내 6개국 중 러시아의 자유등급은 4위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역내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고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나 역내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중국과 함께 견제하고 있고 일본과 정치협력 확대에는 북방영토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문화면에서,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점증하는 추세이나 역내의 타국들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다. 2003년 입국자 수는 동북아2의 5.8%, 출국자 수는 동북아2의 1.1%, 2002년 운항횟수는 동북아2의 4.4%에 불과하다.

5. 몽골

1990년 이후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의 체제 변화는 몽골의 국내외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몽골은 달라진 국제 환경과 국내의 제반 변화에 발맞춰 구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서방의 다당제와 의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는 70여 년 동안 고수해온 소련 일변도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이웃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서구 및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새로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안보와 국방 분야 역시 달라진 주변 환경에 맞추어 다극, 비동맹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전부문에 걸쳐 서구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히 교육제도와 학제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5년 동안 진행된 서구식 개혁 작업은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의 취약한 경제 기반 때문에 모든 개혁 작업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시장경제의 부산물인 빈부격차와 새로운 체제에 탈락한 소외 계층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 경제

시장경제 체제 도입 이후 몽골의 경제 상황은 체제 전환 초기(1990~1995), 경제 구조개편 가속기(1996~1999), 거시경제 안정기(2000~2003) 등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 지난 10여 동안 진행되어온 몽골의 경제 상황을 시기별로 고찰한다.¹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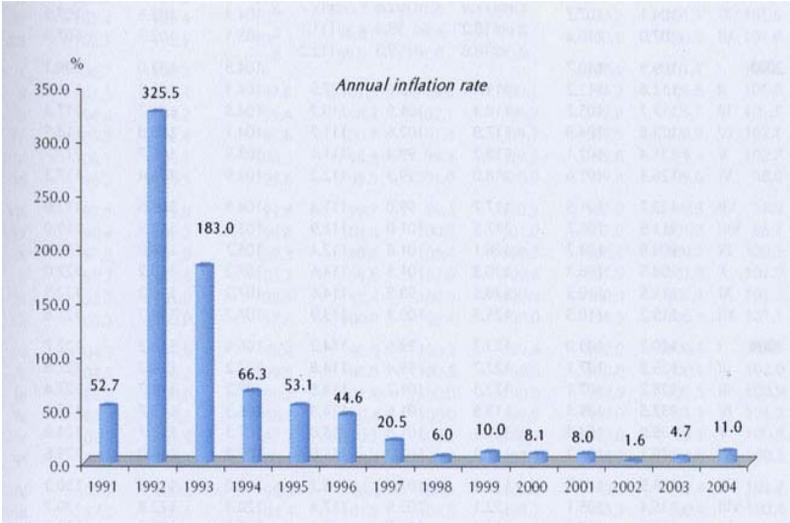
몽골은 1991년부터 계획경제 시스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 과정에서 몽골 경제는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각종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제 전환 초기(1990~1993)에 국내총생산(GDP)은 20% 정도, 같은 기간에 수입은 2.6배 감소하였다. 반면에 물가는 1989~1993년 동안 18.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실업자가 나타나고(8.5%), 전체 국민의 30% 이상이 극빈으로 내몰렸다.

이 기간에 몽골 정부는 물가의 단계별 자유화, 환율 자유화 조치(1993), 전국민에게 쿠폰 발행을 통한 국가 재산의 사유화(1991년 말~1992년 초),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 구조를 개편을 목적으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원조국, 국제기구들과 합의하여 중기(中期) 계획을 입안·시행하고, 각종 세법과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 외자유치, 외환, 통계, 회계에 관한 시장경제의 기초 법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몽골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1994년부터 몇 가지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즉 이때부터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국내총생산도 점진적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1992년에 325%에 달했던 인플레이션 비율이 1994년 66.3% 1995년 53.1%(아래 표 참고)로 낮아졌다.

¹⁵¹ 이하 지난 10여 동안 몽골 경제의 발전과정은 몽골발전연구소(Mongolian Development Institute)에서 간행한 “몽골의 지역발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 및 방법과 방법론 (L. Tsedendamba, *Mongol Ulsad Bus Nutguudyn Högiliin Hötölbör Bolovsruulah Onolyn Ündes*, Argazüi, Argachlal, Ulaanbaatar, 2004), pp. 37~45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III-11> 인플레이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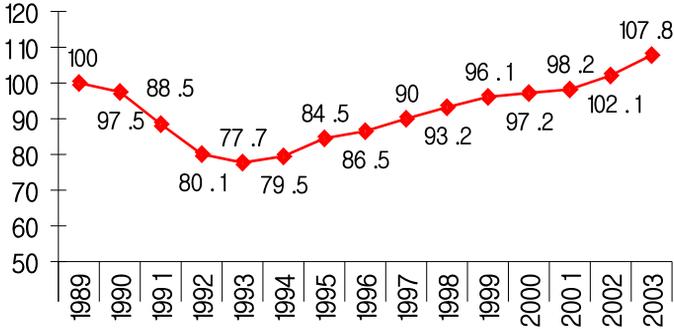


출처 : 몽골국 통계연감 2004 (울란바토르, 2005).

몽골 정부는 경제구조 개편기인 1996~1999년에 세계은행, 국제 금융기구, 원조국들과 공동으로 경제·사회의 전부문에 걸친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거시경제의 안정, 구조개편의 가속화, 국가 재산의 축소, 사적 부문의 발전을 겨냥한 각종 정책을 취한 결과 거시경제에서 긍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즉, 이 기간에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2.3%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비율은 53.1%에서 6~10%로 낮아졌으며, 외환보유고 1억 9,100만 달러, 대외무역 총액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동 시기 마지막 2년 동안 가뭄과 재해가 겹치면서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림 III-4> 국내총생산의 실질성장 비율(1989=100%)



Source : L.Tsendendamba, *Mongol Ulsad Bus Nutguudyn Högjliin Hötölbör Bolovsruulah Onolyn Ündes*, p. 40.

한편 거시경제 안정기(2000~2003년)에는 지표상으로 국내총생산이 2000년 1.1%, 2001년 1.1%, 2002년 4.1%, 2003년 5.5%(1995년 기준 전년 대비)로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폭이 커지고 있으며, 2004년에는 10.6%로 대규모 성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2003년도에는 인플레이션 비율이 5.5%에서 0.90%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최근 몇 년 동안의 지표를 놓고 보면, 몽골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가 낙후되어 있고,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하고, 과소 인구에 기인한 노동력 부족과 시장의 협소화 등 몽골 경제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산물인 빈부 격차로 인한 빈곤층 문제는 사회불안과 정치 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근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을 잃은 유목민들이 대거 울란바토르 등 도시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도시빈민층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1) 기초지표

몽골은 정치체제가 변화하고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된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즉 시장경제 체제가 도입된 직후인 1990~1993년 사이에는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1994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2002년에 와서야 겨우 1989년 수준(<그림 III-4> 참조)을 회복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후 현재까지 수치상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만,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발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이는 아래에 제시한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GDP>

몽골 경제가 세계 및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구매력 기준(GDP with PPP) 몽골의 2003년도 GDP는 48억 7,700만 달러로 동북아1 또는 동북아2 어느 경우에서나 그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최근 2년 동안 GDP가 5%(2003년), 10%(2004년)대로 성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바꿀만한 근본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몽골 경제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GDP에서 산업별 생산 비중을 보면, 2003년 현재 농업 20.6%, 공업 21.4%, 서비스업 58%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면, 농업의 경우 1993년 35%, 1998년 31%로, 공업의 경우 역시 1993년 42%, 1998년 35%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에 반하여, 서비스업의 경우 1993년 37%, 1998년 34%로 감소 혹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별 생산 비중의 증감 추세만 놓고 보면, 차이가 크기는 해도 몽골 경제가 점차 선진국형으로 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별 구성비율은 체제 전환에 따라 국영 농장과 공장의 방기 및 기능마비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곧바로 몽골 경제의 호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몽골 경제는 구조적으로 유목 목축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식량 또한 1990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부인 자원개발을 위하여 광공업에 더욱 발전시켜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몽골의 1인당 GDP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구매력 기준 몽골의 1인당 GDP는 1993년 1,200 달러에서 1998년 2,250 달러, 2003년에는 1,800 달러로 동북아1의 평균 10,700달러, 동북아2의 평균 14,314.3달러의 1/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부록 표 III-1 참조).

<인구>

2005년 현재 몽골의 인구는 264만 6천명이다. 이는 동북아 1 및 동북아 2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국민 1인당 GDP가 동북아 평균 수준에 훨씬 밑도는 저개발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몽골 경제의 규모와 취약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사회주의 시절부터 몽골은 적극적인 인구부양책을 썼지만 국토 면적에 비하여 여전히 인구는 적다. 1990년 이후 인구 성장률을 보아도 근소한 차이지만, 아시아 및 세계 인구 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인구 증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또한 1990년 이후 체제 전환의 혼란은 인구 증가율을 이전보다 떨어뜨려 인구 증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아도 1990~1995년 1.51%이던

인구 증가율이 1995~2000년에는 0.88%로 떨어졌다가 2000~2005년에 1.16%로 나타나 여전히 인구 증가가 완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표 III-2 참조).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인구가 희소한데다가 체제 전환 이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의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1995~2000년의 마이너스 성장은 전적으로 시장경제와 경쟁체제가 불러온 전형적인 유산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속되는 도시화 및 인구 집중화, 그리고 단기간에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경제 사정은 앞으로도 인구 성장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은 인구는 몽골 경제의 가장 큰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나마도 광대한 국토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나 동원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여 동안 과거 국영 농장 및 공장,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전문인력이 생활고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이직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몽골은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몽골의 최대 해외 취업국의 하나인 한국에도 약 2만여 명(비공식 통계)이 주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극히 일부를 빼고 전직 교사, 연구원 등 지식층이라는 사실은 몽골의 전문인력 유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록 표 III-4>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노동력 지표 1과 2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몽골의 전체 노동력을 100만 정도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 수치 역시 동북아시아 인력 수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이다. 노동력 지표 1에서 보듯이, 2004년 현재 전체 취업자 중 농·목축업 종사자가 전체의 40%를 넘어 전

형적인 후진국형 고용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비율과 비교해 보면 노동력이 가장 많이 투입된 농·목 축업의 비중이 서비스 부문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체제 전환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실업률은 한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 특히 아래의 실업률 지표에서 보듯이 2001년 이후에는 산업국가 평균 실업률 4~12%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 수치는 실업자로 등록된 공식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업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국영 농장과 공장의 폐쇄와 방기 등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는데도, 이처럼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고급 저급을 막론하고 전분인력이 시장경제에 편승하여 소규모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은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체제 전환 이후 몽골에 들어간 국제기구나 외국계 회사에 유입된 노동력도 실업률 하락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떻게 설명해도 실업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몽골의 적은 인구에서 비롯된다. 기술이 있거나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타 외국 기구나 상사 또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고, 나머지는 시장경제의 부산물인 3D에 종사하거나 유목목축에 종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수도 울란바토르를 비롯하여 대도시 주변으로 끊임없이 인구가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환경>

동북아시아역이나 세계적 수준과 비교할 때 몽골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량은 극히 미미하다. 이는 적은 인구와 산업 발달 수준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노동 인구의 약 40% 정도가 유목 목축에 종사하여 에너지 소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지표상 1993년도에 비하여 그 후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은 몽골 경제가 그만큼 정체 또는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는 것은 몽골 역시 에너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Ⅲ-5>에서 보듯이 전력도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여 부족분을 이웃 나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력 생산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은 도시 지역은 대부분 화력발전(석탄)에 의존하고 있어서 도시화와 더불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소량이지만 몽골은 2004년 현재 하루 542배럴의 오일을 생산하는 산유국이다. 아직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지만, 향후 고비지대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유전이 개발될 경우 적은 인구에 규모가 작은 몽골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현재 260여 만의 인구에 156여 만km²의 국토는 몽골 경제 발전의 취약점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적은 인구가 광대한 국토에 분산되어 있어 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국토의 광활함에 반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통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점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체제 전환 이후 생계를 위한 도시지역 이주로 동서남북 국경 지대가 점차 무인 지대로 변하고 있는 점도 몽골의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은 국토의 광활함만큼이나 다양한 생태·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는 외국 관

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커다란 자연자원으로서 향후 개발 여하에 따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의 80%가 초원으로 이루어진 대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고전적인 유목목축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 역시 그 자체로서 커다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무역 및 투자

<부록 표 III-6>에서 보듯이 몽골의 수출입은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성장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1993년에서 2003년까지 10년 동안에 수출입 공히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보다는 수입의 증가 추세가 좀 더 두드러진다. 이 점은 2004년도 무역액에서도 확인된다. 즉, 2004년 무역액을 보면 수출입 총액 19억 9,080만 달러 중 수출 8억 6,970만 달러, 수입 10억 2,110만 달러로 수입의 증가폭이 더욱 현저하다. 시장경제 실시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된다. 이는 한편으로 체제 전환 후 국영 공장이나 농장의 폐쇄 및 도태로 인하여 과거 자급이 가능한 공산품이나 농산물까지 수입한 결과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 경제 도입으로 도시민에서 유목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세계 시장 질서에 편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몽골의 무역액은 세계 전체는 물론, 동북아시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반면에 대몽골 해외직접투자액은 1993년 1,100만 달러에서 1998년 1,90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2003년에는 1억 3,200만 달러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 점은 투자액 추이를 보여주는 투자액 지표를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된다. 한편 대몽골 해외투자총액은 비

록 전세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 총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2003년 이후 증가폭은 몽골 경제 발전에 청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2003년 현재 몽골의 주요 무역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으로 몽골의 무역이 대부분 동북아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중국(41.4%), 미국(31.7%), 러시아(9.2%) 등 동북아 주요국에 80% 이상, 수입은 러시아(34.4%), 중국(20.1%), 한국(12.4%) 등 역시 동북아국가들에 60%가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다 일본을 포함시키면 몽골의 대동북아지역 무역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몽골 무역의 향방은 동북아지역과의 관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역으로 몽골이 동북아지역의 안보·경제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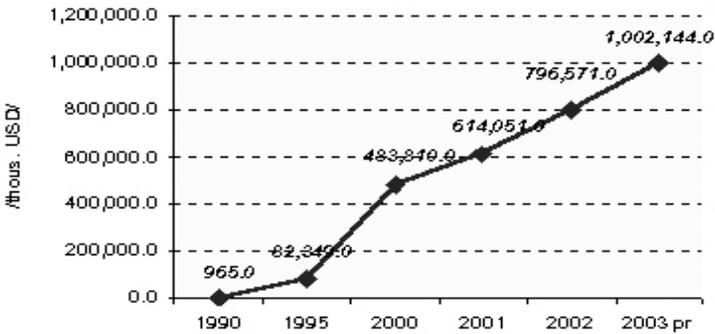
대몽골 직접 투자도 동북아지역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각국의 대몽골 직접 투자는 중국(38.0%), 한국(9.2%), 일본(6.9%), 미국(4.1%), 러시아(3.9%)로 캐나다(15.1%)를 빼고는 동북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다 동북아지역에 있는 홍콩(2.5%)까지 합하면 대몽골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가까이 육박한다(<그림 III-5> 참고).

<표 III-12> 무역액/수출액·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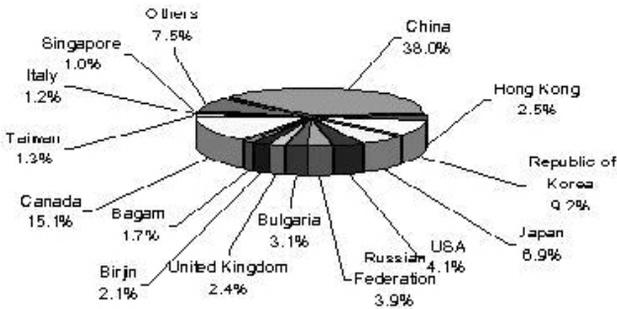
Indicator	Unit	2001	2002	2003	2004
무역액	\$ m.	1159.2	1214.8	1416.9	1890.8
수출액		521.5	524.0	615.9	869.7
수입액		637.7	690.8	801.0	1021.1

Source : 몽골국 통계연감 2004 .

<그림 III-5> 대몽골 해외 직접투자 지표



<그림 III-6> 각국별 해외 직접 투자 비율



Source : 몽골 산업-무역부 홈페이지 <<http://www.mit.pmis.gov.mn>>.

(3) 국가간 수출입 matrix

<부록 표 III-11>에서 보듯이 1993, 1998, 2003년도 몽골의 국가간 수출 실적에는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먼저 1993년에서 2003년까지 10년 동안 수출은 2배 가까이 증가하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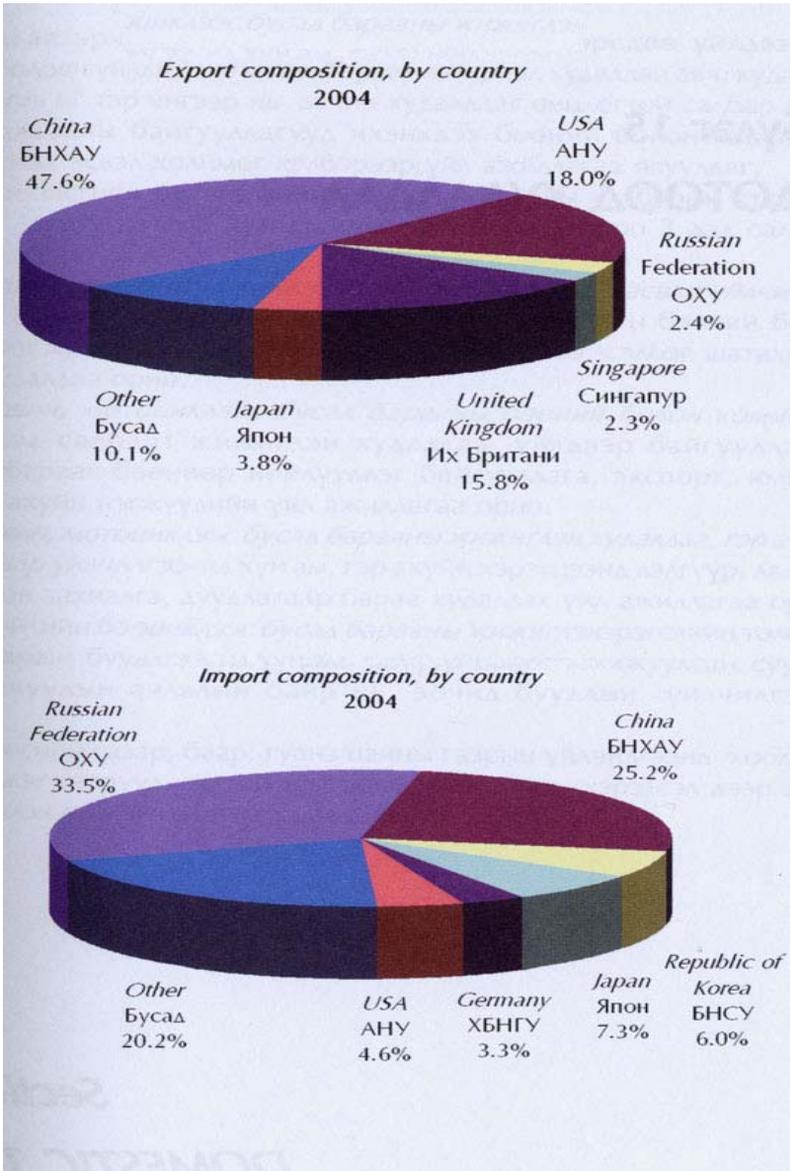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의 수출 감소는 재해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하락에 그 원인이 있는 듯하다.

국가별 특징은 대러시아의 대폭 감소와 대미국, 대중국의 큰 폭 증가를 들 수 있다. 대러시아 수출 감소는 CIS국가에서 러시아연방 외에 다른 국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의 증가는 중국과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말해준다. 그러나 몽골의 공식 경제(official economy)와 맞먹는 규모의 지하 경제(shadow economy)가 대부분 중국과의 교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중국 수출은 표의 수치보다 훨씬 많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하나 주목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대미 수출은 1998~2003년 사이에 거의 5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미국이 2001년 7월 1일부터 몽골을 특혜관세 국가에 포함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¹⁵²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몽골의 동북아시아 지역 수출은 자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2004년에도 계속되어 자국의 전체 수출 가운데 동북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1.8%에 달한다 (<그림 III-7> 참고).

출과 달리 수입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몽골 경제가 동북아 경제 또는 세계 경제로 편입되어 간다는 증거로 설명할 수 있다. 국가별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과 대러시아가 특징적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은 것은 러시아가 몽골의 주요 산업시설에

¹⁵² 또한 미국은 1990~2004년 동안 몽골에 섬유 분야에서 Most-Favored-Nation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Baatar Tsend, "Position of Mongolia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와 과제 (국제워크샵, 통일연구원 발표문, 2005. 9. 8), p. 11.

<그림 III-7> 2004년 몽골의 수출입 구성비율



Source : 몽골국 통계연감 2004 .

수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철도나 광산 등 기간산업 부문에서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아 전체를 놓고 보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몽골의 수입 역시 동북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4년에 계속되어 자국의 전체 수입 가운데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1.6%에 달한다(<그림 III-7> 참고).

(4) 자유무역협정(FTA)

몽골은 현재 미국, 한국, 일본 및 유럽 연합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몽골은 몽·러 국경 도시 알탄불락(Altanbulag)과 몽·중 국경도시 잠민·우드(Zamyn-Uud)에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¹⁵³

나. 안보

(1) 군사력

몽골의 국방비는 당해국의 인구 및 국내총생산 규모만큼이나 미미하다. 이는 동북아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여타 동북아국가들이 매년 국방비가 증액되고 있는데 반하여 몽골은 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GDP대비 국방비 비율도 2.2%로 낮은 국가에 속한다(부록 표 III-17 참조).

몽골의 군사력은 1944~1945년경에 최고 8만에 달하였다. 그 뒤 몇 차례의 증감이 반복되다가 1980년대 말에는 3만으로, 다시 체제

¹⁵³ Baatar Tsend, "Position of Mongolia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p. 16.

전환기인 1990년 말에는 15,000명으로 줄어들었고, 현재는 9,100명의 정규군이 있다. <부록 표 III-22>에서 1993년에 비하여 1998년 이후 국방비가 대폭 삭감된 것은 병력 규모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어떻든 9,100명이라는 병력수는 광활한 몽골 국토에 비하면 특이할 정도로 적은 수치이다. 물론 몽골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의 병력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 점은 사회주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 시절 몽골인민군(MPA)은 군사적 역할보다 정치적 역할이 컸다. 즉 당시 몽골군은 몽골 주둔 소련의 보조부대로서 몽골인민공화국(MPR)에서 소련의 존재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자 몽골인민혁명당(MPRP)의 독점 지배를 보장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였다.¹⁵⁴

소련군의 철군으로 안보 공백이 생기자 몽골은 즉시 중국에 접근하였다. 이어 1990년을 전후하여 일본 및 서방세계에 손을 내밀었다. 1989년 몽골 외무부장관의 중국 방문과 일본 외상의 몽골 방문은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그후 몽골 정부는 병력을 더욱 감축하면서 이른바 “두개의 이웃과 제3의 이웃” 외교를 통하여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도 몽골군의 존재를 국방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야말로 몽골 국방의 핵심요소이다.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군 주둔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토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독자적인 국가안

¹⁵⁴ Shirin Akiner, eds., *Mongolia Today* (Kegan Paul International: London and New York, 1991), p. 136.

보를 확립할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몽골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안보협력체 창설에 적극 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몽골 정부는 1992년 당해국 영토를 비핵화 지대로 선언하였다.

(2)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

몽골은 헌법으로 외국과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도 맺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외국 군대를 몽골 영토에 주둔시키거나 통과시키기는 것을 금한다”(헌법 제4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몽골의 국방외교도 비동맹과 다극화, 입접국과의 균형관계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러·중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대화화 및 신뢰구축 조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몽골의 국방외교의 기본방향이다.¹⁵⁵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미국과의 교류는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잦은 군인사의 교류는 물론 군개혁 및 군사교육, 장비의 혁신에도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재난구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미군이 직접 참여하는 몽·미합동훈련 “Magic Balance”가 1996~1999년과 2001년에 실시되었으며, 미공병과의 합동훈련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몽골은 미국이 주도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에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소규모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¹⁵⁵ *Defense White Paper* (Second edition) (The Ministry of Mongolia, 2001), p. 50.

<표 III-13> 몽골과 미국의 합동훈련 “Balance Magic”

연도		1998	1999
임무		재난지역에 화물 공수, 긴급 의료지원	긴급의료지원
미국	인원	20	17
	장비	수송기 C-130	-
몽골	인원	29	60
	장비	헬기 Mi-8	-

Source: (Mongolian) *Defence White Paper*, p. 53.

최근 몽골 영토에 미군 주둔 논의가 본격화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몽골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몽골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굳이 미국과의 군사 분야의 협조를 긴밀히 하는 것을 어려운 경제 여건과 러·중에 결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안보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몽골의 이러한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는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안보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¹⁵⁶ 이는 근년 러시아와 중국의 연구기관에서 출판된 연구물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들은 1990년대 이후 몽·미관계, 특히 군사분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자국 정부에 몽골과의 협력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¹⁵⁷ 몽골의 대러시아 부채탕감(2003년 말)과 중국의 대몽골 투자확대, 특히 저리 차관 제공 제의는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몽·미간의 과도한 군사적 접근은 동북아지역에서 또 다

¹⁵⁶ G. S. Yaskina, *Mongoliya i vneshnii Mir*(몽골과 외부세계) (Moskva, 2002), p. 247.

¹⁵⁷ L. Oyungerel, “Mongol dakh’ ANU-yn ashig sonirkhol ba khörsh günnüüdiin khüchin züil(몽골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와 인접국들의 요인),”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2 (2003), pp. 32~33.

은 긴장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몽골의 최대 원조국이자 미·일동맹의 한 축인 일본의 접근 역시 러·중과의 갈등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물론 몽골의 대미, 대일 접근을 경제원조와 중국 및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단순한 외교 책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최근의 대미 접근은 두 인접국의 용인 범위를 넘어선 느낌이 든다.

(4) 다자안보협력 입장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여 있는 내륙국가이다. 몽골의 이러한 지정학적 특수성은 당연히 당해국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시절인 지난 70여 년 동안 몽골은 소련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전적으로 현지 주둔 소련군의 도움으로 국가 안보를 지켰다. 동 시기 몽골의 안보를 지켜준 또 다른 요인은 동서 양진영의 대립과 세력균형, 그리고 남북 두 강대국의 대립과 그들 사이의 세력균형이었다.

양극체제의 해체와 몽골의 체제 전환은 당해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이후 몽골의 외교, 안보 및 국방정책의 기저는 자국의 특수한 지정-전략적 위치에 의거한 비동맹과 국외 중립, 다극외교의 실현이다. 즉, 몽골 정부는 몽골의 독립, 주권, 영토 보전상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없는 한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이나 불력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국의 핵심적인 국가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이웃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는 몽골의 외교정책에 관한 기본 규정(조항 3, 9)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몽골은 외교정책을 실현하는데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 a) 러시아 및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양자에 대하여 균형 외교를 실현하고 양자와 선린으로서 전면적으로 협력한다. (이하 생략)
- b) 미국, 일본, 독일 등 동서의 선진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한다.(이하 생략)
- c)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위치를 강화하고 당해 지역의 정치 경제적 통합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한다. 이 대상 범위에서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와 중앙아시아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킨다. 몽골은 (또한) 지역 안보를 강화시키는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상을 확대하고 집단안보 체계를 창설하는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이하 생략)¹⁵⁸

a), b)는 전통 우방인 대러시아와 중국 외교를 기축으로 하여 기타 제3국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몽골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얘기되는 “두 개의 이웃+제3의 이웃” 정책이다. 제3의 이웃은 물리적인 이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3의 세력을 말한다.¹⁵⁹ 이는 양자간 대화와 협력에 바탕을 둔 정책이다. c)는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정치 대화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당해 지역의 안보, 나아가 자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자간 대화와 협력을 바탕에 둔 정책이다.

요컨대 몽골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자간·다자간 대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몽골의

¹⁵⁸ <<http://www.mongolia-foreign-policy.net>>.

¹⁵⁹ B. Batzaya, “Global’chlal ba Mongol ulsyn gadaad bodlogo(세계화와 몽골의 대외정책),”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3 (2003), p. 38.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개선하고 러시아와 중국에 의하여 제약된 자국의 안보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그 중심에 전자의 경우 미국이 있고, 후자의 경우 아·태지역 안보협력체, 특히 동북아 안보협력체와 중앙아시아 안보협력체를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북아 안보협력체이다. 몽골이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몽골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동북아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골 입장에서 보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나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몽골 연구자들이 정부에 동북아지역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몽골 정부 역시 동북아 협력체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55차 유엔 총회에서 동북아 안보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동북아 협력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에도 물론 몽골이 동북아 협력체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 시작된 “두만강개발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RF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연구자도 있다.¹⁶⁰ 몽골은 1998년에 ARF에 가입함으로써 아·태지역 안보 대화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 장관급, 고위관리급 및 기타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향후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몽골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몽골은 ACEAN+3 및 APEC에 가입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몽골의

¹⁶⁰ S. Dashtsevel, “Züün aziin shine regionalizm ba Mongol uls(동아시아의 신지역주의와 몽골),”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3 (2003), pp. 58~59.

안보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5) 다자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몽골 정부는 1990년 이후 체제 전환과 함께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지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1991년 세계은행을 시작으로 1993년 국제통화기금, 1998년 세계무역기구에 차례로 가입하고, 또한 ARF 가입이나 상하이협력기구 참여, ARF+3, APEC 및 ASEM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상황 판단 때문이다.

전자가 순수하게 붕괴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 하에서 안보와 경제문제의 동시 해결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그 동안 경제와 안보를 담보해주었던 소련이 붕괴하고 또다른 이웃인 중국의 경제적 침투가 심화되는 가운데, 몽골 정부는 “제3의 이웃”과의 양자간 협력 및 지역 협력체라는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구체적 행위로서 몽골 정부는 1990년대 초기부터 동북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었다. 민간 차원에서든 그러한 제안을 하였다. 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구체적으로 농·목 축업 분야의 협력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¹⁶¹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동북아협력체는 말 그대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제

¹⁶¹ Kh. Dashdondov, “Züün khoid aziin khödöö aj akhoiin khamtyn ajillagaand Mongolyn oroltsoo(동북아 농업협력과 몽골의 참여),”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1 (2002).

안이었다. 또한 이들의 제안은 명시적으로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들의 제안은 주로 경제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 이는 몽골의 대외무역과 대몽골 해외 투자액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안보 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 추진하자는 견해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동북아는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협력과 여러 분야에서 통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줄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지적하고, 동북아 안보협력체 형성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안보와 경제협력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경제협력은 안보협력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는 이른바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또한 동북아국가들 사이의 정치·경제 분야의 협력이 증진됨으로써 안보협력체 형성의 기초가 놓인다고 주장하고, 그 사례로서 남북한 사이의 상호신뢰도 여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⁶²

또한 동북아지역에서 경제 분야의 다자간 협력이 확대되는 하나의 조건을 안보의 확립이라고 전제하는 한편, 반대로 안보를 확립하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는데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로 시베리아와 중국 및 동북아국가들을 연결하는 송유관 및 가스관 건설 사업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몽골은 이웃 두 나라와 3자 협력을 확대시키고 북한을 동북아 협력사업에 끌어들이기를 희망한다는 점¹⁶³

¹⁶² B. Baldoo & Sh. Batmök, “Züün khoid azi dakh’ ayulgiü baidalyn sistemiin asuudal, Mongolyn khandlaga(동북아의 안보체제 문제, 몽골의 입장),” *Dorno Örnö*(동서), No. 1/2 (1999), pp. 27~32.

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몽골은 동북아 경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이고,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몽골 입장에서 보면 경제 협력은 경제 문제 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안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꾸러지고 여기에 미국이 참여한다면, 몽골은 당해 협력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 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러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균형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세력을 미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몽골은 “두 개의 이웃+제3의 이웃”이라는 외교정책의 기초 위에서 미국을 제3의 이웃의 첫 번째 국가로 중시하고 있다. 몽골 정부가 대미 외교에 온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역시 몽골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몽골을 아·태지역 안보 전략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몽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북한 동시에 교류관계를 맺어온 몽골의 경험은 북한을 폐쇄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모델” 역할을 하는데 긍정적 및 창조적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¹⁶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몽·미간의 정치, 경제, 군사면의 교류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몽·미의 접근은 몽골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즉 미국이 반대할 경우 몽골이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¹⁶³ B. Batzaya, “Global’chlal ba Mongol ulsyn gadaad bodlogo,” p. 40.

¹⁶⁴ L. Oyungerel, “Mongol dakh’ ANU-yn ashig sonirkhol ba khörsh gümnüüdin khüchin züül,” pp. 30~31.

(6) 국제군비통제

몽골은 현재 BWC, CCW, CTBT, CWC, NPT에 가입한 상태이다 (부록 표 III-44 참조).

다. 정치

(1) 정치체제 및 유사성 정도

몽골은 1992년 1월 13일 헌법 개정으로 시장경제와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하였다. 헌법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은 “국가 대회”(국회)이다.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단원제로 총의석수는 76석, 임기는 4년이고,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1992년 6월 제1대 총선을 시작으로 2004년 6월에 제4대 총선이 실시되었다.

내각은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그 주요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고 책임을 진다. 다수당 또는 다수 연합파의 지도자가 통상 내각 수반인 총리가 되지만, 반드시 의원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장관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정당 추천으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은 형식상 국가수반일 뿐 아니라 외교, 국방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 임명 과정에서도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몽골은 헌법상 의원내각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총리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제에 가깝다. 그럼으로 현재 몽골의 정치체제는 총리와 대통령의 출신 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에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1993년 초대 선거(국회에서

간선)를 시작으로 2005년 5월 제4대 선거가 실시되었다.

몽골은 1990년을 전후하여 체제를 바꾼 소련 및 동구권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유혈을 동반하지 않고 체제를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몽골인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응 속도와 그 내용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989년 말 이른바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직후 몽골인민혁명당 지도부는 당간부와 내각 총사퇴를 결정하고, 그 이듬해 1990년 3월 다당제를 수용하여 사실상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하였다. 그 해 9월에는 서구의 정치형태를 본받아 대통령을 선출하고(간선), 곧이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헌법을 개정하였다.(1992년 1월 13일) 이어 1992년 9월에는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비밀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인민혁명당 승리) 향후 민주화의 초석을 놓았다. 그 후 자유선거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6년 야당인 민주연합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연합 정권은 3차례의 내각 총사퇴로 인한 정치 불안, 부패, 빈곤의 확대, 미숙한 개혁추진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2000년 총선에서는 인민혁명당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는 이른바 민주세력과 구세력이 의회를 분점하여 연립정권(총리 민주연합 출신)이 수립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1992년 이후 선거 과정을 보면, 몽골인들의 투표행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권력의 또 다른 축인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된다. 즉 1993년 대선에서는 1992년 총선에서 패배한 민주연합 후보(오치르바트 대통령)가 당선되고, 1997년 대선에서도 1996년 총선에서 패배한 인민혁명

당 후보(바가반디 대통령)가 당선되었다. 그 후 2001년 대선에서 바가반디 대통령이 재선됨으로서 총선, 대선 교차 투표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 역시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을 본 짧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투표행위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와 함께 몽골 정부와 국민은 과거청산 문제도 신속하고 차분하게 진행시켜 왔다. 사회주의 시절 박해를 받은 인사들과 종교와 사상이 거의 완전히 복원·복권되었으며, 과거 독재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시민의 권리 역시 지난 10여 동안 서구 수준으로 신장되어 현재 몽골 국민은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정치자유를 구속받지 않게 되었다. 몽골인들의 신속한 민주질서 확립과 자유의 확대는 Freedom House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정치권리, 시민자유 각각 2, 부록 표 III-46 참조).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몽골인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빠른 적응력은 그들의 정치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이다. 한 학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몽골의 자유민주주의 문화는 20세기 서구의 영향을 받기 전에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즉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지난 10여 동안 진행된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유목적 전통과 칭기스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¹⁶⁵ 대중들의 의견 표명을 모두 진실로 믿기는 어렵지만, 유목적 전통과 칭기스칸의 통치행위 속에 현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만한 민주적 절차가 있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보기도 어렵다.

¹⁶⁵ Paula L.W. Sabloff, "Why Mongolia? The Political culture of an emerging democracy," *Central Asian Survey*, 21~1 (2002), pp. 19~20.

(2) 지역내 정치 협력

<몽·한관계>

1990년 3월 26일 양국간에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몽 양국은 1999년에 “21세기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동안의 한·몽관계를 보면,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관료와 정치인의 상호방문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주로 경제와 문화, 우호친선 방면에 집중되었다. 이는 2004년과 2005년 양국간의 정치인 교류에서도 똑같이 확인되고 있다(부록 표 III-50 참조).

<몽·일관계>

몽골·일본 두 나라는 1972년 2월 24일 외교관계 수립하였다. 그 이듬해인 1973년 12월 24일 도쿄에 주일 몽골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90년까지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특히 1991년 가이후 수상의 몽골 공식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전분야에 걸쳐 가속화되어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였다.

1998년 반가반디 몽골 대통령의 방일시 양국은 “우호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21세기에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3년 바가반디 대통령의 방일시 재차 확인되었다.

일본은 몽골의 주요 원조국이다. 1991~2003년 동안 일본 정부는 총 12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과 무상원조를 제공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몽골에 제공된 전세계 유무상 원조액의 70%를 점하는 액수이다. 현재도 일본 정부는 매년 4,500~5,000만 달러 상당의 조건이 좋

은 차관(soft loan), 3,000~3,500만 달러 상당의 무상원조, 1,000만 달러 이상의 기술 협력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부록 표 III-59 참조).

<몽·중관계>

몽골·중국은 1949년 10월 16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듬해인 1950년 양국은 울란바토르와 베이징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57년 몽골 정부는 내몽고자치구 수도인 호흐호트(Hohhot)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으나, 몽·중관계의 악화로 1959년 폐쇄하였다. 그 후 1990년에 총영사관이 재개설되고, 1996년에는 몽·중 국경도시인 에렌(Ereen)에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1989년 몽·중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1994년 양국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2003년 후진타오 주석 방몽 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를 “선린 상호신뢰의 동반자(partnership of good-neighborliness and mutual trust)” 관계로 규정하였다. 최근 몽·중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이유는 미국의 몽골에 대한 접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부록 표 III-55 참조).

<몽·러관계>

양국은 1921년 11월 5일에 체결된 “상호승인과 우호관계 수립에 관한 몽골·소비에트 협정”을 시발로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이듬해 1922년에 울란바토르와 모스크바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소련 해체 후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양국 관계는 1993년 1월 20일 “몽·러우호협력조약” 체결로 재차 긴밀해졌다. 특히 러시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몽골과 미국의 긴밀한 관계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0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몽도 이러한 입장에서 추진

되었다. 푸틴의 방문 시 양국 관계, 협력 방향 및 목적을 규정한 “울란바토르 선언”에 서명한 후 양국 관계는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부록 표 III-62 참조).

<몽·미관계>

양국은 1987년 1월 27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듬해인 1988년 6월 울란바토르에 미국 대사관이, 1989년 3월에는 워싱턴에 주미 몽골대사관이 각각 설립되었다. 양국 정상은 2004년 7월 바가반디 몽골 대통령의 방미 시, 양국 관계를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협력과 포괄적 동반자”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최근 들어 양국은 군사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은 근년 몽골을 방문한 미국 측 인사가 대부분 국방·안보 담당자라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어쨌든 현재의 몽·미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양국 관계는 긴밀하다. 2005년 11월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몽골 방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부록 표 III-66 참조).

<몽·북관계>

양국은 1948년 10월 15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49년 울란바타르에 주몽 북한대사관이, 1951년 평양에 주북한 몽골대사관이 각각 설립되었다. 몽골, 북한 두 나라는 2002년 8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부록 표 III-65 참조).

(3) 국내적 요인

앞에서 언급했듯이, 몽골은 어떤 형태이든 동북아협력체 구성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이다. 물론 이는 주로 경제 분야의 협력을 말한다. 그러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점에서, 몽골의 정책은 체제 전환 이후 안전정치가 풀린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안보협력체와 경제협력체 연계 추진방안이 제안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면 동북아협력체 구성에 관한 몽골의 입장은 노무현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된다.

더구나 몽골 학자들이 제안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일본과 한국이지만,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한국을 선호하는 편이다. 현재 몽골은 농업과 목축업, 정보산업, 관광 부문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농업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기부터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즉 한국의 자본과 영농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끌어들이어 동몽골 지역을 개발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한·몽 양국민의 친연성, 몽골의 대외무역과 대몽골 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현실적 비중,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 세계화의 혹독한 시련을 겪은 한국의 경험 등을 근거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한국 투자자들에게 경제·무역상의 우호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무역자유지대를 만들자는 대담한 제안까지 하고 있다.¹⁶⁶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몽골 정부는 한반도의 상황을 몽골의 민족

적 이해가 결린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 즉 대몽골 투자와 대외무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고, 해외 근로 노동자의 대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들어 몽골 국민의 운명을 한반도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현상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어떤 나라라도 고립시키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협력에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⁶⁷

이렇게 보면, 몽골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단순히 경제문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북핵 문제, 나아가 동북아지역 안보문제까지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물론 한국 정부의 구상과 일치하고, 따라서 현 정부의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에 몽골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촉진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촉진요인 못지않게 몽골의 동북아안보경제협력체 참여를 제약하는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먼저 몽골 학자들이 “동북아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개념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⁶⁸는 말은 적절한 지적이다. 사실 몽골의 국제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연구기관인 “국제연구소”에서 실린 정책 제안들을 보면 동북아의 개념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한·중·일·러를 포함시키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중국 동북으로 한정시킨 경우가 많다. 한국 학자들의 구상처럼 미국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극

¹⁶⁶ Ts. Baatar & B. Serjav, “Züün khoid azi: Ediin zasgiin khögjilin khandlaga (동북아: 경제발전 동향),”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4 (2004), pp. 35~36.

¹⁶⁷ B. Batzaya, “Global’chlal ba Mongol ulsyn gadaad bodlogo,” p. 43.

¹⁶⁸ 박종철·이교덕·임강택·전병곤, 『몽골출장보고서(2005. 7. 25~7. 30)』(통일연구원, 2005), p. 5.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동북아지역 설정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곧 그들이 당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나,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미국의 동북아안보경제협력체 형성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우호적인 몽·미관계, 그리고 몽골의 친미정책을 놓고 보면, 미국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몽골의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도 몽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몽골 정부의 입장 및 정책행위와는 별개로 현재와 같은 친미 일변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다. 지금도 러·중과의 경제협력 문제나 러·중이 몽골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주제의 세미나가 열리고 이에 관한 정책제안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러·중의 영향력 때문이다. 반대로 러·중 역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부채 탕감과 경제협력은 초기적 수준의 대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몽골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이런 견지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구상에 미국이 지지하더라도, 만약 러·중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반대가 있다면 몽골의 선택의 폭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회·문화

(1) 통신·교통

<부록 표 Ⅲ-68>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몽골의 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전화보급율은 지난 10년(1993~2003)

사이에 2배로 증가하고, 다시 2004년에는 142,300대로 증가하였다. 이동전화 보급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2003년 216,000대이던 것이 2004년에 404,400대로 늘어났다. 이동전화는 광활한 대지의 몽골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현재는 기지국 사정이 나빠 수도권과 옛 몽골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하르호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나 2003년 5만 명이던 것이 2004년에는 22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동전화 가입자와 인터넷 사용자의 빠른 증가 속도는 향후 몽골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부족한 교통망과 몽골 영토의 광대함은 역으로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한다. IT, 전화, 이동통신은 몽골 측이 한국의 투자를 원하는 첫 번째 분야의 하나이다. 한국통신(몽골 전화국)과 SK텔레콤(몽골 제2의 이동통신)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가시적인 협력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

적은 인구, 거친 자연환경, 내륙국가 등과 함께 몽골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기반시설, 특히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의 미비이다. 몽골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진전이 없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몽골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대내외 교통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동몽골에서 중국 동북지방을 연결하는 철로 건설에 국력을 집중시키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몽골 국토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Millennium Road”를 구상하고 시행에 착수하였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몽골 남부 자민 우드(몽·중

국경 도시)에서 몽골 북부 알탄불락(몽·러 국경도시)을 연결하는 총 1,100km에 달하는 현대식 도로 건설이 201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¹⁶⁹

몽골의 도로건설 역시 한국 기업이 진출하여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한·몽 또는 동북아협력 차원에서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다. 특히 국내 교통과 이를 대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몽골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미래 몽골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 뿐 아니라 동북아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이다.

(2) 교육·관광

1921년 사회주의 혁명과 함께 현대식 교육이 실시되었다. 교육제도의 근간은 독일식이고 이를 소련을 통해 받아들였다. 그 후 사회주의 해체와 함께 일부 교육제도가 서구식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주의 시절이나 현재도 몽골인들의 교육열은 높은 편이다. 읽고 쓰는 문자 해독율 또한 매우 높아 2002년 현재 15세 이상 남녀 인구의 97.8%가 읽고 쓸 수 있다.¹⁷⁰

현재 몽골의 학제는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등, 중등, 고등 3단계로 되어 있다. 초등과 중등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편교육이고 수학 기간은 총 10년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1~4학년은 한국의 초등학교(의무교육), 5~8년은 중학교, 9~10학년은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그밖에 보편 교육과정에는 ‘노동자를 위한 보편 교육 기관’이 있다. <부록 표 III-74>의 학교 수 통계에서 초등학교

¹⁶⁹ Baatar Tsend, “Position of Mongolia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pp. 18~19.

¹⁷⁰ CIA, *The World Factbook*.

가 줄고 고등학교가 늘어난 것은, 이전에 4년제 또는 8년제 밖에 없던 학교가 10년제로 확대된 결과로 판단된다.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전문대학, 칼리지, 직업학교가 있다. 대학은 4년이고 나머지는 2년제이다. <부록 표 III-74>에서 보듯이 고등교육 부문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몽골은 보편교육과 고등교육, 사립과 국립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립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우는 학생의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또한 학교 수 통계와 학생 수 통계를 비교해 보면 사립 고등교육 기관은 학교 수에 비하여 학생 수가 현저하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와 함께 시작된 몽골의 사립 교육기관이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유학생 수는 200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통계만 보아서는 무슨 이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몽골 유학생 수는 약 400명(비공식 집계)에 달한다.

관광은 몽골의 외화 획득의 첫 번째 부문의 하나이다. 거친 자연 환경은 역으로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고, 드넓은 초원과 황량한 고비사막, 넓고 푸른 호수는 공해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다. 또 광활한 국토에는 세계 문화유산 급의 유물과 유적이 산재하고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유목민의 생활 역시 훌륭한 관광 상품이다. 몽골 정부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1998년에 울란바타르에서 관광분야 국제투자자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관광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인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관광 시즌이 여름철로 한정되어 있고, 교통·통신과 숙박·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투자하려면 겨울 관광 상품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서야 한다. 물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일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겨울철엔 스키나 사냥(몽골은 세계 우수 사냥터의 하나이다) 등의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다. 인프라 문제도 연차적으로 해결하되, 교통수단은 우선 경비행기로 이동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하고, 따라서 자본력을 갖춘 큰 기업이 담당해야 할 분야이다.

<부록 표 III-78> 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외국인의 몽골 입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관광객이다. 또한 2003년 몽골 입국 외국인을 지역별로 보면 아태지역이 60.2%, 유럽이 35.9%로 동북아시아 또는 역외 지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¹⁷¹ 이는 역으로 몽골이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인과 몽골인의 상대방 국가 방문도 1993년에서 2003년 사이에 무려 10~30배나 증가하였다. 예컨대 1993년 몽골인의 한국 입국은 480명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14,361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하고, 한국인의 몽골 입국 역시 1993년 1,064명에서 2003년 15,938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양국 국민의 상대 국가 방문객 수는 2004년과 2005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즉 2004년도 몽골인의 한국 입국은 18,731명으로 늘어나고, 한국인의 몽골 입국 역시 2004년 말 현재 23,979명으로 증가하였다(부록 표 III-75 참조).

이처럼 양국 국민의 상대 국가 방문객 수의 동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입국 목적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 사업가도 증가폭

¹⁷¹ 몽골국 통계연감 2003 (울란바토르, 2004), p. 226.

에 한몫을 하고 있지만, 주요인은 관광객의 증가이고, 관광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몽골인의 한국 입국은 사업(이른바 보따리 장사)이나 유학, 그리고 취업 노동자가 주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 입장에서 보면 관광 사업에서나 해외 인력 송출 및 사업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부록 표 III-78>에서 보듯이 1993~2003년 사이 몽골 입국 외국인 수를 보면, 동북아국가 가운데 중국인과 한국인만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몽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마. 소결

1990년에 시작된 몽골의 경제 위기는 1994년 이후 국내총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2000년부터는 거시경제도 안정되었다. 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 무역액, 대몽골 직접투자 등 모든 부문의 지표도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GDP를 비롯하여 인구, 노동력, 에너지, 무역 등 제반 지표가 말해주듯이, 동북아 경제에서 몽골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작은 경제 규모는 그만큼 몽골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유무상 원조, 무역액, 무역대상국, 대몽골 직접투자가 동북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4년의 경우 자국 수출에서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1.8%, 수입은 71.6%에 달할 정도로 몽골 무역에서 동북아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무역대상국이나 대몽골 직접투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런 점에서 향후 몽골 경제의 발전은 동북아지역과의 관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역으로 몽골이 동북

아 안보·경제 공동체 형성에 적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재 몽골이 동북아국가들과 협력을 바라는 분야는 국토의 동서남북을 관통하는 이른바 “Millenium Road”와 몽골 동부와 중국 동북지방을 연결하는 철로 건설이다.

사회주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현재 몽골의 병력(9,100명)으로 독자적인 안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 결국 강대국간의 세력균형을 통하여 안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몽골의 현실이다. 몽골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즉 전통 우방인 러·중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서방 및 아시아 각국과 교류를 확대한다는 이른바 「2개의 이웃+제3의 이웃」 정책이 몽골 정부의 외교 및 안보정책의 근간이다.

이와 함께 몽골은 다자안보협력에도 적극적이다. 몽골 외교정책의 기본규정은 위의 양자간 협력과 함께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창설에 적극 협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몽골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동북아협력체이다. 이는 안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몽골 학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다자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를 주장했다. 물론 양자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얘기한 학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몽골의 상황, 즉 지정학적 여건에 제약받는 안보 현실과 어려움 경제 여건은 역으로 몽골이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 창설에 적극일 수 있는 이유이다. 특히 현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몽골은 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몽골은 다당제와 의원내각제를 근간으로 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1990년대 몽골 민주화 과정은 소련 및 동구권과 달리 유혈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 또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몽골인들의 정치 권리와 시민 자유는 서구 수준과 비슷하다.

지역내 정치인의 교류를 보면 몽골을 둘러싼 정치·외교의 현황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의 경우 문화, 우호, 경제, 친선의 성격을 띤 정치인 교류가 주가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는 전 분야에 걸쳐 있고, 미국의 경우 정치와 군사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미국과의 교류이다.

후자의 세 나라와 몽골의 관계는 해당국의 동북아안보·경제협력체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몽골 정부는 현재의 안보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떤 형태든 동북아협력체에 창설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몽골인들이 구상하는 동북아협력체는 기존의 군사동맹(예컨대, 한·미동맹)이나 우호관계(몽·중, 몽·러)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배제된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몽·미관계 하에서 미국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몽골의 선택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이는 러·중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의 구상을 미국이 지지하더라도 중·러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반대가 있을 경우에도 몽골의 선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몽골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사회기반 시설의 미비인데, 그 중 하나가 교통·통신 분야이다. 광활한 국토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도로망과 철도는 국가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할 광산

자원의 개발을 막고 있다. 몽골의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는 관광도 마찬가지이다. 자연 자원을 소재로 한 관광객 모집이 언제나 도상 계획으로 끝나는 것도 부대시설과 교통 시설 미비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래서 몽골 정부는 1990년대 초기부터 몽골 국토를 남북/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망을 건설하고, 이를 인접국과 연결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몽골 동부와 중국의 동북을 연결하는 철로 건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로와 철로 건설은 계획과 사업 시행,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동북아국가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분야이다. 이는 역으로 몽골이 동북아협력체 창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6. 북 한

북한은 동북아협력사업 중에서 에너지 및 철도분야의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유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협력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핵문제가 이 지역의 평화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되면서 북한이 이 지역 협력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는 다소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다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우리와는 달리 비교적 조용히 대응하는데 반해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에 대해서는 거세게 일본을 비난하면서 우리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가. 경제

(1) 기초경제지표

<GDP>

북한경제가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약하다. 2003년 기준으로 북한의 GDP는 228억 5천만 달러로, 세계의 0.04%에 불과하고, 동북아지역(남북한과 일본 및 중국을 포함)의 GDP와 비교할 때는 0.2%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¹⁷² 여기에 더하여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지적할 수 있다. 2003년만 하더라도 동북아지역의 경제성장률이 4%인데 반해 북한은 1%에 불과하였으며 지난 10년간(1994~2003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를¹⁷³ 기록하였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지 않는 한 상당기간 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부록 표 III-1 참조).

¹⁷² 동북아지역에 러시아와 미국을 추가할 경우 북한의 GDP는 0.1%를 차지할 뿐이다.

¹⁷³ 한국은행의 북한GDP 추계 결과를 활용하였음.

<인구>

북한의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2,249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동북아지역(남북한과 일본, 중국 포함)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인구의 0.58%를 차지하고, 세계인구의 0.3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북한경제의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인구실태가 보여 주는 또 다른 특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성장률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이는 식량의 부족사태와 경제 전반의 침체가 지속된데 따른 현상으로 판단된다(부록 표 III-2 참조).

북한의 노동력은 2003년 현재의 기준으로 96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농업부문에 36%, 비(非)농업부문에 64%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

북한경제의 특징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실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소비량은 1.092 Quadrillion Btu로 동북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2002년도 북한의 에너지 생산량은 1993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극복해야할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부록 표 III-5 참조). 북한에서 에너지난은 식량난과 함께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화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내부 재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전력 생산과 운송수단에 필요한 석유 도입량이 감소하였으며, 석유의 감소는 에너지 부족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노력을 힘들게 하

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석유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와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석탄의 도입과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서 특히 전력생산이 증가하였다. 물론 전력의 생산 증가는 이 이외에도 중소규모 수력 발전소의 건설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인한 효율성 증가도 한 몫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대외경제관계

북한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통계자료의 제약 때문에 정확한 수치 대신에 추정치를 사용하여 분석하게 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추정치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7년 기간의 평균 FDI는 5,300만 달러에 달했으나, 1998년 3,100만 달러를 시작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0의 FDI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⁷⁴ 외국인의 북한에 대한 純직접투자가 최근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투자자가 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외국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부문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부록 표 III-6 참조).

북한의 대외무역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본격적으로

¹⁷⁴ 2000년에만 5백만 달러의 正의 FDI를 기록하고 있다.

추진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경제가 회복기를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1999년부터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통계는 남북교역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데, 최근 북한의 외국과의 거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함시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III-14>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

(단위: 억 달러)

연 도	대남한 교역	대외무역	합 계(남북교역 비중,%)
1990	0.13	41.7	41.8 (0.3%)
1993	1.87	26.5	28.4 (6.5%)
1995	2.87	20.5	23.4 (12.3%)
1998	2.22	14.4	16.6 (13.4%)
1999	3.33	14.8	18.1 (18.4%)
2000	4.25	19.7	24.0 (17.7%)
2001	4.03	22.7	26.7 (15.1%)
2002	6.42	22.6	29.0 (22.1%)
2003	7.24	23.9	31.1 (23.2%)

출처 : 통일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통계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표한 수치와 IMF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비중이 절대적인데,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시킨 동북아시아 국가와 북한의 대외교역 비중을 살펴보면, 1993년 63%, 1998년 66%, 2003년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교역에 의존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에 의지하는 비중은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입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5> 북한의 수출입 총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한국	대외무역				동북아 합계	합계 (동북아 비중, %)	
		중국	일본	러시아	총계			
수출 (반출)	1993	178	297	252	39	990	766	1,168 (65.6%)
	1998	92	57	219	8	559	376	651 (57.8%)
	2003	289	395	174	3	777	861	1,066 (80.8%)
수입 (반입)	1993	9	602	220	188	1,656	1,019	1,665 (61.2%)
	1998	130	356	175	57	883	718	1,013 (70.9%)
	2003	435	628	92	116	1,524	1,271	2,049 (62.0%)

출처 : 통일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의 대외무역이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0.27%, 1998년 0.13%, 2003년 0.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990년대 들어와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1999년을 기점으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북한무역이 동북아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증가는 수출보다는 주로 수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의 경우 1993년 0.33%에서 0.19%로 감소했다가 0.21% 증가한데 반해서, 수입은 0.27%에서 0.07%로 폭락했다가 0.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0.0316%에서 1998년 0.0186%까지 감소했다가 2003년 0.191%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동북아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아직까지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북한경제의 폐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몇 개 국가들에게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경제난과 북핵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본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한국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이를 보충하고 있다.

나. 안보

(1) 군사력

북한의 군사력 규모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평가가 힘들다. 또한 북한경제의 규모와 인구가 작기 때문에 국방비의 절대적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측면에서는 25%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병력 규모에서도 1,082만 명으로 세계 4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국방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부록 표 III-16 참조).

북한에서 국방비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국방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출은 민수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축소할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던 1998년에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북한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는 2002년에 와서는 1998년보다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부록 표 III-17 참조).

북한의 군사력은 2002년 현재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에서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국방비에 대한 부담이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서 비롯된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국방비 규모의 측면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 노후화된 군사시설과 무기를 개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군사적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투자지용이 적으면서 그 효과가 큰 핵무기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에 더 매력을 느끼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표 III-16>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최대사정 거리(km)	수송 능력(kg)	비 고
스커드 B	320	1,000	소련의 스커드 B 개량종
스커드 C	570	770	전통적 방식 채용, 기폭제, 화학, 탄두 등으로 구성
로동	1,480	1,200	1993년 5월 최초 발사실험, 500 km 비행 기록함. 50개 미만의 발사대 설치, 핵 탄두 탑재 가능
대포동-1	2,300	1,000~1,500	1998년 8월 31일 발사실험, 아직 실전 배치는 하지 않고 있음.
대포동-2	6,200+	700~1,000	아직 실험 이전
대포동-2 (3단계)	15,000	미상	북미대륙 타격 가능

출처: National Air & Space Intelligence Center.

북한의 군사력은 전체적으로 1990년대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기화한 이유와 함께 기존의 군사부문의 중요한 지원 국가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부문의 협력을 제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부록 표 III-23 참조).

북한의 군사력이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은 핵무기개발과 함께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

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미사일의 개발과 실험발사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군사분야의 국제협력

북한의 무기 수출입은 1980년대 피크를 이루었으나 미사일과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무기수출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입에 비해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던 북한은 무기수출을 통해서 제3세계와의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화수입의 상당부분도 충당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수출의 경우, 1993년 세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0.422%에서 1998년 0.213%로 반감된데 이어 2003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무기수입은 1993년 세계무기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1993년 0.283%에서 1998년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2003년에는 0.027%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 무기를 수출한 국가들은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중동의 국가들로 파악되고 있으며, 북한이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보고되고 있다(부록 표 III-31 참조).

북한이 군사동맹을 수립한 국가는 구소련, 중국, 짐바브웨이, 리비아, 쿠바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1년 7월에 소련 및 중국과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이후,¹⁷⁵ 1980년 10월에는

¹⁷⁵ 러시아의 체제전환 이후 변화된 동맹의 성격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약을 변경하는 2000년 2월 「북·러 신조약」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북·러 신조약」은 핵심쟁점 사항이던 자동군사개입 조항(구 조약 제1조)을 「안보위협 발생시 즉각 통보」 및 「상대의 주권과 독립성, 그리

짐바브웨이와 「10개년 친선협조조약」을 맺었으며, 1982년 11월 리비아와는 「친선협조동맹조약」을, 1986년에는 쿠바와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핵과 미사일 비확산조약과 관련, 북한이 가입한 단체나 조약은, BWC(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과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였다. 다자간 군축 및 비확산 조약으로서 생물과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을 금지하며,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BWC의 경우, 북한은 1987년에 가입하였으나 협약 이행 평가 및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생물무기 개발 및 사용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협약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의정서 제정 협상을 위한 특별그룹(Ad Hoc Group)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인 NPT의 경우, 북한은 1985년 처음으로 가입한 이후, 1993년 3월 12일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했으며, 북한의 핵무기개발(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문제가 제기된 2003년 다시 탈퇴하였다(부록 표 III-44 참조).

최근 북한의 김정일은 2005년 6·15기념 남북공동행사에 정부대표로 참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김일성의 유훈’으로서 고수할 생각이며, 미국이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여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6자회담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NPT에 다시 가입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강조한바 있다.

고 영토성에 반대하는 제3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행위 및 조치 금지’로 대체하고 있다.

다. 정치

(1) 정치체제의 성격

북한의 정치체제는 정권의 세습과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독특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건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수에 집중된 강력한 정치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정치는 그것의 폐쇄성에 따라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정치의 성격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수치를 들 수 있다. 정치권리와 시민자유를 7등급으로 구분하여 국가별로 그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더불어 정치권리와 시민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부록 표 III-46 참조). 북한 이들 세 나라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열악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체제를 경험한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체제와는 유사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 외교관계

<표 III-17> 1990년대 이후 북한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정치지도급 인사교류

	1990~1995		1996~2000		2001~현재(2005.7)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일본	-	-	-	-	2	1
중국	1	-	2	2	1	5
한국	-	-	1	4	-	10
미국	-	-	-	1	-	-
러시아	-	-	1	-	2	-
몽골	-	-	-	1	1	1

과거 북한의 외교활동은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소 양극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라는 구조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요인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비동맹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는데 주력하였는데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반제국주의를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동맹 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 수교경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소연방 해체와 동구권 몰락이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종래 사회주의권내 국가들을 지향한 진영외교 및 비동맹에 주력하던 외교활동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직된 통치이데올로기의 한계 및 경제의 효율성 저하에 따른 내부자원 고갈이라는 현실은 더욱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은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사라진 현실에 직면하여 국가 생존을 위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서방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북한은 실리와 경제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악화되었던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주의 동지적 유대 과거의 동맹적 성격과는 달리 실용적 우호·친선관계가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부록 III. 북한과 동북아국가간 정치 관계 및 고위급인사 교류표 참조).

라. 사회

2003년말 기준으로,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4,879km로 2차선 이하가 대부분이며, 도로포장율은 전체의 12.6%인 약 3,016km(2001년말 기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2003년 말 현재 8개 노선으로 평양-순안(15km), 평양-남포(44km), 평양-원산(189km), 평양-개성(166km), 평양-향산(120km), 사리원-신천(30km) 등이 있다.

북한에서 철도는 장거리 수송의 근간으로,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2%를 담당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북한철도의 총연장은 5,235km로 대부분 단선구간이며 전철화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단선철도의 비중은 98%이며, 전철화구간의 비중은 전체의 8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장비와 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평균 운행속도가 시속 60km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⁷⁶ 이와 함께 북한은 전지역을 연결하는 노선과 함께 국제선도 운용하고 있는데, 중국 노선의 경우, 평양-베이징(주4회), 신의주-단둥, 남양-투먼, 만포-지안의 연결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러시아 노선으로는 두만강역-햇산을 연결하는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북한의 통신시설에 대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최근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이 2001년에 발표한 「세계통신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기준 북한의 유선전화 가입자의 수는 110만 회선이며, 100인당 회선 수는 약 4.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¹⁷⁶ 2002년 러시아 철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강-원산-나진-두만강을 잇는 781km 구간의 평균 속도가 시속 30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 있다.¹⁷⁷ 최근 북한당국은 광통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통신연맹(ITU) 및 UNDP와 합작으로 평양~함흥간 광케이블 시설 설치를 완성하는 등 광케이블망 구축 등에서는 기초적인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체제 특성의 한계, 일반주민 접근 통제, 컴퓨터 부족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확산이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당국의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보통신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컴퓨터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인터넷 사용은 공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북한 내 여러 기관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상호 연결 가능한 내부전산망인 인트라넷(INTRANET)을 활용하고,¹⁷⁸ 대외적으로는 경제 부문의 인터넷사이트를 직·간접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국제 인터넷망과의 접속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은 일부 당·군의 간부급들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용 이동통신과 나선지역,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 중인 상업용 통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태국 록슬리와 북한의 체신회사간에 통신체신사업을 위해 만든 합영회사인 동북아전신회사(NEAT&T)를 설립한 후 유럽형 이동통신(GSM) 방식을 채택해 2000년부터 시범통화를 거쳐 2003년 11월 평양·나선시에서 본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향후 2007년까지 북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기지국은 평양·

¹⁷⁷ 참고로 같은 기간 남한과 비교할 경우, 유선전화의 경우, 북한은 1/20 수준이며, 100인당 가입자 회선 수는 1/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ttp://blog.empass.com/judy93/read.html?a=4101467>> 참조.

¹⁷⁸ 이에 따라 북한의 젊은 계층에서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선·남포·개성·원산-함흥·평양-향산간 주요 도로 등에 50여 개가 건설됐으며 휴대전화 가입자가 2003년 말에는 2만 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¹⁷⁹

마. 소결

북한의 동북아협력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인 차원과 물리적인 측면, 그리고 인적 인프라 모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서 최근 북한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국제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에 걸친 경제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철도망, 도로망, 항만과 공항 등 교통·운송망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개보수 작업마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적 인프라의 경우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시장경제와 국제상황에 대한 지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과 함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협력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인프라 구축 상황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이외에도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국인들의 투자 위험도를

¹⁷⁹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신보는 2003년 12월 4일, “전국(북)의 손전화기 보급수는 11월 하순 현재 2만대를 돌파했다”고 전한 바 있다.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는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실천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정치·경제분야의 폐쇄성도 주변국과의 협력 경험을 제한함으로써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야하는 문제점도 제약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정치체제의 경직성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동북아협력을 위한 북한의 참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협력에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지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내부재원은 고갈된 상태여서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 사태가 마무리될 경우,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동북아 차원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동북아국가들간에 유력한 협력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협력사업과 철도 및 물류연계사업은 북한변수가 해소될 경우 빠른 속도로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02년 발표한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해 오면서 개혁과 개방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북한당국이 시장경제 교육을 위해 관리와 전문가들을 대거 외국에 내보내고 있는 사실도 인적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7. 미 국

가. 경제

(1) 기초지표

<경제총량>

미국의 동북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 자체의 경제적 역량을 나타내는 국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10,980 Billion Dollar로써 전세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미국인구가 전세계의 4.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제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993, 1998, 2003년 지표에 나와 있듯이 3%대를 상회하는 것은 미국 경제력규모를 감안할 때, 1990년대에 미국의 경제력이 매우 크게 신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록 표 III-1>에 나타난 미국의 산업구조의 구분에 의하면 서비스부문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이미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여, 공산품 및 농산품의 생산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미국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후기산업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인구성장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럽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인다 하겠다. 둘째,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로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시점을 둘러싼 중국계의 이민이 1990년대에 많았으며, 베트남계의 이민도 지속되고 있다. 이들 아시아계의 이민은 주로 미국의 서부 연안인 캘리포니아주, 오레곤, 워싱턴주에 아시아인들의 사회를 이룩하게 만들었으며,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결과, 미국 서부와 아시아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을 예상된다(부록 표 III-2 참조).

<에너지>

미국은 전세계 에너지의 약 24%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전세계의 약 17%라는 통계와 비교하면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오일 생산량이 2002년 기준으로 하루에 8,043천 배럴에 불과한데 비해서, 오일의 소비량은 하루에 19,761천 배럴에 기록하고 있어, 오일의 소비량이 생산량의 2배를 상회한다. 이는 미국에 대한 오일의 해외 공급원의 상대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부록 표 III-5 참조).

(2) 무역 및 투자

미국의 대외경제관계를 나타내 주는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수출액은 전세계의 8%, 수입액은 전세계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이 전세계의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을 지역별로 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되기 전인 1993년의 경우에는 서유럽이

24%, 캐나다가 22%, 일본이 10%를 차지하였으나, NAFTA 타결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수출에서 1, 2위를 점유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주요 수입대상지역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바, 1993년에는 캐나다가 19%, 서유럽이 18%, 일본이 18%를 차지하여 3대 수입대상국이었으나, 1998년에는 멕시코가 새로이 진입하였으며, 2003년에는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이 11%의 점유율로 3위의 자리를 차지하였다(부록 표 III-6 참조).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이며 미·중관계가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상호의존도를 보인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국가간 수출입 matrix

미국의 동북아지역과의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부록 표 III-13>와 같다. 이 표는 동북아지역을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의 7개국으로 구성된다고 상정한 것으로서, 미국의 동북아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1993년에 15.99%이었으며, 1998년에는 13.56%, 2003년에는 14.80%를 보이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1993년과 1998년에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순이었으며, 2003년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북한으로 동북아지역국가중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여 미국의 수출대상국 2위를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지역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1993년에는 27.11%, 1998년에는 24.46%, 2003년에는 25.44%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1993년에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순이었으나, 1998년에는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2003년에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순으로 미국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의 국가별 순위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의 다른 측면을 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대미국 수출의 급격한 신장세에 의해서 가능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중남미 4개국, 호주, 모로쿠, 바레인 등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상당한 숫자의 국가 및 집단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또는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임하였으나, 1990년대 이루어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4년에 타결된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과 3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틀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전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사안이기도 하다(부록 표 III-15 참조).

나. 안보

(1) 군사력

미국은 1980년대 말 초래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말미암아 전세계의 유일한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안보면에서의 패권국가 지위는 1990년대의 강력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21세기의 절대적 강자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벌어진 9·11테러 사건은 미국의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세계적 군사안보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

다. 미국은 <부록 표 III-17>에 나타나듯이, 1993년에는 354,778백만 달러, 1998년에는 189,658백만 달러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417,363백만 달러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9·11테러 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의 약 47%를 점유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 바, 미국의 세계적 유일 패권국가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병력규모는 1993년에 170만 명, 1998년에 140만 명으로 나타나듯이 1990년대에는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병력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병력규모가 1,427,000명으로 다시 증가함으로써 9·11사태 이후 미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을 동북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하면 <부록 표 III-16>과 같다. 미국은 국방비의 규모로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비율에서는 전세계적으로 48위, 동북아시아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다음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병력의 규모면에서도 미국은 중국보다 적으며, 동북아시아에는 병력규모면에서 중국이 세계 1위, 미국이 2위, 북한이 4위, 러시아가 5위, 한국이 6위를 점유하고 있는 바,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긴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에서 유일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전세계 무기 수출입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있다. <부록 표 III-29>에 나타나듯이, 미국의 무기수출이 전세계 무기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에 약 60%, 1998년에 약 58%, 2003년에 23%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무기수입은 1993년에 3.3%, 1998년에 3.6%, 2003년에 1.1%를 나타냄으로써 미국의 무기수출국으로서의 위상

을 보여주고 있다.

(2) 군사동맹 및 안보협력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의 안보의 근간을 자임하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주에서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및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하에서 양자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간 국방부의 인사교류 현황은 <부록 표 III-35>와 같다. 미국은 한국에 1949년에 무관부를 개설하였으며, 한국은 미국에 1951년에 미국에 무관부를 개설하였다. 최근의 군인사간 주요 인사교류를 보면, 매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미국을 방미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측에서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간 군사교류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 고위급 군사교류는 1994년 중국측에서 인민해방군의 슈후지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재개되었다. 이후 윌리엄 페리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후 미·중간 군사교류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1997년에는 미국의 전투함이 중국의 칭타오시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2000년에는 미국의 태평양사령관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는 등 군인사간 교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부록 표 III-38 참조).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최근 군사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미국 국방부사이에 1994년 1월 5일 직통전화 연결되었으며, 1994년 9월에 미국과 러시아군 사이에 연합작전훈련이 최초로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교류는 동북아지역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 보다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이 강하다 하겠다(부록 표 III-41 참조).

(3)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입장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기본적으로 미·일 및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지만, 보다 광역적인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근 양자 및 다자간 네트워크를 확립하려고 있다.¹⁸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한국,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전통적 동맹체제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서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 테러, 인도적 사태 발생시에 신속 대응하는 신동맹체제를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한정된 안보분야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여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북아협력대화는 주지하다시피 민간포럼(Track II)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설립된 6자회담도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한 형태이며,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4) 다자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

미국의 동북아 다자간 경제 및 안보협력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¹⁸⁰ 김성한,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p. 10~11.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미국을 배제한 동북아지역 국가들만의 통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동시에 동북아국가들간 배타적 지역통합기구의 형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과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에서의 위상이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라는 좁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위약한 국가들과 연대하여 지역통합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의 광역화된 지역구분을 동북아라는 소지역적 구분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이미 설립된 양대 다자간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안보면에서는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라는 지리적 범위에 따른 소지역적 협력보다는 아시아 및 태평양이라는 광역적 협력을 아시아지역에 대한 다자간 협력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 국무성의 조직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미국은 전세계를 아프리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및 유라시아, 근동아시아,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동북아와의 지역협력을 안보면에서는 미·일 및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무역자유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의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태도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한정된 안보분야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식하여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에 참여하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의 동북아시아협력에 대한 입장은 성사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동북아시아국가들간 관련된 심각한 안보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자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다자간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북아시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안보협력체의 결성에는 계속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의 동북아의 지역협력 문제에 대해서 역외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의 세계전략 틀 안에서 지역협력의 제반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국제군비통제

미국은 BWC, CCW, CTBT, CWC, MTCR 등 국제적 군비통제 체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를 제한하는 NPT도 전세계적 경찰국가 입장에서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2003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발표하여, 범세계적인 WMD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PSI의 역할을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자 적재 선박의 차단뿐만 아니라 개인, 회사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촉매자들이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까지 확대하고 있다¹⁸¹(부록 표 III-44 참조).

다. 정치

(1) 정치체제 유사성

미국은 대통령중심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중에서 가장 확고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부록 표 III-46>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치권리면에서 자유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민자유면에서도 자유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자긍심은 동북아지역국가들 중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정치권리 및 시민자유가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자료에서 보듯이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¹⁸¹ 이서항, PSI의 최근 진전상황과 주요 쟁점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4).

(2) 지역내 정치협력

미국의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의 현황은 <부록 III. 미국과 동북아 각 국가간의 양자간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에 정리되어 있다. 미국과 북한간 고위급회담의 시발점은 아놀드 캔터 국무장관과 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관 회담이었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는 바, 이 결과 미·북간 제네바합의가 도출되었다. 한편, 2000년에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조명록 특사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미국의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미국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최근의 제임스 켈리 미국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 불거진 제2차 핵위기는 미국과 북한간 고위급간의 만남이 결국 북한 핵문제와 연관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간 정상회담은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경우 통상적으로 상호간에 상대 국가를 방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냉전시대이후에는 다자간 협력의 무대에서 실무적인 형태로 한국과 미국간 정상의 만남이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유엔무대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이나, APEC 지도자회의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은 거의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간 정상의 만남은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양국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성향을 상호간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하 미·러간, 미·일간, 미·중간 정상회담도 1990년대 이후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으나,

해당국가의 세계적 역할을 감안할 때, 동북아지역만의 문제를 염두에 둔 회답이라기보다는 양국간 현안문제 또는 전세계적 국제질서와 관련된 회답이 주종을 이룬다 하겠다.

(3) 국내적 요인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공동체 형성이 가시화될 경우에도 역외국가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동북아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동북아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유인요인도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군사안보문제가 중국과 한국 및 일본 등 역내 3개국간에 의해서 논의되는 영역이 확산 및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 3국간의 다자적 안보레짐 형성이 구체화될 기미가 보이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은 동북아지역과의 경제관계 관리기구로서 APEC을 상정하고 있으나, APEC의 활동에 근본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동북아지역의 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역외국가로서 참여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미국은 동북지역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발전방향과 성격의 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한미 및 미일 동맹 채널을 통하여 개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동북아지역에 미국을 배제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을 주축으로 공동체 형성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미국이 역외국으로서 참여하게 하는 촉진요인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 중 가장 큰 현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동북아지역에 미래지향적인 안보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건설적인 동북아 안보공동체는 북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핵문제 때문에 공동체의 형성이 의미없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동북아의 안보공동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선결조건인 것이다.

미국은 한·중·일 3국과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미, 미·중, 미·일 경제관계의 성격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은 중국을 투자대상국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 및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인요인 미비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가들은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현재의 양자간 경제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며, 지역의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APEC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대북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 이전에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북한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동북아지역의 파이프라인 건설과 철도망 연결사업 및 동북아지역개발은행 등 지역협력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기구에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는 지역협력 사업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라. 소결

미국의 동북아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총량적 지표를 경제, 안보, 정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지리적으로 속해 있지 않지만, 동북아시아국가들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은 일본과 중국 및 한국의 수출대상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과거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표출되었으나,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써의 입지를 공고화하면서 미국시장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큰 것이었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중국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중국의 대미수출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북아시아국가들과 미국과의 긴밀한 무역관계가 동북아시아의 역내 협력을 촉진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근본적으로 세계경영을 염두에 두고 국제경제관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일본 및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동북아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 미국은 동북아시아국가 중에서 한국 및 일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측면에서도 양자관계를 동북아 정책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지만,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지 제도화된 형태의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틀 속에서 아시아지역의 안보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입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에 그다지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한 배타적 지역협력체를 결성하겠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때에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동북아시아에 지리적으로 속해 있는 국가들 중 중국과 일본 및 러시아가 국제경제 및 안보면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는 냉전이후시대에 유일패권국가로서 세계경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강대국들을 지역국가로서 상대한다기 보다는 세계경쟁의 파트너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다 강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동북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역할은 유보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유럽지역과 같이 하나의 단일한 지역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지역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대외정책을 수립 및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지역협력을 촉진하는 입장에 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동북아시아지역협력이 배타적 공동체 형성의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IV

분야별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1. 경제분야

경제분야의 동북아협력 인프라는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및 지리·경제적 기초 여건 등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목표 지향적으로 설명한다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보다 확대되어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을 경제분야의 동북아협력 인프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동북아협력 인프라는 지역내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자적인 협약 체결이나 기구의 창설 및 교통망·통신망의 연결, 에너지망의 연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실적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문 이외에도, 지역내 협력과 관련된 지역 국가들의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방성 정도, 지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하자원의 부존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시간 및 자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을 고려하여, 다자간의 경제협력을 규정하는 협약 체결 및 관련 기구의 설립과 구체적으로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인프라 실태를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역내 경제활동의 상호의존성이다. 지역내 국가들이 무역과 투자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상호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역내 무역의 비중과 역내 투자 비중 실적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협력의 제도화 측면이다. 이는 역내 국가

들이 세계시장에 확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고자하는 노력의 정도가 반영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지역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관련 협의기구의 운용 실태 및 새로운 기구의 창설 노력과 이 지역 국가들간의 FTA 체결 논의를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ASEAN+3의 틀이 갖는 유용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역내 공동개발 추진실적이다. 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협력에 필요한 물리적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철도와 에너지망의 구축 노력을 정리할 것이다. 이밖에도 이론부문에서 제기된 역내 국가간 경제적 균질성을 분석하고 노동의 역내 이동 실적을 파악하는 작업은 통계자료의 제약 때문에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밝힌다. 각 국가간 교통망과 통신망 연결 실태 역시 관련 통계자료의 접근이 어려워 다루지 않았다.

경제협력 인프라 실태에 대한 분석은 현 단계에서 실현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천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문에 대한 논의는 지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 실태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

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해 가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경제공동체에 접근해 가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증대되어 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역내 국가간의 무역의존도와 역내 투자비율을 들 수 있다. 역내 국가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을수록 역내 무역의존도와 역내 투자비율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역내 무역의존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역 국가간의 무역의존도는 1993년 총 무역액의 30.1%를 역내에서 소화하였으나 1998년에는 28.8%로 감소하였다. 1998년은 동남아시아지역에 외환위기로 인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였다. 이에 따라 무역 상대를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던 것이다. 외환 위기를 극복한 2003년에는 역내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났으며 이에 따라서 역내 무역비중도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 결과 2003년에는 1993년 수준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무역의존도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과정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수출이었다. 감소한 비율(-8.05%)과 상승한 비율(17.47%)이 모두 수입의 감소 비율(-5.55%) 및 증가 비율(3.12%)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내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 수입보다는 수출의 증가를 통해서 무역의존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1> 역내 국가의 무역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역내교역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미국	몽골	러시아	지역 합계	세계 합계	역내 비중
1993	수출	35,548	145,191	38,995	718	74,479	288	7,787	303,006	1,051,290	28.82%
	수입	43,053	91,384	44,648	1,102	163,491	329	6,447	350,454	1,063,515	32.95%
	합계	78,601	236,575	83,643	1,820	237,916	617	14,234	653,406	2,114,805	30.90%
1998	수출	48,644	156,519	76,174	343	92,293	217	12,013	386,203	1,457,423	26.50%
	수입	44,851	119,920	64,002	779	231,014	340	7,070	467,976	1,503,837	31.12%
	합계	93,495	276,439	140,176	1,122	323,287	557	19,083	854,159	2,961,260	28.84%
2003	수출	88,849	211,593	178,814	809	107,061	484	18,362	605,972	1,946,552	31.13%
	수입	85,968	157,798	161,346	1,356	332,114	591	9,368	748,541	2,332,649	32.09%
	합계	174,817	369,391	340,160	2,165	439,175	1,075	27,730	1,354,513	4,279,201	31.65%

참고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통일부, 통일백서 2005

주: 세계 합계는 역내 국가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액을 의미함.

역내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보여주는 무역실적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동북아지역의 중심에서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어 동북아 경제협력의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만을 살펴볼 경우에는 1998년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무역부문의 상호의존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98년 한국의 역내 무역의존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1993년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45.6%였으나 1998년에는 41.4%로 5% 이상이 감소하였지만, 중국은 1993년 42.8%에서 1998년에는 43.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일본도 1993년 39.2%에서 1998년에는 41.3%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한·중·일 3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998년 역내 무역의존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간동안 북한, 러시아, 몽골, 그리고 미국 등 다른 역내 국가들의 역내 무역의존도가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IV-2>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의존도

(단위: 백만 달러)

역내교역		한국	일본	중국	3국 합계	세계 합계	역내비중
1993	수출	35,548	145,191	38,995	219,734	540,103	40.68%
	수입	43,053	91,384	44,648	179,085	431,882	41.47%
	합계	78,601	236,575	83,643	398,819	971,985	41.03%
1998	수출	48,644	156,519	76,174	281,337	704,402	39.94%
	수입	44,851	119,920	64,002	228,773	514,580	44.46%
	합계	93,495	276,439	140,176	510,110	1,218,982	41.85%
2003	수출	88,849	211,593	178,814	479,256	1,089,959	43.97%
	수입	85,968	157,798	161,346	405,112	967,801	41.86%
	합계	174,817	369,391	340,160	884,368	2,057,760	42.98%

참고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통일부, 통일백서 2005
 주: 세계 합계는 역내 국가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액을 의미함.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실적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전체 무역액에서는 역내 의존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분야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수출부문에서의 역내 의존도의 경우, 1998년 감소하였다가 2003년 큰 폭으로 상승한데 반해서, 수입의 경우는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채롭기까지 하다. 수입부문의 역내 의존도는 이 지역에 외환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인 1998년에 오히려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경기가 회복된 시기인 2003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역내 무역의존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각 국가가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정도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몽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뒤를 이었으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약간의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국가별 역내 무역의존도

(단위: %)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몽골	미국
1993	수출	41.43	42.53	40.04	80.95	17.68	75.20	15.99
	수입	49.70	43.09	37.82	72.12	24.10	86.81	27.11
	합계	45.58	42.82	39.15	75.36	20.11	80.97	22.26
1998	수출	36.66	41.46	40.34	38.93	16.83	62.90	13.56
	수입	48.04	45.59	42.70	66.52	16.47	67.59	24.46
	합계	41.36	43.25	41.33	54.68	16.69	65.68	19.89
2003	수출	49.97	40.80	44.65	88.71	13.97	78.57	14.80
	수입	50.00	39.08	41.20	63.96	16.53	73.78	25.44
	합계	49.99	39.97	43.11	71.41	14.74	75.86	21.65

참고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통일부, 통일백서 2005 .
 주: 무역의존도는 각 국이 세계를 상대로 한 교역액에서 동북아시아를 상대로 한 교역액의 비중

여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과 러시아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리적으로 더 인접한 국가인 러시아보다 미국의 역내 국가들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더 크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러시아에 비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경제·안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극동 지역의 미개발과 유럽지향적인 무역성향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동북아국가의 일원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에 참여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지역 국가들의 역내 투자 실적 역시 무역의존도와 함께 이 지역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 투자 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모으기가 어려워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과 이 지역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직접 투자한 실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지역국가들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2003년에 1,014억 달러로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2,309억 달러에 비해 56.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특히 한국과 미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러시아,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만을 따로 살펴보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중·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FDI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중·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금액은 1998년 536.9억 원에서 2003년에는 635.8억 원으로 18.44%가 증가하였다.

외국인의 역내 투자실적은 56% 이상 감소한 반면에 이 지역국인들이 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실적은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1,638억 달러에 비해 2003년에는 1,956억 달러로 19.4% 증가한 것이다. 한·중·일의 경우, 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전체 증가실적보다는 다소 떨어진다. 315.3억 달러(1998년)에서 340.3억 달러(2003년)로 7.9%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표 IV-4>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

(단위: 백만 달러)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	미국		일본		중국	
	IN	OUT	IN	OUT	IN	IN	IN	OUT	IN	OUT	IN	OUT
1998	5,039	4,740	2,761	1,270	31*	19	174,434	131,004	3,192	24,152	45,463	2,634
2003	3,752	3,429	7,958	9,727	-5*	132	29,772	151,884	6,324	28,800	53,505*	1,800*

주: IN은 투자 유입액(Inflow), OUT은 투자 유출액(Outflow), *는 추정치를 의미함.

나. 경제협력의 제도화 실태

동북아지역은 전후 유럽과 달리 체제와 소득수준, 문화적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편차와 다양성이 있어 이들 국가들간의 경제통합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역내 경제협력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 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역내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갈등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이 지역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동북아지역내 경제협력체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로는 동북아지역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률과 역내 무역비중의 빠른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90년대 말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외환위기 이후 역내 협력 메카니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EU, NAFTA 등 역외 지역통합이 확대·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 지역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협력 체제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도전적인 요소가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¹⁸² 이 지역내 군사·안보적인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경제부문에서는 경쟁관계의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회·문화부문에서는 과거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역내에서 경제협력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먼저 군사·안보적 차원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냉전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는 냉전체제의 유산이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문제에서 비롯된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외교·안보,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자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면서 미국과 일본의 패권에 도전하는 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이 지역의 새로운 안보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

¹⁸² 동북아시아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상』, pp. 10~11 참조.

나라 중국과 대만간의 독립을 둘러싼 위기가 불씨로 남아있으며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간의 갈등과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등은 역내의 안보적 불안 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도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역내 국가간의 수평적 경합구도의 심화 현상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중·일 3국간의 경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함께 지역내 경제통합과정을 주도할 구심점과 합의구조가 미비한 것이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불행한 역사의 기억으로 인하여 지역 국가간의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다, 유럽통합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독일과 같은 역할을 떠맡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부문에서도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문화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과 각국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동북아 역내 국간 폐쇄적 민족주의의 충돌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의 강조, 일본의 ‘보통국가’로의 전환 움직임과 정치권의 보수성 강화 추세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문화교류의 확산이 문화적 경합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동북아경제협력의 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렵

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의와 협력을 유도하기 힘들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ASEAN+3 체제의 운용 실태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체는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했으나,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경제협력체가 구성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ASEAN+3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협력체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 Europ Meeting),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이 있지만 동북아시아 협력차원에서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1967년 8월 18일 ASEAN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외무장관회의 (방콕) 결과인 『아세안선언』에 따라서 창설된 지역협력체로, 브루나이 1984.1) 베트남(1995.7), 라오스와 미얀마(1997.7), 캄보디아(1999.4) 순으로 추가적으로 가입, 회원국이 10개국에 이른다. 이밖에 대화상대국으로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EU, 인도, 중국, 러시아 등 10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기구는 정상회의, 외무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 : AMM), 상임위원회(ASEAN Standing Committee: ASC)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SEAN+3회의가 개최된 것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

기로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SEAN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비공식 정상회의시 한·중·일 3개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에 초청(1997. 12)하였다. 이 회의에서 ASEAN측은 향후 한·중·일 정상들의 정례적인 참석을 희망함에 따라 ASEAN+3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정상회의(1998. 12)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의 설립을 제안하였다.¹⁸³ 마닐라에서 개최된 3차 정상회의(1999. 11)에서는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중·장기적 발전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4차 정상회의(2000. 11)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차원에서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동아시아 연구그룹’(EASG)의 설립을 제안하였다.¹⁸⁴

5차 정상회의(2001. 11)에서는 EASG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우리 측에서는 EASG가 집중적으로 연구할 분야로서 ‘아세안+3회의의 동아시아정상회의로의 전환’, ‘동아시아포럼(EAF) 설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 등을 제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ASEAN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

¹⁸³ 동아시아비전그룹은 ASEAN과 한중일 13개국에서 각 2인씩 전문가를 추천하여 구성한 조직으로, 최근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ASEAN+3 정상회의에 보고한바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금융·정치·환경·사회문화·제도적협력 등 6개 부문에 대한 협력비전을 제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정재완 외,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 43 참조.

¹⁸⁴ 이에 따라 2001년 EASG가 발족되었으며 200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승인하였는바,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주도로 작성된 17개 단기협력사업, 9개 중장기 및 추가연구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정재완 외,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험 현황, p. 45 참조.

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차 정상회의(2002. 11)에서는 EASG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어 승인되었으며, 우리 측은 동아시아포럼(EAF)의 창립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ASEAN+3 정상회의’를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ASEAN과 한중일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여기에서 한중일은 ASEAN 회원국간의 개발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 구상¹⁸⁵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7차 정상회의(2003. 10)에서는 EASG의 최종보고서를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세안통합 이니셔티브’(IAI) 구상 및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표시하였다. 8차 정상회의(2004. 11)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고 ‘아세안+3 체제’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를 2005년에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참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남아국가연합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동(東)아시아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회의기구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EU)처럼 인구 5억 명의 단일시장인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만들기 위한 6년 계획의 ‘비엔티엔 액션 프로그램’(VAP)에 서명했다.

¹⁸⁵ IAI는 2000년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고촉동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회원국간의 발전격차를 축소함으로써 ASEAN의 통합을 촉진하고 ASEAN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임. 2002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추진되는 IAI는 인프라확충, 인재육성, 정보통신기술 육성, 지역경제통합 강화 등 4개 분야 4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정재완 외,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경협 현황, p. 46 참고.

<표 IV-5> ASEAN+3 정상회의

년도	개최국	기간	회수	수석대표
1997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12.15~16	제1차	고건 국무총리
1998	베트남(하노이)	12.15~17	제2차	김대중 대통령
1999	필리핀(마닐라)	11.27~30	제3차	김대중 대통령
2000	싱가포르	11.23~29	제4차	김대중 대통령
2001	브루나이	11.4~6	제5차	김대중 대통령
2002	캄보디아(프놈펜)	11.4~8	제6차	김석수 국무총리
2003	인도네시아(발리)	10.7~9	제7차	노무현 대통령
2004	라오스(비엔티엔)	11.28~30	제8차	노무현 대통령

참조: <www.mofat.go.kr/mofat/ICSFiles/afildfile/2004/10/20/cm_k_d017_16719.hwp>
(2005. 9 23 검색).

한편, ASEAN+3 체제하에서 각종 장관급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경제장관회의(AEM+3)는 2000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8차 ASEAN+3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IMF 내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지분을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2005. 5)하였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7차 회의(2004. 9)에서는 역내 경제협력 및 통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중국측은 13개국별 민간 학자 및 교수가 참여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실현가능성 연구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결국 참가국들의 입장을 수용하여, 동 사업을 2005년 4월부터 단기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부록 표 IV-1 참조).

이러한 협력사업은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실적을 축적함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 의식이 증대되었다.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이 부족하고 지역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협력사업을 심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지역 보다는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체 구성 논의 및 관련 사업들이 보다 활기를 띠고 있으며, 동남아국가들이 ASEAN을 중심으로 결속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경제발전단계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보다는 동북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동아시아 경제를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역내 FTA 논의 및 체결 실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기반으로서 제도화문제를 거론할 때, FTA 체결을 논하는 이유는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FTA의 체결과 같은 협력의 제도화가 역내 협력증진의 유용한 틀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WTO 주도의 무역자유화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를 통한 세계시장의 지역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FTA 체결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이 지역의 경제협력의 실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지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일 FTA>

현 단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적 FTA 체결 실적은 없으며, 한국과 일본간에 양자적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간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FTA 체결문제는 최근 교토에서 개최된 ASEM 회의(2005. 5)에 참석한 한중일 외무장관회의에서 중국측이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을 위해서 공동연구그룹을 발족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그룹에 정부인사와 재계 및 학계 인사를 망라하여 구성하여,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온 연구를 발전시키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측의 제안에 일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ASEAN과의 FTA 체결 움직임과 함께 이 지역내에서 다자적 FTA 체결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1990년대 말에 보여주었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당시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한·중·일 3국간의 FTA 체결 논의에 중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3회 ASEAN+3 정상회의(1999. 11)에 참석한 한·중·일 3국 정상들은 별도의 회동에서 3국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3국의 연구기관들은 2000년 3국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를 개시하였다.

중국측의 태도 변화는 6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표출되었

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2002. 11)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3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제의한 것이다. 이에 한국측은 동의를 표시했지만 일본측이 한국과의 FTA 조기체결을 희망하면서 3국간의 FTA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일본이 이처럼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하게 된 것은 한국과의 FTA가 합의 도달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예상되는데다 한·중간의 FTA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AESAN+3 FTA>

동북아시아에서 FTA 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한·중·일 3국이 개별적으로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 주자는 단연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4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측에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데 이어 5차 회의에서는 중국과 ASEAN간의 FTA 체결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6차 회의에서는 기본협정에 서명(2002. 11)하였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본협정은 FTA 포괄분야, 추진일정, 분야별 협상일정, 조기수확(early harvest) 실시 및 비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화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며, 서비스 및 투자분야는 2003년 협상을 개시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상을 완료한다. 둘째, 2005년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실시하여 ASEAN 6개 선발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르, 필리핀, 브루나이)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한다. 셋째, 500개 상품(주로 농산품)에 대해서 조기 관세인하를 실시(2004년부터)하여 2006년부터는 세율을 제로로 만드는 조기수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주자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ASEAN 측에서 한국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오며 따라서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2003. 10)하였다. 이어 1차 전문가회의를 개최(2004. 3)하여, FTA 협상 적용범위, 협상 방식, 공동보고서 작성 절차 및 시한 등 향후 전문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어 6개월에 걸쳐 4차례의 추가적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동안 양측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확정하고 자국의 정상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에 개최된 한·ASEAN 정상회의에 공동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2년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었다. 또한 2005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2006년까지는 협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SEAN과의 FTA 체결에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합류했으면서도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ASEAN과의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ASEAN의 회원국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네시아와 FTA·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체결 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ASEAN 간의 FTA 체결 협상은 양측에서 진행시켜온 공동연구 결과에 기

초한 보고서가 승인(2003. 10)받은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4년에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5년 4월부터는 2년내 합의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 주요 분야별 협력체 구성 실태

(1) 물류

<철도>

동북아지역의 철도부문의 협력은 TSR과 TKR을 연계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00년 10월 한국의 건교부장관이 러시아의 철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TKR과 TSR의 연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뒤 이어 러시아 철도부 제1차관이 방한(2000. 11), 남·북·러 3개국 철도담당 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였으며, 한국측 건교부와 철도청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2000. 12)하여 3국 장관급회의 개최 전에 3국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어 2001년에는 한·러 경제공동위원회(2001. 2)을 통해서 남북철도 연결 및 TKR과 TSR간 화물운송에 대한 협력을 발전·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제1차 한·러 교통협력위원회를 개최(2001. 12)하여 『한·러 철도협력 약정』과 『한·러 교통협력위원회 약정』에 서명하였다. 2차 한·러 교통협력위원회(2002. 12)에서는 러시아측이 3자 철도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우리측은 실무회담을 먼저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2003년 APEC 정상회담에서 별도의 회담을 통해 한·러 양국 정상은 ‘3자 철도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2003. 10)하

였으며, 2004년 4월에는 양국 정상간의 합의에 따라 남·북·리 간 3자 철도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TKR/TSR 연결사업을 위한 공동연구, 컨테이너시범운송사업 실시,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항만>

한·중·일 3국간의 항만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동북아 물류수송망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도에서 1995년부터 매년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다. 이회는 동시에 효율적인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축 및 3국간 항만건설기술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당초 이 회의는 한·일 양국간 항만국장회의로 시작하였으나, 2000년 중국이 참여하면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한·중·일 3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각국의 대표단장은 한국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장, 중국 교통부 수운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러시아 교통부 항만관리국장의 참가를 유도하고자 한다.

<표 IV-6>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동북아 항만심포지엄 개최 실적

연도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개최지	서울/부산	요코하마/고베	서울/부산	동경/니가타	서울/제주	동경/시모노세키	서울/속초	북경/상해	동경/니가타	서울/부산
참가국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한, 중, 일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 5차 동북아 항만국장회의에서는 “21세기 바람직한 항만물류단지 역할정립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하에 3국의 항만정책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공동연구과제 3건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되었다. 공동연구과제의 제목은, ‘동북아지역 항만투자 촉진 및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연구’, ‘동북아지역 크루즈산업 진흥’, ‘항만구조물의 신뢰성 설계법’ 등이다.

부산에서 개최된 2004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가 항만계획 및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동북아 국제물류시스템의 최신 동향과 항만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 에너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된 ‘제1회 극동 국제경제포럼’에 참석(2005. 9. 27~29)한 우리측 대표는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동북아의 에너지, 자원, 자본, 기술을 상호 결합해 에너지 개발협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경제적 공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협의체는 동북아 6개국(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에너지 분야 지역협의체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01년 ‘제1차 국제 동북아 에너지심포지엄’에서 동북아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CSO,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의 구성을 제안한데서 비롯되었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회의가 개최(2001. 10. 24, 하바로프스크; 2001. 11. 28, 서울)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CSO) 및 그 하부조직으로 Working Group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분간 ESCAP이 CSO 구축을 위한 임시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2003년에는 ESCAP가 주관하여 실무협의회 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4. 7~11)되었다. 이 회의에는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의 국장급 이상의 에너지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발표문(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채택하였다. 공동발표문의 주요 합의사항은 첫째, 동북아에너지협력실무협의회(CSO) 회의를 정기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둘째, 부속기구로서 전력망연계, 화석연료교역 및 에너지정책 분야에 대해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설치를 통한 협력 증진에 합의하고, 셋째, UN·ESCAP이 실무협의회와 실무그룹의 임시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되 추가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협력합의서가 체결된 후 초기 3개년 기간에 대해서는 개도국(몽골, 북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아쉬운 점은 이 회의에 중국과 일본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중국은 정부조직개편작업으로 인해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하였으며, 일본은 북한과의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경우,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자국내 에너지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부족하고, 일본의 경우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의 구성에 관

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환경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7월 개최된 제5차 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에서 동 기금 이용, 동북아환경협력회의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이 이 지역 환경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기구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2월 서울에서 제1차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개최된 이래 2004년까지 모두 9차례 회의가 동북아 6개국간 순번제로 개최되어 왔다.

동북아지역의 환경협력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이 회의에서 동북아지역 6개국(한국, 북한,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은 동북아지역환경협력프로그램(North 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체계를 출범(1996년)시켰다. NEASPEC은 포괄적인 의미의 정부간 포럼이며, 지역내 환경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환경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모니터링과 정보교환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1998년 4차 회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환경데이터훈련센터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설치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9차와 10차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의 주요 의제를 살펴보자.¹⁸⁶ 9차 회의(2004. 3. 2~4, 모스크바)의 주요 의제는 기존의 협력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

¹⁸⁶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는 NEASPEC(동북아환경협력계획)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동북아대기오염 데이터 수집 및 훈련사업, 동북아 자연보전사업 및 황사 예방 및 제어사업 등 5개 사업이 주로 논의 되었다. 같은 해에 개최된 10차 회의(2004. 11. 24~26, 오키나와)에서는 기존의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향후 추진사업이 결정되었다. 추진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3개 시범사업은 ‘환경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비교·분석사업’, ‘석탄 화력발전소 오염저감사업’, ‘화력발전소 전기집진장치의 효율성 증대사업’ 등이다. 향후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동북아 오염이동 관련 화력발전소 오염저감 사업’, ‘자연보전사업’ 등이다. 이 밖에도 NEASPEC 장관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고, 한국의 주관으로 11차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는 1998년 5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회의기간중 한·중, 한·일 양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제안하고 양국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성사되었다. 우리가 3국 장관회의를 제안한 이유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산성비), 황해 및 동해오염 등이 지역 환경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한 동북아국가 간 협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동북아 핵심국가인 한·중·일 3국의 환경 최고 당국자간 회의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1999. 1)에서는 3국간 우선 협력분야를 논의하였으며, 황사대응 등을 위한 환경협력 장관급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북경에서 개최된 2차 회의(2000. 2)에서는 9개 동북아협력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이 중에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공동조사연구,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사업, 중국 사막화 확대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모색 등이 주요 사업으로 거론되었다. 동경에서 개최된 3차 회의(2001. 4)에서는 한·중·일 3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하였다. 서울에서 개최된 4차 회의(2002. 4)에서는 그동안 황사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중국과 일본의 참여를 끌어 들여 3국간 황사 모니터링네트워크 구축, 황사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연구·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에 개최된 5차 회의(북경)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황사·산성비·해양오염 등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2004년 12월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6차 회의에서는 동북아 환경문제 연구기관의 설립방안을 논의하고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3국의 공동입장을 정리하였다. 동북아 황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몽골의 환경장관이 함께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황사대응 사업의 확대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측은 황사,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황해 오염 등 동북아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국제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연구센터의 설립은 한·중·일 3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UNEP 등의 국제기구 협의를 거쳐 2005년 중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설립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당국간 회의체이다. 이 회의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지엄이 확대·발전된 것으로 역내 국가간 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992년 제1차 회의가 일본 니이가타에서 개최된 이래 한국, 중국, 일본이 매년 한차례씩 번갈아 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제2차(1993, 서울), 제4차(1995, 부산), 제7차(1998, 제주), 제10차(2001, 인천), 제13차(2004, 서울) 회의를 개최하였다. 2004년 서울에서 개최된 13차 회의에는 동북아 5개국(한·중·일·몽·러), UN ESCAP,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주요 토의 주제는 ‘대도시 대기질 관리정책 현황 및 대책’, ‘중 복원사례’, ‘지방정부의 생태복원사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관리’ 등이었다.

그 동안 이 회의는 생물다양성 보존, 산성비,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청정기술 및 청정생산, 지구환경현안 등 역내 관심사항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 환경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라. 경제협력 기반 구축 실적 : 역내 공동 개발사업

(1) 철도

동북아지역 철도 연계와 관련한 사업은 남북철도 및 도로의 연결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제연합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수송체계를 세계화 및 통합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아시아횡단철도북부노선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은 1995년 방콕에서 한국의 재정 지원을 기초로 시작되었다. 기본노선은 200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UNESCAP 2차 인프라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는데 5개 노선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동북아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은 ‘한국(부산)-북한-중국-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서유럽’ 노선과 ‘북한(라진)-중국·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서유럽’ 노선인데, 북한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당국은 북한의 철도시설을 현대화하기 이전에 컨테이너 시범운송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금융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포괄적인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천명함에 따라 이 지역의 금융협력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들은 역내 자본흐름의 모니터링과 동아시아 역내 긴급유동성 지원메커니즘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3차 ASEAN+3 재무차관 회의(2000. 3)에서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역기존의 ASEAN 통화스왑협정에 한·중·일 3국이 참여

하여 역내 유동성 위기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기간 중 열린 ASEAN+3 재무장관 회의(2000. 5)는 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는 장치로 기존의 ASEAN 통화스왑협정을 확대하고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양자간 통화스왑협정을 별도로 체결하는 방식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단 치앙마이 구상(Chiang Mai Initiative: CMI)으로 통칭되는 통화스왑협정의 확대발전에 금융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고 있다.

치앙마이 구상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에 유동성 지원 장치를 구비할 수 있게 된 것은 역내 금융협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치앙마이 구상은 역외국의 거부감과 역내국간 경제력·경제발전의 격차가 크다는 점 등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UNDP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 TRADP)

2005년 9월 장춘에서 개최된 두만강개발계획(TRADP) 제8차 위원회에서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TRADP를 10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경제부처 차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을 북한 청진, 중국 옌지(延吉), 러시아 나훗카를 잇는 대삼각지역에서 몽골,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일대로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수송, 투자, 관광, 환경, 에너지, 통신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 재원 분담, TRADP 사무국 전문인력 파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만강개발계획은 1990년 7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되었던 동북아협력 국제학술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거론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몽골에서 유엔개발계획(UNDP)가 주최한 동북아개발 관련 회의에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주축이 되어 두만강개발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은 UNDP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5개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어 왔다.

TRADP는 실물부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역내 교역·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정부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연구·조사 등을 통해 회원국간 관련 사업을 협의·조정하고 필요시 회원국의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UNDP의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은 그동안 3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어왔다. 1단계는 1993년 9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일정한 지역을 임대해서 공동의 경제특구지역을 건설하는 사업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러시아정부가 거부감을 표시한데다 사업의 전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 커져 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사업은 과도적인 기간(1995~1996)을 갖게 되었다. 이간 동안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 1995년 12월 5개국간에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 협정을 체결한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97년부터 2000년의 기간은 2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동

안 사업의 초점은 지역협력을 위한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구체적으로는 무역, 투자, 그리고 환경부문이 선정되었다.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 국가간의 협력의 틀은 구축되었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수준이었다. 이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3단계 사업의 핵심 목표로 선정되었다.

3단계(2001~2005) 사업의 내용은 2000년 12월 북경에서 개최된 워크(on TRADP Project Formulation)에서 논의를 거쳐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회의의 참석자들은 5개의 실무그룹으로 나뉘어져 목표를 정하였는데, 환경, 교역과 투자, 에너지, 교통과 통신, 그리고 관광으로 나뉘어졌다. 3단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첫째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작동의 측면에서나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제도적인 틀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5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3단계에서 추진된 사업들은 대체로 ‘인프라 개발’, ‘교역·투자 환경 개선’, 그리고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개발 추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프라 개발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한·중 합작으로 속초-지루비노(러)-훈춘(중)을 잇는 카페리관광노선을 개설한 것과 나진(북한)-원정(중국)간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교역 및 투자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북한·중국·러시아 접경 3국을 중심으로 국경통과 절차 등의 제도개선을 협의한 것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는, 지구환경기금(GEF)를 중심으로 두만강지역의 환경보호, 환경조사 및 분석사업을 추진하였다.

(4)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TumenNET)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은 TRADP에 있어 환경보호 및 환경친화적 개발추진에 해당하는 환경부문 사업으로서 TRADP에 참여하는 한국,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NDP·GEF의 기술적·재정적인 지원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은 2000년 8월부터 2002년 12월에 걸쳐 시행된 TRADP의 6개 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추진된 것이며 그 대상지역은 두만강 지역과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만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참여국간 역할분담을 통해서 과제가 나뉘어졌다.¹⁸⁷ 두만강 유역, 다루리안 초원, 몽골리안 고원, 광역지역 등으로 나뉘어 진 지역에 대한 현황과 주요 이슈 및 장애요소 등을 파악하는 과제인 ‘국경 간 진단분석’(TDA) 사업은 러시아가 주도하였다.

두만강유역의 생태계 파괴와 수자원 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인식증진’(Aware) 사업은 몽골이 주도하였다. 참여국간 환경관련 자료를 취합, 교환하기 위한 ‘환경정보체계’(EIS)의 구축사업은 중국이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전략적행동계획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두만강 수계 오염원 파악을 위한 ‘오염실태조사’(Survey)는 북한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TDA에서 제시한 동북아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수자원에 대한 위협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¹⁸⁷ 환경부, 두만강유역 환경보전후속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2004).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종합한 ‘전략행동계획’(SAP)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마. 소결

경제분야의 동북아협력 인프라는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인적 측면 등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협력을 위한 경제분야 인프라는 경제부문의 다자협약 체결이나 다자협력기구의 창설 등과 같은 제도적 인프라의 마련과 지역간을 연결하는 교통망·통신망, 그리고 에너지망과 같이 물리적인 인프라의 구축 상황으로 구성될 것이다. 이외에도, 지역내 국가들의 경제협력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마련과 경제의 대외개방성 정도도 제도적 인프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실무인력 등은 인적 인프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화 실태와 현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계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경제부문의 인프라를 살펴보았다.

동북아지역 국가들간의 경제협력체는 그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기구를 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무역이나 투자의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이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협력기구의 결성에는 미온적인 이유는 경제협력기구의 구성과 관련한 중국과 일본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동북아협력을 중국의 동북 3성지역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도 동아시아와의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나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서로 상대방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보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에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ASEAN+3의 형식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 ASEAN+3회의가 개최된 것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매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이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FTA 체결은 현재 국가간에 어느 정도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자국이 FTA 체결 논의에 뒤처지게 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중·일 간에 양자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논의되고 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ASEAN의 차원에서도 한·중·일과 개별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별로 해당사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체를 구성하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분야의 협력

은 가능성이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시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에너지협약체’ 구성이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북아지역에서 협력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진전된 분야는 환경협력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각종 환경협력회의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SPEC),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등의 활동이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리적인 인프라는 교통·운송망의 연결, 에너지 연계망 구축, 통신망 연결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철도연계망 구축사업이다. 동북아지역 철도연계와 관련한 사업은 남북철도 및 도로의 연결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TKR과 TSR을 연결하는 사업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연합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수송체계를 세계화 및 통합함으로써 지역간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주목할만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는 거의 구축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를 진행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ASEAN+3의 형태가 그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한층 축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

아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문제는 ASEAN+3의 형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논의가 진행되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은 북한지역의 단절구간 해소라는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체제 구축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물리적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뒷받침하고, 중국 및 러시아에게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 노력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안보분야

가. 다자안보대화의 활성화

제2차 세계대전 종료이후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¹⁸⁸ 원칙

¹⁸⁸ 집단안보는 국가들이 전쟁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전략으로서 통상적으로 중앙화된 안보장치제도를 채택한다. 일 구성국이 전쟁을 행하는 경우 다른 구성국들은 이를 모든 구성국들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경제적·군사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 국제연맹이나 유엔이 이러한 집단안보를 주요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Roger Scruton, *A Dictionary of Political Thought*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p. 73; Karl W. Deutsc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8), p. 228.

에 의해 국제기구인 유엔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기능하고 있으나, 냉전시기 뿐만 아니라 탈냉전 시대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¹⁸⁹ 따라서 어느 정도 공동의 이해와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유엔에 의한 집단안보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한 다자간 접근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 안보 및 평화 유지를 위한 다자간 접근의 대표적인 유형은 집단자위동맹(Collective Self-Defense)과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이다.

집단자위동맹은 다수 국가가 평화 및 질서유지를 목표로 침략에 대비하여 공동 대항할 것을 합의한 안보체제로서 적과 동지가 명확히 구분되는데, 그러한 예가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다. 한편 협력안보는 구성국들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¹⁹⁰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분쟁예방을 위한 대화지속과 협의과정의 개설을 권장하고 지역안보의 확립을 위하여 다자간 대화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¹⁹¹

¹⁸⁹ 유엔은 1980년대 말까지 시도한 분쟁조정들 가운데 단지 2/5만 성공하였다. Kalevi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p. 423.

¹⁹⁰ 예방외교는 국가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규(disputes)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분규가 더 큰 분쟁(conflicts)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는 한편,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행동들이다. Mark M. Lowenthal,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p. 2.

¹⁹¹ Ashton B. Carter,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홍규덕,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9), pp. 11~13.

탈냉전·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태지역에서는 이러한 협력안보의 성격을 갖는 다자안보대화가 참여국들 간의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대화는 정부간 차원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민간 차원에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가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민간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만이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고 있다.

(1) ARF

냉전시대에 동남아국가연합 『ASEAN』의 6개 회원국들은 역내 안보문제를 기본적으로 ‘ASEAN 틀 밖’(on a non-ASEAN basis)에서 다루었다. 그 이유는 ASEAN 국가들 간의 안보위협에 대한 상호인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ASEAN 국가들의 지역안보 인식은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SEAN 회원국은 1991년 7월 팔라룸푸르에서 ASEAN과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C 등 7개 대화상대국들(dialogue partners)이 확대외무장관회의(ASEAN-PMC)¹⁹²를 개최하여 지역안보협력 가능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로써 ASEAN-PMC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안보대화의 장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미국 클린턴

¹⁹² ASEAN은 1979년 이래 매년 7월 역외 주요국가들과 대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정례 ASEAN 외무장관회의(ASEAN-AMM) 직후 ASEAN-PMC를 개최하여 오고 있다.

행정부가 1993년 7월 「신태평양 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구상을 밝히는 등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 수립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서 1994년 7월 방콕에서 ASEAN-PMC 참여국 이외에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 뉴기니 등 총 18개국이 참여하는 ARF가 출범하였다.

제1차 ARF에서 참가국들은 아·태지역의 안보문제를 위협하는 남중국해 문제, 캄보디아문제, 북한 핵문제,¹⁹³ 신뢰구축방안,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문제 등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ARF의 정례화와 「동남아우호조약」의 준수 등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참가국들은 ARF가 아·태지역 국가들간의 신뢰구축과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외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ARF의 활동과 역할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¹⁹⁴

1995년 8월 브루나이의 반다르 세리 베가완에서 개최된 제2차 ARF에는 베트남이 ASEAN 정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한편, 캄보디아가 옵저버국으로 참가하여 총 19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참석하였다. 제2차 ARF에서 참가국들은 ARF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ARF는 향후 아·태지역

¹⁹³ 제1차 ARF에서 북한 핵문제는 지역안보 의제 중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현안으로 다루어졌으며,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안보 및 세계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북한 핵문제는 사안의 시급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역안보 의제로는 유일하게 회의 종료 이후 채택된 의장성명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 9. 7), p. 1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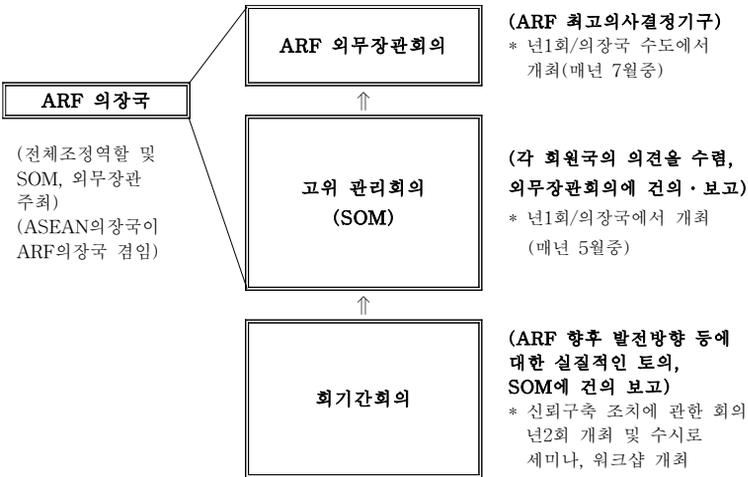
¹⁹⁴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4. 8. 4, p. 15;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를 중심으로,” pp. 10~12 참조.

안보현안에 대한 정부간 공식적 다자협의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부여받았다. 참가국들은 ARF를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에 입각하여 운영할 것을 기본목표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회원국들은 향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1단계 신뢰구축 증진(stage I: promotion of confidence building), 2단계 예방외교의 개발(stage II: development of preventive diplomacy), 3단계 분쟁해결 노력(stage III: elaboration of approaches to conflicts)이라는 점진주의적 절차에 따라서 역내 안보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안보협력을 위하여 시행가능한 구체적 조치들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되, 방위백서 발간 및 안보대화를 통한 신뢰구축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기간 지원그룹(Inter-sessional Support Group)과 평화유지 노력을 포함한 협력활동을 위한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s) 등의 설치·운영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제2차 ARF는 주요 지역안보 문제로 남중국해 영유권문제, 한반도문제, 캄보디아문제, 핵확산금지문제 등을 논의하였다.¹⁹⁵ 이후 ARF는 매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부록 표 IV-2 참조). 상기와 같은 목표를 가진 ARF가 2001년 7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의장역할 강화와 예방외교 추진 등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한 3개 운영문서를 채택한데 이어, 2002년 제9차 회의부터는 위에서 언급된 바 있는 발전방향으로 이행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¹⁹⁵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를 중심으로,” p. 17~18.

ARF 회원국은 1994년 출범 당시 18개국이었으나 2005년 말 현재 25개국으로서 이는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대화상대 10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의장국), 여타 5개국(북한,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몽골, 티모르-레스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2000년 7월의 제7차 회의부터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ARF는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이다. ARF는 외무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회기간회의(ISG on CBMs : Inter-sessional Support Group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표 IV-7 참조).

<표 IV-7> ARF의 운영구조



* 회기간회의의 공동 의장국(ASEAN국과 비ASEAN국 각1국씩 선정)

출처: 외교통상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개황 (서울, 2003. 5), p. 9.

<부록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F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의제들은 대체적으로 한반도, 미얀마 정세 등 지역안보 정세와 테러 등 국제적 사안 및 신뢰구축조치, 예방외교, ARF의 발전방안 등이다. 하지만 1998년부터는 지역금융위기, 2000년부터는 세계화, 2002년부터는 국제테러, 2005년부터는 쓰나미 등 자연재앙 대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994년 발족 이후 그동안 ARF가 이룩한 성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역내 유일의 지역안보문제 토론기구로의 정착이다. ARF는 미·중등 강대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고립된 체제를 포함한 아·태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수용, 지역안보문제 토론과 같은 안보대화 및 신뢰구축과정에 개입시키고 있는 유일한 다자기구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대화습관 축적을 통한 우호적 국가관계 수립촉진 및 접촉창구의 제공이다. ARF는 발족 이후 본회의인 외무장관회의 이외에 고위관리회의(ARF-SOM), 회기간 그룹회의(ISG: Inter-sessional Group Meeting) 등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회원국간의 대화습관을 축적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이제까지 한반도 거르지 않은 다양한 수준의 정례적 회의 개최는 대화의 중요성이 회원국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는 동시에 역내 대화습관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ARF는 상호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인 역내 주요국,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간 회동 및 대화장소로 적절히 이용되고 있다. 2000년 7월 북한의 가입 당시 ARF는 남북한간 최초의 외무장관회담 장소로 이용된 바 있다. 2005년 제9차 회의의 경우, ARF 회의를 통해 북·미 및 북·일간 외상회담이 이루어져 북한이 대화를 통한 대미·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였다. 셋째, 초보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통한 역내 긴장완화 기여이다. ARF는 역내 평화증대와 안정추구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 참여권유와 『연례안보평가서』(Annual Security Outlook) 제출 등과 같은 초보적 신뢰구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간 상호이해와 안정적 관계 수립에 필요한 일정한 규범(norms) 및 원칙(principles) 준수의 중요성을 제고시켜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국가관계의 수립을 촉진하고 역내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ARF는 2001년 7월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국가간 신뢰구축 증진의 제1단계를 벗어나 예방외교의 시행을 위한 제2단계의 발전수준으로 들어섰음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넷째, 군사분야의 국가투명성 증대 공헌이다. ARF는 각 회원국의 역내 안보평가서 제출, 신뢰구축조치로서 회원국간 군인사 교류 시행 권고, 본 회의 및 회기간 그룹회의에서의 국방인사 참여 보장 등을 통해 군사문제에 관한 국가투명성을 부분적으로 증대시키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군소국의 지역안보문제 해결 기여 확대이다. ARF는 이른바 약소국 또는 군소국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ASEAN이 주도하여 창설한 다자간 안보대화 협의체로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을 회원국으로 수용하여 지역안보문제 협의에 개입·관여(engage)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⁹⁶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함께 비판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ARF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4가지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실천력 부족과 비효율적 논의기구로의 전략이다. ARF는 역내의 모든 국가를 다자안보대화라는 신뢰구

¹⁹⁶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pp. 251~254.

축과정에 개입시키고 있으나 지역안보 현안의 해결을 위한 실천력이 부족하며 효용성이 거의 없는 단순한 “대화의 장(場)”(a talk-shop without any teeth)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까지 회원국간 신뢰구축을 위해 시행된 조치는 대부분 다양한 수준의 회의 개최뿐이라는 점이다. 또한 본회의인 외무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의가 1년에 한차례씩밖에 개최되지 않아 안보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설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ARF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핵심 안보문제의 해결 회피이다. ARF는 영토분쟁, 군비증강, 남중국해의 해양영유권 문제 등 지역안정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역내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문제 또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지향한 논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보적 신뢰구축조치 이행이라든지 안보정세 교환과 같은 주변문제들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안보기구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 관련 인사의 참여 부족이다. 역내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국방 관련 고위층 인사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ARF 본 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회기간 그룹회의에는 일부 회원국의 경우 국방관련 인사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실무자급 국방인사의 참여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군소국 역할의 한계 노정이다. ARF는 ASEAN의 주도에 의해 창설됨에 따라 회의개최 및 의장국 수입은 ASEAN 소속 국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중국, 호주 등 ASEAN 역외 일부 강대국들이 ARF 운영의 ASEAN 주도에 비판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역안보문제 논의

및 해결과 관련된 군소국 역할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¹⁹⁷

(2) CSCAP

CSCAP은 역내 안보대화를 통해 국가간 신뢰를 증진하고 정부 차원의 안보협력을 지원·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이른바 “제2트랙 외교”(Track II Diplomacy)로 불리는 민간차원의 안보대화·협력기구이다. 1992년 11월 1~3일 서울 회의에서 아·태지역의 10개국(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에 있는 20여개 전략연구센터 대표들은 대화, 협의, 협력을 통해 지역신뢰구축과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비정부 차원의 더 체계화된 지역과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8개월 간 CSCAP이라는 개념이 정부관료들과 지역안보 전문가들 간에 널리 검토되었고, 1993년 6월 8일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 회의에서 CSCAP을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2월 6일 인도네시아 롬복(Lombok)에서 개최된 조정위원회에서 CSCAP 현장이 채택되었고 1994년 6월 5일 팔라렘푸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CSCAP은 현재까지 아·태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비정부차원의 정례화되고 포괄적인 과정을 위한 가장 전망있는 대화체로 간주되어 왔다. 발족 초기에 10개국이었던 회원국은 2005년 10월 현재 20개국에 달하고 있다. CSCAP은 현재 정부차원의 안보대화체인 ARF에 대한 연계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¹⁹⁸

CSCAP의 구조는 총회,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

¹⁹⁷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pp. 254~256.

¹⁹⁸ <<http://www.cscap.org/about.htm>>.

으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5개의 상설 작업반(Working Group)이 설립되어 있다(부록 표 IV-7 참조). 그러나 CSCAP은 2004년 하반기 이들 작업반을 해체하고 WMD 확산방지, 동북아 다자협력 등 특정 주제에 대한 6개 연구반(Study Group)을 신설하여 2년 시한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¹⁹⁹ CSCAP의 구조 중 운영위원회는 CSCAP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원국들에 설치되어 있는 회원위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연 2회 회의(1회는 6월 팔라렘푸르, 다른 1회는 12월 다른 회원국에서)를 개최, 아·태안보협력이사회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사무국은 현재 팔라렘푸르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산하의 5개 작업반(최근에는 연구반으로 개편)은 아·태지역의 주요안보문제 현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연구 결과는 정책건의 형식으로 발간하고 ARF에 정식 제출하고 있다. CSCAP이 연구결과로서 제출하여 ARF가 수용한 가장 최근의 주제는 2001년 채택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에 관한 문서이다.²⁰⁰

¹⁹⁹ CSCAP은 2004년 기존의 분과작업반(Working Group)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2~3년 기간단위로 5~6개의 특정의제(예: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를 설정, 이 의제들에 대한 상설 특별연구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²⁰⁰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pp. 262~264.

<표 IV-8>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구조

창립 : 1994년 6월
회원국 호주 · 캐나다 · 중국 · 한국 · 북한 · 인도네시아 · 일본 · 말레이시아 · 몽고 · 뉴질랜드 · 필리핀 · 러시아 · 싱가포르 · 태국 · 미국 · 베트남 · 유럽연합(EU) · 인도 · 파푸아뉴기니 · 캄보디아
목적 안보문제에 관한 민간차원의 논의를 통해 지역 신뢰구축 및 안보협력을 위한 구조적 과정 제공
조직 ①총회 ②국제운영위원회 ③사무국 ④실무분과회의 작업반(Work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구축조치 분과작업반 · 포괄적 및 협력안보 분과작업반 · 해양협력 분과작업반 · 북태평양 안보협력 분과작업반 · 국제범죄 연구반
회의 총회는 연 1회, 국제운영위원회는 연 2회, 분과작업반은 연 1~2회 개최

* 최근 CSCAP은 상설 실무분과회의의 작업반을 해체하고 WMD 확산방지 · 동북아 다자협력 · 해양안보협력 ·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 마약밀매 · 반테러 등 특정주제에 대한 6개 연구팀을 발족시킨 바 있다.

CSCAP은 비정부 · 민간차원의 다자안보대화기구로서 첫째, 동아시아 역내 국가를 연계시켜 주는 연계망 구실(network among states), 둘째, 안보문제와 관련한 연구와 조사기구로서의 역할(research and survey), 셋째, 교육기구(educational process)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CSCAP의 기능으로 인해 CSCAP이 아·태지역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공헌한 성과는 매우 크다. 1994년 발족 이래 CSCAP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CSCAP은 그동안 5개 전문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연구활동을 통해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 및 지역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구체적인 제안과 방안(proposal 및 idea)들을 제시해 왔다. 특히 CSCAP은 ARF의 시험대 역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보분야 전문가 및 학자들의 모임으로서 ARF가 수행하지 못하는 연구·조사 및 ARF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ARF가 향후 발전을 위해 2001년 채택한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문서는 그 주요개념과 내용이 CSCAP의 연구활동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며 ARF는 실제로 예방외교 문제와 관련하여 CSCAP에 연구를 요청한 바 있다. 둘째, CSCAP은 역내 국가들이 지역안정과 갈등의 사전 해소 등을 위해 바람직할 수 있는 행동지침(action guidelines)을 소책자의 발간 등을 통해 꾸준히 제시해 왔다. 예를 들면, CSCAP은 신뢰안보구축 작업반 등 산하 5개의 작업반 연구활동을 통해 수시로 단행본의 출간은 물론 각 지역국가들에게 권고하는 행동지침을 「메모랜덤」(memorandum) 형식으로 발간해 왔다. 셋째, CSCAP은 아·태지역에서 정부간 다자안보협의기구인 ARF의 민간자문기구로서 역내 안보문제를 연구·논의하는 학술공동체(academic community)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CSCAP은 학술공동체로서 아·태지역 안보문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국내 차원에서 안보·군사분야의 하부 구조로서 지역안정 조치를 논의하는 유용한 장(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CSCAP의 성과와 공헌에도 불구하고 CSCAP에 대한 비판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CSCAP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CSCAP도 ARF

와 마찬가지로 지역안정을 위한 신뢰안보 구축 조치 등의 논의가 실행력이 없는 단순한 협의로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CSCAP도 ARF가 처한 어려움과 같이 역내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주제라든지 주요국의 치명적인 국가이익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관심을 갖는 남중국해 분쟁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논의가 중국의 주도에 의해 기피되고 있으며, 대만 학자들의 CSCAP 참여 문제도 중국측의 반대로 대만이라는 단체가 아닌 학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CSCAP의 운영을 위해 ASEAN측 학자 1인과 비(非) ASEAN측 1인으로 구성되는 공동의장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상설 사무국은 아세안지역(즉, 말레이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두고 있어 ARF와 마찬가지로 ASEAN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²⁰¹

(3) NEACD

NEACD는 동북아소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차원의 안보대화이다. NEACD는 미국 샌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가 남북한과 미·중·일·러 6개국 외교부 관리와 군인사 및 학자들을 1개국당 5~10명씩 초청하여 각국의 외교부산하 연구기관과 공동개최하는 비정부간(Track II) 안보대화로서 동북아국가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신뢰구축, 협

²⁰¹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pp. 264~266.

력증진에 목적이 있다. 1993년 7월 샌디에고 준비회의를 거쳐 제 1차 회의가 10월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제2차 회의(1994. 5, 도쿄), 제3차 회의(1995. 4, 모스크바), 제4차 회의(1996. 1, 베이징), 제5차 회의(1996. 9, 서울) 등 참가국을 순회하면서 2005년 4월까지 1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²⁰²

2005년 4월 12~13일 서울의 외교안보연구원에서는 북한을 제외한 각국 별로 5~6명 및 IGCC 인사, 옵서버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동북아 안보 및 남북한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고 최초로 외교당국자 간에 비공식 오찬회의도 개최되었다. 북한은 1993년 7월 개최된 준비회의에만 참가하고 그동안 본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2002년 10월 제13차 회의(모스크바 개최)시부터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 회의참석을 지속해 오다가 제16차 회의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비록 개인자격이라고 하나 정부관리(외교부 및 국방부)가 참여함에 따라 NEACD는 Track 1.5라는 준정부간 회의의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회의주제 자체도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참여국가의 평가 및 시각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민간수준의 안보대화를 넘어서고 있다. NEACD가 Track 1.5라는 준정부간 다자안보대화 협의체로서 이룩한 성과는 괄목할만 하다. 우선 먼저, NEACD는 실질적으로 정부인사(외교부 및 국방부 관료)가 개인자격으로 다수 참가하는 준정부간 회의라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정부인사가 다수 참여한다는 사실은 동북아지역 국가 간의 상호이

²⁰² “제16차 동북아 협력대화(NEACD) 개최” <<http://www.mofat.go.kr> (2005. 4. 11)>.

해, 신뢰구축, 협력증진이 단순히 말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 결과가 각국의 실제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NEACD를 통한 각국 간의 대화와 협의는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NEACD가 공헌한 또 다른 성과는 동북아 소지역 국가 간에 대화 습관을 축적했다는 점이다. NEACD는 1993년부터 약 8~10개월 간격으로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비록 준정부간 회의이나 역내 국가끼리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 및 논의 습관을 구축하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 습관의 구축은 역내 국가간 관련 정부인사의 개인적 연계망 확립과 대화통로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공헌에도 불구하고 NEACD가 지역안정 및 안보문제 논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NEACD에 대해 가해지는 첫 번째 비판점은 NEACD도 역내의 다른 안보대화 협의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행력이 없는 단순한 대화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NEACD를 통해 동북아의 다양한 신뢰안보 구축 방안과 국가 간의 상호이해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이행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NEACD는 1997년 12월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동북아국가들이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주권존중, 무력사용 억제, 국제법에 의거한 항해자유원칙 존중, 경제협력 증진 등 8개항을 채택하여 이를 관련정부들에게 권고하였으나 공식적으로 채택된 바 없다. 이에 따라 NEACD는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場)”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²⁰³

²⁰³ 이서항,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pp. 269~270.

나. 분야별 사안

(1) WMD

<역내국의 WMD 확산방지 정책>

대량살상무기(WMD)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중장거리미사일 등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인명을 살상함으로써 강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다. 냉전종식과 함께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WMD 확산방지를 자국의 주요한 안보정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세계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합한 군사·안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1994년 발표한 ‘개입과 확대의 국가안보전략’²⁰⁴은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함께 지역 분쟁, 구 사회주의권의 민주화 개혁실패 위험성, 국가안보와 직결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적극 개입(engagement)하며,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enlargement)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2001년 1월 20일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국방부의 「2002년 핵태세 검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²⁰⁵에서는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5개국을 미국과 적대관계, 대량살상무기 능력 보유, 테러지원,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언제라도 미국과 적대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국가로

²⁰⁴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²⁰⁵ <<http://www.defenselink.mil/news/Jan2002/d20020109npr.pdf>>.

지목하였다.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①재래식 공격으로 대상목표를 파괴할 수 없을 때, ②핵·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 ③긴급 군사상황 발생 등을 예시하였다. 또한 ‘2002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는 북한, 이란, 이라크 3개국을 가장 큰 위협인 대량살상 능력을 갖춘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하여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2002년 11월 16차 당대회와 2003년 3월 10기 전인대를 통해 구성된 중국의 신 지도부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최고 국정목표로 삼고 있고, 중국의 대외정책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동북아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데에 두고 있다.²⁰⁶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핵,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 WMD의 완전한 금지와 폐기를 항상 지지해왔고 또한 그러한 무기와 운반수단의 확산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어떠한 국가가 WMD나 그 운반수단을 개발하도록 지지, 격려, 지원하지 않고 있다.²⁰⁷

탈냉전 도래이후, 일본은 21세기의 정치대국을 지향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청서 2004 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요한 과제 중 하

²⁰⁶ 여인곤 외,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3~05), p. 52.

²⁰⁷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Related Export Control Mechanism (2004/06/29)” <<http://www.fmprc.gov.cn/eng/wjzb/zzjg/jks/kjic/flswt/flszc/t141197.htm>>, p. 1.

나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분쟁의 발발 위협, 국제테러와 WMD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 같은 많은 촉발요인들로 내포되어 있다. 아·태지역은 북핵문제와 동남아에서의 테러를 포함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요인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다”²⁰⁸라고 밝히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00년 6월 28일 승인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²⁰⁹에 의하면 러시아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21세기 세계안보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핵무기 자유지대의 창설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참여정부도 평화변영정책 체계 속에 WMD 방지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상기와 같은 WMD 확산방지 정책에 따라서 핵강대국 미·러는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은 약 6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핵감축협정(START-I/II)에 의하면 2007년까지 3,800개, 2012년까지 1,700~2,200 개로 감축하기로 합의해 두고 있다(<표 IV-9> 참조). 미국의 전략핵무기는 주로 공군과 해군이 분장하여 운용하고 있다. 해군은 18척의 Ohio급 SSBN에 탑재된 432기의 트라이던트 SLBM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은 550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500기가 미뉴트맨-III이고 50기가 Peacekeeper이다. 이외에도 수천발의

²⁰⁸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http://www.mofa.go.jp/policy/un/disarmament/arms/outline.html>>, p. 136.

²⁰⁹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mid.ru/mid/eng/econcept.htm>, pp. 3~4 & 12.

핵탄두와 이를 투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로서 B-52H와 B-2A 21대를 운용 중이다. 러시아는 전략 핵전력으로서 ICBM(SS-18/19/24) 735기, 13척의 실전 배치된 전략잠수함(SSBN-8/18/20/23)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216기, 장거리 전략폭격기(TU-95) 78대에 핵탄두 3,159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적정 수명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전략핵공군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핵군축협정의 하한선인 1,700기보다 적은 1,000기 수준의 선별적인 핵탄두로 핵 억지력을 견지할 전망이다.²¹⁰

<표 IV-9> 미·러의 핵무기 감축합의

종류		2000년	START-I(2001.12.5)	START-II(2007.12.31.)
ICBM	투사미사일	550	500	500
	탄두	2,000	2,000 이하	500
SLBM	투사미사일	432	432 이하	336
	탄두	3,456	3,456 이하	1,750 이하
SSBN	척수	18	18 이하	14
핵탄두총량		5,456	4,900 이하	2,250 이하
전략폭격기		114	97	97

<북핵 6자회담>

WMD 확산방지와 관련,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공동의 협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 북핵문제이다. 1993~94년의 제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채택된 북·미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을 통해 해결되었다. 제네바 합의문에서 북

²¹⁰ 전경만,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의 종합적 군비추세 (2005. 10. 12 간담회 내용), p. 4.

한은 5MW 연구용원자로, 50MW 흑연감속로, 200MW 흑연감속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제조공장 등 5개 핵시설을 동결하고, 동결상태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며 이들 시설을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중유 및 2,000MW 규모의 경수로를 제공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하며 점차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개발의 과거 투명성 확보 보다 미래 핵동결에 중점을 두고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따라서 경수로의 주요 부품이 인도되는 시점까지 과거 핵개발 문제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해소할 수 없었다.

2001년 1월 집권 몇달 만에 9·11테러 사태를 겪은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의 연두 국정연설에서 전 세계 테러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 방지를 테러와의 전쟁의 2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하였다.²¹¹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북한은 이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반발하였다.²¹² 2002년 후반기에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미국은 10월 3~5일 켈리(James Kelly)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여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21개월만에 첫 번째 공식적인 북·미대화를 가졌다. 켈리 특사는 방북시 북한측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등

²¹¹ The White House,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²¹²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할 것이다(외무성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2002년 2월 1일 참조.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였다. 켈리 특사는 특히 북한이 우라늄 농축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핵개발 계획을 폐기해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²¹³ 이에 대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면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개발 계획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상 우려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12월 12일 제네바합의에 따라 취했던 핵 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 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²¹⁵ 이후 북한은 IAEA 사찰관을 추방하고, 영변의 5MW 원자로, 8,000여개의 폐연료봉저장시설, 방사화학 실험실, 연료봉 제조시설에 설치된 봉인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제2차 북핵 위기가 발발되었다.

3월 19일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후 중국의 중재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4월 23~25일 중국

²¹³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1998년 5월 핵실험에 성공한 파키스탄으로부터 가스원심분리기를 구입하여 우라늄 농축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핵폭탄 2개를 만들 수 있는 3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2년 10월 25일 참조.

²¹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월 16일 켈리 특사 방북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Richard Boucher,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²¹⁵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제621호 (2002. 12. 6~12), pp. 3~4 참조.

베이징에서 미국·북한·중국 3자회담이 개최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 북한관련 주요사안 해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북한은 핵폐기와 동시에 북한의 안보우려 사항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시 이행’ 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3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각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5월 31일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차단시키기 위한 새로운 국제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방안’(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제안하였다. 그 후 6월 1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포르투갈·네덜란드·호주·폴란드·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1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PSI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미 국무부는 7월 18~19일 미국을 방문한 중국 외교부 다이빙궈(戴秉國) 부부장을 통해 다자회담 구도 속에서 북·미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및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면 북한 체제안전보장을 공식화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북한은 7월 31일 한·미·일·중·리가 참석하는 6자회담을 수용할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후 베이징에서는 4차(1차회담 8. 27~29, 2차회담 2004. 2. 25~28, 3차회담 6. 23~26, 4차 1단계 회담 2005. 7. 26~8. 7, 2단계 회담 9. 13~19)에 걸친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제2차 북핵 위기 발발 시부터 제4차 2단계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합의될 때까지 관련 6개국의 기본입장과 정책을 분석하면 <부록 표 IV-3>과 같다.

4차에 걸친 회담 결과 2005년 9월 19일 다음과 같은 6개항의 공동성명²¹⁶이 합의되었다.

- ①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 포기 및 조속한 NPT와 IAEA의 안전조치 복귀, 미국의 북한 공격이나 침공 의사 부재 확인,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의 준수·이행, 북한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권 인정,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
- ②북·미 관계정상화 조치,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북·일 관계정상화 조치
- ③양자 및 다자간 경협 증진, 관련 5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한국의 200만 Kw 대북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 ④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별도의 포럼 개최,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 방안 모색
- ⑤‘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으로 합의 사항들의 이행
- ⑥5차 6자회담의 11월 초 베이징 개최

상기와 같은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첫째,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래 거의 3년 만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목표’가 당사국들 사이에 주고받기를 통해 포괄적으로 ‘윈윈’(win-win)의 방식으로 합의되었다. 셋째, 막판까지 참여하게

²¹⁶ “<북핵타결> 6개항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5년 9월 19일 <<http://bbs.yonhapnews.co.kr>>.

대립하였던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과 경수로 제공 문제의 타협은 북·미간 ‘타협을 통한 협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핵 비확산 협상 역사상 유례없는 모든 핵무기와 그리고 핵 계획을 폐기한다는 결정하였다. 그러나 핵포기를 통해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미국으로부터 안보 확보, 에너지 및 경제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기회 확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등의 대가를 얻었다. 다섯째,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이룩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개막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성명은 동시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 이 합의는 이행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행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둘째, 미국과 IAEA 등은 ‘선 NPT 복귀와 IAEA 안전협정 조치 이행, 후 경수로 제공’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NPT 복귀와 IAEA 안전협정 조치 이행’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한 추가 합의가 필수적이다. 셋째, 향후 과제로 참여국들이 이행의 타이밍과 순서를 정하고 ‘공약과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 양국의 이행의지, 특히 미국의 이행 의지가 중요하다. 넷째, 경수로 건설 지역문제이다. 신포 경수로 건설사업을 종료시키지 말고 ‘일시중단’ 하는 상태로 끈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남북한간의 협력이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²¹⁷

(2) 국제테러

유엔 개편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 코피 아난(Kofi Annan)의 더 ‘큰 자유 속에서’(In Larger Freedom)라는 논문²¹⁸의 한 부분은 테러의 국제적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는 2006년 9월까지 테러에 대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채택을 제안하면서 테러를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협박하거나 정부나 국제기구를 강요할 목적으로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육체적 해를 야기하려는 어떠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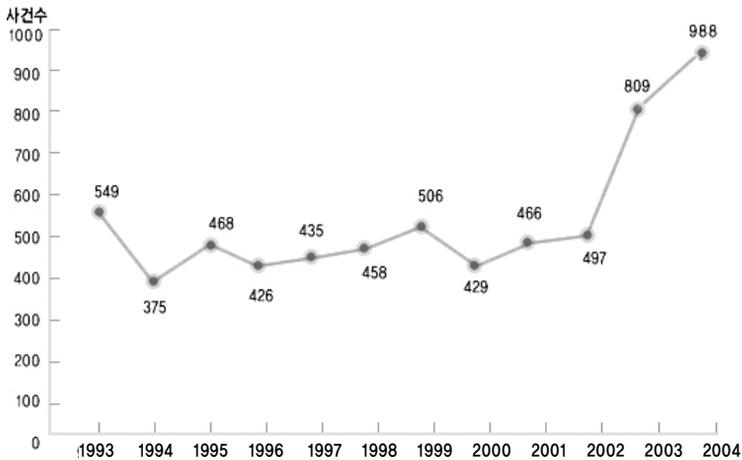
1990년대 초 동·서 냉전 종식으로 극좌테러가 감소한 대신 러시아·유고 등 세계 각지에서 소수민족 분리독립 요구가 분출하고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종전의 좌익이념에 기인한 테러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4년 영국·이스라엘 등 유럽·중동지역 분쟁국가에서 평화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테러사건이 일시 감소하였다가 1995년 이후 다시 민족주의 및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가 확산추세를 보였다. 1997년 이후에는 민족주의 테러가 감소하고 알 카에다 등에 의한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가 현재까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998년 2월 미국·서방국에 대한 테러를 선언한 이후 전 세계 이슬람 동조세력들이 이에 적

²¹⁷ 백학순, “6자회담 공동성명: 성과, 의의, 전망,” 세종논평, No. 30 (2005. 9. 20).

²¹⁸ Kofi Annan, “In Larger Freedom: Decision Time at the UN,” *Foreign Affairs* (May/June 2005).

극 호응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이 본격화되고, 각국의 적극적인 대테러 활동으로 테러가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3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라크전을 계기로 이슬람 과격세력들이 이라크를 지하드(聖戰)의 새로운 전초기지로 삼아 반미·반서방 테러를 강화하면서 2004년 한 해 동안 이라크에서만 전체 테러사건 988건의 절반이 넘는 581건(59%)을 기록하였다²¹⁹(부록 표 IV-9 참조).

<그림 IV-1> 국제테러의 연도별 추세



주요 국제테러 조직들은 대부분 유럽과 중동지역에 편중해 있고 동북아지역에서는 일본적군파(JRA: Japanese Red Army)가 2002년 말까지 활동하였다. 일본적군파는 1948년 형성된 일본학

²¹⁹ <http://www.nis.go.kr/docs/terror/conditions_01.html>.

생운동의 통일체인 「전일본학생자치회연합」이 1960년대 안보투쟁을 벌인 뒤 분열되자, 이 중 마오쩌둥식 무력투쟁을 주장하며, 트로츠키주의를 신봉하는 공산동맹에서 분리하여 1969년 발족한 단체이다. 지도자는 1947년생인 시게노부 후사코로서 그녀는 일본 공산당을 탈퇴하여 적군파를 창설하고 세계혁명을 위해 1971년 베이루트에 잠입하여 중동을 무대로 테러활동을 벌였다. 국제 지명 수배를 받아오던 후사코는 비밀리에 일본에 입국하여 오사카에서 지지들과 접촉하다가 2002년 11월 오사카에서 체포되었다. 12월 말 지지그룹에 보낸 성명문에서는 혁명노선의 오류를 인정하고 ‘일본적군’의 해산을 선언하였다.²²⁰

국제테러와 관련,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국제테러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회교파 격파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지도하는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Al Qaeda)가 2001년 9월 11일 미 여객기들을 공중 납치하여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워싱턴 국방부 건물을 공격, 2,8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9·11테러 사태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다음 날 테러공격을 ‘전쟁행위’라고 선언하는 한편, “우리는 지금까지 대적을 해 본적이 없는 새로운 적과 대치하고 있다”며 응징 및 보복을 전쟁행위에 준해 단행할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²²¹ 현재 아프카니스탄·파키스탄 국경지대에서 미군을 주축으로 다국적군이 회교무장단체 격멸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²²⁰ 김두현, 현대테러리즘 (백산출판사, 2004); “일본 적군파의 시게노부에 대해” <<http://kin.naver.com>>.

²²¹ George W. Bush, “Terrorism: Threat Assesment, Countermeasures and Policy” <<http://www.terror.gen.tr/usa/statementbush.html>>; 경향신문, 2001년 9월 13일.

테러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테러위협통합센터’(TTIC: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를 창설하였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협조와 지원, 반테러에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행동 참여에는 이견이 노정되었다.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9월 12일 “이번 테러는 극히 비열하고 용서하지 못할 폭거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면서 “일본은 미국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원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테러에 대해서는 미국 및 관계국과 힘을 합쳐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²²²

같은 날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국민과 희생자가족에 위로를 표명하는 전문 보냈다. 그러나 중국은 NATO가 앞장서는 미국 지원에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테러에는 반대하지만 이는 유엔을 통한 다자간 논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군사행동으로 자신들이 소외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²²³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테러 참극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테러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바노프 국방장관은 “군사행동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²⁴

²²² 동아일보, 2001년 9월 13일; 세계일보, 2001년 9월 13일.

²²³ 세계일보, 2001년 9월 13일; 한겨레, 2001년 9월 15일.

²²⁴ 경향신문, 2001년 9월 12일; 세계일보, 2001년 9월 13일; 한겨레, 2001년 9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9월 12일 미국의 테러 대참사와 관련해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부시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제56차 유엔총회 의장 취임 차 뉴욕에 체류중이었던 한승수 외교부장은 9월 12일 주유엔대표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더불어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테러행위 근절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들을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²²⁵ 우리 정부는 대테러 국제연대에 동참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주도하의 대테러전 ‘항구적 자유작전’(OEF: Operation of Enduring Freedom)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육군 의료지원단, 해군 및 공군 수송지원단 등을 파견하였다.²²⁶ 북한도 이례적으로 9월 12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줬다”며 “매우 비극적인 그 사건은 테러리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형태의 테러, 그리고 테러에 대한 어떤 지원도 반대하며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²²⁷

(3) 역내 군비경쟁

탈냉전 이후 동북아지역의 군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반적으로 축소가 아니라 월등 강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군사혁신과 변환, 또는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도서영유권 갈등, 해저자원 개발경쟁, 대만문제 등 전통적

²²⁵ 국민일보, 2001년 9월 12일.

²²⁶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테러전쟁 지원(아프가니스탄)” <<http://www.mnd.go.kr>> 참조.

²²⁷ 조선중앙통신, 2005년 9월 12일.

안보문제가 확대하고 있어 역내 국가들이 군사적 수단을 증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역내 군사력 증강이 국가간 쌍대관계(dyadic arms race)에서 지속되는 전형적 군비경쟁 양상을 보인다. 즉, 군비경쟁 원인을 제거하는 국가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가 쌍을 이뤄 군비증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쟁 쌍으로서는 미국-중국, 중국-일본, 북한-남한 등이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적기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역내 핵무기 확산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의 종합적 군비경쟁 추세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미사일 개발경쟁>

미국은 해상미사일 방어체계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데, 제1단계로써 알래스카에 배치된 요격미사일과 동해 배치 이지스함을 연계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도록 1단계 태세를 구축하였다. 이어 제2단계는 2005년 순양함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블록1 미사일을 장착하고 3단계에서는 2006년에 시작하여 15척의 구축함과 3척의 순양함을 배치하여 ‘사실상 세계 어느 곳으로부터’도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은 향후 3년에 걸쳐 총 40기 이상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여 우주에 배치된 위성에 의한 감지 및 통신 지원 하에 적 미사일을 발사한 후 어떤 비행단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다단계 지상·해상기지 복합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MD의 목표물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있어 이들 두

국가로 하여금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중국은 2000년대 미사일부대를 창설하여 미국본토 공격가능한 ICBM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거리 8,000km 되는 東風 31호 미사일을 12개 이상 분리되는 다탄두 재돌입 미사일(MIRV)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東風 31호를 잠수함 발사용으로 개량한 巨浪 2호와 사거리 12,800km로 연장한 東風 41호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북한은 ‘노동1호’ 중거리 미사일의 개발 및 실전배치에 이어 대포동1호, 대포동 2호, 대포동3호 등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포동 계열은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포함되어 북한핵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이 군사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04년 9월 이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 1척을 동해 영역에 상시 배치하여 장거리 감시임무를 맡게 한데 이어 일본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2003년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 도입을 결정하고, 2008년까지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신형 이지스함체계(SM-3)와 패트리오프체계(PAC-3)를 조기 배치하고 관제 레이더 FPS-XX를 일본해역에 배치하고 있다. 2011년까지 MD체제를 완성하기로 하는 한편, 그 이전에는 대북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장거리 및 전략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만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MD 공동개발에 참여할 정도로 대함미사일(ASM)을 기술을 비롯해 공대공, 지대공, 대전차 미사일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MD

개발과 관련해 이미 1994년 H-2 로켓 발사체의 발사 성공, 이의 후속인 H-2A 개발추진은 장거리 전략미사일과 우주 진출이 정책결정 여하에 따라 즉각 가능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1년에 6기정도 배치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 TOPOL-M의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전략군은 2002년 SS-18 ICBM을 4기 신규 배치하고 2003년 30기를 추가 배치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비행 중 고도와 궤적을 자유롭게 변경함으로써 미사일 방어체제를 관통하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중반이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따라 사거리 180km이하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한정되었으나, 2001년 MTCR에 가입함으로써 동 기준에 부합하게 사거리 300Km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연구목적에서 각각 사거리 연장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 확보도 유리해졌다. 현행 호크 미사일을 대체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SAM)을 2010년까지 개발하기로 하여 러시아와 공동개발 협력협정을 2005년 10월 체결하였다.²²⁸

<재래식무기 증강>

첫째, 역내 국가들은 냉전 이후의 군사환경에 부응, 군 개혁을 통해 전력증강을 도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은 해외주둔 병력 재배치(GPR)를 추진함으로써 유럽 및 동북아 주둔 미군을 6~7만 명 축소하는 한편, 전력을 최선의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순항 및 탄도미사일 기술의 보급과 대량살

²²⁸ 전경만, 냉전종식이후 동북아의 종합적 군비추세 (2005. 10. 12 간담회 내용), p. 4.

상무기 확산 등으로 인해 미군의 해외주둔기지 안전문제를 대두시켜 오는데, C4ISR 기술능력의 발달과 함께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하여 해외주둔 개념을 일대 전환하여 재배치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계속하여 재래식 장비의 기술첨단화를 통해 살상력을 WMD수준으로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은 재래식 군사장비를 해외주둔 병력의 재배치와 신속대응 및 기동화, 원거리 투사능력 개념 등의 강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축소하기보다 ‘숫자가 아니라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비하고 있다. 즉, 냉전시기의 전략인 군사장비 고정 배비는 의미가 종료되고 위험지역을 초월하여 위험상황에 대응해 군사장비의 신속하고 유연한 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해공군력을 위한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기로 하여 괌 기지의 확충과 한국, 일본의 기존 미군기지를 재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동북아사령부’를 신설할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으나 주일미군 기지를 사실상 아태지역 전반을 관할하는 모기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03년 미사와 기지에 미 5, 7함대 정찰, 초계 항공군 사령부가 신설되어 P-3C 초계기와 EP-3 전자정찰기 등을 이전배치하고 있고, 미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에 이전하고 일본내 미군기지를 조정 및 재배치하여 미13공군 사령부를 요코다 주일 미공군사령부에 통합시켰다. 그러나 오키나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 문제 등으로 미국과 일본간 주일미군 재배치가 완전 합의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선 부국 후 강병’ 정책을 ‘부국강병 동시 달성’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국특색군사변혁’을 통한 군 현대화를 가속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보다 높게 군사비 증가율을 2000년 이후 책정하

고 있는데, 2005년 공식 발표된 군사비는 29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되었다. 또한 지상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해공군 병력 증강과 무기장비는 원거리 투사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화를 지향하고 있다. 향후 2020년 이전에 200만 명 이하로 감축할 것이다.

러시아는 냉전종식으로 잃은 강대국 지위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군사협력과 훈련을 강화하여 전력의 투사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2004년 2월 모의핵전쟁 훈련을 실시하여 전역에서 ICBM 시험발사, TU-160의 순항미사일 발사훈련 등을 하였다. 2004년 한국과의 대테러 공동훈련, 2005년 8월 중국과의 연합훈련, 10월 인도·중국과의 훈련 등을 통해 군사장비 능력을 유지하고 군사판매 기회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과거 전략핵 미사일과 기갑전력만을 옹호하던 구소련식 군사개념에서 탈피하기 위해 군 개혁을 통해 병력을 대폭 줄이고 있다. 핵심적 비중을 차지했던 ‘전략군’을 감축하여 2001년 미사일 방어군과 우주군 부대를 전략군 소속에서 총참모부 직할부대로 변경하고, 2002년 전략군을 독립군종(하나의 service)에서 일반군(troop)으로 격하시켰다. 2006년에는 공군으로 편입시킬 예정으로 병력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전력을 실질적으로 증강시켜 나가고 있다.

둘째, 역내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지상병력을 축소하고 해·공군력을 첨단화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2008년 9월까지의 12,500명의 3단계 부분철수와 관련해 주한미군 부대 및 장비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아파치 헬기 1기 대대 철수하되 잔류하는 2개 대대는 아파치 롱보우 D형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 강력 살상효과를 내는 장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최근 실전배치된 것

은 전자기파 무기(EMP)와 합동직격탄(JDAM) 등이 있다.

러시아 육군은 T-62 전차를 성능 개량하여 실전 배치하고 T-95 전차를 개발하여 2010년 이후 배치할 예정이다. 해군은 핵잠수함 ‘드미트리 돈스코이’(23,000톤)을 2002년 취역시켰고, ‘벨고로드’ 핵잠수함(18,000톤)을 건조하고 있다. 공군은 TU-160 신형 전략폭격기를 4대 추가 도입하여 총 19대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제5세대 전투기 개발에 힘써 2010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AN-70 수송기 160대를 2007년부터 3년간 도입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극동군관구와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재래식 장비의 정비에 향후 6~10년은 경과해야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하급장교 모집이 쉽지 않아 전반적인 전투태세 정비에 시간이 경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석유수출로 얻은 자금이 배정되는 경우 노후장비 교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유럽(프랑스와 독일)로부터 군사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2005년 러시아 SU-30MK3 전투기와 장거리 폭격기 TU-22M3, IL-76 장거리 수송기, IL-78 공중급유기 등을 구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방위계획대강’을 2차례(1995년 및 2005년) 수정·보완하면서 전력의 해외투사능력 확대를 비약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다. AH-64 롱보우 공격헬기 도입, M-270 다연장로켓발사대 도입, 오스미 급 대형 수송함 3척과 공중급유기 4대 보유는 대표적으로 이를 증거하고 있다. 특히, 해군력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막강수준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지스함 콩고급 4척 보유 및 추가 2척 도입예정이다. 15척의 미사이 구축함과 6척의 대형 헬기 탑재 구축함, 오야시오 급 18척의 잠수함, 99기의 P-3C초계

기 등은 증강된 해군력의 주축이다. 북한도 대미 전쟁을 가정하여 살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 미사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를 해오는 한편,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도 살상력 위주로 무기 및 장비를 꾸준히 보강하고 있다. 우선, 대남 휴전선에 접근해 장사정포를 1,000 문정도 배치해 두고 특히 수도권을 겨냥해 240mm 방사포 등 중장거리 야포 400문 이상을 집중배치하고 있다. 보유 탱크의 주축인 T-62를 개량하여 사거리와 기동력을 증대시켰으며, 잠수함을 증강하고 지대공 미사일 SA-2 발사대를 대거 확보하였다. 북한은 전차를 1980년대형 3,100대, 2,000년대형 4,000대, 방사포 및 다연장포 등 야포 1980년대형 7,000문, 2000년대형 15,000문, 전투기 및 폭격기 1980년대형 810대, 2000년대형 85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공중방어체제(KAD)를 SAM, 패트리엇, BM/C4I 체제, 무인항공체제 등의 복합체제로써 구축해 가는 가운데, 장거리 운용이 가능한 F-15K 전투기를 2008년까지 40대 보유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셋째, 중국-대만 양안간 군비증강 경쟁이 심하다.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탈냉전 이후 더욱 높아졌다. 대만의 독립 가능성과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이 각각 원인이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재강화한 배경 일부도 중국과 대만간의 군비증강에 연관된다. 중국은 미사일 400~500기를 대만을 향해 2000년 이후 고정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F-16 전투기 150대를 판매한 바 있고, 그 이후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비공식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배치와 압력에 대응해 2004년 182억

달러의 무기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 미사일사령부를 3군 수준에 창설하고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6기를 구매하기로 각각 결정하였다. 또한 디젤 잠수함 8척, 대잠 헬기 12기도 포함시켜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은 2002년 이후 매년 중국 군사력 동향에 관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르는 위협을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하여 괌 기지의 해공군력과 태평양사령부 항공모함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연관하여, 미국은 중국의 강한 반발과 관계긴장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장비 판매를 ‘대만의 자국 방위노력 지원’임을 강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이 대폭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의 주요 공군력과 해군력의 증강 원천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수출을 계속하여 반대하는 데에 따르는 반사효과이기도하고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패일방적 패권 견제를 합의함에 따르는 공동보조이기도 하다. 중국이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잠수함, 항공모함, 전폭기, 정보체계, 공중급유체제 등이다.²²⁹

(4) 역내 무기수출 경쟁

전 세계국가들의 주요 재래식 무기판매는 2000년 158억 4,000만 달러, 2001년 166억 1,800만 달러, 2002년 156억 9,200만 달러, 2003년 171억 7,800만 달러, 2004년 191억 6,200만 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여 2000~2004년 총계가 844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²²⁹ 전경만,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의 종합적 군비추세, pp. 5~8.

<부록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2004년 기간 중 세계 제1위(32%)의 무기판매국은 러시아로서 2000년 이후 수출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적극적인 무기수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0~2004년 기간 중 제2위(31%)인 미국의 무기판매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00~2004년 기간 중 세계 제3위인 프랑스의 무기판매 63억 5,800만 달러는 약 8%에 불과해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무기수출 국가임을 알 수 있다.²³⁰ 따라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요한 무기수출 국가도 러시아와 미국이다.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해 있는 무기구매국은 중국, 한국, 대만, 일본, 북한이다. 2000~2004년 기간 중 이들 5개국의 무기구매는 170억 3,100만 달러로써(<표 IV-10> 참조) 전 세계무기 구매 844억 9,000만 달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와 미국 및 기타 서방국가들의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2000~2004년 기간 중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 가장 많이 무기수출을 한 국가는 러시아로서 112억 2,800만 달러를 기록해 총액의 66%를 차지하였다. 러시아는 역내 무기수출의 99%를 중국, 1%를 한국에 수출하였다,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제2위의 무기수출 국가는 미국이고 같은 기간 중 41억 9,500만 달러 상당을 판매해 25%를 차지하였다. 다음 순위는 프랑스 3%, 우크라이나 2.4%, 독일 1.5%, 영국 0.9%, 이스라엘 0.4% 등이다.

²³⁰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453~454 참조.

무기구매의 면에서, 중국은 역내 국가들 중 최대의 수입국으로 러시아로부터 95%, 우크라이나로부터 3.5% 등을 구매하였다. 한국은 역내 제2위 무기수입국으로 미국으로부터 61%를 구매하였고 그 외에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으로 무기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역내 제3위 무기수입국인 대만과 4위인 일본은 대부분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표 IV-10> 동북아 역내에 대한 무기수출 현황(2000~2004)

(단위: 백만 달러)

수출국 구매국	수출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기타	총액
중국	11,112	-	33	-	-	409	36	87	11,677
한국	116	1,680	400	253	150	-	19	137	2,755
대만	-	1,562	-	-	-	-	9	-	1,571
일본	-	953	6	-	-	-	-	13	972 (975)*
총액	11,228 (66%)	4,195 (25%)	439 (3%)	253 (1.5%)	150 (0.9%)	409 (2.4%)	64 (0.4%)	237 (1.4%)	16,975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20 참조.

*: 원자료 수치

(5) 역내 갈등과 분쟁

한국국방연구원의 ‘세계분쟁자료’에 의하면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전 세계에서야의 분쟁은 매년 83~97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IV-11> 참조).

<표 IV-11> 1989~2002 분쟁의 단계별-연도별 추이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진행분쟁	81	84	91	96	97	94	93	94	86	84	83	83	84	84	
총 틀 분 쟁	소계	26	35	37	40	41	46	35	33	34	42	45	40	36	34
	A급	6	9	6	10	7	7	5	3	5	5	7	5	4	1
	B급	11	11	11	10	16	16	11	11	10	15	12	9	6	8
	C급	6	10	13	12	7	13	10	10	11	13	10	10	17	17
	D급	3	5	7	8	11	10	9	9	8	9	16	12	9	8
대립분쟁	41	35	41	41	41	33	40	41	36	28	25	28	33	35	
잠재분쟁	14	14	13	15	15	15	18	20	16	14	13	15	15	15	

출처: <<http://www.kida.re.kr>>.

2003년 현재 전 세계의 분쟁 총 건수는 101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 분쟁이 84건, 종료된 분쟁이 17건이다. 101건 중 아시아 지역에서의 분쟁은 20건으로 진행 중인 분쟁이 19건, 종료된 분쟁이 1건으로 조사되어 있다. 진행 중인 분쟁 19건은 네팔 내분, 인도네시아 분리운동, 카슈미르 분쟁, 미국·아프간 전쟁, 아프가니스탄 내전, 필리핀 내전, 인도 분리운동, 미얀마 분쟁, 스리랑카 내전, 남북한 대립, 방글라데시 내분, 남사군도 분쟁, 북방영토/남쿠릴 영유권분쟁, 서사군도 분쟁,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국·대만 대립, 중국·인도 국경분쟁, 캄보디아 내전, 티베트 독립운동이다. 종료된 분쟁 1건은 1997년의 국경획정으로 해결된 중·러 국경분쟁이다.

이 중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동북아 7개국 중 2개국 이상이 당사자 및 개입자로 포함된 갈등과 분쟁은 5건(남북한대립, 중·대만 대립, 북방영토/남쿠릴 영유권분쟁,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러 국경분쟁)이다(<표 IV-12> 참조).

<표 IV-12> 갈등과 분쟁 현황

(2003년 현재)

	총 건수	진행중인 분쟁	종료된 분쟁
세계의 분쟁	101	84	17
아시아 지역 분쟁	20	19	1
동북아시아 분쟁	5	4	1

동북아시아의 5개 갈등과 분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의 대립>

1945년 8월 일본의 2차대전 항복직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 미군과 소련군이 진입 이후 서로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한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냉전 전체 기간 중 각각 미·소 동맹 하에서 전 분야에 걸쳐 체제경쟁을 지속하였다. 탈냉전기 북한은 소련의 와해와 국제공산주의의 몰락 등으로 인해 외부의 경제, 외교, 군사 지원이 크게 감소 혹은 소멸된 상황에서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 및 에너지, 외환, 식량부족으로 체제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경제, 외교, 이념분야에서 북한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북한의 군사력 전진배치, 핵·미사일 위협, 지리적 이점 등과 같은 군사분야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해 있다. 특히, 1996년 9월과 1998년 6월의 잠수정 침투사건, 1998년 8월 미사일 발사 및 1999년 6월 서해교전 등 북한은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남 무력도발을 지속하였다. 단·중기적으로 분쟁의 종료 전망은 기대하기 곤란하였다. 그러나 2000년 6월 최

초의 남북정상회담 이래 이산가족상봉,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001년 이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지연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남북 대화와 경제·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측면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2002년 6월 서해교전 재발과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 등으로 인해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부록 IV-5 참조).²³¹

<중·대만 대립>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은 1911년 신해혁명 계승자로서의 중화민국(국민당)과 1949년 중국을 대표하는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간의 체제 정통성 문제 및 경제, 외교, 문화, 군사를 포괄하는 전 분야적 대립이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이후 1946년 7월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 대만으로 이전하였다. 장개석과 장경국 총통 집권시(1949~88년) 본토수복 및 통일이 국시이었다. 1991년 이후 대만은 본토수복의 포기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1개성으로 간주, 국제적 지위를 불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에는 경제·문화적 차원의 교류가 증가되어 실질적으로는 분단의 의미가 감소되고 있으나, 대만의 국제지위 강화 노력과 대만내 독립 움직임은 양국간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986년 창당된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당의 주류도 이등휘 전 총통하의 대만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만의 민주화 및 독립의 분위기는 향후 확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도 높다. 1996년 3월

²³¹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대만해협에서 전개된 군사긴장은 중국과 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질서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³² 동 문제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이거나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1997. 7) 및 마카오(1999. 12)의 중국 반환으로 중·대만 통일 압력이 고조되었다. 2000년 3월 대만총통에 독립지향적인 야당후보 첸수이비엔이 당선된 이래 양안관계가 경색화 되었으나, 최근 완화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군비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정경분리노선에 따라 교류관계는 증진되는 추세이다. 중국은 대만·미국관계의 진전을 주시하면서 하나의 중국정책에 반하는 대만독립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대만은 대중국 교류협력관계(직접통항·통상·통신 등 소3통)를 계속하면서도 중국의 군사위협에는 상응한 방위력 개선(무기개발·도입, 방어훈련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부록 표 IV-6 참조).²³³

<북방영토/남쿠릴 분쟁>

동 분쟁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쿠릴열도 20개 도서중 최남단의 2개섬(에토로후, 쿠나시리)과 홋카이도 북쪽의 2개섬(하보마이, 시코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유권 분쟁이다. 2차대전 참전조건으로 소련은 남사할린의 반환과 쿠릴열도의 양도를 보장받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러시아의 구영토(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와는 별

²³² 여인근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10), pp 24~25

²³³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개인 하보마이, 시코탄을 차지하게 되어 영토분쟁이 발생하였다.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후 일·러관계가 개선되었고, 1993년 10월 『도쿄선언』에서 러시아는 북방도서 영유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 인정하였다.

동 문제는 1997년 11월과 1998년 4월 일·러 정상회담시 양국 최대현안인 평화협정 체결과 연계되어 거론되고 있으나, 극동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러정부의 통제 필요성, 동 도서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타결전망이 불투명하다. 2000년 9월 러시아 신임대통령 푸틴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평화조약 체결과 남쿠릴문제의 해결 등이 기대되었으나 협상은 교착상태이다. 2001년 들어서도 두 차례의 양국 정상 회동에서 주요 외교의제로 거론되었으나 경협 필요성과 국내정치적 고려를 동시에 충족시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00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2개 도서 반환과 2개 도서 평화협정 체결후 추가 협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대규모 경협을 내세워 ‘4개 도서 모두 반환 이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부록 표 IV-7).²³⁴ 이와 같은 양국간 이견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센카쿠/조어도 분쟁>

동중국해상 조어도 등 8개 무인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중국·대만 간 분쟁이 있다. 동 지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시 일본으로

²³⁴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고이즈미, ‘러시아, 북방섬 4개 모두 반환해야,’” 연합뉴스, 2004년 11월 17일.

부터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1972년 5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 시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어 이후 일본의 관할 하에 있으나,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78년 등소평 방일시 중국은 조어도열도 영유권 분쟁을 덮어두고 후대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영유권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고 잠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국력이 신장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양국의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양국은 해양권의 확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조어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을 배가하였다. 특히 일본내 보수 우익세력의 등장과 중국내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애국주의화 추세는 양국으로 하여금 국가주권 문제에 대해 타협적 태도를 갖기 어렵게 하고 있다. 1996년 7월 일본의 우익단체가 조어도 열도에 등대를 설치한 이후 양국은 영토주권 문제, 인근 해역에서의 조업, 통항문제, 군사 훈련 등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2년 12월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의 1994년 11월 정식 발효 이후 해양자원의 중요성, 전략적 고려 및 타 지역분쟁 해결과 관련되어 있어, 해결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다. 중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은 동 문제를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부록 표 IV-8).²³⁵

<중·러 국경분쟁>

중·소/러 국경분쟁은 중·소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중국

²³⁵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 체제 조성방안, pp. 27~28.

이 소련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전략적 삼각관계에 참여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추진이후 1980년대 초부터 소련과 국경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 특히 냉전종식 이후 중·러·중앙아시아 3국들은 1991년 「동부국경선협정」과 1994년 「서부국경선협정」 및 1996년 「상하이협정」 등을 통해 국경선을 획정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러시아와 4,355km(동부 4,300km, 서부 55km), 카자흐스탄과 1,533km, 키르기스스탄과 858km, 타지키스탄과 414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1997년 4월 5개국 간 서명된 「국경지역 군사력 상호감축협정」은 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다자간 군축협상으로서 지역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역내 영토·영해 분쟁의 해결에도 귀중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중·러 및 중앙아시아 3국 간 국경분쟁의 극적인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3국의 국력약화로 인한 자원부족으로 판단된다. 1997년 11월 옐친 대통령의 방중시 동부 국경문제를 사실상 타결지었다. 미해결로 남아있던 아무르강과 아르군강에 있는 3개 섬에 대한 통제권 문제는 2004년 10월 14일 중·러 양국 국경협정에서 완전 해결되었다. 중국은 타라바로프(Tarabarov) 섬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고, 양국은 불쇼이섬과 불쇼이우수리스크 섬을 분할지배하기로 합의하였다(부록 표 IV-9).²³⁶

²³⁶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Sino-Soviet border conflict” <http://en.wikipedia.org/wiki/Sino-Soviet_border_conflict>.

다. 소결

안보분야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에는 다자안보대화, WMD 확산방지, 국제테러 등의 사안에서 대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역내에는 국가간 군비증강과 무기수출 경쟁, 국가주권과 영토 분쟁 등의 대립과 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 ARF, CSCAP, NEACD를 통한 다자안보대화는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안보 문제의 토론기구로서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실천력 부족, 핵심 안보현안의 회피 등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는 미국과 북한의 소극적 입장으로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WMD 확산방지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있다. 핵강국 미·러는 핵감축협정(START-I/II)에 의해 2007년까지 3,800개, 2012년까지 1,700~2,200 개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WMD 확산방지를 주요한 안보정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2005년 현재 가장 우려되는 안보현안인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연속 개최하고 있다.

국제테러는 2001년 9·11테러와 2003년 이라크전을 계기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주요 조직들은 대부분 유럽과 중동지역에 편중해 있고 동북아지역에서는 일본 적군파(JRA: Japanese Red Army)가 2002년 말까지 활동하였다. 국제테러와 관련,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테러방지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있다.

역내의 군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월등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도서영유권 갈등, 해저자원 개발 경쟁, 대만문제 등 전통적 안보문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MD체제 개발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고 있어 이들 두 국가로 하여금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2000~2004년 역내 국가들의 무기구매(170억 3,100만 달러)는 전 세계 무기구매의 20%에 달한다. 역내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 비율은 러시아 66%, 미국 25%, 프랑스 3%, 우크라이나 2.4%, 독일 1.5%, 영국 0.9%, 이스라엘 0.4% 등이다.

역내의 주요 갈등과 분쟁에는 남북한 대립, 중·대만 대립, 북방영토 분쟁, 센카쿠·조어도 분쟁, 중·러 국경분쟁 등이 있다. 중·러 국경분쟁만이 1997년 동부국경 문제의 타결과 2004년 국경협정으로 완전 해결되었고, 나머지 네 문제들은 관련 국가들의 심각한 이견과 정책 대립 등으로 역내 안보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3. 정치분야

가. 국가 정상들간 접촉

현재 동북아시아에는 한·중·일·러·북·몽·미 7개국만을 포함한 정례적인 정치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의 정상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동북아국가간 정상들 간의 접촉방식은 양자, 3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가별로 양자간 및 다자간 정상회담의 횟수도 상이하다.

그러나 1990년대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국가들 사이의 정상회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1990년과 1992년 각각 한·러, 한·중관계 정상화를 계기로 해서, 양자간 정상회담의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 2000년 북한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일본도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 한·러관계가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면서 한·러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합의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과 일본은 연 2회에 걸친 정상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기로 하는 등 점차 양국간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등은 여전히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북아지역 국가간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정상회담은 지역적 협력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ASEAN+3, APEC 정상회담 등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체의 연례회의 참석을 계기로 해서 동북아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ASEAN+3를 계기로 실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해를 거듭하면서 3국간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와 연계된 형태의 정상회의이며, 중국측은 최고 실력자가 아닌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정상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ASEAN+3와 연계

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는 북한, 러시아, 몽골 등 여타 동북아국가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²³⁷ 또한 다른 지역 레짐의 회담에 참석하는 국가들 역시 한·중·일·러·미에 한 정되어 북한, 몽골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005년 12월 개최 예정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는 동북아의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동북아 7개국만의 회의가 아니며, 7개국이 모두 포함되는 회담은 아니지만, 참여국가의 확대를 고려할 때 앞으로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주체가 ASEAN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회의가 동북아의 문제를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고 역내 협력과 관련해서 정치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사회·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동북아국가 정상회의가 필요하다.

나. 정치엘리트 및 고위관료들의 접촉

동북아국가들 간의 정상회담이 비정기적이고 공식적인 기구 없이 행해지고 있지만, 정치엘리트 및 고위관료들의 회합은 그것 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더 많은 횟수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정치엘리트나 고위관료의 경우에도 동북아 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모임이나 회의도 역

²³⁷ 배궁찬, 동북아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동북아시아”구상을 중심으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4), p. 27.

시 부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의 경우 보다 기회가 많고 그 만큼 빈도도 높다.

양자접촉의 경우, 양국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당 지도자들 등이 상호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의원외교는 정부차원의 외교가 담당할 수 없는 미묘한 현안 및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 역할을 한다.²³⁸ 공개적 입장 표명이 제약된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자유로이 의사표명과 협상을 함으로써 미묘한 외교현안 및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원외교는 정부외교를 측면지원하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자국의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의 상호교류의 증가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논의하지 못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들은 외국의 의회 관련 인사를 초청하고, 국회의장단, 의원친선협회단, 의원외교협회단, 위원회시찰단, 특별대표단의 형태로 외국의 의회를 방문하며, 국제의원연맹(IPU),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맹(APPU),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아세안의회기구(AIPO),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IPAAF)을 비롯한 각종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또한 동북아에서 양국간 외무장관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관료급 회담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의관료급 회담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간의 정치적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정상회담의 토대를 닦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2년 12월 중국

²³⁸ 정종욱, 의원외교활동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서울: 국회사무처, 1989).

과 러시아는 총리 정례회담 협정의정서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총리회담을 갖고 있다.

한편, 다자접촉의 경우,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지역차원의 협력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회의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ASEAN 확대외무장관회담(ASEAN-PMC), ARF 외무장관회담이다. 1978년 ASEAN과 일본 간 개최된 양측 외무장관 회의를 효시로 1979년 이후 정례화된 ASEAN-PMC는 매년 연례 외무장관 회의(AMM) 직후 개최된다. ASEAN-PMC에는 회원국 및 역외 대화 상대국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와 회원국과 개별 대화 상대국간 개별 회의가 있다. 전체 회의에서는 국제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가 이루어지고, 개별 회의에서는 ASEAN과 각 대화 상대국과의 쌍무 관계가 논의된다. 그리고 ASEAN은 PMC와는 별도로 개별 대화 대상국들과 다양한 명칭(dialogue, forum, joint cooperation committee 등)의 협의회를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PMC의 틀을 활용하여, ASEAN과 역외국가들간 정치, 안보대화를 증진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리고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8개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아·태지역 정치 및 안보 협력문제에 대한 협의체를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ARF가 1994년 태국에서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이후 1998년에 몽골이, 2000년 7차 외무장관회의에 북한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국가의 외무장관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ASEAN 확대 외무장관회의(PMC)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994년 창설 이후 ARF 외무장관회담도 확대외무장관회의 직전

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외무장관회의에 앞서 회원국 고위관리들이 회동하여 외무장관회의 준비 및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는 고위관리회의(SOM)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처럼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동북아국가들 사이의 외무장관들과 고위급관료들이 모여서 지역정세·안보문제에 대해 협의를 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협력을 향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협력기구를 매개체로 하는 것이 아닌 동북아국가들 사이의 외무장관회담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이다. 2004년 6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아시아협력대화(ACD) 외무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외무장관이 3국 외무장관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외무장관회담은 2004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때 합의한 3자위원회 개최에 따른 것으로, 외무장관들이 3자위 수석대표로서 각국을 돌며 매년 한차례 이상 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한·중·일정상회담과 한·중·일 외무장관회담의 정례화는 동북아 핵심 국가들의 일종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는 영토분쟁, 역사해석의 차이, 강대국의 이권다툼, 이념경쟁 등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회의나 모임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엘리트와 고위급 관료들의 접촉은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국가의 정치엘리트와 관료 수준에서의 회의나 모임들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지역레짐의 종류 및 역할

(1)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동남아 10개국과 동북아 한·중·일 3국 총 13개 국가의 정상 회의는 1997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ASEAN과 긴밀한 정치·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중·일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 정상을 최초로 동시 초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98년 12월 하노이 제2차 ASEAN+3 정상회의 때 동남아 금융위기가 동북아로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아세안+3 회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9년 11월 제3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이 회의의 정례화가 합의되고,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분야별 역내 협력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었다. 이후 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외무, 경제, 재무장관 회담을 비롯한 농업 및 노동장관 회담이 정례화되었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일본의 모리 총리가 파트너십의 구축, 열린 지역협력, 정치·안전보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화와 협력이라는 3원칙을 제안하여 지지를 받았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비전그룹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다음단계로 동아시아 협력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관계자 중심의 ‘동아시아연구그룹’(EASG)의 설립을 제안하여 지지를 이끌어냈다.

2001년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하여-평화·번영·진보의 지역』이라는 제목의 동아시아 비전

그룹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환경·문화·에너지·교육·정치·안보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2003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협력을 강조하고 테러 등 안보위협에 대한 공조체제를 확립할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2004년 회의에서는 북핵문제와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언급되었다.

<표 IV-13> ASEAN+3 정상회의 역대 회의의 주요 결과

		내 용
제1차	1997. 12 쿠알라룸푸르	- 통화문제에 대한 지역의 과제 논의 - 아세안측, 향후 한·중·일 정상 초청 정례화 희망
제2차	1998. 12 하노이	- 동아시아 경제재건 논의 - 김대통령 제안으로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설치
제3차	1999. 11 마닐라	- 동아시아 협력 문제 -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제4차	2000. 11 싱가포르	- 동아시아의 일체화를 위한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행검토 - 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G) 설립 합의
제5차	2001. 11 브루나이	- EAVG 보고서 제출 및 EASG 활동 개시 - 동아시아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 검토
제6차	2002. 11 프놈펜	- EASG 보고서 제출 - 17개 단기, 9개 중장기 협력 사업 발굴
제7차	2003. 10 자카르타	- 동아시아 협력 강조 -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식화(공동성명발표) - 테러 등 안보위협에 대한 공조체제 확립 필요성 언급
제8차	2004. 11 라오스	-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 강화 - 한·중·일의 대아세안 및 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이와 같이 초기에 경제적 영역에서 시작된 ASEAN+3 정상회의는 사회·문화, 정치·안보 문제까지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다만 여전히 그 영역이 작다는 점이 문제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비전그룹의 보고서에서도 정치·안보의 협력부분은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개최라는 정도에 한정되었다. 또한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모호성도 문제점이다.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ASEAN+3 정상회의는 여전히 동남아 국가가 중심이 되는 회의이다.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여 지역차원의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동남아 국가들과 한·중·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성과일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인 러시아, 북한, 그리고 미국의 참여하지 않는 한 지역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2) 한·중·일 정상회의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이 한·중·일 3국 정상간 비공식 조찬회동을 제의함으로써 한·중·일 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한·중·일 각국은 조찬회의에서 한·중·일 정상 조찬회동의 정례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對ASEAN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정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은 동북아 화해·공동번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주변 환경 관리 차원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동감했다. 그러나 중국은 조찬회동시 의제를 경제문제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분주한 정상 일정 등을 이유로 정례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2000년 11월 제2차 한·중·일 정상 조찬회동시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재차 제의하고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를 수용함으로써 정례화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 후 2002

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제4차 회의부터는 조찬 형식에서 벗어나 한·중·일 정상간 공식회의가 개최되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역사적 골이 깊은 세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 동북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비록 초기에 중국이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해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하고자 했고 비공식적인 회담이기는 하였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중·일의 화해와 긴장완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어왔다.

199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경제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데, 그 후 2, 3차 회의가 진행되면서 환경, IT, 관광, 문화 등 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제4차 회의부터는 조찬 형식에서 벗어나 공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 2003년 제5차 회의에서는 3국간 외교·안보,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의 포괄적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3국간 협력 공동선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한·중·일 정상은 3국간 협력심화가 세 나라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은 3국 협력이 동아시아의 협력 강화,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하고, 3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선언상의 협력을 연구·기획·조정하며,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연례 정상회의시 제출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라오스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논의되었다.

<표 IV-14>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

		내용
제1차	1999. 11 마닐라	- 중국측 입장을 수용, 경제문제만 협의 : 각국 경제동향 설명과 평가, 상호 경제협력, 중국의 WTO 가입 문제 등 - 한국측 제안 사업(3국 국책 연구소간 경제협력 공동연구)추진 합의
제2차	2000. 11 싱가포르	- 5개 사항 합의 :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 경제협력 공동연구 구체화,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IT협력, 환경 협력
제3차	2001. 11 브루나이	- 3국간 협력사업 이행문제 협의 위한 경제장관 및 외무장관 회의 신설 - 기업인 비즈니스포럼 창설 등 민·관 대화채널 구축, 동아시아 협력제도화
제4차	2002. 11 프놈펜	- 조찬 형식의 회의에서 벗어나 공식회의로 개최, 한·중·일 협력 의지 부각 - 한·중·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공동연구 추진 합의 : 3국간 비즈니스포럼 개최 노력, 3국간 기업인 비자 발급 간소화, 스포츠 교류 활성화, 지식 교류 연구센터 설립, 관광인프라 공동개발 등 논의
제5차	2003. 10 발리	- 3국간 외교·안보, 경제·문화 등 제분야의 포괄적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한 3국간 협력 공동선언 채택 ① 안보대화 강화와 국방·군사 분야 인사고류·협력 확대 ② WMD 확산 방지 및 군축 문제 협력 강화 ③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 ④ 3국간 쉬운 사업부터 실질협력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 ※ 무역·정보통신·환경·에너지·금융·과학·관광·문화 등
제6차	2004. 11 라오스	동아시아 협력문제, 3국간 투자협정 연구 등 지역현안 논의 6자회담 조기개최 등 북핵문제 해법 논의

라.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

(1) 정치체제와 민주화 정도의 상이성

동북아시아의 정치협력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역내 국가간 정치와 경제의 발전 정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미 연합군의 영향력 하에 있던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를 수용한 반면, 소련의 영향을 받은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택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냉전은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

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지속되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안보우산과 자본·기술 및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소련체제가 붕괴된 후 러시아는 시장개혁과 정치개혁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개혁적 사회주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일당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차이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평화를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민주화 수준의 상이함이 정치협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마이클 도일은 칸트의 평화론을 원용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평화적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의 수준이 상이하다면 국제적 평화가 정착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대표성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민주화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간한 *Freedom in the World 2005* 에 따르면, 동북아시아는 정치권리와 시민자유 등급이 1등급인 미국부터 7등급으로 하위등급을 가진 북한까지 다양한 등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 표 III-46 참고).

(2) 시민사회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관련해서 시민사회 영역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지역과 같이 국가의 역할이 강하고 국가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는 국가간 장벽을 뛰어넘어 공동의제에 대한 공감대와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시민사회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발전해왔고, 발전정도도 매우 다르며, 각국의 주요 관심 의제도 다르다. 이것은 시민사회 수준에서도 동북아지역협력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북아에서는 시민사회의 공동활동 경험이 적고, 공통의 언어가 부재하며,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²³⁹

가장 중요한 점은 동북아 시민사회의 활동범위와 의제 설정 방식이 여전히 국가 중심적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의 이념적 규정력이 여전히 강력하며 국가가 시민사회를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낮다. 북한의 경우 획일화된 중앙집권체제에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역할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북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국가간 정치적·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시민사회도 국내적 의제에서 벗어나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

²³⁹ 이희옥,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344~346.

올이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80년대 후반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90년대에 들어서 보다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의 외국의 NGO들과 연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 1990년대 말부터 동북아의 주요 NGO들이 한국의 시민사회를 배우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향후 동북아에서 국경을 따라 설정된 주권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개별국가의 민주화와 초국가적 민주화를 증진시켜 각국의 정치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 동북아질서의 역사적 성격

21세기에 세계적으로 탈냉전과 탈 국민국가주의가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여전히 국민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말 이후 20세기까지 동북아국가들이 근대국가 형성과 근대적 국제체제 형성에 실패한 뒤 분절과 단절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국가간 상호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 규범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일어났던 세계사의 대사건들은 거의 모두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지역은 1894년부터 1975년까지 8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승리하자, 일본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동북아시아로 지배력을 확대하여 먼저 조선을 합병했다. 또한 일본은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을 건설하고, 그를 통해 중국으로 침략을 확대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는 현재까지 한·중·일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역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가 된 러시아는 몽골로 공산주의를 수출했으며, 코민테른을 조직하여 중국으로 공산주의를 확대하고자 했다. 2차 대전 후 중국이 공산화되었고, 북한 역시 공산화되었다. 냉전시대에 동북아시아는 미국을 필두로 하는 일본, 한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 몽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분리되어 단일 지역국가체제로 기능하지 못한 채 대립과 갈등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며 아시아 전 지역으로 세력확대를 도모했던 일본은 2차 대전에 패망하여 『평화헌법』에 따라 외교·국방권이 제약되는 비정상국가가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전후 외교정책의 기초를 경제를 제 1순위로 하는 ‘요시다노선’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비정상적인 국가 양상은 지역협력에 대해 일본으로 하여금 소극적 입장을 취하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형성된 동북아지역의 대립과 갈등은 탈냉전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21세기에 중국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외교력과 국방력을 보유하는 중국식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본도 경제력에 상응하는 외교력·국방력을 보유하는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및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세는 동북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두 국가 사이의 지도력 다툼과 군비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통해 동북아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요인

들이 중첩적으로 교차함으로써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9세기적 전 근대적 요인이 잔존하고, 20세기적 강대국간 대립질서와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21세기적 탈근대 질서와 다차원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바. 소결

동북아시아의 정치 분야의 인프라를 살펴본 결과, 동북아 협력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정상들 간이나 정치엘리트들간의 접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횡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정기적이고 개별사안적이며 양자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인프라의 측면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정치협력의 제도화이다.

동북아시아는 정치협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각 국가들의 공통된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 중국, 한국은 비슷한 문화적·역사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근대화시기부터 이들과는 역사적 과정을 밟아왔다. 또한 미국의 역내 국가 포함여부가 논란거리일 정도로 미국은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유럽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이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는 유럽연합과 같은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아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중·일 간의 역사 해석의 차이도 커서 삼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공동의 역사인식의 부재와 더불어, 각 국가들은 정치체제와 경제수준이 상이한 점도 동북아 정치협력의 제약요인

이다. 동북아지역에는 사회주의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공존하고 있으며, 세계 제 1, 2 위의 경제대국과 최악의 경제상황에 처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역내 정치협력을 하는데 있어서 상호 불신을 높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북아지역에는 냉전과 탈냉전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족의 개념이 중시되고, 국가의 힘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강한 국가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지역차원의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경제적·사회적·기술적·인도적 분야의 협력이 활발하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에도 불구하고 국가들간 정치협력의 제도화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이룩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의 지속성이다. 지속적인 동북아국가들 간의 정치적 상호교류를 통해서 갈등과 불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ASEAN+3, 한·중·일 정상회의 등과 같은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치엘리트들이나 고위관료들의 접촉과 의원들의 접촉도 공통관심을 논의하는 창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4. 문화분야

본 연구가 규정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남북한,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몽골이며, 기능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 간의 동북아지역 협력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려

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 분야의 인프라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경제, 안보 인프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문화교류협력의 인프라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문화교류의 대상으로서 동북아지역의 범주와 문화교류의 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위한 문화교류는 동북아지역의 문화적 획일화나 동질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 가치, 제도, 관행들을 가진 국가들 간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소통되고 이해되는 차원의 교류이기 때문이다.²⁴⁰ 즉, 어느 일방의 문화가 타방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강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의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다른 나라가 요구하는 문화적 수요를 감안하고 배려하는 쌍방향적 성숙도 높은 차원의 문화교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을 문화교류의 수행을 위한 기능적 개념으로 규정할 경우, 그 범위는 좁으면 좁을수록 기능적이고 효과적이다. 즉 협의의 지리적 공간개념으로 동북아지역을 제한할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이 국가단위별로 소속된다.²⁴¹

또한 일반적이고 광의의 문화교류의 내용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의 정치, 경제, 안보 이외의 모든 교류가 해당되나, 동북아지역의 협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가 앞에서 제시한 지역차원의 문화범주 지표를 고려하면 다음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즉, 동북아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공식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화교류협력의 제도화 여부와 문화관련 인적교류 및 주

²⁴⁰ 최송화,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pp. 35~37.

²⁴¹ 문화관광부,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중기 계획 (서울: 문화관광부정책보고서, 2004), p. 2.

체별, 사업별 교류현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을 중심으로 한 앞의 3가지 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문화 인프라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만, 동일한 수준의 통계자료 활용 및 중장기적인 정부정책 수립 및 대안제시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의 지표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가. 문화협력의 제도화 실태

(1) 다자간 제도화 실태

동북아국가 간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 수준은 거의 전무하거나 낮은 단계에 처해 있다. 특히 각국이 자국 문화와 정체성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닌 동북아지역을 포함하는 순수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다자간 제도와 기구는 동북아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동북아국가 간의 지리적, 역사적 공유감이 느슨하고 문화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경우는 지리적, 역사적 공감대와 한자문화권, 유가문화권 등의 문화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근대 이후의 상이한 역사로 인한 단절과 민족적 반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수준은 낮다.

다만, 동북아지역을 넘어선 세계적 차원의 문화관련 국제기구와 문화 분야를 넘어선 정치·경제 목적의 다자간 기구 내에서 동북아국가 간의 문화교류협력을 논의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물론 세계적인 범주에서도 신자유주의의 문화개방 압력에 대한 대응과 정치적, 산업적 목적의 문화교류에 대한 경계 등으로 순수 문화차원의 제도

화 수준은 높지 않다. 47국 문화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존을 위한 ‘세계문화협약’을 준비하는 회의인 INCP(International Network on Cultural Policy) 정도가 대표적이다. 비록 문화교류 및 협력만을 위한 기구는 아니지만, ASEAN+한·중·일(10+3)회의에서는 동북아지역을 포괄하는 문화교류 및 협력에 관한 논의를 시도해왔다. 구체적인 예로 1998년 10+3회의에서 한·중·일과 아세안의 관광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2005년 5월에는 강원도 속초에서 제7차 ASEAN+3NTO(아세안+한·중·일 관광공사)회의가 개최되어 아세안 국가와 함께 한·중·일의 관광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있다.²⁴²

이와 함께 한·중·일 3국간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화 시도도 최근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2년 한국의 문광부와 중국문화부 그리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문화콘텐츠 산업포럼 개최협정을 맺은 사례와 2003년 한·중·일 3국간 상호공통의 이해 속에서 개방 압력이 아닌 문화의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한 아시아문화관광장관회의를 거론할 수 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는 이들 3국간의 이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 3국간에 관광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2004년 3월 한·중·일 3국의 관광공사(NTO)가 공동마케팅을 진행한 바 있고, 2004년 4월에는 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²⁴² 문화관광부, 2005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2005), pp. 9~11.

(2) 양자간 제도화 실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배경 중에 하나는 역내 양자간 제도화 수준이 높지 않은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2005년 2월 현재 세계 총 89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본 연구가 규정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 미국, 북한과는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표 IV-15>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과 동북아국가와의 문화협정 체결현황을 보면, 한국은 1965년 6월에 일본, 1991년 3월에 몽골, 1992년 11월에 러시아, 1994년 3월에 중국과 차례로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²⁴³ 이처럼 일본을 제외하고 1990년대 이후에서야 양자간 문화협정이 체결된 관계로 양자간 교류협력의 역사가 깊지는 않으나, 다자간 제도화 수준보다는 높은 편이다.

<표 IV-15> 한국과 동북아국가와의 문화협정 체결 현황

(2005년 2월, 현재)

국명	서명	발효
일본	1965. 6. 22	1965. 12. 18
몽골	1991. 3. 25	1991. 4. 30
러시아	1992. 11. 19	1992. 12. 19
중국	1994. 3. 28	1994. 4. 27
홍콩	2004. 8. 24	2004. 8. 25
대만(폐기)	1965. 5. 15	1966. 10. 17

출처: 문화관광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양자간 제도화 실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은 인적

²⁴³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검색일: 2005. 9. 16).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먼저, 한국과 중국의 교류협력 현황을 보면,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전부터 교류를 시작했다. 즉, 1989년 중국의 위해와 한국의 인천간 카페리 직항로가 개설되었으며, 1991년 상호대표부를 설치하여 비자발급업무를 도모하기도 했다. 한·중수교 이후 한·중 양국의 협력은 확대되었는데, 1993년 5월 한·중 해운협정, 1994년 10월 한·중 항공협정 등을 체결하였고 1995년 7월에 제1차 한·중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4년 4월에 한국인의 중국여행을 전면 자유화 시켰고, 중국도 1998년 5월 한국을 9개 성(省), 시(市) 중국인의 해외여행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0년 6월 한·중 관광교류 합의각서를 통해 전 지역 중국인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양국민의 상호방문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각기 상대국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북경지사(1995. 3)에 이어 2002년 8월에 상해지사를 설치하였고, 중국은 2003년 8월에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2002년에는 주룽지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하였고, 2004년 7월에는 북경에서 한·중 우호문화관광 대축제를 개최하는 등 양국간의 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은 1986년 제1차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면서 양국간의 항공노선 증편, 1994년 한국방문의 해, 관광부문 Y2K 관련 정보 공유,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및 2002 월드컵 축구대회 공동개최 등을 계기로 삼아 문화교류 및 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1998년 10월에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부속서인 행동계획의 5개 협력분야 중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협력 기본 원칙을 서술하여 구체적 협력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확대, 외국인 여행자확대를 위한 캠페인, 한·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에 의한 교원 초청사업, 스포츠 교류사업, 한국어·일본어 상호학습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특히, 2003년 6월에 양국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우정의 해’ 및 ‘한·일 공동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관광교류 및 협력도 강화되었는데, 일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대상 지역을 2003년 9월부터 기존의 북경, 상해, 광둥성 등 3개 지역에서 3개 도시, 5개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중국의 초·중·고생의 일본 수학여행시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도 2003년 9월부터 일본인에 대한 단기비자 면제조치를 실시하여 양국의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과 협조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2004년을 중·일교류의 해로 정하고 정부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 한·중·일간의 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중국은 1995년 7월 한·중간 체결된 교육교류약정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다음의 사항을 약정하였다. 매년 6명 내외의 정부대표단 교류, 40명 이내의 유학생 상호 파견, 5명 이내의 교수 및 전문가 초청(10일간), 학술자료 상호교환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장려, 언어교사(수) 초빙, 언어능력시험(KPT, HSK) 실시 등이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은 1965년 체결한 문화협정에 기초해 교육분야에서 오랜 동안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1989년 양국은 청소년 교류확대를 위해 ‘한·일 학술문화 청소년 교류사업’을 발족시켰으며,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자 1993년에 이 사업을 상당기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1995년부터는 평화우호교류계획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의 역사, 양국의 관계사, 기타 한반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시 발표된 한·일공동선언에서는 한국 유학생의 파견 공동실시, 향후 10년 동안 1만 명 목표의 중고생 교류 사업 실시, 1999년 4월부터 워킹 홀리데이 제도 실시 등을 합의하였다.

셋째, 청소년 교류협력에 관한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동북아국가간 청소년 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부처간 약정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상호합의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국의 청소년기관, 단체,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와의 친선교류회, 민박, 문화센터 역사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체험한다. 문화관광부의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국가와의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현황 및 직접 주관한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은 <부록 표 IV-11>과 같다.

<부록 표 IV-11>에서 보듯이, 한·일 청소년 교류는 198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후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1,119명으로 가장 많다. 한·중간의 청소년 교류는 1992년 8월 수교 이후 199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 한·중 양국간 청소년 교류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매년 20명씩 10일간 2회로 확대했다. 한국의 문화관광부와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가 주관하며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771명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러간 청소년 교류는 1994년 양국 정상간에 청소년 교류에 합의하고 1995년에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199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러시아 경제사정의 악화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2001년부터 재개되었다. 2004년까지 양국간의 교류인원은 총 134명이다. 한·몽간 청소년 교류는 2000년 2월 몽골 보건복지부 차관이 방한하여 양국간 청소년 교류를 합의해 최초로 실시되었다. 2001년 양국간 청소년 교류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2004년까지 교류인원은 108명으로 역사에 비해 활발히 유지되고 있다.²⁴⁴ 이외에 한·일양국은 2002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 공동 미래프로젝트를 제의함에 따라 양국 청소년 각 500명씩 상호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일 3국의 양자 간 문화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 시도는 분야별로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제도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각국의 동북아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거나 상이한 편이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서도 주도권을 둘러싼 상호경쟁적 인식도 여전히 제약요인으로 남아 있다. 중국의 경우 전통적인 화이(華夷)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본 역시 신대동아공영권 차원에서 우수한 자본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주도하려고 한다. 여기에 최근 한국도 한류의 확산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3국은 각

²⁴⁴ 문화관광부, 청소년백서2004, pp. 659~668.

각 문화교류 담당기관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한다(부록 표 IV-12 참조). 이 점은 동북아의 문화교류가 정부주도의 행사위주로 치우치면서 각국 국민 간 상호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한·중·일 3국이 국제문화교류에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향후 양자간 제도적 협력과 더 나아가 동북아의 제도적 협력 구축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화분야 인적 교류 실태

문화교류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에서, 동북아국가간의 인적교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정치, 경제적 목적의 인적교류 이외에 직접적인 문화목적의 인적교류와 간접적이거나 상호간의 문화 이해 및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인적 교류는 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관광객의 교류와 유학생 교류 그리고 청소년 교류를 들 수 있으며, 다음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광객교류 현황

세계관광기구(WTO)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국제관광객 수는 6억 9,100만 명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7억 5,900만 명으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다. 특히, 이라크전과 SARS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보였던 아시아지역은 2004년에 전년대비 28.6%인 3,400만 명이 증가한 1억 5,300만 명으로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세계 관광객 중에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머물러 54%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동북아의 주요 국가(한·중·일)로 한정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국가간의 관광교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과 동북아국가간 관광객 교류 추이를 나타낸 <부록 표 III-75>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한국으로 입국한 관광객과 해외로 출국한 한국 관광객의 절대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동북아 1그룹 국가 및 동북아 2그룹 국가들과의 관광객 교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관광객 교류 중에 동북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먼저 한국으로 입국한 동북아 1그룹 국가의 비중은 1993년 47%에서, 1998년 55%로 증가했다가 2003년에 50%로 다소 감소했다. 한국의 관광객 중 동북아 1그룹 국가의 비중은 1993년 44%에서 1998년에 42%로 소폭 감소했고, 2003년 역시 42%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출입국 관광객의 절대수가 모두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관광객 교류 역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으로 입국한 동북아 2그룹 국가의 비중은 1993년 51%, 1998년 68%, 2003년 62%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관광객 중 동북아 2그룹 국가의 비중은 각각 62%, 57%, 52%를 차지하고 있어 동북아 1그룹 국가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모두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관광객 교류에서 동북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가별 관광객 구성을 보면, 출입국 관광객 모두에서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 폭은 크지 않다. 중국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한국과의 관광객 교류가 크게 증가해 2003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은 국가가 되었다. 이처럼 인구 대국인 중국관광객의 증가는 한국의 관광객 교류에서 동북아국가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외에도 몽골과의 관광객 교류가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그동안 불모지였던 북한과의 관광객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동북아국가 간의 관광객 교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4년에도 지속되었는데, 전년대비 24.5% 증가한 882만 명이 해외로 출국하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인 55%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였다. 중국으로 출국한 관광객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233만 명, 일본으로 출국한 관광객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57만 명이었다.²⁴⁵

한국의 관광객 교류현황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 교류에서도 동북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일본의 경우, 2004년도 전년대비 26.6%(353만 명)이 증가한 1,683만 명의 관광객이 출국하였으며, 그 중 34%가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으로 출국한 관광객은 전년대비 48.1% 증가한 333만 명, 한국으로 출국한 관광객은 전년대비 35.6% 증가한 244만 명으로써, 일본의 중국 및 한국과의 관광교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²⁴⁶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부록 표 III-76>에서 보듯이 2003년 중국으로 입국한 관광객 중 일본과 한국의 비중이 36%를 차

²⁴⁵ 문화관광부, 2005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p. 20~30.

²⁴⁶ 도쿄지사, JTB Report 일본인 해외여행의 모든 것, pp. 1~2.

지하고 있다. 이 비중은 중국이 세계 4위의 관광대국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다.

이처럼, 동북아 특히 한·중·일 3국간의 관광교류의 증가와 비중의 증대는 지리적, 경제적 배경에 기초하고 있지만, 관광이 교류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미래에 대한 가치공유 등 문화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동북아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유용하다. 따라서 향후 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가 상대 국민에 대한 반감을 낳는 교류가 아닌 상호 문화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인적 교류로 발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교류의 양적인 증대와 함께 문화교류가 수반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유학생교류 현황

동북아국가간의 유학생 교류는 동북아 각국의 유학생 교류현황을 보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록 표 IV-13>의 2004년 4월 1일 기준 한국의 유학생 교류현황을 보면, 한국 내 유학생 총 16,832명 중 중국이 8,960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그 다음으로 2,418명이다. 이들 두 국가에 이어 미국, 대만, 베트남, 몽골이 자리하고 있어, 베트남을 제외하면 한국에 유학온 학생들은 대부분이 동북아국가들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53.2%, 일본이 14.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이 한국 내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한국 유학생이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호주,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 동북아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이 1, 2, 4위를 점하고 있고 전체 대비 51.7%를 차지하

고 있어 동북아국가와의 유학생 교류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21.7%에 불과해 한국 내 유학생 비중보다는 적었다. 그러나 한국 유학생의 절대 인원이 한국 내 유학생 수보다 많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유학생 교류가 중국, 일본과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부록 표 IV-14>의 중국의 유학생 교류현황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중국 내 유학생 중 한국이 35,353명으로 1위이고, 일본이 12,765명으로 그 다음이다. 이 밖에도 미국, 러시아, 몽골의 유학생이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북한도 638명의 유학생을 중국에 파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국가의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이 파견한 유학생은 주로 미주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시아는 22.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유학생 교류현황을 보면, 일본내 유학생 중 중국, 한국, 대만이 상위 3개국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동북아국가의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해외로 나간 일본 유학생의 경우도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한국이 상위 5개국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 중국, 한국 등 동북아국가와의 유학생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록 표 IV-15 참조). 이렇게 볼 때,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국가 간의 유학생 교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유학생 교류 역시 상호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상에서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 3국의 유학생 교류현황을 종합하면, 한·중·일 3국의 국내 유학생 중에 3국이 모두 상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학생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이는 인

적 교류에서 수반되는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호 문화 교류의 중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지역전문가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현황이라 할 수 있다.

(3) 청소년교류 현황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일본 및 중국의 청소년과 중국, 일본으로 출국한 한국 청소년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²⁴⁷ 1999년 한국에 입국한 일본인은 총 입국자의 55%, 2000년 56%, 2001년 55%, 2002년 53%이며, 그 중 11세에서 25세 연령층의 입국 비율은 각기 16.8%, 16.1%, 14.6%, 15.4%로 나타났다. 이 시기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체로 큰 차이가 없어, 한국방문 일본 청소년은 커다란 증감 없이 약 17~8만 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999년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은 총 입국자의 4.5%, 2000년 5%, 2001년 6.3%, 2002년 6.9%이며, 그 중 11세에서 25세 연령층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13.8%, 15.2%, 15.1%, 15.5%로 나타났다. 비록 중국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의 절대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국 방문 중국 청소년의 절대 인원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로, 1999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 청소년은 약 8천여 명이었는데, 2002년에 약 1만 5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물론 이 수치는 한국을 방문한 일본 청소년

²⁴⁷ 윤철경·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협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43~153.

년에 비해 약 1/10의 수준에 불과하나 증가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한·중 청소년 교류는 주목된다.

한국의 중국 출국자는 총 출국자 중에 1999년 19%, 2000년 20%, 2001년 22%, 2002년 26%를 차지하고 있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에 청소년의 비중도 각기 7.8%, 7.6%, 8.5%, 9.4%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일본 출국자는 총 출국자 중에 1999년 28.8%, 2000년 24.8%, 2001년 24%, 2002년 22%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 중에 청소년의 비중은 각기 10.6%, 11.6%, 12.4%, 13.3%로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으로 출국하는 한국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일 간 청소년 교류의 대부분은 청소년 단체 간의 교류가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의 국제교류는 1998년 경제난으로 교류인원이 대폭 감소했었으나, 1999년부터 교류인원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해 있는 62개 회원단체가 청소년 국제교류의 대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들의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의 국가별 교류 현황을 보면, 전체의 절반가까이를 일본과 교류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국과 교류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국가별 청소년 국제교류인원 통계에 의하면, 1999년 국제교류 인원의 80% 이상이 일본, 중국과의 교류였고, 2001년 93% 이상이 일본, 중국과의 교류로 나타났다.

<표 IV-16> 한국의 일본 및 중국과의 청소년교류 인원

(단위: 명 (%))

	1999년	2001년
일본	5,436 (77.0)	5,121 (63.0)
중국	879 (12.5)	2,518 (30.0)
기타 교류국가 합계	737 (10.5)	538 (7.0)

출처: 윤철경·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협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63.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일간의 교류비중이 1999년 77%, 2001년 63%로 한·중간의 교류비중인 12.5%와 30%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다만, 한·일간의 교류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해, 한·중간의 교류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어 양적 성장과 함께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청소년의 상호 문화이해와 교류의 증진은 향후 한·중·일 3국의 문화협력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 추세는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 특히 한·일 양국간의 교류가 일회성의 행사 위주로 기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동북아국가간 특히 한·일간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기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점은 한·중간 청소년 교류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일본과의 교류보다 교류의 정기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훨씬 미비하기 때문에 더욱 시정이 요구된다.

다. 주체별 교류 실태

(1)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동북아국가 간의 교류현황을 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154개 등 총 170개의 자치단체가 44개국의 441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이중 중국이 129개, 미국이 80개, 일본이 78개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이 전체 440개중 47%에 해당하는 207개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17> 한국의 자매결연 대상국가 현황

(2004년 1월 기준)

한국의 자매결연대상국	중국	일본	미국	기타	계
자매 도시수	129	78	80	154	441

출처: 문화관광부,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 (2004).

<표 IV-17>에서 한국의 자매결연 대상 국가현황을 보면,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로 중국 측이 통상교류를 원하고 있어 밀도 높은 인적교류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도나 문화가 달라서 선진문물을 배우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역사가 비교적 길고 교통편이 편리한 일본과의 교류가 한국 자치단체의 자매결연과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편이다. 그러나 일본의 3,000개 지자체 중 한국과 결연을 맺은 지역은 100개가 못되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3%미만이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향후 더 늘어나야 하며, 동시에 중국과의 교류도 주시해서 3국의 자치단체가 상호교류를 통하여 동북아지역 문화협력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⁴⁸

<부록 표 IV-16, 17, 18, 19> 4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중에 동북아국가에 차지하는 비중과 문화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조사가 갖는 한계는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제한된 기간의 교류에 국한된 조사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지자체의 교류를 장기적으로 조사하는데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라는 점에서 한국 지자체의 국제교류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광역지자체의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부록 표 IV-16>에서 보듯이 한국의 광역지자체의 동북아국가와의 교류 비중은 73.3%로서, 기타 국가의 17.2%와 동북아국가 이외의 아시아국가의 9.5%에 비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문화, 관광, 스포츠, 민간 등 문화관련 분야의 교류는 차례로 82.6%, 67.9%, 83.3%, 93.8%, 88.7%로 상대적으로 행정(우호 및 회의 포함) 및 경제목적의 교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록 표 IV-17>에서 보듯이, 동북아 역내 국가와의 교류에서 문화관련 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34.2%로서 경제적 목적의 교류인 10.7% 보다는 많았지만, 행정 목적의 교류인 55.1%보다는 적었다. 이 점은 지자체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나

²⁴⁸ 문화관광부,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 참조.

오는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 목적의 교류를 제외할 경우 문화 관련 교류가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초지자체의 교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초지자체 동일 교류형태의 지역별 비교를 제시한 <부록 표 IV-18>과 동일 지역내 교류형태 비교를 제시한 <부록 표 IV-19>를 보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동북아국가와의 교류는 87.1%로서, 기타 국가의 10.9%와 동북아국가 이외의 아시아 국가 2.0%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또 이 비중은 광역지자체의 동북아국가와의 교류비중보다도 높다. 기초지자체의 동북아국가와의 교류 중 청소년, 문화, 관광, 스포츠, 민간 등 사회문화 관련 교류의 비중은 32.2%로서 행정목적의 교류인 57.8%보다는 적지만 경제목적의 교류인 10.0%보다는 많다. 이 역시 행정기관인 기초지자체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동북아국가와의 교류 중에 사회문화 교류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민간단체간 교류

동북아 주요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학교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도 정확한 통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층차에서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2003년 기준 서울의 초·중등학교 111개교가 일본의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사와 학생의 교류와 스포츠, 문화 등의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고등학교의 경우, 수학여행 대상국으로 중국과 한국에 매년 약 7만여 명의 학생을 보내고 있는데, 일본의 국공립 사립고등학교 중 176개교가 한국과, 157개교가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다. 대학의 경

우, 일본의 국공립 사립대학이 해외대학과 맺은 11,089개의 협정 중에 1,992개를 중국의 대학이, 1,096개를 한국의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대학간의 자매결연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의 서울대학교 등 135개 대학과 중국의 북경대학 등 284개 대학이 다양한 방식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한·중·일 교육기관 간 학술문화교류 사업도 증대하고 있는데, 한·일간의 주요 사업으로는 중고생, 대학생, 교원의 교류 및 일본의 한국어 선택 학생과 교원에 대한 연수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방문, 공동수업, 문화유적지 견학 등이 있고, 대학생의 경우 대학방문, 동아리 활동, 특강, 자유연수, 문화유적지 견학 등이 있으며, 교원의 경우, 학교방문, 교사와의 대화, 수업참관, 자유연수, 문화유적지 견학 등이 있다. 또한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문화행사 프로그램도 있다.²⁴⁹

한국과 중국의 교육관련 교류사업으로는 조선족 동포 초청 연수프로그램과 중국어과 교원의 중국현지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실시한 중국어과 교원은 총 26명이다. 또한 학술 교류차원에서 학술진흥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매년 학자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규모는 미미하다. 이밖에도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관원 및 상사원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03년 6월 현재 북경한국국제학교 등 6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²⁴⁹ 한만길·최영표·이현영,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참조.

전반적인 한·중·일간 교류는 상당히 밀접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일간의 교류는 초기 정부차원의 교류가 압도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수준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만, 한국측의 수요가 일본측의 수요보다 높은 실정이며, 40년 동안 진행된 양국 간의 교류에 비해 질적인 측면이 다소 미흡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 점은 한·중간의 교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근 한·중간 경제협력과 교류의 꾸준한 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양국간의 교류협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 한국측의 수요가 중국측의 수요보다 높은 점과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서서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의 교류로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이 그러하다. 게다가 양적인 교류의 폭발적인 증가에 맞게 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한·중·일 동북아 3국간의 교류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 교류를 넘어서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동북아 NGO간의 교류현황을 살펴보자. 동북아의 NGO들은 국가의 성격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상이하다. 한국, 일본의 NGO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자율적,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와 당 우위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관변 단체적 성격을 갖고 있어 동북아지역내 NGO간의 교류협력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이 다자간의 협력보다는 양자간 협력에 치중하는 편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의 하자센터와 일본의 도쿄수레가 협력하는 교육운동과 한국의 정

신대 대책위와 일본 여성단체가 협력하는 여성운동, 한국의 환경운동연합과 일본의 녹색운동이 연합한 환경운동 등을 들 수 있다. 한·중·일의 다자적 협력은 주로 환경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보적 수준이며, 역사 교육 분야에서 한국(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중국(사회과학원)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진보적 시민단체(교과서 네트워크 21)가 협력하는 사례가 있다. 이들간의 협력으로 역사부교재인 ‘한·중·일이 함께 쓰는 미래를 여는 역사’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동북아 시민단체들의 연대조직으로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ARENA가 있으며, 유엔이 주도하는 지역별 갈등 예방방지를 위한 시민단체 대회 등이 있다.

라. 사업별 교류

문화교류와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 교육(청소년), 생활스포츠, 예술, 문화콘텐츠 등이 있다. 관광 및 교육(청소년) 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예술, 생활스포츠, 문화콘텐츠와 최근 동북아 문화교류의 한 축인 한류에 관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예술교류

예술분야의 교류는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을 포함하나, 지면과 자료의 한계로 여기에서는 문화 자체의 교류는 물론 인적교류 등이 포괄적으로 수행되는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연예술에는 양악, 국악, 연극, 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예술교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

국내 개인 및 단체의 해외공연과 외국인 개인 및 단체의 한국 공연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교류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 <부록 표 IV-20>이다. 이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의 해외공연은 1,027회로 연평균 342회를 기록했고, 내한공연은 1,233회로 연평균 411회를 기록해 해외공연보다 내한공연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이를 한·중·일 간의 교류에 적용하면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즉, 한국이 중국 및 일본으로 파견하는 해외공연이 중국 및 일본의 내한공연보다 더 많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전체 공연예술교류 중에 중국 및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의 해외공연 중에 중국은 7%, 일본은 23%로 합계 30%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의 해외공연 중에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내한공연은 일본이 13%, 중국이 3%로 합계 16%를 차지해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가 한국의 전체 비중에서는 적지 않으나, 해외공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²⁵⁰

상호교류가 바람직한 문화교류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해외공연이 내한공연보다 편중되어 있음은 전반적인 교류의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한국과 일본과의 교류에 비해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할 실정이다.

²⁵⁰ 정정숙 외, 동북아시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p. 100~110.

(2) 체육교류

체육 분야의 교류도 문화교류협력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의 국제교류 현황을 파견과 초청별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 <부록 표 IV-21>와 <부록 표 IV-22>이다. 먼저 엘리트체육의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02년에 전체 45개 종목에 걸쳐 526회 파견했고 39개 종목에 걸쳐 124회를 초청했다. 그 중 동북아국가와는 파견 148회, 초청 25회로 합계 173회를 기록해 전체 650회 중 26.6%를 차지했다. 2003년의 경우는 전체 42개 종목에 걸쳐 563회를 파견했고 31개 종목에 걸쳐 96회를 초청했다. 그 중 동북아국가와는 파견 136회, 초청 28회로 합계 164회를 기록해 전체 659회 중 24.9%를 차지했다. 분류의 편의상 미국과 러시아를 동북아국가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북아국가와의 교류 중 대부분은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2002년과 2003년의 우리나라의 동북아국가와의 엘리트 교류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엘리트체육이 국가 간의 경쟁과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체육교류에서 문화교류협력에 기여하는 분야는 엘리트 체육보다 교류 종목은 많지 않지만 생활체육의 교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국제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전체 18개 종목에 걸쳐 38회를 파견했고 13개 종목에 걸쳐 29회를 초청했다. 그 중 동북아국가와는 파견 22회, 초청 21회로 합계 43회를 기록해 전체 67회 중에 64.2%를 차지했다. 2005년은 전체 10개 종목에 걸쳐 17회를 파견했거나 예정 중이고, 11개 종목에 걸쳐 11회를 초청했거나 계획 중에 있다. 그 중 동북아국가와는 파견 13회, 초청 6회, 합계 19회로 전체 28회 중에

67.9%를 차지해 생활체육 분야의 국제교류에서 동북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3) 문화콘텐츠 교류 및 한류

동북아국가 간의 대중문화 교류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긴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 문화산업이 전통적인 산업영역을 넘어서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동북아 3국도 이에 주목하여 차세대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 동북아의 대중문화 교류도 점차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동북아 3국간의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교류는 대중문화의 교류이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는 그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즉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상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교류와 확산은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매우 예민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²⁵¹

동북아 대중문화 교류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동북아 3국의 문화산업 현황을 볼 필요가 있다. <부록 표 IV-23>의 동북아 문화산업 현황을 보면, 규모는 일본이 820억 달러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중국이 312억 달러, 한국이 157억 달러로 뒤를 잇는다. 세계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일본이 10.4%로 가장 앞서 있어 어느 정도 국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21.1%로 단연 앞서고 있으며, 그 뒤를 14.9%의 중국이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²⁵¹ 양영균· 문호표· 송도영,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5~6.

민영화 수준도 높아 정부의 개입이 적은 반면에, 한국 및 중국은 정부가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이다. 특히 중국은 체제의 특성상 문화산업 분야를 국가가 전부 혹은 상당 지분 소유하고 있거나 제도와 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은 중국 13.1%와 한국 6.5%로 문화산업 평균성장을 전망이 높게 나오고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문화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한국도 ‘한류’의 붐을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동북아 및 전 세계로의 확산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명사이자 문화교류의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류는 방송, 영화, 음반 등 대중문화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1997년 MBC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등 한국드라마가 중국으로 진출한 이후, 2000년에는 한국의 대중음악도 중국으로 진출함으로써 한류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로까지 확산되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겨울연가 및 윤사마의 열풍으로 일본까지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대만, 홍콩 등 중화권 국가에 방영된 대장금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관광 등 문화교류의 기폭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화산업의 내용은 영화, TV, 음반, 출판물, 광고, 게임, 만화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어 모든 분야의 통계화가 불가능하다 다만, 한류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음반을 중심으로 한국의 일본 및 중국, 대만, 홍콩 등에 수출한 총액 추이를 보면 <부록 표 IV-24>와 같다. 이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중국, 대만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시장규모가 제일 커서 수출액도 제일 많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그 증가폭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2000년 185만여 달러에서 3년 만에 10배 가까운 1,637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만에 대한 수출액도 2001년 700만 달러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하였다.

2004년도 한국 방송콘텐츠의 동북아국가에 대한 수출현황을 보면, 국가별로 일본에 대한 수출이 역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케이블TV와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합쳐 한국의 대 동북아국가 수출 중 일본이 5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15.3%의 대만이, 10.8%의 중국이 뒤를 잇고 있어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동북아국가인 일본, 중국, 대만, 홍콩이 총 8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한국과 일본, 중국(대만, 홍콩)의 대중문화 교류가 활발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교류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한국의 방송콘텐츠의 수출은 동북아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수입은 미국이 77.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일국에 편중되어 있다. 참고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2.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부록 표 IV-25 참조). 미국을 동북아국가로 포함시킨다해도 이와 같이 편중된 교류는 바람직한 교류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동북아의 주요 문화교류 대상국인 한·중·일 3국으로 국한시킬 경우 이 문제는 향후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 협력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대중문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시정도 아울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파급효과는 수출 등 경제적 효과와 함께 관광 등 문화교류의 확산에 기여한데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대중문화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 형성으로 국가간에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고 문화적 공감대를 초보적이거나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⁵² 그런 점에서 한류를 동북아 문화교류나 문화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모델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가 상호이해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한류 역시 적합한 것만은 아니다. 동북아국가 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공유성과 문화적 공감대 및 현대사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내용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동북아 3국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현대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상호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소결

이상에서, 문화분야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화교류협력의 제도화 실태와 문화관련 인적교류 및 주체별, 사업별 교류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제도화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

²⁵² 한국관광공사, 한류마케팅 파급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 참조.

상국가인 동북아 6개국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유된 이해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광범한 범위를 갖는 문화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자간의 문화협력을 위한 제도화는 부문별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한·중·일 3국으로 국한시켰을 경우 비교적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간의 문화교류의 역사가 가장 깊고 활발한 편이며, 중국과의 교류도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특성은 관광, 유학생, 청소년 등의 인적교류 현황에서도 나타나는데, 한·중·일 3국간의 인적교류가 동북아지역의 교류를 선도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부문 등의 주체별 교류와 예술, 생활스포츠, 대중문화 등 부문별 교류에서도 한·중·일 3국간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실태는 한·중·일 3국간의 문화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최근의 한류현상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일 3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즉, 최근의 교류현황 및 실태가 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체 더 나아가 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동북아 6개국의 교류수준은 낮은 편이며, 그나마 한·중·일 3국간의 교류협력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일회성의 행사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한·중·일 간의 교류협력도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수준과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축적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지역 문화교류의 활성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중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할 경우,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된 문화협력을 우선적으로 진행시킨 후 이것이 동북아지역으로 확산되는 단계별 접근도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동북아협력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이상에서 국가 차원과 지역차원에서 동북아협력의 인프라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았지만, 인프라 실태를 일관된 틀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북아협력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동북아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는 통계적 지표나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파악되기 어려운 협력 현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목표, 정책대안 등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동북아전문가 인식조사의 내용은 동북아정체성, 경제협력, 안보협력, 정치협력, 문화협력, 정책방향의 6개 분야에 대한 것이다. 특히 동북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식조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 안보, 정치,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관된 틀에 의해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각 분야별로 현황 평가, 기대 이익 평가, 정책목표, 수단, 상호 역할 평가의 항목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분야별 우선순위,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전망, 동북아공동체와 한반도통일의 관계, 동북아공동체의 개방성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²⁵³

인식조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한국의 6개국에 대해서 각각 30명씩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의 직업은 대체로 학계, 연구소, 언론계, 관계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²⁵³ 남궁곤·가상준, “동북아협력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5. 4. 18).

그리고 조사방법은 이 메일을 통한 설문지 회수와 함께,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나라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 업종의 분포에 차이가 있으며, 이메일 조사와 면접조사의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사기간은 2005년 6월부터 8월까지였다.

1. 동북아 정체성²⁵⁴

가. 동북아지역의 포함 국가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인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어떤 국가가 동북아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물어보았다. 대체로 압도적인 다수의 응답자들은 한국(92.8%), 일본(93.2%), 중국(91.7%), 그리고 북한(80.6%)이 동북아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러시아(66.7%)를 동북아지역에 포함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으며, 소수의 응답자만이 미국(37.8%)과 몽골(33.3%)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응답자 가운데에는 동북아지역의 범위에 대만(5.6%), 싱가포르(0.6%), 베트남(0.6%), 캐나다(0.6%),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1.1%)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²⁵⁴ 김성진, “동북아 정체성 조사결과 분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5. 10. 30).

<표 V-1> 동북아지역의 포함 국가

		전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사	례 수	180	30	30	30	30	30	30
한	n	167	30	30	28	30	27	22
	%	92.8	100.0	100.0	93.3	100.0	90.0	73.3
중	n	165	29	30	27	30	27	22
	%	91.7	96.7	100.0	90.0	100.0	90.0	73.3
일	n	168	29	30	30	30	26	23
	%	93.3	96.7	100.0	100.0	100.0	86.7	76.7
북	n	145	28	29	17	27	26	18
	%	80.6	93.3	96.7	56.7	90.0	86.7	60.0
미	n	68	22	5	2	22	9	8
	%	37.8	73.3	16.7	6.7	73.3	30.0	26.7
러	n	120	24	18	8	26	25	19
	%	66.7	80.0	60.0	26.7	86.7	83.3	63.3
몽	n	60	9	6	4	14	7	20
	%	33.3	30.0	20.0	13.3	46.7	23.3	66.7
대	n	10	2	0	2	3	2	1
	%	5.6	6.7	0.0	6.7	10.0	6.7	3.3
싱	n	1	0	0	0	0	0	1
	%	0.6	0.0	0.0	0.0	0.0	0.0	3.3
베	n	1	0	0	0	0	0	1
	%	0.6	0.0	0.0	0.0	0.0	0.0	3.3
캐	n	1	0	0	0	1	0	0
	%	0.6	0.0	0.0	0.0	3.3	0.0	0.0
아	n	2	0	0	0	0	0	2
	%	1.1	0.0	0.0	0.0	0.0	0.0	6.7
무	n	6	0	0	0	0	1	5
	%	3.3	0.0	0.0	0.0	0.0	3.3	16.7

응답자들은 동북아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국적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은 남북한과 미·중·일·러를 포함하는 6개국을,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중·일의 3국(북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중국은 남북한과 중·일 4국(러시아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그리고 러시아는 남북한과 러·중·

일의 5국을 ‘동북아공동체’ 구성국으로 언급하고 있다.

개별 국가별로 보면 동북아공동체에 미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답변은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73.3%) 사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6.7%)과 중국(16.7%)의 전문가들은 러시아(30.0%)나 몽골(26.7%)의 전문가들보다 더 미국의 참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러시아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국제질서 형성노력’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해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공동체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일본의 전문가들이 러시아 전문가들에 비해 미국의 공동체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새로운 동북아 공동체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지리적 기준을 반영하였거나,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참여로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북한의 참여에 대한 응답자들의 입장이다. 대체로 각국의 응답자 가운데 80.0% 이상이 북한을 동북아공동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본(56.7%)과 몽골(60.0%)의 전문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북한과 일본이 수교국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입장이 반영하였거나, 동북아공동체에 북한이 참여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문가들 가운데 북한을 공동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의 비율은 미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6.7%)이나 러시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26.7%)보다는 많은 것이었다. 몽골 전문가들의 응답은 북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몽골의 전문가집단에서는 몽골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도 80% 이상의 응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아마도 몽골 내에서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응답자들은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가 동북아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미국과 한국 전문가집단에서 각각 86.7%와 80.0%, 그리고 몽골과 중국 전문가들에서 각각 63.3%와 60.0%를 차지한 반면, 일본 응답자들은 러시아를 동북아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비율(26.7%)이 매우 저조하였다.

응답자들은 자국을 ‘동북아’로 인식(혹은 동북아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하는 데에서도 다소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은 응답자 전원이 공동체에 자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러시아, 미국, 몽골의 전문가집단은 각각 83.3%, 73.3%, 그리고 66.7%만이 자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설문을 통해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내용은 쌍무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동북아’로 인식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전문가 집단은 응답자 모두 한국이 동북아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응답자는 73.3%가 미국이 동북아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 응답자 비율은 미국 응답자가 자국을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73.3%)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양국간의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과 미국의 동북아공동체에서의 위상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쌍무관계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격차는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먼저 러시아 응답자는 90%가 중국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한 반면, 중국 응답자는 60.0%만이 러시아가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응답자는 86.7%가 러시아가 공동체의 일부라고 응답한 반면, 러시아 응답자 30.0%만이 미국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끝으로 미국 응답자 전원이 일본이 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 응답자는 6.7%만이 미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자신이 생각하는 소속감과 다른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수준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일의 경우 응답자 전원이 자국을 동북아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도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응답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각각 자국 응답자의 73.3%와 83.3%가 자국을 공동체 일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는 다른 모든 국가 응답자들이 이러한 미국 응답자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 몽골, 그리고 특히 일본이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향후 동북아공동체 구성 범위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 쌍무적인 이견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나. 동북아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공유 정도

두 번째로 본 설문에서는 동북아공동체 국가 간의 역사적 경험의 공유정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8.7%가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전체응답자 가운데 한국(96.7%)과 러시아(93.1%) 응답자의 절대다수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역사를 약간 혹은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개별 국가별로 5명 이내(일본과 중국 각각 5명, 미국 4명, 몽골 3명, 러시아 1명, 한국 1명)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 동북아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공유 정도

	많이 공유		약간 공유		거의 공유 하지 않음		계		총합				
	n	%	n	%	n	%	n	%	공유		비공유		
									n	%	n	%	
전체	177	77	43.5	80	45.2	20	11.3	177	100.0	157	88.7	20	11.3
한국	30	11	36.7	18	60.0	1	3.3	30	100.0	29	96.7	1	3.3
중국	28	7	25.0	16	57.1	5	17.9	28	100.0	23	82.1	5	17.9
일본	30	15	50.0	10	33.3	5	16.7	30	100.0	25	83.3	5	16.7
미국	30	13	43.3	13	43.3	4	13.3	30	100.0	26	86.7	4	13.3
러시아	29	17	58.6	10	34.5	2	6.9	29	100.0	27	93.1	2	6.9
몽골	30	14	46.7	13	43.3	3	10.0	30	100.0	27	90.0	3	10.0
$\chi^2 = 12.63255, p = 0.24495$										$\chi^2 = 4.69836, p = 0.45379$			

이러한 응답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의 ‘상이성’이 종종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체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계를 통해 나타난 동북아공동체 국가에서의 유사성은 이들 국가 간의 역사적 경험의 공유 정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세분화할 경우 국가별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60.0%)과 중국(57.1%) 응답자의 과반수는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역사적 경험을 ‘약간’ 공유하고 있다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러시아(58.6%)와 일본(50.0%)의 응답자 과반수는 동북아국가들이 역사적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미국과 몽골의 응답자들은 유사한 비율로 역사적 경험을 ‘많이’(각각 43.3%와 46.7%) 혹은 ‘약간’(양자 모두 43.3%)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응답 양상은 각국의 정책 및 최근의 일련의 현상적인 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중보다 러·일에서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보다 강하게 보인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것은 일정 기간 정례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중의 경우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역사적 경험의 공유정도를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전문가들에게 있어 동일한 사건이 동북아지역에서의 역사적 경험 공유의 정도를 강조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났을 수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탈냉전 이후 1990년대 초반 이후 서구주의를 탈피하고 유라시아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동질성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 건설에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적 경험의 공유문제는 결국 이러한 동질성의 ‘경로의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응답자들의 약 80%는 동북아공동체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이 많다’는 의견(28.2%)보다는 ‘동질성이 다소 있다’는 의견(51.4%)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80%가 넘게 나타난 ‘동질성이 있다’는 응답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체로 응답자들 가운데 한국(66.7%), 중국(64.3%), 그리고 일본(63.3%) 응답자의 과반수가 약간의 동질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질성이 많다는 의견은 몽골(76.7%)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물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동북아공동체에 약간의 동질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다소 간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응답자의 다수(각각 90.0%와 93.3%)가 동질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 응답자의 경우는 동질성이 많이 혹은 약간 있다는 의견(71.4%)과 동질성이 없다는 의견(28.6%)으로 나뉘고 있다. 중국과 유사한 성향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질성이 ‘다소 있다’는 의견(40.0%)과 ‘거의 없다’는 의견(40.0%)이 ‘많다’(10.0%)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약간 지니고 있다’(55.2%)를

중심으로 ‘많다’는 의견(20.7%)과 ‘거의 없다’는 의견(24.1%)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표 V-3>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동질성

	사 례 수	많이 지님		약간 지님		거의 지니 않음		전혀 지니 않음		계		종합						
		n	%	n	%	n	%	n	%	n	%	있음		없음				
												n	%	n	%			
전체	177	50	28.2	91	51.4	32	18.1	4	2.3	177	100.0	141	79.7	36	20.3			
한국	30	7	23.3	20	66.7	3	10.0	0	0.0	30	100.0	27	90.0	3	10.0			
중국	28	2	7.1	18	64.3	8	28.6	0	0.0	28	100.0	20	71.4	8	28.6			
일본	30	9	30.0	19	63.3	2	6.7	0	0.0	30	100.0	28	93.3	2	6.7			
미국	30	3	10.0	12	40.0	12	40.0	3	10.0	30	100.0	15	50.0	15	50.0			
러시아	29	6	20.7	16	55.2	7	24.1	0	0.0	29	100.0	22	75.9	7	24.1			
몽골	30	23	76.7	6	20.0	0	0.0	1	3.3	30	100.0	29	96.7	1	3.3			
											x = 73.09693 p = 0.00000				x = 28.51459 p = 0.00003			

한편,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은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두 문제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동북아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인식과 동질성에 대한 인식을 교차분석하였다(<표 V-4> 참조). 교차분석 결과,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견해가 곧바로 이들 국가들 사이에 동질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77명) 가운데 ‘동질성이 높다’는 의견은 37.7%(29명), 그리고 ‘동질성이 다소 있다’는 의견은 50.6%(39명), 그리고 ‘동질성을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10.4%(8명)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역사적 경험을 ‘다소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80명의 응답

자 가운데 ‘동질성이 많다’는 의견은 21.3%(17명), ‘동질성이 다소 있다’는 의견은 57.5%(46명), 그리고 ‘동질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18.8%(15명), ‘동질성이 없다’는 의견이 2.4%(2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역사적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대다수, 그리고 ‘다소 공유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던 응답자의 20%가 동질성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4> 동북아공동체 국가간의 역사적 경험과 동질성에 대한 교차분석

		동북아공동체 국가 간의 역사적 경험 공유에 대한 태도			
		많이 공유	다소 공유	거의 공유 하지 않음	합계
동북아 공동체 국가 간의 동질성에 대한 평가	많음	29(37.7)	17(21.3)	4(20.0)	50(27.8)
	약간	39(50.6)	46(57.5)	6(30.0)	91(50.6)
	거의 없음	8(10.4)	15(18.8)	9(45.0)	32(17.8)
	전혀 없음	1(1.3)	2(2.5)	1(5.0)	4(2.2)
	합계	77(100.0)	80(100.0)	20(100.0)	177*(100.0)

* 응답자 가운데 기타 의견을 표시한 3명의 응답자는 제외;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라.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공동이해관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동질성과 함께 또 다른 동인은 공동이해관계 혹은 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에서는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상호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다수(92.7%)는 공동이해관계가 많거나(44.4%) 약간 있다(48.3%)라고 응답하였으며, 거의 없다(6.7%)나 없다(0.6%)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국가별로도 공동이해가 많이 혹은 약간 있다는 견해가 80% 이상을 기록하였다.

국가별로 응답자의 답변을 살펴보면, 일본 응답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북아공동체 국가들 사이에 공동이해관계가 많다(76.7%)고 응답하였으며, 약간 있다는 응답도 20.0%에 달하여 상호관계를 인식하는 비율이 96.7%에 달했다. 한국의 응답자 역시 전체적으로는 96.7%가 공동이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공동이해가 많다는 의견은 일본 응답자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56.7%). 이에 비해 미국(70.0%), 중국(66.7%), 러시아(48.3%), 그리고 몽골(44.8%)의 응답자들 가운데는 동북아공동체 국가 간의 공동이해가 약간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응답자의 33.3%의 응답자는 이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많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 응답자는 많이 있다는 의견과 거의 없다는 의견이 각각 13.3%로 분산되었다.

대체로 한국과 일본의 응답자들은 동북아공동체 국가들 상이의 동질성이 높고 공동이해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동질성이 있다는 견해(약 50%)보다 공동이해가 있다는 의견(83.3%)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동북아공동체의 형성과 참여가 동질성보다는 공동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응답자들은 동질성이 약간 있다는 견해(64.3%)와 공동이해가 약간 있다는 견해(66.7%)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동질성이 거의 없다는 견해(28.6%)와 공동이해가 약간 있다는 견해(66.7%)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중국 응답자의 경우 비교적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동질성과 공동이해를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동질성보다는 공동이해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공동이해관계

	사 례 수	많이 지님		약간 지님		거의 지니지 않음		전혀 지니지 않음		계		종합			
		n	%	n	%	n	%	n	%	n	%	있음		없음	
												n	%	n	%
전체	178	79	44.4	86	48.3	12	6.7	1	0.6	178	100.0	165	92.7	13	7.3
한국	30	17	56.7	12	40.0	1	3.3	0	0.0	30	100.0	29	96.7	1	3.3
중국	30	10	33.3	20	66.7	0	0.0	0	0.0	30	100.0	30	100.0	0	0.0
일본	30	23	76.7	6	20.0	1	3.3	0	0.0	30	100.0	29	96.7	1	3.3
미국	30	4	13.3	21	70.0	4	13.3	1	3.3	30	100.0	25	83.3	5	16.7
러시아	29	13	44.8	14	48.3	2	6.9	0	0.0	29	100.0	27	93.1	2	6.9
몽골	29	12	41.4	13	44.8	4	13.8	0	0.0	29	100.0	25	86.2	4	13.8
$\chi^2 = 38.02199$ $p = 0.00090$											$\chi^2 = 9.45671$ $p = 0.09218$				

마. 소결

동북아 정체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동북아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들에 관한 인식조사를 보면, 국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중·일의 참여는 각각 92.8%, 91.7%, 93.3%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국, 러시아, 북한, 몽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국가별로 편차가 컸다. 특히 미국의 참여에 대해 일본(6.7%)과 중국(16.7%)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 미국의 참여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점이며, 이는 동북아공동체가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지리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거나, 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참여로 인한 공동체에서의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 국가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공동체의 참여국에 대한 국가들간의 차이점은 동북아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둘째, 동북아 역사적 경험의 공유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공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7%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역사적인 경험과 인식의 차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비록 제한적인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기는 하지만,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청신호로 보일 수 있다.

셋째, 동북아공동체의 동질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79.7%가 동북아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 일본, 몽골이 동질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동북아 동질성이 적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자신과 동북아지역과의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의 공동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92.7%라는 많은 응답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많거나 약간 있다고 대답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의 질문들과 연계시켜 보았을 때, 대체로 한국과 일본

의 응답자들은 동북아공동체 국가들 사이의 동질성이 높고 공동 이해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동질성이 있다는 견해보다 공동이해가 있다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동질성 보다는 공동이해관계에 기초해서 동북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은 동북아공동체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질성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적 상호의존과 발전, 역내의 평화와 안보라는 커다란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국가들간의 인식의 차를 좁혀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 경제협력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통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어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경제공동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제도적인 틀에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느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공동체에 대한 동북아지역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공동체 형성의 가능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6개

문항의 설문이 작성되었다. 지역국가 경제간의 상호의존성, 자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 APEC의 경제공동체 형성에의 유용성,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 등을 물어보았다.

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동북아공동체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상호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의존성이 있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에서 9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성이 아주 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49.2%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살펴볼 경우 한국의 응답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의 응답자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100%의 응답자가 동북아경제가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러시아의 경우는 82.8%만이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응답자들이 보여준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의존성에 대한 태도가 유보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상호의존성을 인정한 82.8%의 응답자들 중에서도 오직 소수 비율(10.3%)만이 ‘매우 의존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대부분(72.4%)은 ‘다소 의존적’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응답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경우, 미국의 전문가들도

러시아 다음으로 동북아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96.7%라는 높은 비율이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지만, 이 중에서 20%만이 ‘매우 상호의존적’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매우 상호의존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만으로 평가할 경우, 러시아와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6>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매우 상호 의존적		다소 상호 의존적		거의 상호 의존적 아님		계		종합			
		n	%	n	%	n	%	n	%	의존적		비의존적	
										n	%	n	%
전체	177	87	49.2	80	45.2	10	5.6	177	100.0	167	94.4	10	5.6
한국	30	25	83.3	5	16.7	0	0.0	30	100.0	30	100.0	0	0.0
중국	29	15	51.7	12	41.4	2	6.9	29	100.0	27	93.1	2	6.9
일본	29	22	75.9	7	24.1	0	0.0	29	100.0	29	100.0	0	0.0
미국	30	6	20.0	23	76.7	1	3.3	30	100.0	29	96.7	1	3.3
러시아	29	3	10.3	21	72.4	5	17.2	29	100.0	24	82.8	5	17.2
몽골	30	16	53.3	12	40.0	2	6.7	30	100.0	28	93.3	2	6.7
$\chi^2 = 56.05567$ $p = 0.00000$										$\chi^2 = 11.28772$ $p = 0.04596$			

반면, 한국 다음으로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의 전문가그룹은 일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 중에서 ‘매우 상호의존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5.9%에 달하고 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그룹들이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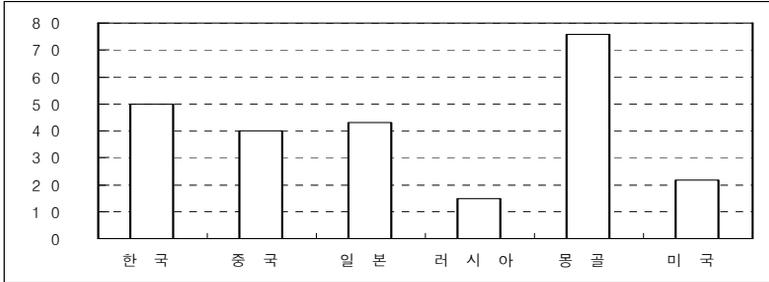
경제의존성에 대한 국가간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역내 무역의존도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 의존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러시아와 미국의 역내 무역의존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몽골의 경우 대외무역의 역내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들과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은 한·중·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몽골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편중되어 있고,²⁵⁵ 몽골 전문가들에게 ‘동북아공동체’란 개념이 생소하거나 몽골 경제가 동북아지역에 속해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²⁵⁵ 몽골의 러시아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993년 47.9%에서 1998년에는 22.5%로 급감하였으며, 2003년에는 21.6%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1993년 24.4%에서 2003년에는 32.2%로 증가하였다. 결국 이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합할 경우, 2003년 53.8%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V-1> 2003년도 국가별 동북아지역내 무역의존도

(단위: %)



나.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과 자국의 경제발전

“동북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귀국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89.3%)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55.9%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점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10.7%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공동체의 형성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공동체 형성이 자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지역 국가경제 사이에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매우 상호의존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과 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80%)은 앞에서 ‘매우 상호의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83.3%)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우 상호의존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았던 러시아(10.3%)와 미국(20%)은 이 질문에서도 13.8%와 10%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약간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상호의존적’이라는 응답 비율은 중국이 51.7%, 일본이 75.9%로 일본이 큰 폭으로 많은 비율을 기록하였으나 경제공동체 형성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은 75.9%, 일본은 65.5%로 오히려 중국 전문가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일본이 역내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는 중국경제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평가와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국가는 미국과 몽골이다. 미국의 경우 상호의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비율이 96.7%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50%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미국의 경제가 동북아시아 경제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동북아시아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V-7>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과 자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매우 도움		다소 도움		거의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안됨		계		종합				
	n	%	n	%	n	%	n	%	n	%	도움됨		도움안됨		
											n	%	n	%	
전체	177	99	55.9	59	33.3	15	8.5	4	2.3	177	100.0	158	89.3	19	10.7
한국	30	24	80.0	6	20.0	0	0.0	0	0.0	30	100.0	30	100.0	0	0.0
중국	29	22	75.9	7	24.1	0	0.0	0	0.0	29	100.0	29	100.0	0	0.0
일본	29	19	65.5	10	34.5	0	0.0	0	0.0	29	100.0	29	100.0	0	0.0
미국	30	3	10.0	12	40.0	11	36.7	4	13.3	30	100.0	15	50.0	15	50.0
러시아	29	4	13.8	22	75.9	3	10.3	0	0.0	29	100.0	26	89.7	3	10.3
몽골	30	27	90.0	2	6.7	1	3.3	0	0.0	30	100.0	29	96.7	1	3.3
	$\chi^2 = 113.52209 \quad p = 0.00000$										$\chi^2 = 60.57215 \quad p = 0.00000$				

몽골은 미국과는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53.3%만이 ‘매우 상호의존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한 반면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몽골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0%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는 반대로 현재 몽골 경제가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몽골의 경제발전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귀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무역(38.5%), 에너지·자원(26.1%), 교통(11.2%), 정보·통신(9.3%) 등의 순으

로 중점분야를 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와 몽골을 제외하고는 무역부문이 동북아지역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는 무역부문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하다고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8>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점 분야

	사 례 수	교통		에너지, 자원		무역		금융		정보통신 (ICT)		환경		기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61	18	11.2	42	26.1	62	38.5	10	6.2	15	9.3	9	5.6	5	3.1	161	100.0
한국	28	3	10.7	9	32.1	13	46.4	1	3.6	2	7.1	0	0.0	0	0.0	28	100.0
중국	26	0	0.0	10	38.5	13	50.0	2	7.7	0	0.0	1	3.8	0	0.0	26	100.0
일본	28	0	0.0	4	14.3	10	35.7	1	3.6	7	25.0	5	17.9	1	3.6	28	100.0
미국	29	1	3.4	3	10.3	14	48.3	3	10.3	2	6.9	2	6.9	4	13.8	29	100.0
러시아	25	2	8.0	15	60.0	2	8.0	1	4.0	4	16.0	1	4.0	0	0.0	25	100.0
몽골	25	12	48.0	1	4.0	10	40.0	2	8.0	0	0.0	0	0.0	0	0.0	25	100.0
x = 108.44938 p = 0.000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를 선택하는 비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전체적인 비율과 가장 유사한 선택을 보여준 국가는 한국이다. 전체로 나타나는 선택 순서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선택한 순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무역(46.4%), 에너지·자원(32.1%), 교통부문(10.7%)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선택과 가장 근접한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의 전문가들

도 무역(50%)과 에너지·자원(38.5%)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 나타난 차이점은 세 번째 선택에서 발견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교통부문(10.7%)을 지적한 반면에 중국의 전문가들은 금융부문(7.7%)을 꼽았다. 북한이라는 단절된 지역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동북아지역의 교통협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 금융기법의 도입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력이 주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문가들이 보여준 선택은 한국 및 중국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무역(35.7%), 정보·통신(25%), 환경(17.9%), 에너지·자원(14.3%) 순으로 고른 선택을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환경부문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이 다른 국가 전문가들의 선택과 비교해서 두드러진다. 일본 전문가들의 선택은 당장에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 보다는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할 부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문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는 러시아도 들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와 달리 에너지·자원부문(60%)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다른 국가에 비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이 분야의 협력이 자국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선택한 분야가 정보·통신(16%) 부문이다. 러시아가 과학기술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이 대외무역부문과 교통부문(8%)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러시아가 대

외무역을 통한 협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통부문의 경우에는, 그동안 러시아측이 TKR과 TSR의 연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에 비추어 예상 보다는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무역부문의 협력(48.3%)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역부문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없는 것도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의 전문가들이 보여준 응답 결과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된다. 교통분야의 협력(48%)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무역부문(40%)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몽골의 전문가들이 교통분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관련 산업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몽골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가 교통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하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접근 방법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다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몽골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접근방법으로는 ‘무역 및 투자의 증대’를 통해서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1%),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약체 구성’(32.9%)이 뒤를 이었고, ‘산업 분야별 협력체 구성’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6.9%)이 가장 낮았다. 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의존도를 증대시켜 나가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약체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9>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방식

		무역 및 투자의 증대		양자간 FTA의 확산		산업 분야별 협력체 구성		동북아 다자간 경제 협의체 구성		계	
		n	%	n	%	n	%	n	%	n	%
전체	173	71	41.0	33	19.1	12	6.9	57	32.9	173	100.0
한국	30	7	23.3	10	33.3	3	10.0	10	33.3	30	100.0
중국	28	6	21.4	10	35.7	1	3.6	11	39.3	28	100.0
일본	30	9	30.0	6	20.0	4	13.3	11	36.7	30	100.0
미국	28	17	60.7	2	7.1	0	0.0	9	32.1	28	100.0
러시아	28	16	57.1	2	7.1	3	10.7	7	25.0	28	100.0
몽골	29	16	55.2	3	10.3	1	3.4	9	31.0	29	100.0
x=30.94442 p=0.00894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과는 다르게 한국과 중국에서는 ‘양자간 FTA의 확산’을 선택한 전문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기능적인 접근 방식 보다는 제도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은 ‘무역 및 투자의 증대’를 세 번째로 꼽았으며, 특히 중국 전문가들의 응답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중국전문가들이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 및 일본의 전문가의 선택과 미국·러시아·몽골 전문가들의 선택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미국·러시아·몽골 전문가들의 선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양자간 FTA의 확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점에서는 한국·중국 전문가들의 인식과 공유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몽골의 전문가들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무역 및 투자의 증대’를 선택하였고 뒤를 이어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의체 구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양자간 FTA의 확산’을 선택한 전문가의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까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미국, 러시아, 몽골의 경우 한·중·일과의 FTA 추진 논의가 거의 없거나 아주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러시아, 몽골의 전문가들의 과반수가 ‘무역 및 투자의 증대’를 동북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기록한 것이다.

마. APEC의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 가능성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일단 긍정적인 응답(68.5%)이 부정적인 응답(31.5)을 앞서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긍정적인 비율(47.8%)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APEC이 동북아지역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PEC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나 도움을 줄 것인지를 인식하는 양상은 국가별로 많은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가장 강한 긍정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몽골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이고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를 차지해 이를 합할 경우 83%가 APEC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가장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준 국가는 미국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에 불과하고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31%를 차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모두 합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PEC의 역할이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을 뛰어 넘는 것이어서 별다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러시아는 매우 유사한 응답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6.7%, 러시아는 10%를 차지했으며,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한국 60%, 러시아 56.7%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APEC이 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과정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서 약간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국가가 중국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이고 ‘다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3%를 차지해 중국의 전문가들이 APEC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몽골과 같은 80%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몽골에 비해서는 강한 긍정의 응답비율이 낮게 나와 내용에서 있어서는 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V-10> APEC의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여 가능성

	사 례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거의 도움이 안됨		전혀 도움이 안됨		계		종합			
		n	%	n	%	n	%	n	%	n	%	도움됨		도움안됨	
												n	%	n	%
전체	178	37	20.8	85	47.8	49	27.5	7	3.9	178	100	122	68.5	56	31.5
한국	30	2	6.7	18	60.0	10	33.3	0	0.0	30	100	20	66.7	10	33.3
중국	30	5	17	22	73	3	10	0	0	30	100	27	90	3	10
일본	30	9	30	11	37	9	30	1	3	30	100	20	67	10	33
미국	29	2	7	9	31	14	48	4	14	29	100	11	38	18	62
러시아	30	3	10	17	57	9	30	1	3	30	100	20	67	10	33
몽골	29	16	55	8	28	4	14	1	3	29	100	24	83	5	17
x=55.67861 p=0.00000												x=21.87321 p=0.00055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66.7%로 한국(66.7%)이나 러시아(66.7%)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매우 도움이 된다’도

응답한 비율(30%)이 한국(6.7%) 및 러시아(1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긍정의 강도 측면에서 일본 전문가들이 APEC의 역할에 대해서 중국 및 한국의 전문가들에 비해서 보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어느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중국을 지목한 응답자의 비율(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일본(27.9%)과 한국(14.9%)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가로 지목되었다.

전체적인 응답비율과 가장 유사한 응답을 한 전문가는 몽골이었다. 몽골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중국(41%), 일본(33%), 한국(15%) 순으로 꼽은 것이다.

<표 V-11>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국가

	사례 수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참여국 모두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54	23	14.9	66	42.9	43	27.9	1	0.6	9	5.8	10	6.5	2	1.3	154	100.0
한국	27	7	25.9	6	22.2	10	37.0	0	0.0	4	14.8	0	0.0	0	0.0	27	100.0
중국	18	2	11	13	72	2	11	0	0	0	0	1	6	0	0	18	100
일본	29	5	17	10	35	14	48	0	0	0	0	0	0	0	0	29	100
미국	25	3	12	11	44	6	24	0	0	3	12	0	0	2	8	25	100
러시아	28	2	7	15	54	2	7	0	0	0	0	9	32	0	0	28	100
몽골	27	4	15	11	41	9	33	1	4	2	7	0	0	0	0	27	100
x=83.25354 p=0.00000																	

일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한 국가의 전문가들은 한국(37%)과 일본(48%)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최고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의 전문가들은 중국(72%), 미국(44%), 러시아(54%)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에도 2순위이기는 하지만 35%나 되는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역할에 비해 일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문가 대부분이 자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은, 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같은 수준(11%)으로 강조하였으며, 러시아도 7%로 같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25.9%)과 중국(22.2%)의 역할을 강조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국의 역할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12%)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자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응답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14.8%)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문가들은 세계 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장이 동북아지역에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전문가가 자국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 전문가 31.4%

가 자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 소결

경제공동체의 형성의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식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인식은 국가마다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동북아공동체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확대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첫째는, 각 국가들이 구체적인 사업이나 협력방식에 있어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국가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경제에 유익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꼽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주는 중요성과 기대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리적으로 결합하기 어렵지만,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이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별다른 기대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가 동북아지역 경제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동북아지역에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자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중·일 전문가들이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는데 있어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국가의 전문가들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능적인 측면에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의존도를 증대시켜 나가면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강조된다 하겠다.

3. 안보협력

가. 동북아지역의 안보 상황 평가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 안보질서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면,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군사적

이해가 첨예하고 충돌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질서는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시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대외정책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확산, 핵과 미사일 등 WMD 확산 및 국제테러 방지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방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일본을 아·태지역의 군사허브로 삼고 미·일 동맹을 미·영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하고 있다. 10년 만에 경제침체를 회복하고 있는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관계를 바탕으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면서 국제적 역할 확대를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WMD 확산과 국제테러 방지 등 범세계적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반면, 군사 개혁과 현대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성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2차 북핵위기를 둘러싸고 북·미가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 북방영토와 독도 및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중·일·러 간에 상호 갈등과 대립이 자주 노정되고 있다.

동북아의 이러한 안보상황에 대해 역내 국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다.

조사 결과, 6개국 180명의 응답자 중 ‘매우 안정되어 있다’가 1.1%, ‘다소 안정되어 있다’가 27.2%, ‘다소 불안하다’가 56.7%, ‘매우 불안하다’가 14.4%, ‘무응답’이 0.6%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

체로 응답자의 71.1%가 불안정, 28.3%가 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중 ‘매우 불안정’이 14.4%, ‘다소 불안정’이 56.7%로써, 역내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 안보상황이 불안정하지만 매우 심각한 정도로 불안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동북아지역의 안보상황 평가

	사 례 수	매우 안정		다소 안정		다소 불안정		매우 불안정		계		종합			
		n	%	n	%	n	%	n	%	n	%	안정		불안정	
												n	%	n	%
전체	179	2	1.1	49	27.4	102	57.0	26	14.5	179	100.0	51	28.5	128	71.5
한국	30	0	0.0	5	16.7	20	66.7	5	16.7	30	100.0	5	16.7	25	83.3
중국	30	0	0.0	11	36.7	13	43.3	6	20.0	30	100.0	11	36.7	19	63.3
일본	30	1	3.3	2	6.7	18	60.0	9	30.0	30	100.0	3	10.0	27	90.0
미국	29	0	0.0	7	24.1	20	69.0	2	6.9	29	100.0	7	24.1	22	75.9
러시아	30	0	0.0	15	50.0	14	46.7	1	3.3	30	100.0	15	50.0	15	50.0
몽골	30	1	3.3	9	30.0	17	56.7	3	10.0	30	100.0	10	33.3	20	66.7
x = 29.31131 p = 0.01466												x = 15.50479 p = 0.00841			

국가별 빈도차이를 분석할 때, 가장 동북아 안보환경을 ‘불안정’하게 인식하는 국가는 일본(90.0%)이고, 한국(83.3%), 미국(73.3%), 몽골(66.7%), 중국(63.3%), 러시아(5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매우 불안정하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30.0%에 달해 일본이 북한 핵과 미사일,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 이어 중국(20.0%), 한국(16.7%), 몽골(10.0%), 미국(6.7%), 러시아(3.3%) 순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고 응답하였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다소 불안정하다’고 대답한 국가는 한국(66.7%)과 미국(66.7%), 일본(60.0%), 몽골(56.7%), 러시아(46.7%), 중국(43.3%) 순이다.

반면, 가장 동북아 안보환경이 ‘안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50.0%)이고, 중국(36.7%), 몽골(33.3%), 미국(23.3%), 한국(16.7%), 일본(10.0%) 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양국의 7~9%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한반도 안정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안보환경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러시아(50.0%), 중국(36.7%), 몽골(30.0%), 미국(23.3%), 한국(16.7%) 순으로 ‘다소 안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 동북아안보공동체의 지역안정 기여도

유럽에서는 냉전시대이었던 1975년에 이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라는 다자안보대화가 형성되어 지역 평화와 안보유지에 이바지하였고 1990년 독일통일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또한 이는 1995년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 제도화되어 냉전종식 이후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안보위협 요인들에 대응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대화는 정부간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민간차원에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가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민간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만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중국이 1990년 대 중반 이후부터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을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 즉 ‘동북아 평화협력체’와 제도화된 ‘동북아 평화협력기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차원의 동북아안보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 이것이 지역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역내 국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6개국 전체 응답자의 52.8%가 ‘매우 도움이 된다’, 38.9%가 ‘다소 도움이 된다’, 6.7%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0.6%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가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응답자의 91.7%가 동북아안보공동체의 형성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고,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에 높은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역내 6개국 중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의 100%이다. 양국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 53.3%와 ‘다소 도움이 된다’ 46.7%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러시아는 이미 소련 시대부터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를 제의해 왔고, 한국도 냉전종식 이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러시아 다음으로는 몽골(96.7%), 중국(93.3%), 일본(83.3%), 미국(76.6%)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에 대한 응답자 비율이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 비율보다 높으나, 미국의 경

우에만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 역내 국가 중에서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보다는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이 지역안정에 도움 안 된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도 미국(20.0%)으로 나타나 있다.

<표 V-13> 동북아안보공동체의 지역안정 기여도

	사 례 수	매우 도움		다소 도움		거의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종합						
		n	%	n	%	n	%	n	%	n	%	도움됨		도움안됨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78	95	53.4	70	39.3	12	6.7	1	0.6	178	100.0	165	92.7	13	7.3			
한국	30	16	53.3	14	46.7	0	0.0	0	0.0	30	100.0	30	100.0	0	0.0			
중국	30	14	46.7	14	46.7	2	6.7	0	0.0	30	100.0	28	93.3	2	6.7			
일본	29	16	55.2	9	31.0	3	10.3	1	3.4	29	100.0	25	86.2	4	13.8			
미국	29	6	20.7	17	58.6	6	20.7	0	0.0	29	100.0	23	79.3	6	20.7			
러시아	30	16	53.3	14	46.7	0	0.0	0	0.0	30	100.0	30	100.0	0	0.0			
몽골	30	27	90.0	2	6.7	1	3.3	0	0.0	30	100.0	29	96.7	1	3.3			
											x = 44.86533 p = 0.00008				x = 14.92371 p = 0.01069			

다.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국의 중점 분야

냉전종식으로 동서진영 간의 이념적 대립은 종료되었고, 대규모 전쟁 발발의 위협도 감소하였다. 또한 안보·군사 분야에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일본과 중국의 군비증강, 남북한 간의 불신과 대립, 한·일·중·러 간 영토분쟁, 국제테러 등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안보 위협 요인들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어야 하고 역내 국가들은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역내 국가들이 어떠한 안보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를 질의해 보았다.

6개국의 187 응답건수 중 46.5%가 군사적 신뢰구축, 32.1%가 WMD 확산방지, 8.0%가 군비축소, 7.0%가 테러방지, 5.3%가 기타에 대답했고, 1.1%가 무응답이었다. 이는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WMD 확산방지가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역으로 6개국이 동북아 역내 국가 간에는 군사적 신뢰가 아직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WMD 확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개국 중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국가는 한국으로 86.7%이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 76.7%, 일본 48.5%, 러시아 32.3%, 몽골 25.0%, 미국 12.9% 순이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과 중·일의 군사력 증강 정책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WMD 확산방지에 대해서는 미국이 74.2%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몽골 40.6%, 일본 27.3%, 러시아 22.6%, 중국 20.0%, 한국 6.7% 순이다. 미국과 몽골 및 일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국가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군비축소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16.1%, 몽골이 12.5%, 일본이 12.1% 정도로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응답하고 있으나, 한국은 3.3%, 미국은 3.2%, 중국은 0%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소련붕괴 이후 군사력이 대폭 약화된 러시아가 역내 국가들의 군비축소를 중시하는 반면, 한·미·중 3국은 군비축소에는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테러 피해국인 러시아, 일본, 미국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테러방지를 어느 정도 중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테러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한국과 중국은 전혀 중시하지 않고 있다.

<표 V-14>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국의 중점 분야

		테러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축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기타		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72	12	7.0	83	48.3	12	7.0	55	32.0	10	5.8	172	100.0
한국	30	0	0.0	26	86.7	1	3.3	2	6.7	1	3.3	30	100.0
중국	30	0	0.0	23	76.7	0	0.0	6	20.0	1	3.3	30	100.0
일본	27	2	7.4	14	51.9	3	11.1	7	25.9	1	3.7	27	100.0
미국	29	1	3.4	3	10.3	1	3.4	22	75.9	2	6.9	29	100.0
러시아	28	5	17.9	10	35.7	4	14.3	6	21.4	3	10.7	28	100.0
몽골	28	4	14.3	7	25.0	3	10.7	12	42.9	2	7.1	28	100.0
x=74.38808 p=0.00000													

라.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지역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양자간 차원에서는 군사교류·협력 확대와 동맹 강화, 다자간 차원에서는 다자안보대화의 활성화와

다자안보기구의 구성 등이다.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시아에서는 양자간의 군사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한·미, 미·일, 북·중 동맹도 유지되고 있다. 다자간에는 비정부차원의 NEACD가 1993년 이후 정례적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6개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6개국의 184 응답건수의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 Pearson 값이 0.62983이다. Pearson 값이 0.1보다 큰 것은 이 통계의 대표성이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응답건수에 의해 전체빈도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순히 6개국의 180명 중 111명이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구성, 30명이 비정부 차원의 안보대화(NEACD) 활성화, 20명이 양자적 군사교류·협력 확대, 12명이 양자동맹 강화, 7명이 기타라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180명의 응답자들이 양자관계 보다는 다자관계를 통해, 비정부 차원 보다는 정부차원의 제도화를 통해 동북아안보공동체가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구성에는 한국이 30명 중 23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미국이 30명 중 20명, 몽골이 30명 중 19명, 중국이 30명 중 18명, 일본이 30명 중 16명, 러시아 30명 중 15명 순이다. 미국은 역내 국가 중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이 지역안정에 가장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국가이지만, 응답자 30명 중 20명이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는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구성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비정부차원의 안보대화(NEACD) 활성화에는 러시아가 30명

중 9명, 한국이 30명 중 5명, 몽골이 30명 중 5명, 일본과 미국이 각각 30명 중 4명, 중국이 30명 중 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러시아 응답자들이 역내 타국의 응답자들보다 NEACD의 기능과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적 군사교류·협력 확대에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30명 중 5명, 러시아가 30명 중 4명, 몽골이 30명 중 3명, 미국이 30명 중 2명, 한국이 30명 중 1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양자동맹 강화에는 미국과 러시아 및 몽골이 각각 30명 중 3명, 중국이 30명 중 2명, 일본이 30명 중 1명, 한국이 30명 중 0명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동북아안보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미국 응답자들은 양자동맹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표 V-15>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사 례 수	양자적 군사 교류협력 확대		양자동맹 강화		비정부 차원의 안보대화 (NEACE) 활성화		동북아 다자 안보기구 구성		기타		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75	19	10.9	10	5.7	28	16.0	111	63.4	7	4.0	175	100.0
한국	30	1	3.3	0	0.0	5	16.7	23	76.7	1	3.3	30	100.0
중국	29	4	13.8	1	3.4	4	13.8	19	65.5	1	3.4	29	100.0
일본	29	5	17.2	1	3.4	4	13.8	16	55.2	3	10.3	29	100.0
미국	30	2	6.7	3	10.0	4	13.3	20	66.7	1	3.3	30	100.0
러시아	29	4	13.8	2	6.9	8	27.6	15	51.7	0	0.0	29	100.0
몽골	28	3	10.7	3	10.7	3	10.7	18	64.3	1	3.6	28	100.0
$x = 17.35487 \quad p = 0.62983$													

마.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대한 ARF 기여도

1994년 형성된 ARF는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과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외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다자안보

대화체이다. 북한도 2000년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이 25개국이다. 따라서 ARF는 남북한·미·일·중·러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차원의 다자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ARF는 그동안 역내 유일의 지역안보문제 토론기구로 정착하였고, 초보적 신뢰구축조치의 이행을 통해 역내 긴장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ARF가 실천력 부족과 비효율적 논의기구로 전락하였고, 핵심 안보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ARF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6개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6개국의 180명 응답자 중 ‘다소 도움이 된다’ 53.3%,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25.6%, ‘매우 도움이 된다’ 17.8%,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8%, 무응답 0.6%의 비율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71.1%,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가 28.3%이다. 따라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ARF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들 중 가장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몽골로서 93.3%이고, 한국과 일본 73.3%, 러시아 63.3%, 미국 30.0% 순이다. 몽골의 경우에만 ‘매우 도움이 된다’와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46.7%)이 같을 뿐,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 보다 훨씬 많다. 이는 대다수의 역내 국가들은 ARF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미국의 경우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70.0%)가 ‘도움이 된다’는 평가(30.0%) 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평가는 미국이 아·태지역이라는 광역차원에서는 다자안보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나 동북아라는 소지역 차원에서는 소극적인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56.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13.3%이다.

<표 V-16>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대한 ARF의 기여도

		매우 도움		다소 도움		거의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종합			
		n	%	n	%	n	%	n	%	n	%	도움됨		도움안됨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79	32	17.9	96	53.6	46	25.7	5	2.8	179	100.0	128	71.5	51	28.5
한국	30	1	3.3	21	70.0	8	26.7	0	0.0	30	100.0	22	73.3	8	26.7
중국	30	3	10.0	25	83.3	2	6.7	0	0.0	30	100.0	28	93.3	2	6.7
일본	29	5	17.2	17	58.6	7	24.1	0	0.0	29	100.0	22	75.9	7	24.1
미국	30	1	3.3	8	26.7	17	56.7	4	13.3	30	100.0	9	30.0	21	70.0
러시아	30	8	26.7	11	36.7	10	33.3	1	3.3	30	100.0	19	63.3	11	36.7
몽골	30	14	46.7	14	46.7	2	6.7	0	0.0	30	100.0	28	93.3	2	6.7
$\chi^2 = 71.52702 \quad p=0.00000$												$\chi^2 = 40.70043 \quad p=0.00000$			

바.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의 장애 국가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는 안보질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북아에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공동체의 형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안보대화체와 관련해서 동

북아지역에서는 현재 민간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 만
이 기능을 하고 있다.

냉전종식 이후 역내 국가들은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들을 하여 왔으나 일부 국가들의 반대
나 소극적인 입장과 정책 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어느 국가가 가
장 장애가 되는 지를 6개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에
게 물었다.

6개국의 190 응답건수 중 52.1%가 북한, 18.9%가 미국, 14.7%
가 일본, 11.1%가 중국, 1.6%가 한국, 0.5%가 러시아라고 각각 대
답하였고, 1.1%가 무응답이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은 동북아안
보공동체 형성에 가장 장애가 되는 국가를 압도적으로 북한이라
고 판단하고 있고 미·일·중을 약간의 장애국가로 보고 있다.

6개국의 190 응답건수를 분석할 때, 중국을 제외한 5개국은 모두
북한을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가장 장애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북한을 장애국가라고 응답(80.0%)하였고, 다음으로는
러시아(66.7%), 일본(53.3%), 한국(52.9%), 몽골(45.5%), 중국(18.2%)
순이다. 미국을 가장 장애국가로 응답한 국가는 중국(30.3%)이고,
다음으로는 몽골(24.2%), 러시아(20.0%), 한국(17.6%), 일본(13.3%),
미국(6.7%) 순이다. 일본을 가장 장애국가로 응답한 국가는 중국
(51.5%)이고, 다음으로는 한국(17.6%), 러시아(13.3%), 일본(3.3%),
미국과 몽골(0.0%) 순이다. 중국을 가장 장애국가로 응답한 국가는
일본(23.3%)이고, 다음으로는 몽골(18.2%), 미국(13.3%), 한국(11.8%),
러시아와 중국(0.0%) 순이다.

미·일은 북한, 중국 순으로 장애국가를 응답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일본(51.5%)·미국(30.3%)·북한(18.2%) 순으로 장애국가를 응답하고 있다. 이는 미·일은 중국을, 중국은 미·일을 견제하고 있는 현재의 동북아 안보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유사하게 북한, 미국, 일본 순으로 이들을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의 장애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표 V-17>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의 장애국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70	2	1.2	18	10.6	23	13.5	95	55.9	32	18.8	170	100.0
한국	26	0	0.0	2	7.7	3	11.5	16	61.5	5	19.2	26	100.0
중국	28	0	0.0	0	0.0	15	53.6	5	17.9	8	28.6	28	100.0
일본	29	1	3.4	7	24.1	1	3.4	16	55.2	4	13.8	29	100.0
미국	30	0	0.0	4	13.3	0	0.0	24	80.0	2	6.7	30	100.0
러시아	30	0	0.0	0	0.0	4	13.3	20	66.7	6	20.0	30	100.0
몽골	27	1	3.7	5	18.5	0	0.0	14	51.9	7	25.9	27	100.0
$\chi^2 = 76.55007 \quad p = 0.00000$													

사. 소결

동북아 역내 6개국 180명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안보분야에 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역내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 안보상황이 불안정하지만 매우 심각한 정도로 불안정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안정’하게 인식하는 국가는 일본(90.0%)이고, 한국(83.3%), 미국(73.3%), 몽골(66.7%), 중국(63.3%), 러시아

(50.0%)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 개발, 최근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 등과 관련이 있고, 수년 간 계속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 안보 질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역내 국가들 간에 높은 정도(91.7%)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도움이 안 된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양자동맹을 중시하는 미국(20.0%)이다.

셋째,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분단국가이며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위협을 느끼는 한국(86.7%)과 중국(76.7%)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우려하는 미국(74.2%)과 일본(27.3%)은 WMD 확산방지를 각각 지적하였다.

넷째, 6개국의 180명 응답자 중 다수인 111명(61.4%)이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정부 차원의 안보대화(NEACD) 활성화, 양자적 군사교류·협력 확대, 양자동맹 강화 순이다. 이를 통해 역내 전문가들은 양자간 안보·군사관계보다는 다자간 안보대화, 비정부 차원의 안보대화보다는 정부차원의 다자안보기구 형성을 통해 동북아안보공동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을 제외한 5개국은 아·태지역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인 ARF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평가(71.1%)하고 있다. 한편 역내 국가들은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대한 장애국가를 압도적으로 북한(52.1%)

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미·일은 북한·중국 순으로, 중국은 일·미·북한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안보 면에서 미·일 대 중국 간의 상호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기와 같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우리들은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①북핵 문제의 조기해결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를 통한 불안정한 역내 안보상황의 개선, ②미·일 대 중국 간 상호불신 축소, ③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이 지역 안정에 도움 된다는 미국의 인식전환 유도, ④ARF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및 ARF나 북핵 6자회담 등을 통한 정부차원의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및 다자안보기구 형성 등이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4. 정치협력²⁵⁶

동북아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동질성과 공동이해에 대한 인식, 국가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의 필요성과 진행정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갈등요인과의 해결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 형성에 대한 입장과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서 본 설문은 동북아공동체 국가의 정부 간 대화에 대한 인식,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평가,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ASEAN+3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국가 등에 대

²⁵⁶ 김성진, “동북아 정치협력 인식조사 결과 분석”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5. 10. 20).

한 설문을 물어보았다. 동북아국가들은 역사적 문제, 영토문제, 소수민족문제 등의 민감한 문제영역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 각국은 관련 상대국을 비난해왔으며,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법적, 역사적 관점,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와 과정,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들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관련국가들 사이에 상호 불신을 배가시킴으로써 공동체 형성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왔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신규회원국은 회원국과 ‘영토문제’가 없어야 하며, 영토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입의 선결조건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북아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한·중·일 3국간에는 여전히 ‘영토문제’ 혹은 영토를 둘러싼 일방적 혹은 쌍무적인 갈등이 진행 중이다.

본 설문은 향후 동북아공동체의 정치적 협력을 둘러싼 보다 구체적인 문제와 그 요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 정부간 대화 진행에 대한 의견

본 설문에서는 동북아공동체의 국가 간의 정치차원의 대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정부간의 대화는 공동체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기초적인 방법이며, 이에 따라 공동체의 정부차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는 동북아공동체에서 정부 간 대화가 ‘다소 적다’는 입장(52.8%)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 36%의 응답자가 ‘다소

많다'고 답변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다소 많다'는 의견은 몽골 응답자(56.7%)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와 중국(각각 43.3%),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의 순(각각 약 20~28% 정도)으로 나타났다.

<표 V-18> 정부간 대화 진행에 대한 의견

		매우 많음		다소 많음		다소 적음		매우 적음		계		종합			
		n	%	n	%	n	%	n	%	n	%	많음		적음	
												n	%	n	%
전체	178	6	3.4	64	36.0	94	52.8	14	7.9	178	100.0	70	39.3	108	60.7
한국	30	1	3.3	6	20.0	20	66.7	3	10.0	30	100.0	7	23.3	23	76.7
중국	30	0	0.0	13	43.3	17	56.7	0	0.0	30	100.0	13	43.3	17	56.7
일본	29	0	0.0	7	24.1	14	48.3	8	27.6	29	100.0	7	24.1	22	75.9
미국	29	1	3.4	8	27.6	19	65.5	1	3.4	29	100.0	9	31.0	20	69.0
러시아	30	1	3.3	13	43.3	16	53.3	0	0.0	30	100.0	14	46.7	16	53.3
몽골	30	3	10.0	17	56.7	8	26.7	2	6.7	30	100.0	20	66.7	10	33.3
x=40.26990 p=0.00041												x=17.13284 p=0.00425			

동북아공동체 국가 간의 정부간 대화가 '다소 적다'는 의견은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66.7%와 65.7%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응답자 가운데에는 27.6%의 응답자(8명)가 정부간 대화가 '매우 적다'고 응답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견해는 주로 일본의 정치적 입장이 주변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더 많은 대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몽골 응답자들은 정부간 대화가 '매우 많다'거나 '다소 많다'고 응답한 비율(66.7%)이 다른 국가의 응답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 이후 몽골의 대외관계가 확대되고 주변국 정부와의 접촉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동북아공동체에서의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

공동체의 형성에서 누가 갈등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들 인식의 국가별 격차는 상호 신뢰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설문문의 결과는 동북아에서 북한(44.8%), 일본(33.6%), 그리고 미국(9.8%)과 중국(8.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가장 180명의 응답자 가운데 5명(3.5%)만이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라는 응답을 하여, 예시된 국가(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응답자를 국가별로 보면 한국 응답자들은 북한(41.4%), 일본(37.9%), 그리고 미국(17.2%)을 동북아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의 핵위기와 일본의 역사왜곡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는 점과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미국을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로 지목한 응답자는 수치상으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차이는 한국 5명, 중국 4명, 러시아 3명, 그리고 일본 2명 등 근소한 차이로 통계적 의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의 응답자들은 압도적인 다수(82.8%)가 가장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로 일본을 지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을 지목(13.8%)하였다. 중국의 응답자 가운데 북한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에 불과하며, 이는 중·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응답자들은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로 상대적으로 다양

한 국가를 지목하고 있다. 우선 일본 응답자의 40.7%는 북한이 동북아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29.6%)과 한국(14.8%)을 지목하였다. 특히 일본 응답자 가운데 2명은 자국이 동북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북아공동체 국가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문제시 하고 있는 응답자군은 미국의 응답자들이었다. 이들은 압도적 다수(82.1%)가 북한이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라고 답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일본(3명, 10.7%)과 중국(2명 7.1%)을 지목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물론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동북아에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19> 동북아공동체에서의 갈등 야기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43	5	3.5	12	8.4	48	33.6	64	44.8	14	9.8	143	100.0
한국	29	0	0.0	1	3.4	11	37.9	12	41.4	5	17.2	29	100.0
중국	29	0	0.0	0	0.0	24	82.8	1	3.4	4	13.8	29	100.0
일본	27	4	14.8	8	29.6	2	7.4	11	40.7	2	7.4	27	100.0
미국	28	0	0.0	2	7.1	3	10.7	23	82.1	0	0.0	28	100.0
러시아	30	1	3.3	1	3.3	8	26.7	17	56.7	3	10.0	30	100.0
x = 88.95794 p = 0.00000													

북한과 동맹국관계에 있는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역시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의 전문가들과 다소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응답자들은 56.7%가 북한을, 그리고 26.7%가 일본

을 동북아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라고 답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반응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따라 중국과의 갈등소지가 급격히 감소한데 비해, 현재 진행중인 북핵 위기와 일본과의 영토 문제 등 러시아의 당면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러시아의 외교정책개념이나 국가안보개념 등 공식문서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 형성을 커다란 국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질문이 동북아공동체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 응답자의 다수가 미국을 이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지역문제를 고려한 응답인 것으로 보인다.

다. 언급한 국가가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

그렇다면 동북아공동체 국가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는 국가는 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일까? 응답자들은 정치체제의 차이 혹은 정치체제의 문제(38.6%), 패권추구 성향의 정책(22.7%), 그리고 역사적 갈등(18.2%)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각각 18명(7.4%)의 응답자들이 영토분쟁과 기타 문제를 주요 갈등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응답자는 패권추구 성향과 역사적 차이(각각 30.0%), 그리고 정치체제의 차이(26.7%)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중국 응답자들은 패권추구(46.7%)와 역사해석의 차이(33.3%)를 주요 갈등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몽골, 미국, 그리고 일본의 응답자들은 정치체제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갈등요

인이라고 답하였으며(각각 64.3%, 50.0%와 55.2%), 미국 응답자의 33.3%는 기타 의견을, 그리고 몽골 응답자의 25.0%는 역사적 해석의 차이가 분쟁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동북아공동체에서의 주요 갈등요인에 대한 이러한 응답은 다분히 주요 갈등과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에 대한 인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주요 갈등이라고 지적한 정치체제의 문제는 주로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한 응답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²⁵⁷ 이에 비해 미국과 중국을 분쟁을 야기하는 주요 국가라고 답한 응답자는 패권(미국을 주요 갈등 국가로 지적한 응답자 전원,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응답자의 46.7%)을 주요 갈등 이유라고 지적하였다.²⁵⁸ 일본을 주요 갈등국가로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도 역사적 해석의 차이(21명, 42.9%), 패권추구(11명, 22.4%), 그리고 영토분쟁(10명, 20.4%), 정치체제의 차이성(3명, 6.1%)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로 정치체제의 상이성(3명)과 기타 이유(2명)가 지적되었으나, 이러한 의견은 전체의견의 3.5%에 불과하다.

이를 쟁점별로 정리하면, 패권에 대한 우려는 대체로 미국(35.0%), 일본(27.5%), 중국(17.5%)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체제의

²⁵⁷ 동북아공동체의 주요 갈등요인으로 정치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의 80.0%(40명)는 북한이 동북아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국가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비율은 북한을 주요 갈등 국가로 지적한 응답자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을 주요 갈등국가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정치체제의 차이(63.5%), 기타(15.9%), 그리고 패권추구(1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의견은 주로 미국 응답자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²⁵⁸ 중국을 주요 갈등국가로 지적한 응답자 가운데 패권추구를 제외하면 4명(26.7%)은 중국의 정치체제의 차이를, 그리고 2명(13.3%)은 경제마찰을 그 이유로 응답하였다.

차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인식은 주로 북한(80.0%)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영토문제(90./9%)와 역사 해석의 차이(84.0%)로 갈등을 야기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주로 일본이 동북아공동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언급한 국가의 갈등 야기 이유

	사 례 수	역사 해석의 차이		경제적 마찰		영토분쟁		정치 체제의 차이		패권추구		기타		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76	32	18.2	5	2.8	13	7.4	68	38.6	40	22.7	18	10.2	176	100.0
한국	30	9	30.0	0	0.0	1	3.3	8	26.7	9	30.0	3	10.0	30	100.0
중국	30	10	33.3	1	3.3	2	6.7	3	10.0	14	46.7	0	0.0	30	100.0
일본	29	2	6.9	1	3.4	0	0.0	16	55.2	6	20.7	4	13.8	29	100.0
미국	30	2	6.7	1	3.3	2	6.7	15	50.0	0	0.0	10	33.3	30	100.0
러시아	29	2	6.9	1	3.4	6	20.7	8	27.6	11	37.9	1	3.4	29	100.0
몽골	28	7	25.0	1	3.6	2	7.1	18	64.3	0	0.0	0	0.0	28	100.0
x=87.81658 p=0.00000															

이러한 인식을 정리하면 동북아공동체에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인식을 벗어나려면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패권’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경우는 당면한 핵 위기의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대체로 영토나 패권적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보다 다수는 역사인식이라는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일본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서 한국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3명)는 모두 한국의 정치체제의

차이를 그 이유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은 한국이 여전히 정치적 민주화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V-21>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와 갈등요인의 교차분석

		갈등요인						전체
		역사	경제	영토	정치	패권	기타	
한국	빈도	0	0	0	3	0	2	5
	갈등국가(%)	0.0	0.0	0.0	60.0	0.0	40.0	100.0
	갈등이유(%)	0.0	0.0	0.0	6.0	0.0	12.5	3.4
중국	빈도	1	2	0	4	7	1	15
	갈등국가(%)	6.7	13.3	0.0	26.7	46.7	6.7	100.0
	갈등이유(%)	4.0	50.0	0.0	8.0	17.5	6.3	10.3
일본	빈도	21	1	10	3	11	3	49
	갈등국가(%)	42.9	2.0	20.4	6.1	22.4	6.1	100.0
	갈등이유(%)	84.0	25.0	90.9	6.0	27.5	18.8	33.6
북한	빈도	3	1	1	40	8	10	63
	갈등국가(%)	4.8	1.6	1.6	63.5	12.7	15.9	100.0
	갈등이유(%)	12.0	25.0	9.1	80.0	20.0	62.5	43.2
미국	빈도	0	0	0	0	14	0	14
	갈등국가(%)	0.0	0.0	0.0	0.0	100.0	0.0	100.0
	갈등이유(%)	0.0	0.0	0.0	0.0	35.0	0.0	9.6
전체	빈도	25	4	11	50	40	16	146
	갈등국가(%)	17.1	2.7	7.5	34.2	27.4	11.0	100.0
	갈등이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위 분석에서는 몽골 응답자 30명과 sysmis로 처리된 4명의 응답자가 제외되었음 (N=146).

라. 향후 동북아공동체의 문제해결 방식

본 설문에서는 문제와 그 요인에 대한 인식과 함께 문제해결에 필요한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로 동북아공동체 국가 간의 대화를 상정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향후 동북아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

해 어떤 방식의 정부간 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먼저 응답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정상회담(57.1%)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무회담(17.1%)과 장관급회담(14.9%)이 그 뒤를 이었다.

<표 V-22> 향후 동북아공동체의 문제해결 방식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실무회담		분야별 민간 전문가 회담		기타		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75	100	57.1	26	14.9	30	17.1	14	8.0	5	2.9	175	100.0
한국	30	25	83.3	1	3.3	1	3.3	2	6.7	1	3.3	30	100.0
중국	29	12	41	3	10	14	48	0	0	0	0	29	100
일본	30	12	40	3	10	6	20	9	30	0	0	30	100
미국	27	9	33	10	37	5	19	1	4	2	7	27	100
러시아	29	21	72	5	17	2	7	0	0	1	3	29	100
몽골	30	21	70	4	13	2	7	2	7	1	3	30	100
$\chi^2 = 74.66347$ $p = .00000$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응답자의 경우는 압도적 다수(25명, 83.3%)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미국 응답자는 정상회담(33.3%)과 장관급회담(37.0%)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우는 한국, 러시아(72.4%), 몽골(70.0%)의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응답자들의 경우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정상회담(41.4%)보다는 실무회담(48.3%)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본 응답자들은 정상회담(40.0%)과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 회담(30.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개별국가 간의 정책결정과정의 차이나 결정과정에서의 문화적 차이, 그리고 동북아공동체 문제해결의 어려움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에 대한 강조는 정치 실무진의 결심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으며,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결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마. ‘ASEAN+3’의 효과에 대한 인식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존의 틀 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과 문제를 타결하는 방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문에서는 ‘ASEAN+3(한·중·일)’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표 V-23> ‘ASEAN+3’의 효과에 대한 인식

		많이 영향 미침		다소 영향 미침		거의 영향 없음		전혀 영향 없음		계		종합			
		n	%	n	%	n	%	n	%	n	%	영향미침		영향없음	
												n	%	n	%
전체	178	53	29.8	97	54.5	26	14.6	2	1.1	178	100.0	150	84.3	28	15.7
한국	30	6	20.0	21	70.0	3	10.0	0	0.0	30	100.0	27	90.0	3	10.0
중국	30	8	26.7	20	66.7	2	6.7	0	0.0	30	100.0	28	93.3	2	6.7
일본	29	9	31.0	14	48.3	5	17.2	1	3.4	29	100.0	23	79.3	6	20.7
미국	30	3	10.0	16	53.3	10	33.3	1	3.3	30	100.0	19	63.3	11	36.7
러시아	30	6	20.0	20	66.7	4	13.3	0	0.0	30	100.0	26	86.7	4	13.3
몽골	29	21	72.4	6	20.7	2	6.9	0	0.0	29	100.0	27	93.1	2	6.9
x=47.25527 p=0.00003												x=14.89764 p=0.01081			

설문의 결과는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84.3%)가 ‘ASEAN+3’이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에 많은 영향(29.8%)을 주거나 다소 영향(54.5%)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이 질문만 놓고 보아서는 ASEAN의 맥락에서든 무엇이든 정부 간의 대화가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응답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들의 정책적 인식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러의 응답자들은 ‘ASEAN+3’의 방식이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유보적인 인식이 다수(한국 70%와 중·러 각각 66.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유보적인 인식이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신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31.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 응답자들은 여전히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53.3%),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33.3%에 달하여 인식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몽골 응답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다수(72.4%)가 ‘ASEAN+3’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ASEAN+3’의 구도에 대해 동북아공동체 국가들 가운데 중 몽골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중·러의 응답자들은 비교적 소극적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미국의 응답자들은 소극적인 긍정이나 소극적인 부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가장 노력해야 하는 국가

본 설문에서는 어떤 국가가 동북아공동체형성에 가장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향후 동북아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와 둘째로 어느 국가가 장애로 작용하기를 그만두어야 하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질성과 역사적 경험의 공유문제를 차치하고 이미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은 영토분쟁과 역사해석 등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 패권을 둘러싼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담당했던 견인차의 역할을 할 국가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질문은 향후 통합에 대한 인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맥락에서 응답자의 다수는 중국(44명, 26.4%)과 일본(41명, 25.0%)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뒤를 이어 한국(29명 17.7%), 미국 (26명, 15.9%), 러시아 (10명, 6.1%), 그리고 북한(9명,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별 응답의 차이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 응답자들은 40.0%가 미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어 일본(23.3%), 그리고 중국과 한국(각각 16.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중국의 응답자들은 일본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46.4%), 이어 한국(17.9%)과 중국(14.3%)의 순으로 답하

였다. 이에 비해 일본 응답자들은 일본(46.4%), 중국(25.0%), 한국(21.4%)의 순으로 응답하여 자국이 공동체 형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러시아의 응답자들은 중국(48.1%), 러시아(33.3%), 그리고 한국(14.8%)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적하는 응답이 개별 국가별로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 응답자들은 중국(36.4%), 한국(23.1%), 그리고 미국(19.2%)의 순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체 형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V-24>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가장 노력해야 하는 국가

	사 례 수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참여국 모두		계	
		n	%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64	29	17.7	44	26.8	41	25.0	9	5.5	26	15.9	10	6.1	5	3.0	164	100.0
한국	30	5	16.7	5	16.7	7	23.3	1	3.3	12	40.0	0	0.0	0	0.0	30	100.0
중국	28	5	17.9	4	14.3	16	57.1	0	0.0	1	3.6	0	0.0	2	7.1	28	100.0
일본	28	6	21.4	7	25.0	13	46.4	0	0.0	1	3.6	1	3.6	0	0.0	28	100.0
미국	26	6	23.1	9	34.6	2	7.7	1	3.8	5	19.2	0	0.0	3	11.5	26	100.0
러시아	27	4	14.8	13	48.1	1	3.7	0	0.0	0	0.0	9	33.3	0	0.0	27	100.0
몽골	25	3	12.0	6	24.0	2	8.0	7	28.0	7	28.0	0	0.0	0	0.0	25	100.0
$\chi^2 = 138.97382 \quad p = 0.00000$																	

이러한 다소 산만해 보이는 결과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양면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공동체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에 대한 질문과 이 질문을 교차분석할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응답자가 이전의 질문 ‘동북아공동체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로 지목했던 국가를 동북아공동체를 위해 향후 ‘노력’해야 할 국가로 언급한다면 이는

지목한 국가가 향후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25> 동북아공동체에 ‘갈등유발 국가’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인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가							전체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미국	러시아	모두	
한국	한국	빈도	2	1	1	0	0	1	0	5
		분쟁국(%)	40.0	20.0	20.0	0.0	0.0	20.0	0.0	100.0
		노력국(%)	6.5	2.5	2.6	0.0	0.0	10.0	0.0	3.4
	중국	빈도	3	5	6	0	1	0	0	15
		분쟁국(%)	20.0	33.3	40.0	0.0	6.7	0.0	0.0	100.0
		노력국(%)	9.7	12.5	15.4	0.0	5.3	0.0	0.0	10.3
	일본	빈도	10	8	21	1	3	5	1	49
		분쟁국(%)	20.4	16.3	42.9	2.0	6.1	10.2	2.0	100.0
		노력국(%)	32.3	20.0	53.8	50.0	15.8	50.0	20.0	33.6
북한	빈도	13	24	8	1	11	3	4	64	
	분쟁국(%)	20.3	37.5	12.5	1.6	17.2	4.7	6.3	100.0	
	노력국(%)	41.9	60.0	20.5	50.0	57.9	30.0	80.0	43.8	
미국	빈도	3	2	3	0	4	1	0	13	
	분쟁국(%)	23.1	15.4	23.1	0.0	30.8	7.7	0.0	100.0	
	노력국(%)	9.7	5.0	7.7	0.0	21.1	10.0	0.0	8.9	
전체	빈도	31	40	39	2	19	10	5	146	
	분쟁국(%)	21.2	27.4	26.7	1.4	13.0	6.8	3.4	100.0	
	노력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분쟁을 야기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에서 몽골은 제외되었으며, 두 문항에서 기타 응답을 한 4명은 제외됨(N=146). 본문에서 인용되는 백분율과 표의 ‘전체’ 항목상의 백분율의 차이는 몽골 응답자 30명을 제외한 데에서 비롯된 것임.

위의 표는 이러한 유추를 통해 각 국가들이 향후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노력’의 성격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에서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분쟁을 야기하는 국가로 지목한 응

답자가 이번 질문항목에서 다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국가로 지목한 경우의 수이다. 이는 이들 국가가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갈등을 자제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면 동북아공동체에서 향후 노력해야 할 국가로 지적된 중국(26.8%), 일본(25.0%), 한국(17.7%), 그리고 미국(15.9%) 가운데 일본은 상대적으로 향후 진행해야 할 노력의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향후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들은 이전의 질문에서 주로 북한이 갈등을 유발하는 국가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경우 미국의 적극적 역할은 소극적인 갈등행위의 자제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의미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의미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향후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전체 응답자 가운데 41명, 몽골 응답자 제외시 39명) 가운데 동북아공동체에서 갈등을 유발한 국가로 일본을 지목하였던 응답자는 총21명이며, 이는 일본의 노력을 지적한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응답자들은 동북아공동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본’에 대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여전히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국가에 대해서 공동체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소결

동북아 정치협력에 관한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동북아 공동체의 정치협력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 요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동북아국가들간의 정부차원의 대화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그 동안 동북아국가들간에 정부차원의 대화가 많지 않았다(60.7%)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동안 동북아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는 달리, 정치적인 협력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온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간의 대화가 공동체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의 평화적인 해결의 기초적인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동북아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역내 정부간 대화가 늘어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동북아공동체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에 대한 질문은 국가별 상호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이다. 북한(44.8%)과 일본(33.6%)이 갈등을 가장 많이 야기하는 국가로, 한국이 가장 낮은 퍼센트를 기록한 국가로 지목되었다. 특히 국가별로 지목한 국가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갈등을 야기한 국가로 한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경우는 북한을, 중국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일본(82.8%)을 지목했다. 언급된 국가가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정치체제의 차이 혹은 정치체제의 문제, 패권추구 성향, 그리고 역사적 갈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북한이 가장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와 현재 핵문제로 인해 역

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중국의 경우는 지역내 지도국의 위치를 두고 일본과의 세력다툼의 차원에서 그러한 대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의 한 방법으로 ‘ASEAN+3’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의 응답자(84.3%)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거나 다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인들이 ‘ASEAN+3’가 미국을 배제한 동북아공동체를 위한 기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문제에는 향후 동북아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와, 어느 국가가 장애로 작용하기를 그만두어야 하는가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 북한 순으로 동북아를 주도해야 하는 국가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는 한국은 미국을, 중국은 일본을, 일본은 자국을, 러시아는 중국을, 미국은 중국을 지도국으로 꼽고 있어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질문은 위의 갈등을 야기하는 국가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과 연계시켜 보았을 때, 각 국가의 전문가들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동북아공동체의 정치분야 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뚜렷하게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바로 동북아의 정치협력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동북아지역협력의 우선 순위는

지역의 정치적 인식의 차를 좁히고, 정부차원의 대화를 증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완화하는 일도 정치협력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정치협력을 주도해 나가면서, 정치협력을 위한 다자간 기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로 지목된다.

5. 문화협력

가. 동북아 문화교류 수준

동북아지역의 협력을 위해서는 경제, 안보 및 정치분야의 협력만으로는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차원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국가 간의 문화협력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문화협력은 어느 일방의 영향력이 관철되거나 수용되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이질성이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공통된 문화를 창조해가는 과정이자 수단이다.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문화공동체의 방향을 지향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란 동북아국가들이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상당 정도의 정신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고 현 시대에 나타나는 서로의 문화적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세계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연대체제’를 의미한다.²⁵⁹

여기에서는 이러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에 필요한 동북아 지역의 문화협력 인프라 실태에 관한 동북아 각국 전문가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국가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그러나 문화교류의 속성상, 동북아 각국이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교류정도에 대한 판단기준과 교류수준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즉, 각국이 상대 국가의 문화적인 특징과 전통, 역사 그리고 문화수준에 대한 인식차이에 따라 문화교류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동북아 각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에게 “선생님께서서는 동북아공동체 국가 간의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의 결과가 <표 V-26>이다.

<표 V-26> 동북아 문화교류 수준

	사 례 수	활발히 이루어짐		다소 이루어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계		종합			
		n	%	n	%	n	%	n	%	있음		없음	
										n	%	n	%
전체	179	33	18.4	122	68.2	24	13.4	179	100.0	155	86.6	24	13.4
한국	30	8	26.7	21	70.0	1	3.3	30	100.0	29	96.7	1	3.3
중국	30	8	26.7	22	73.3	0	0.0	30	100.0	30	100.0	0	0.0
일본	30	6	20.0	22	73.3	2	6.7	30	100.0	28	93.3	2	6.7
미국	29	1	3.4	16	55.2	12	41.4	29	100.0	17	58.6	12	41.4
러시아	30	1	3.3	21	70.0	8	26.7	30	100.0	22	73.3	8	26.7
몽골	30	9	30.0	20	66.7	1	3.3	30	100.0	29	96.7	1	3.3
$\chi^2 = 43.09603 \quad p = 0.00000$										$\chi^2 = 35.15013 \quad p = .00000$			

²⁵⁹ 최송화, 21세기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p. 36.

<표 V-26>를 보면, 동북아 6개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인식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와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응답이 86.6%로 나타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13.4%를 압도했다. 그러나 동북아의 문화교류 수준이 활발한 편이라는 인식은 18.4%인데 반해 다소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68.2%여서, 동북아 각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가 일정 수준 진행되고는 있으나, 활성화된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의 전문가들은 93% 이상 심지어 중국의 전문가들은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다만, 문화교류의 수준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인식한 전문가들은 30%이하에 머물러 있어, 이들 국가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 실태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보다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나마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70%)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55.2%의 전문가만이 응답해 ‘활발하다’(3.4%)는 응답을 포함해도 동북아국가 중에 가장 적은 58.6%만이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41.4%에 달하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의 문화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및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나머지 동북아국가들과 역사, 지리적인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에 미국 및 러시아를 포함시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장기적인 인식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동북아문화공동체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가 간 혹은 지역 간 연대의 틀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동체란, ‘이해관계에 매이지 않는 가치의 공유범역’ 또는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정 범역의 인구집단들 및 그 삶의 틀’ 정도로 해석된다. 문화공동체는 그 틀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이 예술, 학문 등 문화일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국제기구로서 성립하기는 어렵다. 즉, 동북아의 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나 안보공동체와 같이 구체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다.²⁶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은 동북아지역의 협력체 형성에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 동북아문화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은 요원하다. 사실, 동북아 각국은 문화공동체 형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그 형성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그것을 제거해나가는 수순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²⁶⁰ 최송화, 21세기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구상, pp. 57~61.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선생님께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를 통해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은 다양하나, 본 연구의 특성과 조사의 편의를 감안하여 4개의 보기를 제시했다. 즉, 문화교류의 부족,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 공통된 문화기반의 부족, 각국의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첫 번째 보기인 문화교류는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1번 문항과 관련이 있으며, 나머지 3개의 보기는 일반적으로 빈도 높게 제시되고 있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중에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동북아 6국의 지역정체성을 감안하여 선별하였다. 그 대신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개의 보기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설문 결과는 <표 V-27>과 같다.

<표 V-27>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

	사 례 수	문화 교류의 부족		공통된 역사 인식의 결여		공통된 문화 기반의 부족		각국의 민족주의		기타		계	
		n	%	n	%	n	%	n	%	n	%	n	%
전체	168	9	5.4	57	33.9	11	6.5	74	44.0	17	10.1	168	100.0
한국	29	0	0.0	5	17.2	0	0.0	23	79.3	1	3.4	29	100.0
중국	29	4	13.8	11	37.9	0	0.0	13	44.8	1	3.4	29	100.0
일본	28	0	0.0	12	42.9	0	0.0	12	42.9	4	14.3	28	100.0
미국	24	2	8.3	4	16.7	1	4.2	12	50.0	5	20.8	24	100.0
러시아	28	0	0.0	14	50.0	3	10.7	7	25.0	4	14.3	28	100.0
몽골	30	3	10.0	11	36.7	7	23.3	7	23.3	2	6.7	30	100.0
x=57.19031 p=0.00002													

먼저, 동북아 6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종합해 보면,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은 ‘각국의 민족주의’(44%)를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33.9%)와 ‘공통된 문화기반의 부족’(6.5%) 그리고 ‘문화교류의 부족’(5.4%)을 차례로 지적하였다.

이를 다시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각국의 민족주의’(79.3%)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일부는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17.2%)도 지목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각국의 민족주의’(44.8%),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37.9%), ‘문화교류의 부족’(13.8%)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국가체제’를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으로 ‘각국의 민족주의’와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를 동일(42.9%)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타 의견을 통해 동북아의 문화공동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정치체제와 정치적 결단력이 문화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전체 평균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제시한 보기 이외의 기타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가 20.8%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교육문제를 제외하면, 정치안보, 정치체제, 지도력, 이념, 정치적 갈등 등 대부분이 정치문제와 관련한 것들이었다.

러시아 전문가의 인식은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50%), ‘각국의 민족주의’(25%), ‘공통된 문화기반의 부족’(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사고방식의 다양성’과

‘문화적 우월성 경쟁’을 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몽골 전문가들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은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36.7%), ‘공통된 문화기반의 부족’(23.3%), ‘각국의 민족주의’(23.3%), ‘문화교류의 부족’(10.%)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각 요인별로 각국 전문가의 인식을 비교해 보면, ‘각국의 민족주의’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79.3%)이 단연 으뜸으로서 동북아 전체평균인 42.3%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국에 이어 미국(50%), 중국(44.8%), 일본(42.9%)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러시아(25%)와 몽골(23.3%)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다음으로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로서 전체평균인 33.9%보다 높은 50%를 기록했다. 평균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국가는 차례로 일본(42.9%), 중국(37.9%), 몽골(36.7%)이었으며, 한국(17.2%)과 미국(16.7%)은 상대적으로 적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체평균이 6.5%에 불과한 전문가들이 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된 문화기반의 부족’에 대해서 몽골의 전문가(23.3%)들은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우려를 나타냈다. 몽골에 이어 러시아 전문가 10.7%와 미국의 전문가 4.2%가 공통된 문화기반의 부족을 장애 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이에 대해 응답한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어 대조적이었다. 이는 동북아의 대표적인 3국이 한자문화와 유가문화

등 공통의 문화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교류의 부족’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는 중국(13.8%)이 가장 많았으며, 몽골(10%), 미국(8.3%)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 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응답하지 않았다. 동북아 문화교류 수준을 묻는 1번 문항과 관련하여, 중국의 전문가 전원이 동북아에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로 볼 때, 중국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문화교류의 부족을 지목한 것은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문화교류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은 ‘각국의 민족주의’를, 러시아와 몽골은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를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향후 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은 민족주의를 상호 자극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통된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동북아 3국이 중심이 되어 문화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점차 동북아 각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선 교류분야

앞 문항에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북아 각국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장애요인을 찾았다면, 이번 문항에서는 동북아 각국 전문가들의 인식을 통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협력은 동북아 각국 간 문화의 공유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교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 문항에서 보듯이,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류의 활성화 수준은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어느 방면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에 대해 동북아 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께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느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영역과 다양한 동북아 6개국의 구성을 감안하여, 관광, 스포츠, 예술, 방송, 종교 등 5개 분야를 보기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문화의 광활한 영역과 정치, 경제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기타 분야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설문하였다.

<표 V-28>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선 교류분야

		관광		스포츠		예술분야		방송		종교		기타 분야		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62	60	37.0	8	4.9	31	19.1	30	18.5	11	6.8	22	13.6	162	100.0
한국	27	6	22.2	5	18.5	8	29.6	6	22.2	1	3.7	1	3.7	27	100.0
중국	28	14	50.0	2	7.1	6	21.4	4	14.3	1	3.6	1	3.6	28	100.0
일본	26	6	23.1	1	3.8	9	34.6	7	26.9	0	0.0	3	11.5	26	100.0
미국	27	5	18.5	0	0.0	5	18.5	4	14.8	0	0.0	13	48.1	27	100.0
러시아	29	13	44.8	0	0.0	1	3.4	6	20.7	6	20.7	3	10.3	29	100.0
몽골	25	16	64.0	0	0.0	2	8.0	3	12.0	3	12.0	1	4.0	25	100.0
x=82.50492 p=.00000															

<표 V-27>은 설문 결과의 정리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은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관광’(37%) 교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은 문화교류의 주체인 사람의 왕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포괄적으로 동반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전문가들의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광 다음으로는 ‘예술’(19.1%)과 ‘방송’(18.5%)이 뒤를 이었는데, 두 분야에 대한 동북아 전문가의 인식 수준은 거의 비슷하였다. 반면 ‘종교’(6.8%)와 ‘스포츠’(4.9%)의 교류를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기타 분야를 제시한 전문가의 비율인 13.6%보다 적어, 이 두 분야의 교류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엘리트 스포츠의 경우 국가간 경쟁이나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공동체 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종교 역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각국 전문가들의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구분해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예술을, 중국, 러시아, 몽골의 전문가들은 관광을 우선 교류분야로 선정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 예술 다음으로 관광이 아닌 방송을 선호하고 있어 사회주의권 국가와 문화적 관념의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관광, 예술, 방송의 비중보다 기타 분야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사실상 우선 교류분야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하다. 기타 분야에 대한 의견도 경제, 교육, 정치, 안보,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의 인식을 교차해서 보면, 동북아 전문가 전체의 인식에서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관광의 경우, 몽골(64%), 중국(50%), 러시아(44.8%)의 전문가들이 평균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일본(23.1%), 한국(22.2%), 미국(18.5%)이 평균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두 번째로 동북아 전문가들이 높게 인식한 예술(19.1%)의 경우, 일본을 필두로 한국과 중국이 평균 이상의 응답을 해 이 부분에 대한 동북아 3국간의 공감대가 제한적이거나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균에 근접한 미국(18.5%)에 몽골(8%)이 뒤를 잇고 있으나, 러시아는 예술 전통이 강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저조한 3.4%의 응답률을 보여 동북아 문화공동체와의 공감대가 약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인 방송(18.5%)의 경우 일본(26.9%), 한국(22.2%), 러시아(20.7%)의 전문가들이 평균 이상의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미국(14.8%), 중국(14.3%), 몽골(12%)의 전문가들은 평균 이하의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모두 1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커다란 특성을 찾기는 힘들다. 이밖에 스포츠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평균 이상의 높은 인식을 보였고, 종교의 경우는 러시아와 몽골이 평균 이상의 인식을 보였는데, 특히 러시아는 기타 국가에 비해 종교분야의 교류에 압도적인 20.7%의 응답을 한 점이 특이했다.

종합하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선 교류분야로 동북아 각국의 전문가들은 관광분야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이 분야의 교류를 바탕으로 동북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선도함으로써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도기관

이번 문항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도출하려는 앞 문항과 연장선상에 있다. 즉, 앞의 문항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류분야를 묻는 질문이었다면, 이번 문항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체를 묻는 질문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6개국의 전문가들에게 “선생님께서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정부, NGOs, 종교단체, 기업, 방송매체 등 5개의 보기를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체는 크게 정부기구와 민간조직으로 대별된다. 정부기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준정부조직 등이 있으나, 이를 세분하지 않고 정부로 통합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간조직의 경우는 문화교류협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4개의 보기를 제시했으며, 동북아 6개국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해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함으로써, 보기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동북아 6개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정부’(42.8%)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NGOs’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 전문가들은 21.4%, ‘방송매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한 전문가들은 20.1%에 달해 NGOs와 방송매체의 역할에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이밖에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8.8%, ‘종교단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한 전문가들은 3.1%에 머물렀다.

<표 V-29>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도기관

		정부		NGOs		종교단체		기업		방송매체		기타 분야		계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59	68	42.8	34	21.4	5	3.1	14	8.8	32	20.1	6	3.8	159	100.0
한국	28	7	25.0	5	17.9	0	0.0	2	7.1	12	42.9	2	7.1	28	100.0
중국	27	15	55.6	7	25.9	1	3.7	2	7.4	0	0.0	2	7.4	27	100.0
일본	26	14	53.8	2	7.7	0	0.0	2	7.7	8	30.8	0	0.0	26	100.0
미국	27	15	55.6	4	14.8	0	0.0	1	3.7	6	22.2	1	3.7	27	100.0
러시아	26	12	46.2	5	19.2	1	3.8	5	19.2	2	7.7	1	3.8	26	100.0
몽골	25	5	20.0	11	44.0	3	12.0	2	8.0	4	16.0	0	0.0	25	100.0
$\chi^2 = 50.38675 \quad p = .00191$															

국가별로 구분해서 보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타국의 전문가들과 달리 ‘정부’보다 ‘방송매체’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최근 방송매체를 통해 유행하고 있는 한류의 영향이 전문가들의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몽골의 전문가 역시 타국의 전문가들과 달리 정부보다 NGOs가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 역시 최근 체제전환 이후 NGOs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몽골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국가의 전문가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전문가들은 정부, NGOs, 기업, 종교단체의 순으로 답했고, 일본의 전문가들은 정부, 방송매체, 기업, NGOs, 종교단체의 순으로 답했으며,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부, 방송매체, NGOs, 기업의 순으로,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정부, NGOs, 기업,

방송매체, 종교단체의 순으로 표기했다. 기타 의견을 통해 제시된 다른 주체를 보면, 한국은 준정부단체와 교육단체를, 일본은 지방자치제와 정치가를, 미국은 문화조직을, 러시아는 track2를 제시하였는데, 대부분이 교류 및 협력 주체로서 정부에 포함 가능하거나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어서 통계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각 주체별 전문가의 인식을 교차해서 보면, 동북아 전문가 전체의 인식에서 4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정부’의 경우, 미국의 55.6%, 중국의 55.6%, 일본의 53.8%의 전문가들이 응답했으며, 러시아 역시 비교적 많은 46.2%의 전문가가 응답했다. 반면에 한국과 몽골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25%와 20%의 응답률을 보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서 NGOs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몽골로서 동북아 전문가 전체 평균인 21.4%를 크게 상회하는 44%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국가는 중국(25.9%)밖에 없으며, 나머지 국가의 전문가들은 평균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제일 적은 7.7%에 불과한 전문가가 표기한 일본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NGOs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방송매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42.9%), 일본(30.8%), 미국(22.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몽골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중국의 전문가들은 단 한사람의 전문가도 표기하지 않아, 방송매체를 문화교류 및 협력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 중 러시아의 전문가가 평균인 8.8%보다 훨씬 높은 19.2%를 기록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종교단체를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는 전체적으로 3.1%에 불과했으나, 몽골의 전문가는 12%나 응답해 타국에 비해 종교단체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동북아 6개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주체로서 NGOs와 방송매체 등 민간의 역할보다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국 정부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주도하면서 동시에 민간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

동북아 6개국 중 문화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라고 인식한 미국과 러시아의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북아 6개국 전문가들은 문화교류가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교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으며, 그런 점에서 동북아 6개국 전문가들은 동북아 문화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향후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동북아 6개국의 전문가들은 각국의 민족주의와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를 지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중국, 미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민족주의를 장애요인으로 공감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몽골의 전문가들은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를 장애요인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전문가들이 상호 공통된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되어 상호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3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북아 6개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우선적인 교류협력분야와 주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설문결과는 동북아 6개국의 전문가들이 우선적으로 교류해야 할 분야로 관광을, 교류협력의 주체로는 정부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우선적인 교류협력 분야로 주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전문가들은 관광에 공감하고 있었고,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예술분야에 공감하고 있었다. 방송 분야의 교류 필요성에도 6개국 전문가들 모두가 비교적 공감하고 있었다.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는 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동북아 6개국 전문가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방송매체의 역할을, 몽골의 전문가들은 NGOs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주체의 역할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통해 볼 때, 동북아지역의 문화협력은 상호 민족주의를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관광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6. 정책방향

정책방향과 관련된 질문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미국의 전문가들의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우선적 추진분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질문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는 한국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데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함께 고려되었다.

가. 동북아지역 협력 현황

본 연구는 동북아지역이 지역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바, 동북아공동체 관련 인프라를 문화, 경제, 안보, 정치분야로 나누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문항은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동북아지역의 지역협력 현황을 물어보는 질문이다. 본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문항을 작성할 당시 공동연구자들은 경제분야의 지역협력이 가장 잘 진행되어 있다고 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본 문항을 만들었다.

6개국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대한 바와 같이 동북아의 협력은 경제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81.3%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화분야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13.6%이었으며, 이는 최근 한류문화가 중국과 일본 및 몽골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정치(3.4%) 및 안

보(1.7%) 분야라고 응답한 결과는 미미하였으며, 이는 동북아에서 정치 및 안보분야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는 갈등양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V-30> 동북아지역 협력 현황

		문화		경제		안보		정치		계	
		n	%	n	%	n	%	n	%	n	%
전체	176	24	13.6	143	81.3	3	1.7	6	3.4	176	100.0
한국	30	1	3.3	29	96.7	0	0.0	0	0.0	30	100.0
중국	30	5	16.7	25	83.3	0	0.0	0	0.0	30	100.0
일본	29	8	27.6	20	69.0	1	3.4	0	0.0	29	100.0
미국	30	1	3.3	29	96.7	0	0.0	0	0.0	30	100.0
러시아	29	3	10.3	25	86.2	0	0.0	1	3.4	29	100.0
몽골	28	6	21.4	15	53.6	2	7.1	5	17.9	28	100.0
x=44.13184 p=0.00010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경제분야의 협력이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7%를 차지함으로써 경제분야에 대한 양국의 큰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 대다수도 (69.0%) 경제분야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5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전문가들이 문화분야의 협력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분야에 대한 응답이 6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응답비율은 일본이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의 양상에 대해서 나머지 5개국과는 다소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 일본내에서 표출되고 있는 한류열풍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

다음문항은 미래지향적 질문으로서 동북아지역 6개국의 전문가들이 동북아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이다. 공동연구자들은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경제분야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응답결과는 기대한 것과 같이 경제분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분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38.4%를 불과하게 나타남으로써, 이 결과를 앞의 문항의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이라 하겠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의 31.6%가 안보분야의 협력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한 점과 정치분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9.2%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의 협력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불과 3명만이 동북아지역의 안보협력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 및 정치분야에 대해서 불과 6명만이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인 것이다.

6개국 전문가들은 동북아지역에서 현재는 안보분야의 협력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안보분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분야의 협력이 여타분야로의 협

력으로 자연스럽게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기능주의적 입장보다는 안보분야 및 정치분야의 협력이 경제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신기능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V-31>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점추진 분야

		문화		경제		안보		정치		계	
		n	%	n	%	n	%	n	%	n	%
전체	177	19	10.7	68	38.4	56	31.6	34	19.2	177	100.0
한국	30	4	13.3	15	50.0	8	26.7	3	10.0	30	100.0
중국	30	5	16.7	11	36.7	4	13.3	10	33.3	30	100.0
일본	30	4	13.3	10	33.3	8	26.7	8	26.7	30	100.0
미국	30	1	3.3	4	13.3	19	63.3	6	20.0	30	100.0
러시아	29	0	0.0	15	51.7	11	37.9	3	10.3	29	100.0
몽골	28	5	17.9	13	46.4	6	21.4	4	14.3	28	100.0
$\chi^2 = 36.63433 \quad p = 0.0014344$											

또한, 문화분야의 협력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전문가들의 비율이 10.7%에 불과하게 나타남으로써, 전문가들은 문화분야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소위 연성권력에 의한 지역협력구도의 추진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동북아에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역시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경제적 이득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보협력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도자들의 정치협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별 응답비율을 보면,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각15명)들이

경제분야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의 문항에서 압도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 현재 가장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중점추진분야로 경제분야를 선택한 전문가는 13.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미국전문가들의 인식은 2/3에 달하는 19명이 안보분야의 협력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로 반영되었다. 즉,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는 현재 경제분야 협력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안보분야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전문가들의 인식은 역외국가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동북아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의 전문가들이 정치분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3.3%를 보이고 있어, 전체 평균인 19.2%를 10% 이상 상회하고 있다. 이 결과는 중국전문가들이 일본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도력보다는 중국의 정치적 지도력이 우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중국의 지도력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동북아공동체 형성 가능 시기

본 문항은 동북아공동체가 실제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써,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사실상 공동체 형성의 시간표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동체 형성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지역국가들의 대응도 매우 긴밀하게 표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형성의 가능시기를 10년, 20년, 30년으로 구분해서 물어본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20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1%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30년 이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3%로써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의 단기간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5.6%로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질문의 성격상 부정적 응답을 회피하게 되는 응답자들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동북아공동체 형성이 20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7%에 달한다는 것은 6개국의 전문가들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응답을 각국별로 보면, 미국, 러시아, 몽골의 전문가들이 가능시기가 10년 이내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30.0%, 40.0%, 60.0%를 보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의 응답비율이 각각 6.7%, 6.7%, 10.0%라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중국, 일본간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위요한 활발한 경제협력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는 결과인 것이다. 즉, 한·중·일 3국은 실제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적인 위치에 있으며,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핵심적인 국가들인데 이들 3국의 전문가들은 지역공동체 형성이 10년 이내의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V-32> 동북아공동체 형성 가능 시기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불가능		계	
		n	%	n	%	n	%	n	%	n	%
전체	180	46	25.6	65	36.1	51	28.3	18	10.0	180	100.0
한국	30	2	6.7	12	40.0	14	46.7	2	6.7	30	100.0
중국	30	2	6.7	10	33.3	13	43.3	5	16.7	30	100.0
일본	30	3	10.0	11	36.7	12	40.0	4	13.3	30	100.0
미국	30	9	30.0	11	36.7	8	26.7	2	6.7	30	100.0
러시아	30	12	40.0	14	46.7	4	13.3	0	0.0	30	100.0
몽골	30	18	60.0	7	23.3	0	0.0	5	16.7	30	100.0
x=55.26379 p=0.00000											

반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리적 특성면에서, 몽골은 국가의 규모면에서 핵심국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이론적으로 보면, 동북아지역내에서 실질적으로 상호작용이 많은 국가들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상호작용의 결과 파생되는 부작용을 포함해서 제반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은 지역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반면, 상호작용이 적은 미국, 러시아, 몽골은 역내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현실감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공동체의 관련성

본 문항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한반도가 지정학 및 지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다. 동북아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이다. 본 문항은 동북아공동체 형성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91명,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59명으로서 전체 응답자 180명 중 150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이 거의 필요 없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6명, 전혀 필요없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4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6개국의 전문가들이 설문지 작성의 주체가 한국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과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공동연구자들의 기대와 같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각국별로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전혀 필요 없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이 2명으로서 의외의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한반도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도 17명으로서 56.7%를 차지함으로써 6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이 역외국가 입장에서 남한과 북한을 별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싸고 부각시킨 이미지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 쉽게 통일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30명 중 29명이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분단국가의 일원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표 V-33>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공동체의 관련성

	매우 필요		조금 필요		거의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계		종합				
											필요함		필요없음		
	n	%	n	%	n	%	n	%	n	%	n	%	n	%	
전체	180	91	50.6	59	32.8	26	14.4	4	2.2	180	100.0	150	83.3	30	16.7
한국	30	15	50.0	14	46.7	1	3.3	0	0.0	30	100.0	29	96.7	1	3.3
중국	30	13	43.3	12	40.0	5	16.7	0	0.0	30	100.0	25	83.3	5	16.7
일본	30	17	56.7	7	23.3	4	13.3	2	6.7	30	100.0	24	80.0	6	20.0
미국	30	9	30.0	10	33.3	9	30.0	2	6.7	30	100.0	19	63.3	11	36.7
러시아	30	9	30.0	15	50.0	6	20.0	0	0.0	30	100.0	24	80.0	6	20.0
몽골	30	28	93.3	1	3.3	1	3.3	0	0.0	30	100.0	29	96.7	1	3.3
	x = 49.04153 p = 0.00002										x = 16.80000 p = 0.00490				

마. 동북아공동체의 개방성

본 문항은 동북아공동체의 지향성에 관련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공식적 지역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지역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기구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한편, 지역공동체의 개방성 문제는 공동체의 구심점을 유지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지역공동체가 역내 국가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성을 지녀야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폐쇄적 지역공동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연구자들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개방형 동북아공동체를 선호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응답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60.0%, 다소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37.8%에 달함으로써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북아공동체는 역외국가에 대해서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국별 응답결과를 분석하면, 매우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의 순위에서 일본이 83.3%, 몽골이 73.3%, 한국이 70.0%, 미국이 60.0%, 중국이 53.3%, 러시아가 20.0%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몽골을 제외하면, 일본, 한국, 미국 등 선진국 수준 국가의 전문가들은 세계화에 보다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방형 지역주의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체제전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화의 필연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V-34> 동북아공동체의 개방성

		매우 개방		다소 개방		다소 폐쇄적		계		종합			
		n	%	n	%	n	%	n	%	개방		폐쇄	
										n	%	n	%
전체	180	108	60.0	68	37.8	4	2.2	180	100.0	176	97.8	4	2.2
한국	30	21	70.0	9	30.0	0	0.0	30	100.0	30	100.0	0	0.0
중국	30	16	53.3	14	46.7	0	0.0	30	100.0	30	100.0	0	0.0
일본	30	25	83.3	4	13.3	1	3.3	30	100.0	29	96.7	1	3.3
미국	30	18	60.0	11	36.7	1	3.3	30	100.0	29	96.7	1	3.3
러시아	30	6	20.0	22	73.3	2	6.7	30	100.0	28	93.3	2	6.7
몽골	30	22	73.3	8	26.7	0	0.0	30	100.0	30	100.0	0	0.0
x=34.21569 p=0.00017										x=5.11364 p=0.40217			

바. 소결

6개국의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항목들을 작성되었는바, 각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향후에는 동북아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협력분야를 안보분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동북아공동체의 개방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중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필요없다고 응답한 전문가들도 30명에 달해서 한반도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케 한 측면이 있었다.

전문가 설문조사의 응답은 각국별로 특이한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각국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답변한 것도 많았다. 이는 연구원에서 선정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정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간에 의견교환도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현재 가장 잘 추진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한편,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안보분야에서 우선적으로는 안정을 꾀하고 점진적으로 안보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북아공동체는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지역국가들 및 동북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조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의 형성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큰 안목과 보다 긴 시간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VI

요약 및 종합

동북아 협력은 냉전종식을 전후한 시기부터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에 의해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더욱이 한국의 참여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가전략의 주요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동북아 협력을 위한 인프라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확인해보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그렇지만 동북아 협력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인프라 지표를 마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연구는 도이취의 ‘안보공동체’를 동북아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지표를 마련했다. 그런데 동북아지역국가들의 체제 및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지표별 통계자료가 고르게 수집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를 만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동북아 협력이라는 이슈의 전문성과 지역국가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국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표별 통계자료의 수집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및 분야별로 수집된 통계자료가 양적·질적으로 균일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프라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내지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수집된 자료만으로도 각 국가가 지역협력에 어느 정도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지역협력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개괄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는, 비록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지라도 전문가들의 여론선도 능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인프라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에서 국가별 및 분야별로 수집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협력의 인프라 실태를 개괄적·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인프라 수준에 대한 평가를 보완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유럽사례에 비추어 동북아시아협력의 수준을 추론·평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유럽사례는 지역협력 내지 통합이론이 탄생하는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시도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인프라 지표개발이 지역협력 및 통합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유럽은 여러 측면에서 동북아와 다르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제2장에서 언급되었던 유럽통합의 성립 및 발전동력을 중심으로 양 지역의 조건적 차이를 감안하고 서로 비교해본다면, 추론적이거나 현재 동북아시아협력의 인프라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앞으로 동북아시아협력의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개괄적으로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 국가별 인프라 실태

국가별 인프라 실태를 개괄적이거나 분야별로 정리해보면, <표 VI-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 국가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경제분야	안보분야	정치분야	문화분야	지역협력에 대한 영향력
한국	의지	◎	◎	◎	◎	◇
	실제	◎	△	○	◇	
중국	의지	◎	○	○	◇	◎
	실제	◎	△	◇	△	
일본	의지	◎	◇	◇	○	○
	실제	◎	△	△	◇	
러시아	의지	○	◎	◇	◇	◇
	실제	△	△	△	X	
몽골	의지	◎	◎	◎	◎	X
	실제	◎	◇	○	△	
북한	의지	○	△	△	X	X
	실제	X	X	X	X	
미국	의지	○	△	◇	○	◎
	실제	○	△	△	◇	

◎ : 매우 높음, ○ : 높음, ◇ : 보통, △ : 낮음, X : 매우 낮음

첫째, 지역협력에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은 세계차원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서로의 관계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탓에 정작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중간규모의 국가이며 지정학적으로 지역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있는 한국과 몽골은 동북아지역협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러한 현실은 동북아지역협력 발전을 위한 다자협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국가별로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난다. 국가별 인식차이는 각 국이 어떠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또 실제 협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동북아국

가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이익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며, 또 실천하고 있다. 러시아나 북한처럼 실제 지역 경제협력에의 참여도가 낮은 국가도 경제협력의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분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다. 안보 및 정치 분야에서 나타나는 인식차이는 결국 각 국의 이익 및 국가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회문화분야의 차이는 좀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즉 각 국의 경제능력, 시민사회의 역량, 지역 정체성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각 국의 협력의지와 실천에 차이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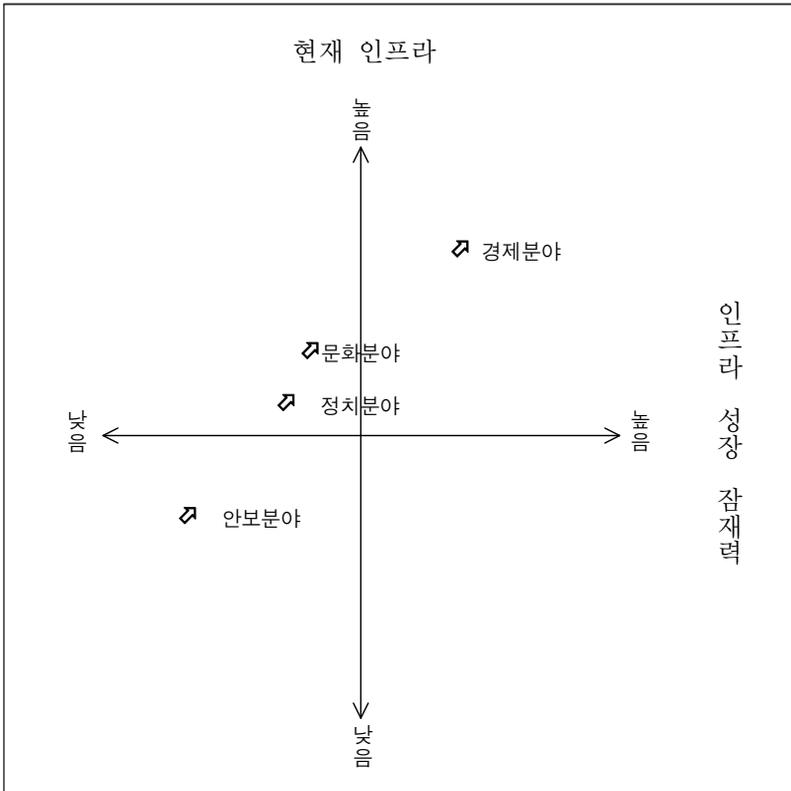
셋째, 미국과 러시아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감안할 때,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기능적 측면에서 동북아지역을 규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분야 협력에 대한 각 국의 인식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지리적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폐쇄적인 태도는 동북아지역내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사이의 협력증대를 위한 물질적 인프라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국가별 협력인프라의 큰 편차는 지역협력에 대한 각 국의 국가전략 내지 정책방향 못지않게 동북아지역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협력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국가별 이익 내지 정책조정을 넘어 각 국의 국내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분야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편의성을 위해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 인프라 실태조사
의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분야별 인프라 실태를 개괄
적으로 요약하면 <그림 VI-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지역협력의 제도화 정도, 협력 내용의 양과 질, 협력방식 등을 바탕
으로 현재의 인프라와 인프라의 성장 잠재력을 추론한 것이다.

<그림 VI-1> 분야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운 분야별 지역협력의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분야의 지역협력 인프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분야는 지역협력의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높은 인프라 수준은 전반적으로 지역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분야만 놓고 볼 때, 인프라 성장의 잠재력은 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못하다. 무엇보다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창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기구설립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둘째, 안보분야의 협력 인프라는 냉전시기에 비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그 수준은 매우 낮다. 동북아지역에는 아직도 역내 국가들 사이에 체제차이로 인한 갈등, 영토분쟁 등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군비경쟁이 활발하다. 더욱이 군사블록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미·일 동맹체제와 중·러·북의 동맹체제 사이에 형성되었던 경쟁관계의 기본틀은 아직도 유효하다. 물론 역내 국가들은 이러한 대결 및 경쟁 구도가 이익증대에 기여하는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점점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종류의 다자안보대화가 제안되었으나, 동북아지역에 국한된 다자안보대화는 아직 정례화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 안보협력은 여전히 양자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역안보질서를 위협하는 북한 핵문제 이슈를 둘러싼 다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6자회담이 특정 이슈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회담이 성공하면,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협력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치분야 및 문화분야의 인프라 수준은 안보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발전 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이다. 정상 회담을 비롯하여 고위 정치인 및 관료들 사이의 접촉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 국민들 사이의 인적 교류, 그리고 각 국의 문화교류가 점차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트나 국민들 사이에 상호 공동의식, 즉 공동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또 사회체제 및 경제수준 차이,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와 문화분야에서 인프라 확장의 잠재력은 그리 높지 못하다. 실제로 동북아지역국가들 사이의 정상회담은 주로 양자적 차원에서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상들의 다자회동은 양적으로 아직 적은 편이다.

넷째, 경제분야 협력의 높은 수준에 비해 정치분야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에서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에 각 국 정부보다 기업의 역할이 훨씬 앞서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미진한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요인 외에도 정부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강대국의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이나 중국은 동북아에 국한된 경제협력기구 창설에 대해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또 미국의 경우에 다자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정 이슈에 대해 강대국이 적극적 관심과 개입의지를 가지고 주도해 나가면서 여타 국가들에 대해 참여를 요청할 경우, 레짐이 창설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적 주장을 상기하면, 동북아에서 지역협력의 제도화가 어려운 중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다섯째, 기능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앞선 경제분야의 협력이 여타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연계전략 가능성이 제시된다. 현 상황에서 경제협력의 확대가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경제와 안보의 연계전략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미약하다. 연계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협력의 제도화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현재 동북아에서 각 분야 협력의 제도화는 모든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국제제도 속에 역내 국가들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일부 역내 국가들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로를 통한 제도화의 경험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협력의 제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APEC, ASEAN+3 등 태평양 지역 및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동북아지역국가만의 제도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부분적 제도화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FTA처럼 양자 협정이 서로 얽히고설킬 경우, 이것이 결국은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결과도 충분히 예상된다. 즉 지역내에서 몇몇 국가들 사이에 협력이 제도화될 경우, 역내의 그룹화로 인해 배타성이 증대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안보분야에서 동맹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컨대 한·중·일 FTA 또는 문화협력의 제도화 역시 미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역협력의 인프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없다.

3. 전문가 인식조사 종합평가

역내 각 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력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는 현재 인프라의 있는 그대로의 실태보다는 그 실태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현 인프라 실태와 발전 잠재력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늠하는 데 유용하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동북아시아지역협력에 대한 각 국가의 이해 차이를 간접적 이나마 분명하게 보여준다.

인식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종합 평가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개념을 둘러싸고 각 국가마다 적지 않은 인식 차이를 보였다. 동북아시아의 범주와 관련하여 한·중·일이 포함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미·러·북·몽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편차가 컸다. 특히 미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일본과 중국 전문가들의 생각이 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경쟁관계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지만,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일본의 경우에는 의외의 결과였다. 아마도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범주를 판단하는 구지역주의의 기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향후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을 일본 전문가들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각 국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통념보다 지역 정체성의 공유기반이 넓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유기반의 성격에 대해서는 인식차이가 보인다. 한·일·몽의 경우에는 문화적 동질성이 강조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에는 이해관계의 공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어쨌든 공유기반이 넓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은 한편으로 향후 지역협력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강조가 동시에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발전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경제공동체라는 제도적 발전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역 경제공동체 참여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신 한·중·일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이들 세국가가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전문가들은 동북아 안보상황이 불안정하긴 하지만, 심각할 정도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다자안보공동체의 형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이 안보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중심과제로 인식되었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치협력 수준을 낮게 평가하면서 정치협력의 질적·양적 증대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협력을 주도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통계적으로는 중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국가별 인식의 차이는 정치협력이 낮은 이유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섯째, 문화협력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높다. 향후 문화협

력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민족주의와 역사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전문가들은 지역협력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경제분야의 협력을 기반으로 긴 호흡을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 현실에 대한 여러 측면의 인식과 문제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동북아지역에서 협력과 공동체 형성이 쉽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위해서 유럽과 비교해보는 작업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럽사례를 통해 본 동북아지역협력의 문제와 과제

지역협력이나 통합과정을 비교하기 위한 일반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론적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유럽사례가 이론의 모태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아예 유럽경험을 기준으로 동북아지역협력의 문제점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물론 동북아지역이 반드시 유럽경험을 답습할 수도, 또 그럴 필연성도 없다는 점을 비교의 전제로 두고 시사점을 찾을 것이다. 또 유럽과 동북아 상황을 모두 일일이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제2장에서 정리했던 유럽통합의 성립과 성장동력 요인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유럽통합의 성립 및 발전 동력이 국제환경, 지역국가간 화해 및 상호이익 추구, 시장경제 체제의 확대 및 발전, 체제 및 문화의 동질성으로 크게 네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이 틀에 따라 비교·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제환경

첫째,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종식과 더불어 전쟁의 구조적 억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동북아에서도 냉전이 종식되면서 전쟁억제와 평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친 세 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던 유럽과 비교하여 동북아에는 전쟁억제를 위한 구조 확립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경제발전 수준과 전쟁억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정비례 관계를 보이는 것을 염두에 두면, 동북아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증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 핵문제가 초래하는 전쟁위협이 초래할 경제적 손실을 강조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질서의 필요성이 부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의 경우, 냉전적 블록대결 구조 속에서 동유럽블록이란 공동의 적이 통합의 주요 촉진요인들 중 하나로 작용했던 데 반해, 현재 동북아에는 공동의 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내 상호경쟁 및 적대의식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 경쟁 및 적대의식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유도 및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유럽의 경우,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받았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현재 동북아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배제된 동북아지역통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위한 동북아지역의 다자경제협력에는 자국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호의적 태도 유지하지만, 정치·안보차원에서는 자국의 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자주의를 선호(hub-and-spokes system)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은 미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협력공동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안보분야에서는 6자 회담을 비롯하여 미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안보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자안보협력과 다자협력이 중층적·보완적 관계를 가진 협력의 다층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넷째,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다자주의적 협력(유럽평의회, OEEC, NATO, WEU)이 이미 보편화되었던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서 다자주의적 지역협력 경험은 아직 일천한 탓에 큰 성과도 거두고 있지 못할뿐더러, 이에 대한 역내 국가 및 국민들의 기대수준도 아직은 그리 높지 못하다. 따라서 다자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간의 비갈등적 문제영역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점차 갈등적 문제영역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영역별 국제레짐을 형성하고, 양적·질적 증대를 통해 공동이익 및 공동규범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 지역국가간 화해 및 상호이익 추구

첫째, 유럽에서는 지역강대국들간에 화해와 협력의지가 강했다. 무엇보다 독일과 프랑스는 화해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데 반해, 동북아의 지역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아직 화해 및 협력의 의지가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분야의 협력을 동북아 통합의 주 원동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안보분야 협력은 일단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뒤이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럽에서는 통합초기부터 안보와 경제의 연계가 작동했다. 탈냉전기 안보와 경제이익의 상호연계 불가피성이 동북아에서도 점증하고 있지만, 유럽통합초기 독·불이 보여준 것 같은 명확한 연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동북아에서는 역내 안보협력 및 상호신뢰 수준이 낮은 탓에 어느 국가도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기꺼이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을 통해 역내 국가간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긴장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안보와 경제의 연계 및 교환 가능성을 제고하며, CSCE, OSCE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패권경쟁의 역사로 인한 비극적 전쟁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유럽에서는 과거극복의 맥락에서 구조적·자발적으로 역내 패권추구를 견제·포기한 데 반해, 동북아에는 과거청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패권경쟁의 잠재력이 상존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중·일이 패권경쟁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

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분야의 공동이익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패권경쟁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시장경제 체제의 확대 및 발전

첫째, 1970~1980년대 유럽에서는 신경제발전동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유럽통합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었다. 1990년대 이래 일본과 한국에서도 신경제발전동력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경제개발에 대한 요구가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발전수준은 다르지만 각국의 경제적 필요성 탓에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분출하고 있으며, 이는 FTA 협상 및 체결 필요성을 가속화한다. 경제적 필요성은 동북아지역통합의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핵심요인이란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업구상 및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북아 금융네트워크 구축, 운송·물류·통신네트워크 구축, 공동개발사업(만주 및 시베리아), 첨단 기술의 표준화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일 FTA를 바탕으로 한·중 FTA와 한·중·일 FTA, 나아가 한·미 FTA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1970~1980년대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분배’보다 자유시장 의존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었던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는 아직 국가개입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국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단기적으로는 역내 공

동사업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국제레짐을 형성하고, 이를 발판으로 점차 각국내 시장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1970~1980년대 세계시장에서 지역간 경쟁이 유럽경제통합을 가속시킨 요인들 중 하나였는데 반해, 지역간 경쟁은 1990년대 이래 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아직도 지역간 경쟁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탈냉전기 세계경제는 지역적 틀을 넘어서는 협력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에는 아직 지역규범보다 세계규범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PEC, ASEM 등은 지역통합을 강화시키기보다 세계경제 협력강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통합의 주요변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자유무역에 관한 세계규범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규범을 발판으로 점차 지역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규범이 온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APEC과 ASEM을 통해 동북아 역내 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 체제 및 문화의 동질성

첫째, 유럽통합의 성립 및 확대 배경에는 항상 참여국들간 체제적 유사성 내지 사회구조적 동질화가 기본적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동북아에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두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

고 있으며, 경제·사회구조에 그 영향력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제도통합의 주역인 동북아 각국 엘리트들 사이에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의 수준이 유럽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아마도 이들 국가의 현대화 과정을 통해 동북아에도 궁극적으로 체제적 유사성이 점진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국의 정치엘리트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규범의 동질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정치·안보분야에서 공동규범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정치의 규범이 확산되면, 자연스럽게 체제동질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럽은 전통적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왔으며, 이것이 통합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동북아는 유교 및 불교문화권으로서 공통의 문화전통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20세기 초 이래 근대화 과정의 차이로 인해 각각 상이한 정치·사회문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 특히 미래를 겨냥하여 청소년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히 전통문화에만 치중하기보다 각국의 현대적 대중문화 속에서 공통의 문화적 코드(code)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럽통합 초기부터 유럽주민들 사이에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뚜렷했다.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주민들간의 교류 및 의사소통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정체성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전시기 형성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유산과 탈냉전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역사문제와 영토를 둘러싼 지역

국가들간 갈등은 지역정체성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및 영토를 둘러싼 갈등 대신에 평화 및 번영과 같은 당면한 가치 및 이익을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정체성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국 NGO 및 지식인들간 인식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역사교과서 공동 집필을 위한 한·중·일 협력은 의미있는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 서울: 푸른길, 1999.
-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3.
- 국방부. 2004 국방백서 . 서울: 국방부, 2004.
- 김계동 외 편. 유럽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 . 서울: 오름, 2003.
- 김국진. 동북아평화협의회의 구현방안 연구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 시리즈 89-08. 1989.
- 김두현. 현대테러리즘 . 백산출판사, 2004.
- 김성한. 미국의 동아태전략 변화 전망 .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5.
- 문화관광부.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중기 계획 . 서울: 문화관광부정책보고서, 2004.
- _____. 2005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서울: 문화관광부, 2005.
- _____. 청소년백서2004 . 서울: 문화관광부, 2005.
- 박종철.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박종철 외.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동북아안보·경제협력체제 형성방안 .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배궁찬. 동북아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동북아시대”구상을 중심으로 .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4.
- 세종연구소(編).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과 한국. 성남: 세종연구소, 1994.
- 양영균 · 문홍표 · 송도영.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엄태암. 안보정책 논총 2: 4자회담 활성화 및 동북아 6자회담의 활용방안 .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2.
- 여인곤 외. 21세기 미 · 중 · 일 ·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 방안 . 통일연구원연구총서 03-05.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민족통일연구원 1996. 10.
- 윤철경 · 오해섭.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협력 연구 .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서향. PSI의 최근 진전상황과 주요 쟁점 .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4.
- _____. ARF 평가와 발전과제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2.
- 이재승. 에너지 안보와 동북아협력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4.
-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 서울: 아르케, 2004.
- 이창재 외.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9-07.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정문길 외.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 _____.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 서울: 문화과 지성사, 2000.
- 정재완 외. ASEAN+3(한·중·일) 경제동향 및 한국과의 협
협 현황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정정숙 외. 동북아시아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 문
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정종욱. 의원외교활동의 재정립을 위한 연구 . 국회사무처, 1989.
- 진창수 편.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의 정치경제 . 성남: 세
종연구소, 2002.
- 최송화. 21세기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구상 . 서울: 법문사, 2004.
-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동방특급열차: 김정일과 함께한 24일
간의 러시아 여행 . 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간 북한동향 . 제621호 (2002.12.6~12).
- 한국관광공사. 한류마케팅 파급효과 및 향후 발전방향 .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
- 한국동북아지역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
역통합의 꿈과 현실 . 서울: 동아일보사, 2003.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동북아 문화콘텐츠산업 현
황 . 서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3.
- 한만길·최영표·이현영.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 파주: (주)나남출판, 2005.
- 홍규덕.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
應策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9.
- 환경부. 두만강유역 환경보전후속사업 활성화 방안연구 . 2004
2004-2005 동북아군사력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 Akiner, Shirin eds. *Mongolia Today*. London and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1991.
- Alagappa, M. ed.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98.
- Archer, Clive and Fiona Buther, *The European Union: Structure & Process* (2nd Edition). London: Pinter, 1996.
- Carter, Ashton B., William J. Perry and John D. Steinbrunner.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2.
- Deutsch, Kar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 _____.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8.
- Etzioni, Amita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5.
- Fawcett, Louise and Andrew Hurrell eds.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gional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order*. Oxford: Oxford Univ. Press, 1995.
- Haas, Ernst B.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 Holsti, Kalevi J.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 Lake, David A. and P. M. Morgan eds.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State Colleg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7.
-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Book, 1943.
- Morgenthau, H.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ititon). N.Y.: Alfred A. Knopf, 1973.
- Ness, Peter Van eds. *Debating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 Nye, Joseph. *Peace in Parts* (2nd edition).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7.
- Scruton, Roger. *A Dictionary of Political Thought*.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2.
- Shambaugh, David ed. *Is China Unstable: Assessing the Factors* Armonk, New York, London: M.E.Sharpe, 2000.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Russia* (4th quarter 1999). London: EIU, 1999.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Strategic Survey 1992~1993*. London: IISS, 1993.
-
- . *Strategic Survey 1996~1997*. London: IISS, 1997.
- The Ministry of Mongolia. *Defense White Paper* (Second edition). 2001.
-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 金熙德. 中國的東北亞研究 .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1.
- 羅榮渠. 現代化新論 . 北京: 北京大出版社, 1993.
- 劉清才. 21世紀東北亞地緣政治 .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2004.
- 門洪華. 构建中國大戰略的框架 . 北京: 北京大出版社, 2005.
- 楊貴言. 當代東亞問題研究簡論 . 北京: 人民出版社, 2004.
- 王 名. 中國民間組織 .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1.
- 張曉明·胡惠林·章建剛. 2004年: 中國文化產業發展報告 .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 蔡建國. 21世紀的東亞: 機遇, 挑戰與創新 .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04.
- 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 . 北京: 人民出版社, 2002.
- Bellers, Jürgen. *Der schöne Schein der EU*. Siegen: Scylda Verlag, 2004.
- Czempiel, Ernst-Otto. *Friedensstrategien: Systemwandel durch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Demokratisierung und Wirtschaft*. Paderborn: Schöningh Verlag, 1986.
- Friedrich, Carl J. *Europa-Nation im Werden*. Bonn: Europa Union Verlag, 1972.
- Tsedendamba, A. *Mongol Ulsad Bus Nutguudyn Högjiin Hötölbör Bolovsruulah Onolyn Ündes*. Argazüi, Argachlal, Ulaanbaatar, 2004.
- Yaskina, G. S. *Mongoliya i vneshnii Mir*(몽골과 외부세계). Moskva: 2002.

2. 논문

- 구춘권. “유럽연합의 화폐통합에 대한 네오그람시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 제42집 3호, 2002.
- 김명섭·이동윤. “동북아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문화적 대안의 모색.” *한국과 국제정치* . 제21호 제2호, 2005.
- 김성한. “제5차 동북아 평화 심포지엄 결과 보고.” (2004. 4. 6).
- 김원배. “동북아중심 구상의 재검토” *창작과 비평* . 제31권 제2호, 2003.
- 김태효. “CSCAP 제13차 포괄 안보협력분과 작업반 회의결과.” 2004. 4. 27.
- 박순성. “한국 평화운동의 발전방향과 아시아 평화연대.” *정전 50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 주최세미나 발표문*. 2003. 7. 26.
- 박번순.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방안.” *발표논문* 2003.
- 박홍규. *6자 동북아평화협의회*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88-86. 1988.
- 배금찬.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 제7차 ASEAN+3 정상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 _____. *동북아시대와 한국의 외교과제: 지역협력전략을 중심으로* .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4).
- _____. *아세안+3 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1).
- _____. *동아시아 정체성 창출방안연구* .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2).

- _____. 동북아 경제중심구가 건설을 위한 외교적 대책 . 외교
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3).
- 백학순. “6자회담 공동성명: 성과, 의의, 전망.” 세종논평 . No.
30, 2005.
- 안병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아시아공동체인가, 태평양공동체
인가,” 사상 . 1996, 여름호.
- 안충영. “동북아경제통합의 비전과 FTA추진.” 외교 . 제69호,
2004.
- 안효승. “동북아지역 FTA 추진전망.” 외교안보연구원 정책보고서
(2003).
- 양길현. “동북아경제중심의 가능성과 추진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
제20권 제2호, 2004.
- 외교안보연구원. “최근 ASEAN의 동향: AMM, ARF 그리고
PMC를 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1994).
- 우정은.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창작과 비평 . 제
31권 제2호, 2003.
- 유현석.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추진전략과 과제.” 참여정부시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변영전략 . 민주평통, 한국동북아학
회, 호남국제정치학회 합동학술회의 발표논문 (2003. 6. 12).
- 이상균.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제 구축방안 : 유럽의 경험과 한
국의 선택.” 국가전략 . 1997년 봄 · 여름호
- 이서향. “ARF 예방 외교 워크숍 참가 결과.” 2004. 4. 21.
- _____. “제 15차 NEACD 참가결과.” 2004. 5. 6.
- _____. “다자안보기구 관련 연구소 방문결과 보고.” 2004. 6. 1.
- 이영광. “동북아 경제협력의 과제와 방안: 한 · 중 · 일 FTA의

- 기대효과와 추진방안.” 공공정책연구 . 제14호, 2003.
- 전병곤. “중국의 다자주의 지역전략: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 10권 1호, 2003 봄.
- 홍규덕. “21세기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에 대한 전망과 과제.” 외교 . 제53호, 2000. 4.
- 홍용표.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반도.” 통일정책연구 . 제11권 2호, 2002.
- “러시아연방 (신)군사독트린.” 중소연구 . 18권 1호, 1994 봄.
- “러시아연방 군사독트린.” 중소연구 . 통권 84호, 1999/2000.
- Abe, Kazutomo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east Asia and the roles of Free Trade Area.” *mimeo*, (2003).
- Adler, Emanuel. “Seizing the Middle Ground: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3, 1997.
- _____. “Imagined (Security) Communities: Cognitiver Reg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6, No. 2, 1997.
- Anichkin, Aleksandr. “kurilskiy eskiz: mozhno li dogovoritsya s yaponysami,” *IZVESTIYA*. Fevralya 19, 1992.
- Annan, Kofi. “In Larger Freedom: Decision Time at the UN.” *Foreign Affairs*. May/June 2005.
- Christensen Thomas J. and Jack Snyder. “Chain Gangs and Passed Bucks: Predicting Alliance Patterns in Multipolar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2, 1990.

- Cocks, Peter. "Toward a Marxist Theory of European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80.
- Fedorovskiy, Alexander. "Russian Case on the Infrastructure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urrent Status and Tasks. Sep. 7-9, 2005 at KINU.
- Haas, Ernest B. "The Uniting of Europe and the Uniting of Latin America."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5, No. 4, 1967.
- Hamilton, Daniel. "A More European Germany, A More German Europ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5, No. 1, Summer 1991.
- Han, Sung-Joo "undamentals of Korea's New Diplomacy: New Korea's Diplomacy toward the World and the Future."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7, Summer 1993.
- Lipson, Charl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Vol. 37, Oct. 1984.
- Lowenthal, Mark M. "Preventive Diplomacy: Prospects and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5, 1993)
- Milner, Helen. "International Theories of Cooperation among Nations." *World Politics*. Vol. 44, No. 3, 1992.
- Nye, Joseph S. "Compa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2, No. 4, 1968.

- Puchala, Donald J. "International Transaction and Region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4, No. 4, Autumn, 1970.
- Sabloff, Paula L. W. "Why Mongolia? The Political culture of an emerging democracy." *Central Asian Survey*. 21-1, 2002.
- Schmitter, Pilippe C. "A Revised Theory of Reg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4, No. 4 *Regional Integration: Theory and Research*. Autumn 1970.
- Taga, Hidetoshi. "Tasks and efforts by non-state actors towards Northeast Asia cooperative regional society." *mimeo*, 2002.
- Tsend, Baatar. "Position of Mongolia 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국제위크샵,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와 과제, 통일연구원 발표문, 2005. 09. 08.
- Väyrynen, Raimo. "Regionalism: Old and New."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No. 5, 2003.
- 聶資魯. "論江澤民同志的外交思想." *中國外交*. 2002年, 1期.
- 李學林. "中國大陸振興東北老工業基地 之研析." *展望與探索*. 第2卷, 第8期, 2004.
- 日本經濟團體連合會. "活力と魅力溢れる日本をめざして." 2003.
- 朱鋒. "朝鮮半島問題六方會談前途分析." *現代國際關係*. 2005年, 第1期.
- 中澤則夫. "東アジア經濟協力の強化と對外經濟政策の推進." 발표 논문.

- Baatar, Ts. and Serjav. “Züün khoid azi : Ediin zasgiin khögjiliin khandlaga(동북아: 경제발전 동향).”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4, 2004.
- Baldoo, B. and Sh.Batmök. “Züün khoid azi dakh’ ayulgüi baidalyn sistemiin asuudal, Mongolyn khandlaga(동북아의 안보 체제 문제, 몽골의 입장).” *Dorno Örnö*(동서). No. 1/2, 1999.
- Batzaya, B. “Global’chlal ba Mongol ulsyn gadaad bodlogo(세계화와 몽골의 대외정책).”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3, 2003.
- Dashdondov, Kh. “Züün khoid aziin khödöö aj akhoin khamtyn ajillagaand Mongolyn oroltsoo(동북아 농업협력과 몽골의 참여).”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1, 2002.
- Dashtsevel, S. “Züün aziin shine regionalizm ba Mongol uls(동아시아의 신지역주의와 몽골).”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3, 2003.
- Oyungerel, L. “Mongol dakh’ ANU-yn ashig sonirkhol ba khörsh gümnüüdiin khüchin züil(몽골에서의 미국의 이해관계와 인접국들의 요인).” *Olon uls sudlal*(국제연구). No. 2, 2003.

3. 기타

- 경향신문 .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로동신문 .
연합뉴스 .
세계일보 .
조선중앙통신 .
중앙일보 .
한겨레 .
日本經濟新聞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ITAR-TASS

“<북핵타결> 6개항 공동성명 전문” <<http://bbs.yonhapnews.co.kr> (2005. 9. 19)>.

“김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청와대 보도자료, 2001. 2. 27.

“러 무기수출 올해 20% 증가” <www.yonhapnews.net/news, 2001. 12. 27.>

“-러시아에서 고개드는 ‘황화론(黃禍論)’-”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10224&clubid=11000384>>.

“북-러 신조약 전문” <www3.yonhapnews.co.kr. 2000. 11. 3>.

“우크라이나가 공동경제지대 창설에 적극적인 이유” <<http://www.kotra.or.kr>>.

“제16차 동북아 협력대화(NEACD) 개최” <<http://www.mofat.go.kr> (2005. 4. 11)>.

“일본 적군파의 시게노부에 대해” <<http://kin.naver.com>>

- “대테러전쟁 지원(아프가니스탄)” <<http://www.mnd.go.kr>>.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동북아시아의 도전과 우리의 선택” (2004. 7).
- 동북아시아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구상.”
- 박종철 · 이교덕 · 임강택 · 전병곤. 『몽골출장보고서』(2005. 7. 25~7. 30). 통일연구원, 2005.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 전경만. “냉전종식이후 동북아의 종합적 준비추세.” 2005. 10. 12 간담회 내용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 “Korea: A Nation Transformed.” Vol. 2, Selected Speeches of President Roh Tae Woo. Seoul: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1993.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MFA Information and Press Department Commentary Regarding the Japanese Parliament House of Representatives Resolution Concerning Accel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Russian-Japanese Ties in the Light of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Interstate Relations. 358-24-02-2005, February 24, 2004.
-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ly 1994.
- The White House.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http://blog.empass.com/judy93/read.html?a=4101467>>.
<<http://blog.naver.com/boraokmi/60011330736>>.
<<http://www.defenselink.mil/news/Jan2002/d20020109npr.pdf>>.
<<http://www.cscap.org/about.htm>>.
<<Http://www.mongolia-foreign-policy.net>>.
<http://www.nis.go.kr/docs/terror/conditions_01.html>.
“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www.mid.ru/mid/eng/econcept.htm>.
Boucher, Richard. Spokesman,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Press statement. October 16, 2002
<www.state.gov/r/pa/prs/ps/2002/14432.htm>.
Bush, George W. “Terrorism: Threat Assessment, Countermeasures
and Policy” <<http://www.terror.gen.tr/usa/statementbush.html>>.
Gorbachev, Mikhail. “International Current Issues and the
Future of Korean Peninsula.” The Seventeenth Incheon
Memorial Lecture. Korea University, November 19,
2001.
Larson, Admiral Charles R. “Cooperative Engagement and
Economic Security in Asia.” Press Office USIS, US
Embassy, Korea, Backgrounder March 19, 1993.
Li, Xiaorong “‘Asian Values’ and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www.puaf.umd.edu/IPPP/li.ht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Related Export

Control Mechanism (2004/06/29)”

<<http://www.fmprc.gov.cn/eng/wjb/zzjg/jks/kjic/fkswt/fkszc/t141197.ht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the Kremlin, May 26, 2004” <<http://www.In.mid.r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terview of Russian Ambassador to Japan Alexander Losyukov, Published in the Newspaper Vremya Novostei on January 26, 2005” <[http://www.In.mid.\(26-01-2005\)](http://www.In.mid.(26-01-200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the Kremlin, May 26, 2004” <<http://www.In.mid.ru>>.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CTBT) Organization Signed” <[http://www.In.mid.ru\(564-24-03-2005\)](http://www.In.mid.ru(564-24-03-200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Thirty-Fifth Anniversary of Entry into Force of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http://www.In.mid.ru\(422-05-03-2005\)](http://www.In.mid.ru(422-05-03-2005))>.

The Center for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http://globaledge.msu.edu/statistics>>.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http://www.mofa.go.jp/policy/un/disarmament/arms/outline.html>>.
- “Draft Russian Military Doctrine”
<209.207.236.112/nuke/guide/russia/doctrine/991009-draft-doctrine.htm>.
- “Federal Government Ratifies Free Trade Agreement With Russia.” FBIS-EEU-2000-0831.
- “President of Russia: Road Map on the Common Space of External Security”
<<http://www.kremlin.ru/eng/text/docs/88029.shtml>>.
- “Sino-Soviet border conflict”
<http://en.wikipedia.org/wiki/Sino-Soviet_border_conflict>.

<부록 I>

동북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으로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각국의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무기명으로 밝히신 견해는 통계처리용의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귀하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5년 월

통일연구원 동북아공동체 연구자 일동

연락처: 연구책임자 박종철(TEL: 82-2-901-2533, FAX:

82-2-901-2543 pjc@kinu.or.kr)

**설문에 대해 응답하실 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동북아공동체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다음 중 동북아공동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북한 5) 미국 6) 러시아
 7) 기타 ()

2.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공동체 국가들이 얼마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공유하고 있다
 2) 약간 공유하고 있다
 3) 거의 공유하고 있지 않다
 4)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다

3. 선생님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동북아공동체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동질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지니고 있다
 2) 약간 지니고 있다
 3)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4.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공동체의 국가들이 얼마나 공동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지니고 있다
 2) 약간 지니고 있다
 3)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
 4)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동북아공동체의 문화 분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공동체의 국가간의 문화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3)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선생님께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문화교류의 부족
 2) 공통된 역사인식의 결여
 3) 공통된 문화기반의 부족
 4) 각국의 민족주의
 5) 기타 다른 이유()

3. 선생님께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느 분야의 교류가 우선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관광 2) 스포츠
 3) 예술분야(영화/음악 등) 4) 방송
 5) 종교
 6) 기타 분야()

4. 선생님께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부 2) NGOs
 3) 종교단체 4) 기업
 5) 방송매체 6) 기타 분야

동북아공동체의 경제 분야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공동체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상호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상호의존적이다
- 2) 다소 상호의존적이다
- 3) 거의 상호의존적이지 않다
- 4) 전혀 상호의존적이지 않다

2.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이 귀국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다소 도움이 된다
- 3) 거의 도움이 안된다
- 4) 전혀 도움이 안된다

3.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귀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통 2) 에너지, 자원
- 3) 무역 4) 금융
- 5) 정보통신(ICT) 6) 환경
- 7) 기타()

4.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무역 및 투자의 증대 2) 양자간 FTA의 확산
- 3) 산업분야별 협력체 구성 4) 동북아다자간 경제협의체 구성
- 5)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약간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6. 선생님께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어느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한국 2) 중국 3) 일본
- 4) 북한 5) 미국 6) 러시아 7) 기타 ()

**동북아공동체의 안보 분야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현재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안정되어 있다
- 2) 다소 안정되어 있다
- 3) 다소 불안정하다
- 4) 매우 불안정하다

2.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이 지역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다소 도움이 된다
- 3)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귀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테러방지
- 2) 군사적 신뢰구축
- 3) 군비축소
- 4) 대량살상무기(WMD)확산방지
- 5) 기타 ()

4.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양자적 군사 교류협력 확대
- 2) 양자동맹 강화
- 3) 비정부 차원의 안보 대화(NEACD 등) 활성화
- 4) 동북아 다자안보기구 구성
- 5)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이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다소 도움이 된다
- 3)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안보공동체 형성에 다음 중 어느 국가가 가장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한국 — 2) 중국 — 3) 일본
- 4) 북한 — 5) 미국 — 6) 러시아 — 7)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ASEAN+3(한·중·일)가 동북아정치공동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 4)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6.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정치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느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한국 2) 중국 3) 일본
- 4) 북한 5) 미국 6) 러시아 7) 기타 ()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동북아에서 현재 어느 분야의 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문화 2) 경제 3) 안보 4) 정치

2.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느 분야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문화 2) 경제 3) 안보 4) 정치

3.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10년 이내 2) 20년 이내 3) 30년 이내 4) 불가능

4.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한반도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조금 필요하다
- 3) 거의 필요 없다 4) 전혀 필요 없다

5. 선생님께서는 동북아공동체가 역외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개방적이어야 한다
- 2) 다소 개방적이어야 한다
- 3) 다소 폐쇄적이어야 한다
- 4) 매우 폐쇄적이어야 한다

응답자 기록사항

성 명	
국 적	
소속 전공분야	
전화번호 e-mail fax	

조사원 기록사항

성 명	
6전화번호	
조사일시	월 일 시
조사방법	<input type="checkbox"/> 1) 면접 <input type="checkbox"/> 2) 응답자 자기기입 <input type="checkbox"/> 3)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의 병행

Expert Survey on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Dear Sir/Madam:

As a non-profit research institution created to support the ROK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is conducting an expert survey on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Anonymity will be fully guaranteed and your opinion given in this questionnaire will solely be used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statistical analysis, not for any other purpose.

KINU greatly appreciates your time and consideration toward the survey.

Northeast Asian Community Research Project Team
Kyuryoon Kim (Tel: 822-901-2592, Fax: 822-901-2572,
krkim@kinu.or.kr)

Please select the choice that best describes your opinion and then mark ✓ on the corresponding spot on the questionnaire.

Please select only one answer for each ques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instructions.

Part I. Identity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Please select the countries need to be included in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You may select many.)

- 1) South Korea 2) China
 3) Japan 4) North Korea
 5) the U.S.A. 6) Russia
 7) Other ()

2. How much historical experience has been shared among the above selected Northeast Asian countries?

- 1) Very Much
 2) Much
 3) Little
 4) Very Little

3. How much in common do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countries have in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 1) Very Much
 2) Much
 3) Little
 4) Very Little

4. How much common interest exists amo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countries?

- 1) Very Much
 2) Much
 3) Little
 4) Very Little

Part III. Economic A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How do you rate the degre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amo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countries?

- 1) Very High
- 2) High
- 3) Low
- 4) Very Low

2. How much help could be deriv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n relation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your country?

- 1) Very Much
- 2) Much
- 3) Little
- 4) Very Little

3. Which one of the following areas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by your country i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 1) Transportation
- 2) Energy, Natural Resources
- 3) Trade
- 4) Finance
- 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6) Environment
- 7) Other ()

4. Which one of the following measures do you consider to be the most efficient way i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 1) Expansion of Trade and Investment
- 2) Expansion of Bilateral FTAs
- 3) Build-up of Industrial Cooperative Bodies
- 4)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Economic Consultative Institution

5. How much help could be derived from the activitie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mmunity (APEC) i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 1) Very Much
- 2) Much
- 3) Little
- 4) Very Little

6. Which one of the following countries needs to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 1) South Korea
- 2) China
- 3) Japan
- 4) North Korea
- 5) the U.S.A.
- 6) Russia
- 7) Other ()

Part IV. Security A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How do you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Northeast Asian security?

- 1) Very Stable 2) Stable
 3) Unstable 4) Very Unstable

2. How much help could be deriv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in relation with the regional stability?

- 1) Very Much
 2) Much
 3) Little
 4) Very Little

3. Which one of the following areas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by your country i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Community?

- 1) Terror Deterrence
 2) Military Confidence Building
 3) Arms Reduction
 4) Non-Proliferation of WMD
 5) Other ()

Part V. Political A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How do you evaluate the status of progress of the governmental dialogues amo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countries?

- 1) Very Well 2) Well
 3) Badly 4) Very Badly

2. Which one of the following countries causes the most conflict among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Community countries?

- 1) South Korea 2) China 3) Japan
 4) North Korea 5) the U.S.A. 6) Russia
 7) Other ()

3. Which one of the following do you consider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conflict with the above selected country?

- 1) Conflicting Interpretation of History
 2) Friction of Economic Relations
 3) Territorial Disputes
 4) Differences in Political Systems
 5) Pursuing Hegemony 6) Other ()

Part VI. Linkage Aspects of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Which one of the following areas is progressing most vigorously in Northeast Asia?
 1) Culture 2) Economy
 3) Security 4) Politics

2. Which one of the following areas needs the greatest emphasis i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Culture 2) Economy
 3) Security 4) Politics

3. When do you think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Within 10 Years 2) Within 20 Years
 3) Within 30 Years 4) Impossible

4. How necessary would Korean Unification be in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1) Very Much 2) Much
 3) Little 4) Very Little

5. How much openness would the Northeast Asian Community need to have in relation with the outside world?
 1) Very Much 2) Much
 3) Little 4) Very Little

Interviewee Records

<i>Name</i>	
<i>Nationality</i>	
<i>Affiliation</i>	
<i>Areas of Expertise</i>	
<i>Tel</i>	
<i>e-mail</i>	
<i>fax</i>	

Interviewer Records

<i>Name</i>	
<i>Tel</i>	
<i>Time</i>	
<i>Method</i>	

<부록 Ⅱ>

전문가 인식조사 응답자 명단

국적	이름	소속	전공분야
한 국	김성진	덕성여대	정치학
	김언성	동북아시아대위원회 과장	-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치
	김재철	가톨릭대	-
	김태현	중앙대학교	정치학
	김흥규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정치
	박명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남북문제, 국정치
	박찬봉	통일부	-
	배금찬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치
	손기웅	통일연구원	-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정치
	신상진	광운대	중국외교/동북아국제관계
	안형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학
	엄태암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정치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학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
	이대우	세종연구소	-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정치/국제정치경제
	이상현	세종연구소	국제정치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국제안보/군축
	이석수	-	-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정책
	전봉근	평화협력원	통일외교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
	정정숙	한국문화관광청 정책연구원	문화교류
	최강	-	정치외교
	최수영	통일연구원	경제학(북한경제/남북경협)
	최영종	가톨릭대 국제학부 국제관계학	-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치경제
	황재호	한국국방연구원	중국정치

국적	이름	소속	전공분야
미 국	Alan D. Romberg	Henry L. Stimson Center	Northeast Asia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US policy
	Balbina Hwang	The Heritage Foundation	Northeast Asia
	Bruce E. Bechtol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international relations
	Charles L. Prichard	Brookings Institute	Security
	C. Kenneth Quinones	International Action	Northeast Asia security/history
	David Von Hippel	Nautilus Institute	Energy and the Environment
	Dennis Halpin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hina, Korea
	Derek Mitchell	CSIS	East Asia security
	Donald Gross	Senior Fellow, Atlantic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China, Korea, Japan, Northeast Asia/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international security
	Dong Bandow	CATO	Northeast Asia
	Dong Bond	Harvard University	Intel.relations, development
	James L. Schoff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East Asia security
	Jennifer Arnyo	Univ.of Penn, Stanford Univ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Joel Wit	CSIS	Northeast Asia security
	Joseph Winder	Korea Economic Institute	Korea peninsula, economics, foreign policy
	John Endicott		Northeast Asia, US defence policy
	John Merrill	Division Chief, Northeast Asia, Bureau of Intelligence & Research	
	Jon Wolfsthal	Cameaie Endowment	Proliferation
	Kongdon(Katy) Oh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USA	Northeast Asian regional relations, 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oward Northeast Asia, Two Koreas/Japan/China
	L. Gordon Flake	Maureen and Mike Mansfield Foundation	
	Miles Kahler	UCSD	
	M. Noland	INST.	economies
	Patrick Morgan	University fo California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US-Korea relations
	Peter Beck	ICG(NGO)	Korea
	Ralph. A. Cossa	Pacific Forum CSIS, Honolulu	East Asia security
	Scott Bruce	Nautilus Institute	Korean Nuclear issue
	Scott Snyder	Asia Foundation	US-Asia political/security relations
	Ted Carpenter	CATO	
	T. J. Dempel	Director, IEAS UCAC BERKELEY	asian regionalism/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Todd Rosablan	US Senate	Intelligence, Non-proliferation, regional security
Vinod Aggarwal	UC Berkeley	Political Science	

국적	이름	소속	전공분야
러 시 아	Alexander Fedorovskiy	IMEMO	Korea and NEA issues
	Andrei Kouzmenko	IMEMO	China Military politics, security in Northeast Asia, Sino-Russian relations
	Elena	IMEMO	Russia-Pacific region relations
	Evgeny Volosov	IMEMO	South-Eastern Asia, Northern Asia
	Evgueny Kim	Diplomatic Academy of Russian MOFA	International and Korea's Labor law
	Likov Konstantin Fedorua	극동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Mikhail M. Steklov	Moscow State University	Korean economy
	Kanaev		ARF activity
	Kim En Un	IFES RAS	problem fo Korean peninsula, overseas koreans
	Konstantin V. Asmolv	IFES RAS	Korean history & political tradition, pacific security
	Proekobs Taufe	극동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Shalda	IMEMO	Russia-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Svetlana Suslina	IFES RAS	Economics of Korean peninsula, Russian-Korean economic relations
	V. Amirov	IMEMO	APR economic&security issues
	굴러도브 부슬란	경제문제연구소	-
	마살쎬프 알렉산드르	주장부국제교류국 한국담당관	-
	뽀포브 블라지르르	경제문제연구소	-
	이바노프 알렉산드르	국립사범대학교	역사학박사
	제바예바 엘레나	경제문제연구소	
	페슈트뉴코 유리	허버사범대학교 일어과 역사박사 교수	-
칼라슈니코프 빅토르	경제문제연구소 경제박사	-	
크리보드딜바 올리아	주장부국제교류국 주임전문가	-	
무기명(7)	-	-	

국적	이름	소속	전공분야
몽 골	A. Buyantugs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A. Tuvshintugs	전략연구소 부소장	-
	B. Amgalan	몽골국립사범대학 유전공학연구원	-
	B. Buyantsog	몽골국영라디오방송국 편성책임자	-
	B. Dashzeveg	UBS TV 방송국 정치 평론가	-
	B. Serzav	학자, 연구원	-
	CH. Dariman	번역사(공인회계사)	-
	D. Odkhuu	정부공무원	-
	D. Sharkhuu	국제연구소 연구원	-
	D. Shin-erdene	과학기술대 IT공학부 교수	-
	K. Demberel	학자(국제연구소)	-
	L. Byambadorj	몽골국립대학교 민속학 교수	-
	L. Khaisandai	국제연구소 소장	-
	L. Molomjams	전략연구소 고문	-
	L. Tsendamba	MDI 부소장(연구원)	-
	L. Tsermaa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
	M. Amartaiwan	울란바타르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
	M. Khurmitkhan	선임연구원	-
	N. Ariungua	몽골국립대학교	-
	O. Batsaikhan	몽골개발연구소 고문	-
	O. Munhkbat	연구원	-
	R. Damdindorj	몽골방송국 뉴스편집국 평론가	-
	R. Zamtsh	학자(국제연구소)	-
	S. Dashtengel	연구원	-
	S. Jargalsaikhan	세관원	-
	SH. Erdenebeleg	몽골국립라디오방송국 정치법률부서편집국장	-
	T. Lkhagwabay	법률가	-
	TS. Baatar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TSH. Battshetshег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Z. Odgerel	몽골국립대학 역사학자	-
무기명(1)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자	-	

국적	이름	소속	전공분야
일본	雨宮 浩之 (AMEMIYA, Hiroyuki)	慶應義塾大學大學院政策・メディア研究科	국제정치, 안전보장
	藤橋師子(Fujihashi)	東京大學/日本大學 留學生センター	일본어
	福山悠介(Fukuyama)	慶應義塾大學 グローバルセキュリティ研究所	한반도지역연구
	原田 泉(Harada)	국제사회연구소	위기관리론/정보사회론
	池田裕子(Ikeda)	-	-
	木宮 正史(Kimiya)	동경대학	한반도정치
	國方智子(Kokuho)	-	-
	荒井誠治(Koushou Seiji)	회사원	증권
	増田雅之(Masuda)	방위청 방위연구소	아시아안전보장, 중국외교/안전보장정책
	中村貞行(Nakamura)	회사원	증권
	瀬地山 角(Sechiyama)	동경대학	사회학
	高橋 博子 (TAKAHASHI, HIROKO)	히로시마 시립대학 히로시마평화연구소	미국사
	武貞秀士(Takesada)	방위청 방위연구소	국제정치학
	田辺靖雄(Tanabe)	경제산업연구소	국제관계
	土屋大洋(Tsuchiya)	게이오대학	국제관계론
	山本吉宣(Yamamoto)	靑山學院大學	국제정치
	湯淺 剛(Yuasa)	방위청 방위정책과	비교정치학, 중앙아시아안전보장연구
	米山	동경대학	정치학
	道下徳成	방위연구소	정치학
	久保文响(Kubo)	동경대학	정치학
	白石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국제관계
	IHARA, HIROKI	三菱 증권	증권
	ISO, MITSUE	三菱 증권주식회사	-
	KASUMI MIZUMOTO	히로시마 시립대학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국제정치, 국제관계, 핵문제
M. MATSUMOTO	Securities Company	-	
okada tamio	동경대학	정치	
OKONOGI, MASAO	게이오대학	정치학	
무기명(2)	-	-	
중국	-중국 전문가 소속기관 *北京大學 *中國社會科學院 *外交學院 *現代國際關係研究院 *上海復旦大學 *上海同濟大學 *上海社會科學院		

<부록 Ⅲ>

국가별 지역협력 인프라 실태 지표

1. 국가별 경제지표

가. GDP

<표 III-1> 동북아 7개국의 GDP

	GDP (구매력기준) b			GDP 실질성장률 b			GDP (경상물가) a			일인당 GDP (구매력기준) b		
	\$ bn			%			\$ bn			\$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한국	424	584.7	855.3	6.3	-6.8	2.8	414.96	511.77	746.18	9,500	12,600	1,700
중국	2,610	4,420	6,449	13.4	7.8	9.1	562.82	900.18	5,596.87	2,200	3,600	5,000
일본	2,549	2,903	3,567	0.0	-2.6	2.3	5,158.56	5,512.64	3,115.50	20,400	23,100	28,000
러시아	7,754	5,934	1,287	-12.06	-5.0	7.3	402.96	31,303	50,597	5,190	4,000	8,900
몽골	2.8	5.8	4.877	-1.3	3.5	5	1	0.98	3.89	1,200	2,250	1,800
북한	22.0	21.8	22.85	-7~-9	-5.0	1.0	-	-	-	1,000	1,000	1,000
미국	6,379	8,511	10,980	3.0	3.9	3.1	6,865.6	8,285.9	9,453.95	24,700	3,500	37,800
동북아1 (2003년)	10,899.027			4.04			9,462.44			53,700 (동북아1의 평균: 10,700)		
동북아2 (2003년)	23,166.027			4.37			19,422.36			100,200 (동북아2의 평균: 14,314.3)		
전세계 (2004 est.)	\$55.5 trillion			4.9%			-			\$8,800		

		GDP 구성비 b		
		%		
		1993	1998	2003
한국	농업	8.0	6.0	4.4
	공업	45.0	43.0	37.6
	서비스업	47.0	50.0	58.0
중국	농업	26.0	19.0	14.5
	공업	-	49.0	51.7
	서비스업	-	32.0	33.8
일본	농업	2.0	2.0	1.4
	공업	30.0	38.0	30.9
	서비스업	-	60.0	67.7
러시아	농업	-	7.0	5.2
	공업	-	39.0	35.0
	서비스업	-	54.0	59.8
몽골	농업	35	31	20.6
	공업	42	35	21.4
	서비스업	37	34	58
북한	농업	25.0	25.0	30.2
	공업	-	60.0	33.8
	서비스업	-	15.0	36.0
미국	농업	-	7.0	5.2
	공업	-	39.0	35.0
	서비스업	-	54.0	59.8

출처: a - World Bank - WDI

b - CIA World Factbook

참고: 동북아1-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동북아2-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나. 인구

<표 III-2> 동북아국가의 인구

(단위: 인구(천명), 성장률(%))

지표		1990	1995	2000	2005	
한국	인구	42 869	45 007	46 779	47 817	
	성장률	1990~1995 0.97		1995~2000 0.77		2000~2005 0.44
중국	인구	1,155,305	1,219,331	1,273,979	1,315,844	
	성장률	1990~1995 1.08		1995~2000 0.88		2000~2005 0.65
일본	인구	123,537	125,472	127,034	128,085	
	성장률	1990~95 0.31		1995~2000 0.25		2000~2005 0.17
러시아	인구	148,370	148,189	146,560	143,202	
	성장률	1990~1995 -0.02		1995~2000 -0.22		2000~2005 -0.46
몽골	인구	2,216	2,389	2,497	2,646	
	성장률	1990~1995 1.51		1995~2000 0.88		2000~2005 1.16
북한	인구	19,690	20,918	21,862	22,488	
	성장률	1990~1995 1.21		1995~2000 0.88		2000~2005 0.56
미국	인구	255,539	269,603	284,154	298,213	
	성장률	1990~1995 1.07		1995~2000 1.05		2000~2005 0.97
동북아1 (2005년)	인구	1,516,880				
	성장률	0.6				
동북아2 (2005년)	인구	1,958,295				
	성장률	0.5				
전세계 (2005년)	인구	6,464,750				
	성장률	1.2				

동북아 1: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동북아 2: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 Source: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and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03 Revision <<http://esa.un.org/unpp>, 30 May 2005/>.

<표 III-3> 동북아국가의 실업률

지표	단위	1993	1998	2003	World
한국	%	2.6	7.9	3.4	30*
중국		2.3	3.0	10.0	
일본		4.4	4.4	5.	
러시아		1.4	11.5	8.4	
몽골		15	4.5	4.6	

Source: CIA World Factbook

* 다수 후진국들에서의 실업과 저고용을 포함하고 있음. 선진국들의 실업률은 전형적으로 4%~12%임.

<표 III-4> 몽골의 노동력 및 실업률 지표

<p>● 노동력 지표 1</p> <p>▷ Population of working age 1531.1 thousand(2004)</p> <p>▷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986.1 thousand(2004)</p> <p>▷ Of which: Employed 950.5 thousand(2004)</p> <p>▷ Of which: Unemployed 35.6 thousand(2004)*</p> <p>▷ Employees by divisions: herding/agriculture 40.2%, wholesale & retail trade 14.1%, industry 12.0%, transport & communication 4.4%, construction 4.1%, others 25.2%</p> <p>* 통계 수치에 잡힌 공식적인 실업자 수</p> <p>Source: 몽골국 통계연감 2004 (울란바토르 2005).</p>														
<p>● 노동력 지표 2</p> <p>▷ Labor Force 1.4 million (2001)</p> <p>▷ Labor Force by occupation: herding/agriculture 46%, manufacturing 6%, trade 10.3%, public sector 4.7%, other/unemployed 33% (2001)</p> <p>Source: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http://globaledge.msu.edu/statistics>.</p>														
<p>▷ 실업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Unit</th> <th>2001</th> <th>2002</th> <th>2003</th> <th>2004</th> </tr> </thead> <tbody> <tr> <td>%</td> <td>4.6</td> <td>3.4</td> <td>3.5</td> <td>3.6</td> </tr> </tbody> </table> <p>Source: 몽골국 통계연감 2004 (울란바토르, 2005).*</p> <p>* 통계에 잡힌 공식적인 실업률을 계산한 것임.</p>					Unit	2001	2002	2003	2004	%	4.6	3.4	3.5	3.6
Unit	2001	2002	2003	2004										
%	4.6	3.4	3.5	3.6										

다. 에너지

<표 III-5> 동북아국가의 에너지 생산·소비

	에너지소비량			에너지생산량			오일 소비량			오일 생산량			전력생산량		
	Quadrillion(10 ¹⁵) British Thermal Units			Quadrillion(10 ¹⁵) British Thermal Units			Thousand Barrels per Day			Thousand Barrels per Day			10억 kwh		
	93	98	02	93	98	02	93	98	02	93	98	02	2002		
한 국	5.542	6.797	8.395	0.769	0.979	1.235	1,684.00	1,916.60	2,179.70	0	0	0	134.89	225.97	267.57
중 국	31.317	37.077	43.177	31.836	36.335	41.852	2,959.50	4,105.60	5,161.00	2,890.00	3,198.20	3,399.70	756.71	1,103.801	1,575.13
일 본	19.397	21.339	21.965	3.894	4.580	4.286	5,414.00	5,524.40	5,300.60	19.3	17.4	17.5	867.11	996.45	1,044.04
러 시 아	31.964	25.719	27.536	44.691	40.400	45.679	3,750.50	2,488.60	2,580.00	6,950.00	6,074.00	7,654.20	914.92	787.8	850.61
몽 골	0.098	0.077	0.084	0.071	0.058	0.060	12.8	8.0	11.0	0	0	0	2.427	2.515	2.91
북 한	1.328	0.865	1.032	1.120	0.792	1.036	71.7	35.00	20.00	0	0	0	32.92	31.4	33.62
미 국	87.578	95.147	97.649	68.261	72.787	70.793	17,236.70	18,917.10	19,761.30	8,835.60	8,391.80	8,043.30	3,197.191	3,620.296	3,838.55
동 북 아 1	57.682	66.155	74.714	37.689	42.744	48.468	10,142.02	11,589.79	12,672.30	2,909.30	3,215.60	3,407.20	-		
동 북 아 2	177.223	187.02	199.898	150.641	155.932	164.941	31,129.22	32,995.49	35,013.60	18,694.90	17,681.40	19,104.70			
전 세 계	353.281	381.455	411.196	349.428	383.943	404.981	67,398.90	73,875.10	78,206.20	66,051.80	73,762.20	74,930.50			

Sourc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Annual 2002*

동북아 1: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동북아 2: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라. 무역 및 투자

<표 III-6> 동북아국가의 무역 및 투자

	수출			수입			FDI					
	\$ bn			\$ bn			\$ m.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1992~1997 연평균		1998		2003	
							in	out	in	out	in	out
한국	81	133	201.3	78.9	94	175.6	1,298	2,939	5,039	4,740	3,752	3,429
중국	92	183.8	436.1	104	140.17	397.4	32,799	2,846	45,463	2,634	53,505	1,800
일본	360.9	440	447.1	240.7	319	346.6	1,225	20,232	3,192	24,152	6,324	28,800
러시아	43	71.8	134.4	27	58.5	74.8	2,018	1,027	2,761	1,270	7,958	9,727
몽골	0.36	0.316	0.524	0.361	0.4724	0.691	11	-	19	-	132	-
북한	1.02	0.74	1.04	1.64	1.83	2.04	53	-	31 (추정치)	-	-5 (추정치)	-
미국	449	663	714.5	582	912	1,260	60,268	77,569	174,434	131,004	29,772	151,884
동북아1('03)	1,086,064			922,331			-				63,650	34,029
동북아2('03)	1,934,964			2,257,131			-				101,046	195,640
전세계 ('03)	8,819 \$ trillion			8,754 \$ trillion			-				559,576	612,201

	주요수출국			주요수입국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한국	미국(26%) 일본(17%) EU(14%)	미국(17%) 일본(9%) 중국(9%)	미국(20.4%) 중국(14.7%) 일본(9.4%)	일본(26%) 미국(24%) EU(15%)	미국(22%) 일본(18%) 중국(7%)	일본(19.6%) 미국(15.2%) 중국(11.4%)
중국	홍콩 일본 미국	홍콩(21%) 미국(21%)	미국(21.5%) 홍콩(18%) 일본(14.9%)	일본 대만 미국	일본(20%) 미국(12%) 대만(12%)	일본(18.1%) 대만(12.8%) 한국(9.7%)
일본	동남아(33%) 미국(29%) 서유럽(18%)	미국(30%) EU(18%) 동남아(12%)	미국(28.8%) 중국(9.6%) 한국(6.9%)	동남아(25%) 미국(23%) 서유럽(15%)	미국(24%) 동남아(14%) EU(14%)	중국(18.3%) 미국(17.4%) 한국(4.6%)
러시아	유럽 북미 일본	우크라이나 독일 미국	독일(7.5%) 이태리(6.9%) 네덜란드(6.7)	유럽 북미 일본	유럽 북미 일본	독일(14.3%) 벨라루스(89.9%) 우크라이나(7.1%)
몽골	동유럽(62%) 중국(17%) EC(8%)	중국(30.1%) 스위스(21.5%) 러시아(12.1%)	중국(41.4%) 미국(31.7%) 러시아(9.2%)	USSR(75%) 오스트리아(5%) 중국(5%)	러시아(30.6%) 중국(13.3%) 일본(11.7%)	러시아(34.4%) 중국(20.1%) 한국(12.4%)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일본(28%) 한국(21%) 중국(5%)	한국(28.5%) 중국(28.4%) 일본(24.7%)	중국 러시아 일본	중국(33%) 일본(17%) 러시아(5%)	중국(39.7%) 태국(14.6%) 일본(11.2%)
미국	서유럽(24.3%) 캐나다(22.1%) 일본(10.5%)	캐나다(23%) 멕시코(12%) 일본(8%)	캐나다(23.2%) 멕시코(14.1%) 일본(7.4%)	캐나다(19.3%) 서유럽(18.1%) 일본(18.1%)	캐나다(19%) 일본(13%) 멕시코(10%)	캐나다(17.8%) 멕시코(11.3%) 중국(11.1%)

1993~1998년 자료: CIA World Factbook.

2003년 자료: IMF - IFS

FDI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4*, The Shift Towards Services.

동북아 1: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동북아 2: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미국

마. 국가간 수출입 matrix

<표 III-7> 한국의 수출입 matrix

(단위: 백만불)

		중 국	일 본	미 국	러시아	북한	몽골	동북아	세계	비 중
1993	수출	5,150	11,564	18,220	601	9	4	35,548	85,808	41.43
	수입	3,929	20,016	17,952	974	178	4	43,053	86,630	49.70
	합계	9,079	31,580	36,172	1,575	187	8	78,601	172,438	-
	비율1	11.6	40.2	46.0	2.0	0.2	0.0	-	-	-
	비율2	5.3	18.3	21.0	0.9	0.1	0.0	45.6	-	-
1998	수출	11,981	12,262	23,076	1,115	130	80	48,644	132,703	36.66
	수입	6,488	16,843	20,423	1,000	92	5	44,851	93,370	48.04
	합계	18,469	29,105	43,499	2,115	222	85	93,495	226,073	-
	비율1	19.8	31.1	46.5	2.3	0.2	0.1	-	-	-
	비율2	8.2	12.9	19.2	0.9	0.1	0.0	41.4	-	-
2003	수출	35,110	17,276	34,369	1,659	435	100	88,849	177,798	49.97
	수입	21,909	36,313	24,935	2,522	289	4	85,968	171,940	50.00
	합계	57,019	53,589	59,304	4,181	724	104	174,817	349,738	-
	비율1	32.6	30.7	33.9	2.4	0.4	0.1	-	-	-
	비율2	16.3	15.3	17.0	1.2	0.2	0.0	50.0	-	-

비율1- 한국의 동북아수출입 합에서 상대국가가 차지하는 비율,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위: %

비율2- 한국의 전 세계수출입 합에서 상대국가가 차지하는 비율,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위: %

*Source: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통일부, 통일백서 2005 를 참고하여 재작성함.

<표 III-8> 중국의 수출입 matrix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	북한	몽골	동북아	세 계	동북아 /세계 (%)
1993	수출	15,782	16,977	2,692	2,860	602	82	38,995	91,693	42.53
	수입	23,303	10,633	4,986	5,360	296	70	44,648	103,622	43.09
	합계	39,085	27,610	7,678	8,220	898	152	83,643	195,315	-
	비율1	46.7	33.0	9.2	9.8	1.1	0.2	-	-	-
	비율2	20.0	14.1	3.9	4.2	0.5	0.1	42.8	-	-
1998	수출	29,718	38,001	1,833	6,266	357	63	76,174	183,744	41.46
	수입	28,307	16,997	3,627	15,021	51	181	64,002	140,385	45.59
	합계	58,025	54,998	5,460	21,287	408	244	140,176	324,129	-
	비율1	41.4	39.2	3.9	15.2	0.3	0.2	-	-	-
	비율2	17.9	17.0	1.7	6.6	0.1	0.1	43.3	-	-
2003	수출	59,423	92,633	6,035	20,096	628	156	178,814	438,250	40.80
	수입	74,151	33,939	9,726	43,135	395	284	161,346	412,836	39.08
	합계	133,574	126,572	15,761	63,231	1,023	440	340,160	851,086	-
	비율1	39.3	37.2	4.6	18.6	0.3	0.1	-	-	-
	비율2	15.7	14.9	1.9	7.4	0.1	0.1	40.0	-	-

<표 III-9> 일본의 수출입 matrix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	북한	몽골	동북아	세계	비중
1993	수출	17,353	106,898	1,508	19,192	221	19	145,191	362,602	40.04
	수입	20,652	55,943	2,777	11,742	244	26	91,384	241,630	37.82
	합계	38,005	162,841	4,285	30,934	465	45	236,575	604,232	-
	비율1	16.1	68.8	1.8	13.1	0.2	0.0	-	-	-
	비율2	6.3	27.0	0.7	5.1	0.1	0.0	39.2	-	-
1998	수출	20,182	119,717	970	15,400	175	75	156,519	387,955	40.34
	수입	37,079	67,518	2,906	12,142	217	58	119,920	280,825	42.70
	합계	57,261	187,235	3,876	27,542	392	133	276,439	668,780	-
	비율1	20.7	67.7	1.4	10.0	0.1	0.0	-	-	-
	비율2	8.6	28.0	0.6	4.1	0.1	0.0	41.3	-	-
2003	수출	57,480	117,384	1,770	34,823	91	45	211,593	473,911	44.65
	수입	75,559	59,892	4,235	17,931	174	7	157,798	383,025	41.20
	합계	133,039	177,276	6,005	52,754	265	52	369,391	856,936	-
	비율1	36.0	48.0	1.6	14.3	0.1	0.0	-	-	-
	비율2	15.5	20.7	0.7	6.2	0.0	0.0	43.1	-	-

<표 III-10> 러시아의 수출입 matrix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북한	몽골	동북아	세계	비중
1993	수출	3,068	2,005	1,998	391	168	157	7,787	44,047	17.68
	수입	2,335	1,367	2,304	306	54	81	6,447	26,751	24.10
	합계	5,402	3,372	4,302	697	223	238	14,234	70,798	-
	비율1	38.0	23.7	30.2	4.9	1.6	1.7	-	-	-
	비율2	7.6	4.8	6.1	1.0	0.3	0.3	20.1	-	-
1998	수출	3,144	2,171	5,995	516	54	133	12,013	71,389	16.83
	수입	1,146	810	4,052	1,004	8	50	7,070	42,939	16.47
	합계	4,290	2,981	10,047	1,520	62	183	19,083	114,328	-
	비율1	22.5	15.6	52.6	8.0	0.3	1.0	-	-	-
	비율2	3.8	2.6	8.8	1.3	0.1	0.2	16.7	-	-
2003	수출	8,161	2,407	6,082	1,317	111	284	18,362	131,454	13.97
	수입	3,270	1,816	2,931	1,312	3	36	9,368	56,677	16.53
	합계	11,432	4,223	9,013	2,629	113	320	27,730	188,131	-
	비율1	41.2	15.2	32.5	9.5	0.4	1.2	-	-	-
	비율2	6.1	2.2	4.8	1.4	0.1	0.2	14.7	-	-

< 표 III-11 > 몽골의 수출입 Matrix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	북한	동북아	세계	비중
1993	수출	120	17	4	145	1	1	288	383	75.20
	수입	66	21	17	220	4	1	329	379	86.81
	합계	186	38	21	365	5	2	617	762	-
	비율1	30.1	6.2	3.4	59.2	0.8	0.0	-	-	-
	비율2	24.4	5.0	2.8	47.9	0.7	0.0	75.4	-	-
1998	수출	101	13	29	41	33	0	217	345	62.90
	수입	58	59	36	150	37	0	340	503	67.59
	합계	159	72	65	191	70	0	557	848	-
	비율1	28.5	12.9	11.7	34.3	12.6	0.0	-	-	-
	비율2	18.8	8.5	7.7	22.5	8.3	0.0	75.4	-	-
2003	수출	284	9	143	41	7	0	484	616	78.57
	수입	172	63	24	265	67	0	591	801	73.78
	합계	456	72	167	306	74	0	1,075	1,417	-
	비율1	42.4	6.7	15.5	28.5	6.9	0.0	-	-	-
	비율2	32.2	5.1	11.8	21.6	5.2	0.0	75.4	-	-

<표 III-12> 북한의 수출입 matrix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한국	몽골	동북아	세계	비중
1993	수출	269	222	0	49	178	0	718	887	80.95
	수입	663	243	2	185	9	0	1,102	1,528	72.12
	합계	932	465	2	234	187	0	1,820	2,415	-
	비율1	51.2	25.5	0.1	12.9	10.3	0.0	-	-	-
	비율2	38.6	19.3	0.1	9.7	7.7	0.0	75.4	-	-
1998	수출	46	197	0	8	92	0	343	881	38.93
	수입	392	193	5	59	130	0	779	1,171	66.52
	합계	438	390	5	67	222	0	1,122	2,052	-
	비율1	39.0	34.8	0.4	6.0	19.8	0.0	-	-	-
	비율2	21.3	19.0	0.2	3.3	10.8	0.0	75.4	-	-
2003	수출	359	158	0	3	289	0	809	912	88.71
	수입	690	100	9	122	435	0	1,356	2,120	63.96
	합계	1,049	258	9	125	724	0	2,165	3,032	-
	비율1	48.5	11.9	0.4	5.8	33.4	0.0	-	-	-
	비율2	34.6	8.5	0.3	4.1	23.9	0.0	75.4	-	-

<표 III-13> 미국의 수출입 matrix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몽골	동북아	세계	비중
1993	수출	8,767	47,950	2,967	14,776	2	17	74,479	465,870	15.99
	수입	33,513	110,418	1,847	17,677	0	36	163,491	602,975	27.11
	합계	42,280	158,368	4,814	32,453	2	53	237,916	1,068,845	-
	비율1	17.8	66.6	2.0	13.6	0.0	0.0	-	-	-
	비율2	4.0	14.8	0.5	3.0	0.0	0.0	22.3	-	-
1998	수출	14,258	57,888	3,585	16,538	4	20	92,293	680,406	13.56
	수입	75,109	125,091	6,008	24,805	0	45	231,014	944,644	24.46
	합계	89,367	182,979	9,593	41,343	4	65	323,287	1,625,050	-
	비율1	27.6	56.6	3.0	12.8	0.0	0.0	-	-	-
	비율2	5.5	11.3	0.6	2.5	0.0	0.0	22.3	-	-
2003	수출	28,419	52,064	2,450	24,099	8	21	107,061	723,611	14.80
	수입	163,255	121,233	9,085	38,346	0	195	332,114	1,305,250	25.44
	합계	191,674	173,297	11,535	62,445	8	216	439,175	2,028,861	-
	비율1	43.6	39.5	2.6	14.2	0.0	0.0	-	-	-
	비율2	9.4	8.5	0.6	3.1	0.0	0.0	22.3	-	-

바. FTA²⁶¹

<표 III-14> 대륙별 FTA 추진추진동향 (타결/협상중)

	아시아	미주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등	소계
아시아	5/11	2/8	0/1	1/1	0/0	8/20
미 주	2/8	2/7	0/2	1/1	1/1	6/19
유 럽	0/1	0/2	0/4	0/0	0/6	0/13
대양주	1/1	1/1	0/0	0/0	0/0	2/2

<표 III-15> 동북아국가의 FTA 추진동향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비고
한국	칠레('03), 싱가폴('03)	일본, EFTA, 캐나다, ASEAN	ASEAN, EFTA, 캐나다, 인도, Mercosur, 미국	-
중국	홍콩('03.6), 마카오('03.10) *ASEAN,	뉴질랜드('04.12 개시)	호주, 인도, 한국, 일본, **GCC, Mercosur, 칠레(공동연 구 종료)	* 중-ASEAN FTA는 '04년 10월 상품 분야 타결, '05년 7월 발효 예정 ** GCC 걸프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일본	싱가포르('02.1), 멕시코('04.3), 필리핀('04.11)	한국('03.12 개시) 태국('04.2 개시) 말레이시아('04.1 개시)	ASEAN('05.4 개시예정), 칠레, 인도네시아, 대만	-
러시아	우크라이나('94) 신유고연방('00.8) 몰도바('03.6)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03.9 공동경제지대(CES) 창설에 관한 협정)	-	-

²⁶¹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2004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5년 전망” (2005).

	기체결	협상 중	검토중	비고
미국	이스라엘(85) NAFTA(94) 요르단('02), 칠레('02) 싱가폴('03), 중남미4개국('03), 호주('04.2), CA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모로코('04.3), 바레인('04.5) 도미니카공화 ('04.3)	FTAA, SACU, 태국('04.6개시), 파나마('04.4개시), 페루·콜롬비아· 에콰도르('04.6개시)	ASEAN, 인도네시아, 이집트, 대만, 우루과이, 필리핀	-

2. 국가별 안보지표

가. 국방비

<표 III-16> 동북아 7개 국가의 국방비 순위(2002년 기준)

	국방비 규모순위 (금액: \$억)		GDP 대비 국방비 비율순위(%)		국민1인당 국방비 규모순위 (금액: \$)		병력규모순위 (단위: 천 명)	
	순위	금액	순위	비율	순위	금액	순위	병력
1	미국(1)	3,296	북한(1)	25.0	미국(4)	1,138	중국(1)	2,270
2	중국(2)	484	러시아(26)	4.8	러시아(25)	333	미국(2)	1,414
3	러시아(3)	480	중국(31)	4.1	일본(28)	290	북한(4)	1,082
4	일본(5)	371	미국(48)	3.3	한국(29)	266	러시아(5)	998.1
5	한국(11)	131	한국(59)	2.8	중국(-)	37	한국(6)	690
6	북한(25)	47	몽골(-)	2.2	북한(-)	31	일본(23)	239.9
7	몽골(-)	24	일본(-)	1.0	-	-	몽골	9.1

() 안의 숫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순위임.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통계 참고.

<표 III-17> 동북아국가의 국방비

	국방비(US \$ m.)*			국방비/GDP(%)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한국	11545	13026	14860	3.3	2.8	2.5
중국	[14343]	[18000]	[33100]	[2.1]	[1.9]	[2.3]
일본	39867	41362	42729	0.9	1.0	1.0
러시아	[23958]	[10300]	[18500]	[5.3]	[3.1]	[4.3]
몽골	31.6	19.8	24.3	2.5	2	2.2
북한	21.5	13.3	14.4	11.4	14.6	14.4
미국	379016	309447	[414400]	4.5	3.1	[3.8]
전세계	-	-	879 (US10억달러)	-	-	-

* 수치는 2000년 불변가격과 환율에 의해 계산되었음.

Source: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북한: 통일부, 2004 북한개요 .

US \$ m. = Million US dollars, [] = SIPRI estimate.

나. 군사력 현황*

<표 III-18> 한국의 군사력 현황

지표	단위	1993	1998	2003
전체 군인수	명	633,000	672,000	686,000
육군		520,000	560,000	560,000
해군		60,000	60,000	63,000
공군		53,000	52,000	63,000
예비군		4,500,000	4,500,000	4,500,000
준군사조직		4,500	4,500	4,500
탱크		대/척/기	1,860	2,190
포대	4,540		4,696	4,774
함정	38		38	39
잠수함	4		14	20
수송기	0		0	0
전투기	460		511	554
헬리콥터	180		190	160
핵무기	없음		없음	없음
화학무기	알려지지 않음		확인	확인
생물무기	없음		없음	없음
SRBM	확인 NHK-1 (Baekgom), NKH-A (Hyon Mu)		확인 NHK-1 (Baekgom), NKH-A (Hyon Mu)	확인 NHK-1 (Baekgom), NKH-A (Hyon Mu)
MRBM	없음		없음	없음
IRBM	없음		없음	없음
SLBM	없음	없음	없음	
ICBM	없음	없음	없음	
Strategic bombers	없음	없음	없음	
Strategic submarines	없음	없음	없음	

*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 현황은 IISS Military Balance 1993/94, 1998/99, 2003/2004 와 NBR Reserch Team 2004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표 III-19> 중국의 군사력 현황

지표	단위	1993	1998	2003
총 병력	명	3,030,000	2,820,000	2,250,000
육군		2,300,000	2,090,000	1,700,000
해군		260,000	260,000	400,000
공군		470,000	470,000	250,000
민병		1,200,000	1,200,000	500-600,000
인민무장경찰		1,200,000	1,200,000	1,500,000
탱크	대/척/기	7,500-8,000	8,800	7,180
포		18,300	14,500	18,100
함정		56	53	63
잠수함		47 (전략잠수함 1)	63(전략잠수함1)	69(전략잠수함 1)
수송기		0	0	0
전투기		5,850	4,107	2,600 (전략폭격기 20)
헬기		65	25	45
핵무기		확인	확인	확인
화학무기		가능	가능	가능
생물학 무기		추측	추측	추측
SRBM		Confirmed CSS-6 (DF-15/M-9), CSS-7 (DF-11/M-11)	Confirmed CSS-6 (DF-15/M-9), CSS-7 (DF-11/M-11)	Confirmed CSS-6 (DF-15/M-9), CSS-7 (DF-11/M-11), CSS-8 (DF-7)
MRBM		Confirmed CSS-2 (DF-3)	Confirmed CSS-2 (DF-3), CSS-5 (DF-21)	Confirmed CSS-2 (DF-3), CSS-5 (DF-21)
IRBM		None	None	None
SLBM		Confirmed CSS-N-3 (J-1)	Confirmed CSS-N-3 (J-1)	Confirmed CSS-N-3 (J-1)
ICBM		Confirmed 14 10 CSS-3 (DF-4), 4 CSS-4(DF-5)	Confirmed 17 10 CSS-3 (DF-4), 7 CSS-4(DF-5)	Confirmed 30+a 24 CSS-4(DF-5A), 8 CSS-9 (DF-31), CSS-3 (DF-4)
Strategic bombers		None	None	None
Strategic submarines		Confirmed 1	Confirmed 1	Confirmed 1

<표 III-20> 일본의 군사력 현황

지표	단위	1993	1998	2003
총 병력	명	237,700	242,600	239,900
육상자위대		149,900	151,800	148,200
해상자위대		43,100	43,800	45,600
공상자위대		44,700	45,600	44,400
예비군		46,500	48,600	47,000
준군사조직		12,000	12,000	12,250
탱크	대/척/기	1,200	1,090	1,020
포		1,012	900	870
함정		62	57	54
잠수함		17	16	16
수송기		0	0	0
전투기		531	429	350
헬기		147	196	192
Nuclear weapons		None		
Chemical weapons				
Biological weapons				
SRBM				
MRBM				
IRBM				
SLBM				
ICBM				
Strategic bombers				
Strategic submarines				

<표 III-21> 러시아의 군사력 현황

지표	단위	1993	1998	2003
총 병력	명	2,030,000	1,159,000	960,600
육군		1,000,000	420,000	321,000
해군		300,000	180,000	155,000
방공군		230,000	210,000	184,600
공군		170,000		
전략핵군		194,000	149,000	149,000
예비군		20,000,000	20,000,000	20,000,000
준군사병력		220,000	543,000	409,100
전차	대/척/기	26,320	16,010	22,380
대포		24,386	5,972	17,966
해상함		169	44	32
잠수함		219(전략잠수함 52척)	98(전략잠수함 26척)	53(전략잠수함 13)
항공모함		2	1	1
항공기		4513 (전략폭격기 170대)	2250 (전략폭격기 66대)	2031 (전략폭격기 78대)
헬기		1,739	1,387	810
핵무기		확인	확인	확인
화학무기		확인	확인	확인
생물무기		유망	유망	유망
SRBM		확인 SS-1 Scud B/C, SS-21 Scarab	확인 SS-1 Scud B/C, SS-21 Scarab	확인 SS-1 Scud B/C, SS-21 Scarab
MRBM		부재	부재	부재
IRBM		부재	부재	부재
SLBM	확인 SS-N-6 Serb, SS-N-8 Sawfly, SS-N-18 Stingray, SS-N-20 Sturgeon, SS-N-23 Skiff	확인 SS-N-6 Serb, SS-N-8 Sawfly, SS-N-18 Stingray, SS-N-20 Sturgeon, SS-N-23 Skiff	확인 SS-N-8 Sawfly, SS-N-17 Snipe, SS-N-20 Sturgeon, SS-N-23 Skiff	
ICBM	확인 1,204 100 SS-11 Sego, 40 SS-13 Savage, 40 SS-17 Sparker (RS-16), 302 SS-18 Satan (RS-20), 290 SS-19 Siletto (RS-18), 92 SS-24 Scalpel, 340 SS-25 Sickle (RS-12M)	확인 756 180 SS-18 Satan (RS-20), 188 SS-19 Siletto (RS-18), 92 SS-24 Scalpel, 360 SS-25 Sickle (RS-12M)	확인 735 150 SS-18 Satan (RS-20), 150 SS-19 Siletto (RS-18), 36 SS-24 Scalpel, 360 SS-25 Sickle (RS-12M), 29 SS-27 (Topol-M2)	
전략폭격기	확인 170	확인 66	확인 78	
전략잠수함	확인 52	확인 26	확인 13	

<표 III-22> 몽골의 군사력 현황

지표	단위	1993	1998	2003	
총 병력	명	21,250	9,800	8,600	
육군		20,000	8,000	7,500	
공군		1,250	800	800	
예비군		140,000	137,000	137,000	
준군사조직		10,000	7,200	7,200	
전차	대/척/기	650	600	370	
대포		435	430	430	
해상함		0	0	0	
잠수함		0	0	0	
항공모함		0	0	0	
항공기		15	9	0	
헬기		12	12	13	
핵무기		None			
화학무기					
생물무기					
SRBM					
MRBM					
IRBM					
SLBM					
ICBM					
Strategic bombers					
Strategic submarines					

<표 III-23> 북한의 군사력 현황

	1993	1998	2003
군인 수	1,127,000	1,055,000	1,082,000
육군	1,000,000	923,000	950,000
해군	45,000	46,000	46,000
공군	82,000	85,000	86,000
예비군	6,000,000	4,700,000	4,700,000
준군사조직	-	189,000	189,000
탱크	3,700	3,000	3,500
포대	9,080	10,600	10,400
함선	3	3	3
잠수함	25	26	26
비행기	730	607	605
헬리콥터	50	-	24

<표 III-24> 미국의 군사력 현황

지표	단위	1993	1998	2003
총 병력	명	1,729,700	1,401,600	1,427,000
육군		586,200	479,400	485,000
해군		510,600	380,600	400,000
공군		449,900	370,300	367,600
해병대		183,000	171,300	174,400
해안경비대		39,100	36,000	37,582
예비군		1,842,200	1,350,550	1,237,700
준군사조직		68,000	53,000	53,000
탱크		대/척/기	15,341	8,239
포	7,518		5,703	5,390
해상함	161		138	118
잠수함	110(23척 전략잠수함 포함)		84(18척 전략잠수함 포함)	72(18척 전략잠수함 포함)
수송기	12		12	12
전투기	5916 (전략폭격기 238대 포함)		4114 (174대 전략 폭격기 포함)	5421 (18대 전략 폭격기 포함)
헬리콥터	2,252		1,995	1,826
핵무기	Confirmed		Confirmed	Confirmed
화학무기	Confirmed		Confirmed	Confirmed
생물무기	-		None	None
SRBM	None		None	None
MRBM	None		None	None
IRBM	None		None	None
SLBM	Confirmed Poseidon C-3 (UGM-73A), Trident C-4 (UGM-93A), Trident D-5 (UGM-133A)		Confirmed Poseidon C-3 (UGM-73A), Trident C-4 (UGM-93A), Trident D-5 (UGM-133A)	Confirmed Poseidon C-3 (UGM-73A), Trident C-4 (UGM-93A), Trident D-5 (UGM-133A)
ICBM	Confirmed 818 261 Minuteman II (LGM-30F), 507 Minuteman III (LGM-30G), 50 Peacekeeper (LGM-118A)		Confirmed 680 590 Minuteman III (LGM-30G), 50 Peacekeeper (LGM-118A)	Confirmed 550 500 Minuteman III (LGM-30G), 50 Peacekeeper (LGM-118A)
Strategic bombers	Confirmed 238		Confirmed 174	Confirmed 114
Strategic submarines	Confirmed 23	Confirmed 18	Confirmed 18	

다. 핵무기 현황

<표 III-25> 중국의 핵전력(2003년)

유형	NATO designation	갯수	배치연도	Range (kilometers)	핵탄두× yield	핵탄두 총계
Land-based missiles *						
DF-3A	CSS-2	40	1971	2,900	1 x 3.3 Mt	40
DF-4	CSS-3	12	1980	5,500	1 x 3.3 Mt	12
DF-5/5A	CSS-4	20	1981	13,000	1 x 4 - 5 Mt	20
DF-21A	CSS-5	48	1985 - 1986	1,800	1 x 200 - 300 kt	48
DF-31	CSS-X-10	0	2005?	8,000	1 x ?	0
DF-31A	n.a.	0	2010?	~ 12,000	1 x ?	0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						
Julang I	CSS-NX-3	12	1986	>1,000	1 x 200 - 300 kt	12
Julang II	CSS-NX-4	0	2010?	8,000	1 x ?	0
Aircraft ***						
Hong-6	B-6	100	1965	3,100	1 - 3 x bomb	100
Qian-5	A-5A	30	1970	400	1 x bomb	30
Tactical Weapons						
Possible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DF-15 [CSS-6], DF-11 [CSS-7]), artillery, or atomic demolition munitions 120						
Total weapons		400	-	-	-	-
Mt: Megaton; kt: kiloton. *DF stands for dong feng, which means "east wind." China defines missile ranges as follows: short-range, <1,000 kilometers; medium/intermediate-range, 1,000-3,000 kilometers; long-range, 3,000-8,000 kilometers; and intercontinental > 8,000 kilometers. **Julang means "giant wave." ***Figures for aircraft are for nuclear-configured versions only. Bomb yields estimated between 10 kilotons and 3 megatons.						

Source: NRDC: Nuclear Notebook

Chinese nuclear forces, 2003

By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November/December 2003 pp. 77-80 (Vol. 59, No. 06)

© 2003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http://www.thebulletin.org/article_nn.php?art_ofn=nd03norris>.

<표 III-26> 러시아의 핵전력(2005)

유형	명칭	발사대	배치연 도	핵탄두 x yield	핵탄두 총계
ICBMs					
SS-18	Satan	100	1979	10 x 550/750	1,000
SS-19	Stiletto	130	1980	6 x 550/750	780
SS-24 M1	Scalpel	15	1987	10 x 550	150
SS-25	Sickle	300	1985	1 x 550	300
SS-27	n.a. (Topol-M)	40	1997	1 x 550	40
계	-	585	-	-	2,270
SLBMs					
SS-N-18 M1	Stingray	96	1978	3 x 200 (MIRV)	288
SS-N-23	Skiff	96	1986	4 x 100 (MIRV)	384
계	-	192	-	-	672
폭격기/무기					
Tu-95 MS6	Bear H6	32	1984	6 AS-15A ALCMs or bombs	192
Tu-95 MS16	Bear H16	32	1984	16 AS-15A ALCMs or bombs	512
Tu-160	Blackjack	14	1987	12 AS-15B ALCMs, AS-16 SRAMs, or bombs	168
계	-	78	-	-	872
총계	-	855	-	-	3,814
ALCM—air-launched cruise missile; AS—air-to-surface missile;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range greater than 5,500 kilometers; 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s;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RAM—short-range attack missile. 400					

출처: NRDC: Nuclear Notebook

Russian nuclear forces, 2005

By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March/April 2005 pp. 70-72 (Vol. 61, No. 02)

© 200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http://www.thebulletin.org/article_nn.php?art_ofn=ma05norris>.

<표 III-27> 북한의 탄도미사일(2005)

	MAXIMUM RANGE (kilometers)	PAYLOAD (kilograms)	COMMENT
SCUD B	320	1,000	Reverse-engineered Soviet Scud B
SCUD C	570	770	Conventional explosives, chemical, and cluster warheads
NODONG	1,480	1,200	Test-fired in May 1993; flew 500 kilometers. Fewer than 50 launchers deployed. Designed to carry a nuclear warhead
TAEPODONG-1	2,300	1,000~1,500	Test-launched August 31, 1998. Not yet deployed
TAEPODONG-2	6,200 +	700~1,000	Not yet tested
TAEPODONG-2 (three-stage)	15,000	unknown	More than a decade away. May be capable of striking all of North America

Source: NRDC: Nuclear Notebook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5
 By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May/June 2005 pp. 64-67 (Vol. 61, No. 03)
 © 200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http://www.thebulletin.org/article_nn.php?art_ofn=mj05norris>.
 For range: NATIONAL AIR AND SPACE INTELLIGENCE CENTER.

<표 III-28> 미국의 핵전력(2005)

유형	명칭	발사대	배치 년도	핵탄두 x yield	warheads active/spares
ICBMs					
LGM-30G	Minuteman III	-	-	-	-
	Mk-12	150	1970	1 W62 x 170	150
	Mk-12	50	1970	3 W62 x 170 (MIRV)	150/15
	Mk-12A	300	1979	2-3 W78 x 335 (MIRV)	750/30
LGM-118A	MX/Peacekeeper	10	1986	10 W87x 310(MIRV)	100
Total	-	510		-	1,150/45
SLBMs					
UGM-96A	Trident I C4	48/2	1979	6 W76 x 100 (MIRV)	288
UGM-133A	Trident II D5	288/12	-	-	-
	Mk-4	-	1992	6 W76 x 100 (MIRV)	1,344/150
	Mk-5	-	1990	6 W88 x 455 (MIRV)	384/20
Total	-	336/14		-	2,016/170
Bomber					
B-52H	Stratofortress	94/56*	1961	ALCM/W80-1x 5-150	450/25
	-	-		ACM/W80-1 x 5-150	400/20
B-2A	Spirit	21/16	1994	B61-7, -11, B83-1 bombs	200/55
Total	-	115/72		-	1,050/100
Non-strategic forces					
Tomahawk SLCM	-	325	1984	1 W80-0 x 5-150	200
B61-3, -4, -10 bombs	-	n/a	1979	0.3-170	580**
Total	-	325	-	-	780
총 합계***	-	-	-	-	~5,000/315

ACM: advanced cruise missile; ALCM: air-launched cruise missile;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range greater than 5,500 kilometers); 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SLCM: sea-launched cruise missile;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The first figure is the total inventory, including those used for training, testing, and backup; the second figure is the primary mission inventory: the number of operational aircraft

유형	명칭	발사대	배치 년도	핵탄두 x yield	warheads active/spares
assigned for nuclear or conventional missions.					
**Four hundred and eighty are deployed at eight bases in six European countries.					
***Approximately 5,000 additional intact warheads are retained in the reserve or inactive stockpiles.					

Source: NRDC: Nuclear Notebook

U.S. nuclear forces, 2005

By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January/February 2005 pp. 73-75 (Vol. 61, no. 01)

© 200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http://www.thebulletin.org/article_nn.php?art_ofn=jf05norris>.

라. 무기 수출입

<표 III-29> 동북아국가의 무기 수출입액

(단위: US 백만 달러)

	수입			수출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한국	1,893	1,725	299	56	60	36
중국	668	609	660	1,225	2,548	404
일본	2,116	2,334	210	11	20	-
러시아	-	41	-	3,897	2,233	6,980
북한	134	0	5	200	101	-
미국	1,599	1,725	210	28,280	27,400	4,385
전세계	47,411	47,513	18,680	47,411	47,513	18,680

* 1993/98 Source: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WMEAT)*
<http://www.state.gov/t/vc/rls/rpt/wmeat/1999_2000/>, constant(1999) prices.

** 2003 Sourc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www.sipri.org/contents/armstrad/at_data.html#chap>, constant(1990) prices.

<표 III-30> 중국의 주요 무기수입국

(단위: US \$ m)

	Russia	Ukraine	Israel	France	USA	Total
1993	772	55	18	5	1	851
1998	111	73	28	8	-	220
2003	1961	73	-	4	-	2038

Sourc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www.sipri.org/contents/armstrad/TIV_imp_CHI_89-04.pdf>,
 constant(1990) prices

<표 III-31> 북한의 주요 무기 수출입 상대국

(단위: US \$ m)

	수입 대상국가				수출 대상국가			
	Russia	China	USSR	소계	Syria	Iran	burma	소계
1994	17	1	5	23	43	9	-	52
1998	5	-	-	5	-	2	13	15
2003	5	-	-	5	-	-	-	-

Source: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http://www.sipri.org/contents/armstrad/TIV_imp_CHI_89-04.pdf>,
 constant(1990) prices

마. 군사교류 현황

<표 III-32> 한·중 군사관계

▶무관부 개설	
'93. 12. 30 : 주중 한국무관부 개설	
'94. 04. 29 : 주한 중국무관부 개설	
※ 외교관계 : 1992. 8.24 수교	
▶최근 주요 인사교류	
방중	방한
'92. · 이필섭 합참의장(대통령 수행)	
'94. · 이양호 합참의장(대통령 수행)	
· 유정갑 정보본부장	
'95. · 조성태 정책실장(2월)	
'96. · 서태석 정보본부장	
· 양상태 제1차관보	· 羅斌 국방부 외사국장(12월)
'97. · 박용옥 정책차관보	
· 이정린 국방차관(11월)	
'98. · 이상희 정책기획국장	· 雄光楷 부총참모장(8월)
'99. · 이종옥 정보본부장(7월)	
· 조성태 국방부장관(8월)	
'00. · 이수용 해군총장(4월)	
· 조영길 합참의장(8월)	· 遲浩田 국방부장(1월)
'01. · 길형보 육군총장(3월)	
· 김동신 국방장관(12월)	· 劉順曉 공군사령원(3월)
'02. · 이익수 공군총장(1월)	
· 황규식 국방대총장(4월)	
· 권영호 국방차관(8월)	· 邢世忠 국방대학교장(3월)
	· 張文臺 제남군구 정치위원(7월)
	· 傅全有 총참모장(8월)
'03. · 김창호 정보본부장(9월)	
· 김종환 합참의장(11월)	· 錢樹根 부총참모장(3월)
	· 許志功 국방대부교장(9월)
'04. · 국방부 정책실장(12월)	· 李殿仁 국방대 부정치위원(7월)
	· 중국 총참모부 군훈/병중부장(11월)
	·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11월)
	· 중국 심양군구 사령원(11월)
'05. · 국방장관 (3월)	
· 육군대학총장(7월)	
· 공군총장(7월)	

<표 III-33> 한·일 군사관계

<p>▶ 무관부 개설 주일 한국 무관부 : 1966. 11월 개설 주한 일본 무관부 : 1967. 9월 개설</p>						
<p>▶ 정례교류회의 및 합의각서 국방장관회담 : '94 이후 정례화 안보정책협의회(외무+국방) : '98 이후 정례화 국방정책 실무회의(년 1회) : '94 이후 정례화 합참 통막간 회의(년 1회) : '99 이후 정례화 '04.12월 제6차회의 정보교류회의 : 정보본부, 육 해 공군간 년 2회 교환 개최 방공실무회의('91 이후 정례화) 해군 對 해군회의 : '99 이후 정례화 양국간 합의각서 - 韓 日 군용기 우발사고방지 조치 합의서한 교환('95.6.5) - 韓 日 공군간 HOT-LINE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한 교환('97.7.3) * HOT-LINE 개통('97.9.1) : 오산 MCRC - 후쿠오카 서부관제소</p>						
▶최근 주요 인사교류						
구 분	국방장관	국방차관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방일연도	'94,'96,'98 '00,'02	'71,'95	'69,'78,'83,'84,'87,' '88,'90,'92,'94,'96,' '97,'02,'04	'69,'70,'73,'76,' '82,'85,'87,'90,' '92,'97,'00,'02	'73,'76,'80,' '85,'86,'88,' '91,'98,'00,' '02,'05	'73,'80,'82,' '85,'89,'91,' '93,'96,'99,' '00,'03,
구 분	방위청 장관	방위청 차관	통막의장	육 막 장	해 막 장	공 막 장
방한연도	'79,'90,'95,' '97,'99,'02,' '03,'05	'70,'73,' '96,'98,' '00	'68,'69,'84,'86,'95,' '96,'00,'04	'69,'71,'75,'79,' '87,'97,'98,'00,' '03	'72,'78,'87,' '90,'98,'00 '02,'04	'77,'79,'81,' '85,'87,'92,' '95,'97,'99 '02,'03,'04

<표 III-34> 한·러 군사관계

<p>▶ 무관부 개설 주러 무관부 : '91. 10. 1 주한 무관부 : '91. 9. 20</p>	
<p>▶ 군사협정 및 협력추진 '94. 6 해상사고 방지협정, 군사협력 양해각서 체결 '97. 11 한·러 방산군수협력 협정 체결 '97. 11 제1차 한·러 국방부 정책회의 실시 '98. 6 한·러 휴가장병 상호교류 MOU 서명 '98. 6 군인사교류 합의각서 '99. 8 2000~2001년 한·러 군사교류 양해각서 체결 '01. 2 한·러 군사비밀 보호협정 '01. 3 한·러 해군간 해양실무 협력의정서 '02. 7 군사기술협력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 '02. 11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p>	
<p>▶ 최근 주요 인사교류</p>	
방러	'94. 4 이병태 국방부 장관 방러 '96. 5 함정 블라디보스톡 방문(러 해군창설 300주년) '96. 9 해사생도 순항분대 블라디보스톡 방문 '96. 11 국방부차관 '96. 11 김동진 국방부 장관 '98. 8 유삼남 해군참모총장 '98. 11 해사생도순항분대 블라디보스톡 방문 '99. 5 정보사령관 '99. 6 육사생도 '99. 6 해사생도 '99. 9 김동신 육군참모총장 방러 '00. 5 국방부장관 친선군사사절단 '02. 4 해군 참모총장 '02. 5 육군 참모총장 '02. 11 이준 국방장관 방러 '03. 5 공군 참모총장 '03. 6 합참의장 '04. 7 공군 참모차장 '04. 10 지상군 훈련참관단 러시아 방문 '04. 11 한·러 친선군사사절단 '05. 3 1군 사령관 '05. 4 국방부 장관
방한	'95. 5 그라쉴프 국방장관 방한 '96. 10 공군사령관 '97. 2 러 함정 인천항 방문(러일전쟁시 제물포 해전 희생자 추모식) '98. 5 지상군총국장 '98. 5 미하일로프 국방부 제1차관 '98. 10 태평양함대사령관 '99. 3 쿠르예도프 해군사령관 방한 '99. 8 휴가장병 6쌍 최초 교류, 국방부 정책실무회의팀 '99. 9 세르게예프 국방장관 방한 '00. 6 친선군사사절단

'01. 7	총참모부 차장
'02. 12	극동군관구 사령관
'02. 12	총참모부 국제협력 총국장
'03. 4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 방한
'03. 4	정보총국장
'04. 2	태평양함대 사령관
'04. 11	러 극동군관구 사령관
'05. 3	러 발루에프스키 총참모장
'05. 8	키슬랴크 군축차관 방한
'05. 9	한·러 본부장회의/합동군사회의

<표 III-35> 한·미 군사관계

<p>▶ 무관부 개설 주미 무관부 : 1951.8 주한 무관부 : 1949.4</p>	
<p>▶ 최근 주요 인사교류</p>	
방미	<p>'97.6 육군 참모총장 '97.7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98.7 국방부 장관 '98.9 합참차장(아태지역 군고위급 회의) '99.2 합참의장 '99.3 공군참모총장 '99.7 국방부 장관 '99.11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제31차 SCM, 21차 MCM참석) '01.11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제33차 SCM, 23차 MCM참석) '02.12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제34차 SCM, 24차 MCM참석) '03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제35차 SCM, 25차 MCM참석) '04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제36차 SCM, 26차 MCM참석, 태평양사) '05.1 연합부사령관 '05.3 공군총장 '05.6 합참의장</p>
방한	<p>'98.1 국방부 장관 '98.4 합참의장 '98.5 공군참모총장 '98.9 국방부 장관 '99.1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제30차 SCM, 제20차MCM참석) '99.3 육군참모총장 '99.3 태평양사령관(부임후 방문) '99.7 국방부 장관 '99.12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합참의장 이취임식 참석) '00.3.18 국방부 장관 '00.8 태평양사령관(UFL 지휘관 세미나참석) '00.9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제32차SCM, 제22차 MCM참석) '01.8 미태평양 사령관(UFL지휘관 세미나 참석) '02.2 미태평양 사령관(이임예방) '02.4 미합참의장(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주관) '02.5 미태평양 사령관(부임후 방문) '02.8 미태평양 사령관(UFL 지휘관 세미나 참석) '03.2 미특수전사령관, 캡스톤 그룹 '03.3 태평양사령관 '03.4 미해병대 사령관 '03.9 태평양사 공군사령관 '03.11 미합참의장 '04.2 미캡스톤 그룹, 미연합사령관 '04.9 미해군참모총장 '04.10 미태평양사령관</p>

<표 III-36> 중·러간 군사교류 현황

기간	군 고위인사	주요 내용
1992. 12. 17~19	옐친 대통령의 방중	「국경병력 감축협정」 체결
1993. 11. 11	그라초프 국방장관 방중	「방위협정」 조인
1994. 4. 11~14	콜레슈니코프 참모총장 방중	무기판매, 인적교류, 국경병력 감축 등 논의
1995. 5. 15~20	그라초프 러시아 국방장관 방중	국경지대 군비와 병력의 상호감축과 군사방위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문안 등 마련
1996. 4. 25~26	옐친 대통령 방중, 제1차 '상하이5개국' 정상회담(26일, 상하이)	미·일의 '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한 안보협력 확대, 중앙아시아의 안보협력
1997. 4. 13~18	로디오노프 국방장관 방중	군사기술 이전, 군사적 신뢰강화 문제 협의
1997. 4. 22~26	장쩌민 방러, 제2차 '상하이5개국' 정상회담(24일, 모스크바)	중·러 및 중앙아시아 3국 「국경병력 감축협정」 체결
1998. 7. 3	제3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알마티)	지역평화와 안정 증진, 협력
1998. 10. 21~24	세르기에프 국방장관 방중	미·일의 TMD 구축 반대
1999. 5. 12	옐친 대통령의 특사 체르노미르딘 전 총리 방중	코스보 문제 협의
1999. 8. 24	제4차 '상하이5개국' 정상회담(비슈케크)	「비슈케크 공동선언」 채택
2000. 1. 16~18	지호전 중국 국방장관 방러	「군사협력 확대에 관한 비망록」 교환
2000. 7. 5	제5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두산베)	유엔역할강화, NATO 신전략 개념 반대 등
2001. 2. 21	장만년 중국중앙국방위원회부주석 방러	NATO 동진 및 NMD 체제 구축 논의

기간	군 고위인사	주요 내용
2001. 4. 27~31	당가선 외교부장 방러	상하이 5개국 외무장관 회의
2001. 6. 14~15	제6차 '상하이 5개국' 정상회담(상하이)	우즈베키스탄 가입, SCO로 개편, 테러리즘·극단주의 반대
2001. 7. 16	장쩌민 방러	『러·중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하고 군사협력 강화, ABM조약의 유지 등 선언
2001. 7. 15~18	후진타오 국가부주석 방러	ABM 조약 재확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방안 논의
2002. 6. 6~7	장쩌민주석 방러, 제8차 SCO 정상회담(7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SCO 창설, 반테러기구 창설 합의
2002. 7. 17	루사일로 안보회의 서기 방중	미국의 일방적 대테러전쟁 반대
2003. 5. 26~28	후진타오 주석 방러	북핵, 중앙아 주둔 미군 문제 논의
2003. 5. 29	제8차 SCO 정상회담(모스크바)	지역안보 문제 협의
2003. 9. 23	SCO 총리급회담(베이징)	공동안보조직 결성, 대테러 공조, 극단주의 세력의 침투 방지 논의
2004. 4. 20~22	이바노프 국방장관 방중	양국 군사기술협력, SCO내 협력
2004. 6. 17	제9차 SCO 정상회담(타슈켄트)	지역안보협정 체결, 공동테러대책기구 출범
2004. 10. 14~16	푸틴 대통령 방중	북핵, SCO 역할 확대, 대테러 공조 협의
2005. 7. 5	제10차 SCO 정상회담(아스타나)	공동안보조직 결성, 대테러 공조, 극단주의 세력의 침투 방지 논의
2005. 8. 18~25	합동군사훈련(블라디보스톡, 산둥반도, 황해)	'평화의 사명 2005'
2005. 9. 8	차오강찬 국방부장 방러	군사기술협력위원회 개최

<표 III-37> 2002년 10월 북핵위기 발생 이후 중·북접촉 현황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의제	비고
'03. 4. 23~25	북·중·미 3자회담, 북경		
'03. 7. 12~15	다이빙귀 외교부부부장	김정일 면담, 후진타오 친서전달, 6자회담논의	북한 6자회담 참여 발표(7.31)
'03. 8. 7	왕이 외교부부부장	6자회담 개최시기, 의제 및 대표단 구성	-
'03. 8. 19	류홍차이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최태복 면담	-
'03. 8. 19~20	쉬차이허우 군 총정치부 주임	김정일, 조명록 면담, 6자회담 논의	-
'03. 10. 30	우방귀 전인대의장	김정일 면담, 6자회담 재개논의, 5천달러 상당 무상경제원조	북한 6자회담 수용
'03. 8. 27~29	제1차 6자회담, 북경		
'03. 12. 25~26	왕이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논의	-
'04. 1. 19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일면담, 비공개	-
'04. 2. 9	김계상 외무상 부상	6자회담 및 북핵문제 논의	-
'04. 2. 25~28	제2차 6자회담, 북경		
'04. 3. 24	리자오싱 외교부장	김정일 면담, 6자회담 및 실무그룹 구성 논의	-
'04. 4. 19~2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유 무상원조	-
'04. 6. 23~26	제3차 6자회담, 북경		
'05. 2. 19~23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	김영남 면담, 중조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과 공동의 관심사 의견 교환	-
'05. 3. 29~4. 2	중국공산당 대표단	-	-
'05. 4. 22	후진타오, 김영남 아시아 아프리카회의에서 접견	-	-
'05. 5. 10~14	중국공청단 대표단	친선방문	-
'05. 5. 24~28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대표단	친선방문	-
'05. 7. 9~12	중국공산당 대표단	-	-
'05. 7. 12~14	탕자쉬안 국무위원	후진타오주석 특사, 백남순 외무상과 면담	-
'05. 7. 25~8. 7	1단계 제4차 6자회담 개최, 북경		
'05. 8. 27~29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6자회담	-
'05. 9. 13~19	2단계 제4차 6자회담 개최, 북경		
'05. 10. 8~11	중국정부대표단	노동당 창건 기념일 참석	-
'05. 10. 28~30	胡錦濤 국가주석	중·조우호협력관계 강화, 6자회담, 경제원조	-

<표 III-38> 중·미간 군인사 교류 현황

방중	방미
*1994. 10 월리엄 페리 국방장관 방중	*1994. 8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 쉬후이즈(인민해방군 총참모장)
*1997. 5. 12-16 John Shalikashvili(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United States)	*1996. 12. 8-18 초하오텐 국방부 장관
*1997. 9 미 전투함 중국 칭타오시 방문	*1997. 3. 9-25 최초로 중국 항모 하와이 진주만과 샌디에고 방문
*1998.1 월리엄 코헨 국방장관	*1997. 8. 5-12 푸관요우(인민해방군 총참모장)
*2000. 2. 27-3. 2 Denise Blair(Commander-in-Chief of the U.S. Pacific Command)	*1998. 9 장완넨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방미
*2000. 7. 11-15 월리엄 코헨 국방장관	*2000. 1. 24-26 시용광카이(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장군 제3차 국방부 부장관 협의회의에 참석
*2000. 10. 11-13 Richard Danzig 미해군 사령관	*2000. 4. 14-22 스원성 중국 해군사령관
*2000. 11. 2-5 Herry Shelton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of the United States)	*2000. 8. 21-29 왕주선(군사과학원 소장)
*2000. 11. 28-12. 2 Walter Slocomber(the U.S. under Secretary of Defense) 제 4차 국방부 부장관 협의회 참석	*2000. 10. 28-11. 2 위웅보(인민해방군 총정치부장)
	*2003. 10 차오강찬 국방부장

<표 III-39> 러·일간 군인사 교류 현황

일자	군 고위인사	주요 내용
1994. 2. 3~4	제2차 외교·국방정책 기획협의회	『방위정책 대강』과 군사독트린 각각 소개, 군인사 교류, 군사훈련 사전통보, 국방정책 투명성 보장문제 등 협의
1996. 4. 27~30	우스이 방위청 장관 방러	국방장관 회담
1996. 5. 27	체체바토프 극동군 사령관 방일	안보대화, 방위교류 확대
1999. 9. 20	해군합동훈련(태평양)	합동수색 및 구조훈련
1999. 8. 16~19	노로타 일본 방위청 장관 방러	국방장관 회담, 『방위교류 각서』 체결, 북한 미사일 재발사·NMD 체제 문제 협의
2000. 9. 3~5	푸틴 대통령 방일	군사정보 교환·군고위급 접촉 등 추진, MD문제, 노후 핵잠수함 해체와 폐 플루토늄의 제거에 대한 지원 등 협의
2001. 4. 18~22	쿠로에도프 러시아 해군참모총장 방일	방위청 장관, 해상자위대 차모장 등과 면담, 요코스카 해군기지 방문
2003. 1. 10	고이즈미 총리 방러	상호방위교류 등 합의
2003. 1. 27	이시바 일본 방위청 장관 방러	일·러 국방장관회담 (Ishiba-Ivanov, Moscow)
2003. 4. 11	이바노프 국방장관 방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2003. 8. 26	해군합동훈련(나훗카 해상)	대테러 대책
2004. 8.	러시아 태평양함대 일군항 방문	친선방문

<표 III-40> 러·북간 군인사 교류 현황

일자	군 고위인사	주요 내용
1992. 1. 17	엘친 대통령 특사 로가초프 방북	동맹조약 유지조건으로 무력불사용과 국제 규범 준수 촉구
1992. 3. 2	CIS 군사대표단 방북	『1992~93 군사협력의정서』 조인
2000. 7. 19~20	푸틴 대통령 방북	미·일의 TMD 계획 견제, 러·북간 군사협 력 문제 협의, 안보위협 상황 발생시 지체 없는 상호접촉 재확인.
2001. 4. 27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방러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협력 협정 , 2001년 군사협력협정 체결
2001. 7. 26~8. 18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군사무기 구매와 부품의 장기적 확보 문제, 미국의 MD계획 반대, ABM조약의 유지 불 가피성 등 논의
2001. 12. 1~4	러시아 군사대표단 방북	군사분야의 쌍무협조 발전
2002. 8. 22~24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문제 등 협의, 군시설시찰
2003. 9. 10	폴리코프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2005. 5. 9	리종산 북한군 차수 방러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2005. 8. 15	폴리코프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방북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북핵문제 논의

<표 III-41> 러·미간 군인사 교류 현황

일자	군 고위인사	주요 내용
1993. 1. 3	(아버지)부시 대통령 방러	START II 조약 체결
1994. 1. 14	클린턴 대통령 방러	『핵무기 상호거냥 중지협정』 체결
1994. 9. 28	엘친 대통령 방미	전략핵 감축 조기완료, NPT의 무기한 연장 등 합의
1997. 3. 20~21	엘친·클린턴 헬싱키정상회담	군축관련 4개 공동성명 채택
1997. 5. 13	로디오노프 국방장관 방미	『미·러 군사협력협정』 체결, 김일성 사후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
1998. 9. 1~2	클린턴 대통령 방러	『21세기의 공동안보 도전에 관한 공동 성명서』 채택
2000. 6. 3~5	클린턴 대통령 방러	미국의 NMD 체제 구축, 북한의 미사일 위협, 체첸 사태, 발칸 반도 문제 등 협 의
2000. 6. 13	코언 국방장관 방러	NMD 관련 기술공유 제한, 러시아가 제시 유럽공동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반대
2001. 6. 17	푸틴·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	정치·국방·외교 현안논의, 미사일방 어체제 문제 대립
2001. 7. 22	푸틴·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이탈리아 제노바)	정치·국방·외교 현안 논의, 미사일방 어체제 문제대립
2001. 11. 13~15	푸틴 방미	군축, 대테러 공조 등 현안 논의, 핵무기 대폭 감축 합의, MD 반대
2002. 9. 20	이바노프 국방장관 방미	러·미간 전략적 협력, 군축협정 이행 방안, 국제안보 등 조율
2002. 11. 22	부시 대통령 방러(푸쉬킨시)	NATO 확장, 이라크 무기사찰, 체첸 사 태 등 협의
2003. 8. 26	미 하원 군사위대표단 방러	투명성증진 차원에서 시베리아 극비핵 시설 최초방문
2003. 9. 26~27	푸틴 대통령 방미	이라크 재건, 이란 핵, 원유 등 현안 논의
2004. 1. 29	볼턴 국무부군비통제담당차 관 방러	WMD확산방지체제 구축협의를, 러시아의 PSI승인요청
2004. 7. 2	러·미·영 해군합동훈련 (극동해상)	통신 및 기동, 민간선박 운항보호 등 훈련
2005. 1. 11	이바노프 국방장관 방미	휴대용 미사일 불법거래 저지 합의서 추진
2005. 2. 24	푸틴·부시 정상회담 (브라티슬라바)	안보, 핵무기 비확산, 대테러 전쟁 문제 협의

바. 영토분쟁 현황

<표 III-42> 동북아지역의 주요 영토분쟁 이슈와 갈등

분쟁 당사국	분쟁내용	현재의 갈등 정도
중국·러시아	국경분쟁	낮음
중국·일본	도서분쟁(조어도/센카쿠열도)	중간
중국·북한	국경분쟁	낮음
중국·타지키스탄	국경분쟁	낮음
일본·러시아	도서분쟁(북부 도서)	중간
일본·한국	도서분쟁(독도)	중간

출처: Jianwei Wang, "Territorial Disputes and Asian Security: Sources, Management, and Prospects," in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42-43; 전재성, "동북아지역 갈등해소와 협력의 방향과 과제," 김계동 외, 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2004, pp. 61에서 재인용.

<표 III-43> 동북아국가의 영토분쟁 현황

국가	분쟁상대국 및 내용 (Source: CIA World Factbook)
한국	Japan: Liancourt Rocks
중국	Brunei: Spratly Islands India: various boundary disputes in the western, middle, and northeastern sections of the 2,600 mile border, as well as parts of Kashmir, have led to armed conflict and continued tensions Japan: Diaoyutai/Senkaku Islands Malaysia: Spratly Islands North Korea: Paektu-san Mountains Philippines: Spratly Islands Russia: two small sections along the Amur/Heilong River border Taiwan: Diaoyutai/Senkaku Islands, Paracel Islands, Spratly Islands Tajikistan: various border portions Vietnam: Paracel Islands, Spratly Islands, maritime boundary and joint fishing zones, various land boundary portions
일본	China: Diaoyutai/Senkaku Islands Russia: Kurile/Northern Territories Islands South Korea: Liancourt Rocks Taiwan: Diaoyutai/Senkaku Islands
러시아	Azerbaijan: Caspian Sea boundaries China: various portions of Amur/Heilong River border Estonia: border demarcation Iran: Caspian Sea boundaries Japan: Kurile Islands Kazakhstan: Caspian Sea boundaries Latvia: border demarcation Lithuania: border demarcation Norway: Barents Sea maritime boundary, Svalbard Turkmenistan: Caspian Sea boundaries Ukraine: Sea of Azov and Kerch Strait boundaries
북한	China: Paekstu-san Mountains
미국	Bahamas: maritime boundaries Canada: maritime boundaries (Dixon Entrance, Beaufort Sea, Strait of Juan de Fuca, Machias Seal Island); Haiti: Navassa Island Marshall Islands: Wake Island

사. 비확산레짐 가입현황

<표 III-44> 동북아국가의 비확산레짐 가입 현황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	미국
BWC	서명 72. 4. 10 비준 87. 6. 25	가입 84. 11. 15	서명 72. 4. 10 비준 82. 6. 8	서명 72. 4. 10 비준 75. 3. 26	서명 72. 4. 10 비준 72. 9. 5	가입 87.3.13	서명 72. 4. 10 비준 75. 3. 26
CCW	2001	가입	가입	서명 80. 10. 10 비준 81. 4. 10	가입	-	가입
CTBT	서명96.9.24 비준 9.9.24	서명 96.9.24	서명 96.9.24 비준 97.7.8	서명 96.9.24 비준 00.6.30	서명 96.10.1 비준 97.8.8	-	서명 96.9.24
CWC	서명 93. 1. 14 비준 97. 4. 28	서명 93. 1. 13 비준 97. 4. 25	서명 93. 1. 13 비준 95. 9. 15	서명 93. 1. 13 비준 97. 11. 5	서명 93. 1. 14 비준 95. 1. 17	-	서명 93. 1. 13 비준 97. 4. 25
MTCR	2001	-	1987	서명 87. 4. 16 비준 95. 10. 10	비가입	-	1987
NPT	서명 68. 1. 1 비준 75. 4. 23	가입 92. 3. 9	서명 70. 2. 3 비준 76. 6. 8	서명 68. 7. 1 비준 70. 3. 5	서명 68. 7. 1 비준 69. 5. 14	가입 85. 12. 12 철회 03. 1. 10	서명 68. 7. 1 비준 70. 3. 5
PSI	비가입	-	가입	서명 03. 6. 12 비준 04. 5. 31	비가입	-	가입

Source: 대한민국 국방백서 2004, NBR.

3. 국가별 정치지표

가. 정치체제

<표 III-45> 동북아국가의 정치체제(2003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북한	미국
정체	민주 공화제	인민 공화제	입헌 군주제	공화제	민주 공화제	인민민주 주의 공화제	연방 공화제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회의 제정부	내각 책임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	대통령 중심제
Head of state	노무현 대통령	후진타오 국가주석	아키히토 천황 (1989.1.7~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영흐바야르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지 W. 부시 대통령
Prime minister	고건 총리	원자바오 총리	고이즈미 총리	미하일 카샤노프 총리	엑베크도르지 총리	박봉주 내각총리	없음
U. house	국회	전국인민 대표대회	참의원	연방의회	국가 대회의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원
Dom. Party	한나라당	중국 공산당	자민당	러시아연 방공산당	없음(여야 연립정부)	조선 노동당	공화당

Source: 국가정보원 세계국가 자료, NBR.

나.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

<표 III-46> 정치체제의 유사성 정도 측정

	정치권리 (Political Rights)	시민자유 (Civil Liberties)	자유 등급 (Freedom Rating)
중국	7	6	자유롭지 못한 국가
일본 *	1	2	자유국가
미국 *	1	1	자유국가
러시아	6▼	5	자유롭지 못한 국가
한국 *	1▲	2	자유국가
북한	7	7	자유롭지 못한 국가
몽골 *	2	2	자유국가

출처: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05*.

정치권리와 시민자유는 각각 1등급이 가장 자유롭고 7등급이 자유가 적음을 나타낸다.

▲▼상승 또는 하락지수는 지난 조사보다 정치권리 또는 시민자유가 증진되었는지 아니면 악화되었는지를 나타낸다.

* 선거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국가들을 나타낸다.

주석: 표의 등급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다.

다. 양자간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표 III-47> 한·중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정 상 회 담	'92. 09	노태우 대통령 방중
	'93. 11	APEC(시애틀)회담시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94. 03	김영삼 대통령 방중
	'94. 11	APEC(인니 보고르) 회담시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95. 11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 방한
	'96. 11	APEC(필리핀 마닐라)회담시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97. 11	APEC(캐나다 밴쿠버)회담시 김영삼 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98. 11	김대중 대통령 방중
	'99. 09	APEC(뉴질랜드 오크랜드)회담시 김대중 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00. 09	UN새천년 정상회의(뉴욕)시 김대중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01. 10	APCE(상해) 회담시 김대중 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02. 10	APEC(멕시코) 회담시 김대중 대통령 - 江澤民主석 회담
	'03. 07	노무현 대통령 방중
	'03. 10	APEC 계기(태국 방콕) 노무현 대통령- 胡錦濤 주석 회담
	'04. 11	APEC(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 계기 노무현 대통령 胡錦濤 주석 회담
	'04. 11	ASEAN+3 정상회의(라오스 비엔티엔) 계기 한·중·일 정상회담
	'05. 5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회담' 계기 노무현 대통령 胡錦濤 주석 회담
	'05. 11	APEC 계기 정상회담(서울)
	'94. 10	李鵬 국무원총리 공식방한
	'95. 03	코펜하겐 UN 사회개발정상회의 참석시 김영삼 대통령 - 李鵬총리 면담
	'95. 05	이홍구 국무총리 공식방중
중 정 상 회 담	'96. 03	방콕 ASEM 정상회담 참석계기 김영삼 대통령 - 李鵬총리 회담
	'96. 11	로마 세계식량정상회의 참석계기 이수성 국무총리 - 李鵬총리 회담
	'98. 04	런던 ASEM 정상회담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98. 04	胡錦濤 국가부주석 방한시 김종필 총리 회담
	'99. 11	ASEAN+3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대통령-朱鎔基총리-오부치총리간 정상조찬회담
	'00. 10	서울 ASEM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01. 11	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 참석계기 김대중대통령-朱鎔基총리-고이즈미총리 조찬회동 및 김대통령- 朱총리 회담
	'02. 09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 계기 김대중 대통령 - 朱鎔基 총리 회담
	'03. 10	APEC (태국방콕)회담시 노무현대통령-胡錦濤주석 회담
	'04. 10	하노이 ASEM 정상회의 계기 노무현 대통령 - 溫家寶 총리 회담
'05. 01	자카르타 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중 총리회담	
'05. 06	이해찬 국무총리 방중시 胡錦濤 주석 회담	
외 무 장 관 회 담	1991. 10	제1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
	1991. 11	제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APEC 각료회의 참석 계기
	1992. 04	제3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제48차 ESCAP 총회 참석 계기
	1992. 08	제4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상욱 장관 방중 및 한·중 수교
	1993. 01	제5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파리)
	1993. 04	제6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방콕)
	1993. 05	제7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
	1993. 07	제8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싱가폴)
	1993. 09	제9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뉴욕)
	1993. 10	제10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한승주 외무장관 방중
	1994. 03	제11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김영삼 대통령 방중 계기
	1994. 06	제1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한승주 외무장관 방중
	1994. 07	제13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방콕)-ASEAN PMC 참석 계기
	1994. 09	제14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뉴욕)-UN 총회 참석 계기
1994. 10	제15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李鵬 총리 방한 계기	
1995. 07	제16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브루나이)-ASEAN PMC 참석 계기	

1995. 09	제17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뉴욕)-UN 총회 참석 계기
1995. 11	제18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江澤民 주석 방한 계기
1996. 02	제19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푸켓)-아시아10개국 외무장관회담 참석계기
1996. 03	제20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공로명 장관 방중
1996. 07	제21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자카르타)-ASEAN PMC참석 계기
1996. 08	제2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뉴욕)-UN 총회 참석 계기
1996. 11	제23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마닐라)-APEC 참석 계기
1997. 02	제24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싱가폴)-ASEM 외무장관 회담 참석 계기
1997. 05	제25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유종하 장관 방중
1997. 07	제26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ASEAN PMC/ARF 참석 계기
1997. 09	제27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UN 총회 계기
1997. 11	제28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밴쿠버)
1998. 04	제29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런던)
1998. 07	제30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 박정수 장관 방중
1998. 11	제31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김대중 대통령 방중 계기
1999. 07	제3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싱가폴)/홍순영 외무장관
1999. 12	제33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 唐家璇 외교부장 방한/ 홍순영 외무장관
2000. 04	제34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정빈 장관 방중 / 唐家璇 외교부장
2000. 07	제35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방콕)/ 唐家璇 외교부장
2000. 10	제36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서울)-ASEM정상회의 계기, 이정빈장관/ 唐家璇 외교부장
2001. 05	제37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북경)-ASEM외무장관 회담계기(이정빈장관/ 唐家璇외교부장
2000. 07	제38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하노이)-ASEM PMC/ARF참석계기(이정빈/ 唐家璇
2001. 10	제39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상해)-APEC 정상회의 계기(한승수 장관/ 唐家璇 외교부장
2001. 11	제40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브루나이)-ASEM+3 계기(한승수장관/ 唐家璇 외교부장
2001. 11	제41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뉴욕)-UN 총회의장 자격(한승수 장관/ 唐家璇 외교부장
2002. 03	제4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북경)- 최성홍 장관 / 唐家璇 외교부장
2002. 06	제43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태국 차앙)-ACD회의 참가계기(최성홍장관/ 唐家璇외교부장
2002. 08	제44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서울)- 唐家璇 외교부장 방한(최성홍 장관)
2003. 04	제45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북경)-윤영관 외무장관 / 李肇星 외교부장
2003. 06	제46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캄보디아 프놈펜)-ASEM+3계기(윤영관/ 李肇星 외교부장
2003. 07	제47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중국 베이징)-노무현 대통령 국민방중 계기 윤영관/李肇星
2003. 07	제48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인도네시아 발리)-ASEM외무장관 회담 계기
2003. 08	제49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서울)- 李肇星 외교부장 방한(윤영관 장관)
2003. 10	제50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태국 방콕)- APEC 외무장관회담 계기
2004. 07	제51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인도네시아 자카르타)-ASEAN PMC 계기 (반기문/李肇星)
2004. 11	제52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칠레 산티아고)-APEC 계기(반기문장관/李肇星 외교부장

	<p>2005. 05 제53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일본 교토)-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계기(반기문/李肇星)</p> <p>2005. 07 제54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라오스 비엔티엔)-ASEAN+3 PMC/ARF외무장관회의 계기</p> <p>2005. 05 제55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중국 베이징)-반기문 장관 방중 계기</p> <p>2005. 09 제56차 한·중 외무장관 회담(미국 뉴욕)- 제60차 유엔총회 계기</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의 회 간 협 력 현 황</p>	<p>'92. 12 한·중의원친선협회 및 '93.6 중·한의원친선협회 결성- 양국 의회간 교류도 급속히 증가</p> <p>'94. 01 이만섭 국회의장 방중</p> <p>'95. 01 한·중의원친선협회를 '한중의원외교협의회로 개편, 의회차원의대중외교 활동 본격 추진중</p> <p>'95. 04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제 1차 합동회의 개최(북경)</p> <p>'95. 12 황낙주 국회의장 방중</p> <p>'00. 09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제 2차 합동회의 개최(북경)</p> <p>'01. 02 박명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방중</p> <p>'01. 05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p> <p>'02. 01 이만섭 국회의장 방중</p> <p>'03. 07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방중</p> <p>'03. 09 박관용 국회의장 방중</p> <p>'03. 09 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p> <p>'03. 11 서정화 국회통일외교통상 위원장 방중</p> <p>'04. 08 賈慶林 정협 주석 방한</p> <p>'04. 11 陳至立 국무위원 방한</p> <p>'05. 05 한·중 친선 국회의원 방중단</p> <p>'05. 07 남궁 석 국회사무총장 중국 의회 공식 방문</p> <p>'05. 09 成思危 전인대 부위원장 방한</p> <p>'05. 09 제2차 세계국회의장 회의 계기 한·중 국회의장 회담</p> <p>'05. 09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방중</p>

<표 III-48> 한·일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1991. 1. 9~10	가이후 수상 방한
1992. 1. 16~18	미야자야 수상 방한
1992. 11. 8	노태우 대통령 방일(교토)
1993. 3. 31~4. 2	한승주 외무장관 방일
1993. 6. 29~30	무토 외상 방한
1993. 9. 23~25	한승주 외무장관 방일
1993. 11. 6~7	한·일 정상회담(경주)
1994. 3. 24~26	김영삼 대통령 국빈 방일
1994. 7. 23~24	무라야마 수상 방한
1994. 10. 6~7	한승주 외무장관 방일
1995. 9. 5~7	공로명 외무장관 방일
1995. 11. 18	한·일 정상회담(오사카 APEC 계기)
1996. 6. 22~23	한·일 정상회담(제주도)
1997. 1. 15	이케다 일외상 방한
1997. 1. 25~26	한·일 정상회담(벵푸)
1997. 12. 29~30	오부치 일외상 방한
1998. 3. 21~22	오부치 일외상 방한
1998. 4. 2	한·일 정상회담(런던) ASEM 정상회담 계기
1998. 5. 21~23	박정수 외무장관 방일
1998. 9. 3~4	홍순영 장관 방일
1998. 10. 7~10	김대중 대통령 국빈 방일
1998. 11. 28~29	제1회 한·일 각료간담회(가고시마)
1999. 2. 10~11	고무라 외상 방한
1999. 9. 12	한·미·일 정상회담(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 계기
1999. 10. 22~24	제2차 한·일 각료간담회(제주)
1999. 11. 28	한·중·일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마닐라), ASEAN+3 정상회의 계기
2000. 3. 26~27	고노 일외상 방한
2000. 5. 29	모리 일총리 방한
2000. 6. 8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전총리 조문차 방일
2000. 7. 13~14	고노 외상 방한
2000. 9. 22~24	김대중 대통령 실무공식방일(아타미)
2000. 10. 18~20	고노 외상 방한, ASEM 외무장관회의 계기
2000. 10. 19~21	모리 총리 방한, ASEM 정상회의 계기
2000. 11. 6~7	이정빈 외무장관 방일
2000. 11. 15	한·일 정상회담(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 계기
2001. 10. 15	고이즈미 총리 방한
2001. 10. 20	한·일 정상회담(상해), APEC 정상회의 계기

2001. 11. 5	한·일 정상회담(브루나이), ASEAN+3 정상회의 계기
2002. 1. 20~23	한승수 외무장관 방일
2002. 3. 21~23	고이즈미 총리 공식 방한, 한·일 투자협정 성명
2002. 5. 31~6. 1	고이즈미 총리 월드컵 개막식 참석차 방한, 한·일 정상회담은 미 개최
2002. 6. 30~7. 2	김대중 대통령, 월드컵 결승전 참석차 방일
2002. 7. 12~14	가와구치 외상 공식 방한
2002. 9. 22	한·일 정상회담 개최(덴마크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계기
2002. 11. 4	한·중·일 정상회담, ASEAN+3 정상회의 계기
2003. 1. 15~16	가와구치 외상 방한
2003. 2. 24~25	고이즈미 총리,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 2. 25 한·일 정상회담 개최
2003. 3. 30~31	영관 외무장관 방일
2003. 5. 24~29	박관용 국회의장 공식 방일
2003. 6. 6~9	노무현 대통령 일본 국빈 방문
2003. 6. 6	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동경)
2003. 6. 18	한·일 외무장관회담(프놈펜), ASEAN PMC 계기
2003. 8. 22~23	가와구치 외상 방한
2003. 9. 23	한·일 외무장관회담(뉴욕), 유엔총회 계기
2003. 10. 7	한·중·일 정상회담(발리), ASEAN+3 정상회의 계기
2003. 10. 8	한·일 정상회담(발리), ASEAN+3 정상회의 계기
2003. 10. 20	한·일 정상회담(방콕), APEC 정상회의 계기
2004. 3. 7.	한·일 외무장관회담
2004. 5. 29~30	가와구치 외상 방한
2004. 7. 1	ASEAN PMC/ARF 계기 한·일외무장관회담
2004. 7. 21~22	고이즈미 수상 방한, 한·일정상회담
2004. 8. 1~5	열린우리당 대표단 방일
2004. 8. 17~19	일본 민주당 의원단 방한
2004. 8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방일
2004. 9. 24	제 59차 유엔총회계기 한·일외무장관회담
2004. 9. 30	일본 연립여당 간사장 방한
2004. 11. 5~7	마치무라 일 외무대신 방한, 한·일외무장관회담
2004. 11. 29~30	한·일의원연맹합동총회
2004. 12. 17~18	노무현 대통령 방일, 정상회담
2005. 1. 6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일외무장관회담
2005. 4. 7	ACD 계기 한·일외무장관회담
2005. 4	한·일외무장관회담
2005. 5	한·일외무장관회담
2005. 6	한·일정상회담
2005. 6	마치무라 외상 방한

<표 III-49> 한·러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90. 3	공로명 구소련 영사처장 부임
'90. 3	김영삼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박철언 정무 제1장관 방소
'90. 5	도브리닌 소련 대통령 외교담당고문 방한
'90. 6	한·소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90. 8	김종인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방소
'90. 12	노태우 대통령 방소
'90. 12	최호중 외무장관 방소
'91. 1	로카초프 소련 외무차관 방한
'91. 1	마슬류코프 소련 제1부수상 방한
'91. 4	베스메르티흐 소련 외무장관 방한
'91. 4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방한
'91. 5	박준규 국회의장 방소
'91. 9	메드베데포 소련특사(대통령 고문) 방한
'91. 12	하스블라토프 러시아 최고회의의장 방한
'92. 3	코지레프 외무장관 방한
'92. 5	쇼힌 러시아 부총리 방한
'92. 6	이상옥 외무부 장관 방러
'92. 8	페트로프 대통령실 행정실장 방한
'92. 9	김대중 민주당 대표 방러
'93. 6	한승주 외무부 장관 방러
'93. 10	미키타예프 공민권위원장 방한
'94. 4	한승주 외무부 장관 방러
'94. 6	김영삼 대통령 방러
'94. 11	슈메이코 상원의장 방한
'95. 7	이그나텐코 부총리 방한
'95. 9	체르노미르딘 총리 방한
'96. 5	공로명 외무부 장관 방러
'96. 8	김영배 국회부의장 방러
'97. 6	조순 서울특별시장 방러
'97. 7	시수예프 부총리 방한
'97. 7	프리마코프 외무장관 방한
'97. 9	루킨 하원 외무위원장 방한
'98. 5	카라신 외무차관 방한
'98. 8	프루삭 상원 외무위원장 방한
'98. 9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방러
'98. 9	정재문 IPU 한국대표단장 방러
'99. 1	홍순영 외교부장관 방러
'99. 3	임동원 외교안보수석 방러

'99. 4	셀레즈네프 하원의장 방한
'99. 5	김대중 대통령 방러
'99. 10	선준영 외교통상부 차관 방러
2000. 3	장재룡 외교통상부 차관보 방러
2000. 6	러.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정홍식 의원 등 6명) 방한
2000. 5	조세형 새천년 민주당 고문 등 의원대표단 방러
2000. 6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 방러
2000. 6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방러
2000. 9	한.러 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 방러
2000. 9	국회구주협의회 대표단 방러
2000. 9	최호중 전 외무장관
2000. 10	로슈코프 외무차관 방한
2000. 10	이한동 총리 방러
2000. 10	이승곤 외교안보연구원장 방러
2000. 11	로고진 하원 외교위원장 방한
2000. 11	하카마다 하원 부의장 방한
2001. 2	푸틴 대통령 방한
2001. 2	세르게예프 러 외무부 행정차관 방한
2001. 5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 방러
2001. 5	이만섭 국회의장 방러
2001. 5	고로데츠키 노보시비르스크 시장 방한
2001. 5	이미경 의원 등 민주당 의원 방러
2001. 5	러 하원 금융.재정위원장 등 하원의원단 방한
2001. 6	러 하원 사무총장 방한
2001. 8	제2차 국화한민족통일연구회 방러
2001. 9	임성준 외교부차관보 방러
2001. 10	고건 서울시장 방러
2001. 10	폴리콥스키 러 극동지역 대통령 대표 방한
2001. 10	한완상 부총리 블라디보스톡 방문
2001. 11	김영진 의원 등 방러
2001. 11	루킨 러 하원 부의장 방한
2001. 11	코조킨 이스베스티야 사장 방한
2001. 11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 방한
2001. 11	이 회창 한나라당 총재 방러
2002. 1	최성홍 외무차관 방러
2002. 2	한.러 의원 친선협회 대표단 방한
2002. 3	김향경 외무차관 방러
2002. 4	야코블레프 상트 페테르부르크 시장 방한
2002. 9	로슈코프 러외무차관 방한
2002. 10	김민하 평통수석부의장 방러

2002. 12	전윤철 부총리 방러
2002. 12	쉬실로프 하원교육과학위원장 방한
2003. 1	김항경 외교부차관 방러
2003. 2	조순형 대통령당선자 고위대표 일행 방러
2003. 2	북한 핵문제 국회대표단 방러
2003. 2	미로노프 상원의장 및 로슈코프 외무차관 등 대통령 취임경축 사절 방한
2003. 6	조영동 국정홍보처장 방러
2003. 7	조부영 국회부의장 방러
2003. 9	김진표 부총리 방러
2003. 10	이바노프 러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방한
2003. 11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방러
2004. 4	루쉬코프 모스크바시장 방한
2004. 5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러
2004. 7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한
2004. 7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방러
2004. 9	노무현 대통령 공식 러시아 방문
2004. 11	코샤초프 러 하원 외교위원장 방한
2004. 11	이명박 서울시장 방러
2004. 11	알렉세예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 방한
2004. 11	장재룡 본부대사, 신기남, 김형주 의원 방러(상트페테르부르크 거점도시 행사참석)
2005. 3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방러
2005. 5	노무현 대통령 방러 - 2차대전 승전 60주년 기념 행사 참석
2005. 7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방러
2005. 7	유라시아 대장정 대표단 방러
2005. 8	한·러 의원 정치포럼 대표단 방러
2005. 8	브누코프 외무부 아태1국장 방한
2005. 8	이종석 NSC 차장 방러
2005. 9	김원기 국회의장 방러

<표 III-50> 한·몽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방몽	방한
1992. 4 이상옥 외무부장관	1991. 오치르바트 대통령/ 곰보수렌 외무부장관
1994.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1992. 2 곤칙도르지 국가소회의(국회) 의장 겸 부통령
1995. 10 조순 서울시장	1992. 가와 국방차관 겸 무력참모부의장/ 영흐툽신 교육부차관
1996. 이시윤 감사원장	1993. 프레브도르지 부총리
1998. 7 김정수 외교통상부장관	1994. 초인호르 외무부차관
1998.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1995. 5 바산잡 울란바타르시장/ 곰보잡 인구정책-노동부장관
1999. 5 김대중 대통령	1995. 10 다시운돈 몽골인민혁명당 당수
1999. 박준규 국회의장	1995. 바가반디 국회의장/ 간바야르 검찰총장
1999. 김상현 한·몽의원친선협회장	1996. 자브즈마 감사원장
2000. 김정길 법무부장관	1997. 엘벡도르지 국회부의장/조리그 보사부장관
2001. 6 이한동 국회의장	1998. 나란차츠랄트 울란바타르시장 바트바야르 보사부장관/ 아마르 자르갈 외무부장관
2001. 안정남 국제청장	1999. 곤칙도르지 국가대회의 의장/ 아마르자르갈 총리
2001. 임창렬 경기도지사	잔찬 헌법재판소장/ 영흐바야르 인민혁명당 당수
2003. 김용섭 국제청장	투브덴도르지 국방부장관
2003. 박관용 국회의장	2000. 3 곤칙도르지 국가대회의 의장
2003. 11 김진선 강원도지사	울란 재경부장관/ 영흐볼드 울란 바타르시장
2004. 6 최종영 대법원장	2001. 2 바가반디 대통령
2005. 8 국가인권위원회장	2001. 알탄호약 검찰총장/직지드 하부 구조부장관
2005. 9 이명박 서울시장	2002. 3 남도르지 법무-내무부장관
	2002. 에르덴츨론 외무부장관
	2003. 10 나산자르갈 식품 농업부장관
	2003. 11 영흐바야르 총리
	2005. 3 멩흐-오르길 외무부 장관
	2005. 6 바트후 교통·관광부 장관
	2005. 10 간디 보건복지부 장관

<표 III-51> 남·북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일자	내 용
2000. 6. 15	남북정상회담
2000. 7. 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2000. 8. 29~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0. 9. 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2000. 12. 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1. 9. 15~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2002. 4. 3~5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 평양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와 회담
2002. 8. 12~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2002. 10. 19~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3. 1. 21~24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2003. 4. 27~29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3. 7. 9~12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2003. 10. 14~17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4. 2. 3~6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2004. 5. 4~7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2005. 5. 16~19	남북 실무회담(차관급)(개성)
2005. 6. 21~2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2005. 9. 13~16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표 III-52> 한·미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정 상 회 담	17차 1990. 6. 3~6. 8	노태우 대통령 방미, 부시 대통령과 회담 (6.6)
	18차 1991. 7. 1~7. 3	노태우 대통령 국민 방문,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7. 2)
	19차 1991. 9. 23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욕)
	20차 1992. 1. 5~1. 7	부시 대통령 방한,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1.6)
	21차 1993. 7. 10~7. 11.	클린턴 대통령 방한,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
	22차 1993. 11. 21~11. 24.	김영삼 대통령, 시애틀 APEC 정상회담(11. 17~20) 참석 후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워싱턴), 공동기자회견(11.23)
	23차 1994. 11. 14	보고르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 정상회담 (인도네시아)
	24차 1995. 7. 25~7. 28	김영삼 대통령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 (7. 27)
	25차 1996. 11. 24	마닐라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 정상회담 (필리핀)
	26차 1996. 4. 16	클린턴 대통령 방한(제주도), 4자회담 공동 제의
	27차 1997. 6. 23~6. 27	김영삼 대통령, 유엔 환경특별총회(뉴욕) 계기 정상회담
	28차 1997. 11. 24	밴쿠버 APEC 정상회담 계기 한·미 정상회담 (캐나다)
	29차 1998. 6. 6~6. 13	김대중 대통령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 (6. 9)
	30차 1998. 11. 21~22	클린턴 대통령 방한
	31차 1999. 7. 2~7. 4	김대중 대통령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 (7. 2)
	32차 2000. 6. 8	한미 정상회담 (동경) - 오부처 일총리 장례식 계기
	33차 2000. 9. 7	한미 정상회담 (뉴욕) - 유엔 천년정상회의 계기
	34차 2000. 11. 15	김대중 대통령, APEC 정상회담(브루나이) 계기 정상회담
	35차 2001. 3. 6~3. 9	김대중 대통령 미국 실무방문,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3. 7)
	36차 2001. 10. 19	김대중 대통령, APEC 정상회담(상해) 계기 부 대통령과 정상회담
	37차 2002. 2. 19~2. 21	부시 대통령 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2. 20)
38차 2003. 5. 11~5. 17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5. 14)	
39차 2003. 10. 20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담(방콕) 계기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40차 2004. 11. 20	노무현 대통령, APEC 정상회담(산티아고) 계기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41차 2005. 6. 10	노무현 대통령 미국 방문,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외 무 장 관 회 담	1990. 7. 31	한·미 외무장관 회담(싱가포르)- 제2차 APEC 각료 회담 참석
	9. 26	한·미 외무장관 회담(뉴욕) - 제45차 유엔총회 참석
	1991. 4. 29~5. 3	이상옥 외무장관 방미 - 한·미 외무장관 회담(4. 30)
	7. 2	외무장관 회담 개최(워싱턴)
	11. 13	이상옥 외무장관-J. Baker 국무장관간 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
	1992. 1. 21	한·미 외무장관 회담
	7. 26	한·미 외무장관회담(마닐라)
	1993. 3. 25~30	한승주 외무장관 방미
	9. 28~10. 2	한승주 외무장관, UN 총회 참석자 미국 방문 - 한·미 외무장관 회담(9. 28)
	1994. 2. 10~12	한승주 외무장관 방미
	3. 27~4. 4	한승주 외무장관, 중국, 유엔, 미국, 일본 방문
	9. 5~9	한승주 외무장관 미국 방문
	9. 29	한·미 외무장관회담(뉴욕)
	11. 14	한·미 및 한·미·일정상회담(인니 APEC정상회담시)-한·미외무장관 회담(11. 14)
	1995. 2. 4~7	공로명 외무장관 방미
	1996. 3. 25~28	공로명 외무장관 방미
	1997. 2. 22~23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한(2. 22 한·미 외무장관 회담)
	5. 21~24	유종하 외무장관 방미(5. 12~22유엔, 5. 22~24워싱턴)
	9. 24	-5. 23 한·미외무장관 회담 UN총회 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뉴욕)
	1998. 5. 1~2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한
	6. 10	한·미 외무장관 회담(대통령 미국 국민방문 계기)
	7. 27	한·미 외무장관 회담(마닐라, ARF/ASEAN PMC 참석 계기)
	9. 9~12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방미-한·미외무장관회담, 행정부고위인사 및 중진의원 면담
	9. 24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뉴욕)
	1999. 5. 13~17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 방미 한·미 외무장관회담 개최 (5.17)
	7. 26.	ASEAN-PMC 계기 한·미 외무장관회담 (싱가포르)
	7. 27.	ASEAN-PMC 계기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 (싱가포르)
	9. 9	APEC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 (오클랜드)
	2000. 3. 13~15	외교통상부 장관방미, 한·미 외무장관 회담(3. 13)
	6. 23~24	Albright 미 국무장관 방한, 한·미 외무장관 회담
	7. 28	ARF 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방콕)
10. 25~26	Albright 국무장관 방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 (10. 25)	
2001. 2. 5~10	외교부장관 방미, 한·미 외무장관회담(2. 7)	
6. 5~12	외교통상부장관 방미	
7. 27~28	Powell 미 국무장관 방한	
9. 18	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워싱턴)	

외 무 장 관 회 담	2002. 2. 1	한·미 외무장관 회담 개최(뉴욕)
	4. 16~20	최성홍 장관 방미, 한·미 외무장관 회담(4. 17)
	9. 13	UN 총회 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 (뉴욕)
	10. 26	APEC 각료회의 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멕시코 로스카보스)
	2003. 3. 26~29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미국 방문, 한·미 외무장관 회담 (3.28)
	6. 18	ARF 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 (프놈펜)
	9. 2~7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한·미 외무장관 회담 (9.3)
	2004. 3. 2~6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한·미 외무장관 회담
	9. 23	UN 총회 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 (뉴욕)
	10. 25~26	Colin Powell 미 국무장관 방한(10. 26 한·미 외무장관 회담)
	11. 19	APEC 계기 한·미 외무장관 회담(칠레 산티아고)
	2005. 2. 10~2. 14	외교통상부 장관 방미
	3. 19~3.20	Rice 미 국무장관 방한
	11. 17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경주)

<표 III-53> 중·일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일자	내용
1990. 11. 12	우슈예첸 부주석 아키히토 천황 즉위식에 참석
1991. 8. 10	가이후 수상 방중(1989년 6월 이래로 서구 국가들의 현직 국가정상 중 최초)
1992. 4. 6	장쩌민 당 총서기 방일
1992. 5. 25	완리 중국 공산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방일
1992. 10. 23	일본 천황부부 방중
1993. 11. 19	APEC 회의 참석차 일·중 정상회담(Seattle)
1994. 2. 23	주룽지 부총리 방일
1994. 3. 19	호소가와 수상 방중
1994. 4. 29	Bunbei Hara 중의원 의장 방중
1994. 8. 27	타카코 도이 참의원 의장 방중
1994. 10. 28	룽이런 부주석 방일(부주석으로는 최초)
1995. 4. 10	차오스 중국공산당 상임위원회 의장 방일
1995. 5. 2	토미치 무라야마 일본 수상 방중
1995. 11. 18	APEC 회의에서 일·중 정상회담 (Osaka)
1996. 11. 24	APEC 회의에서 일·중 정상회담(Manila)
1997. 9. 4	류타로 하시모토 일본 부수상 방중(현직 일본 부수상으로는 최초로 방중)
1997. 11. 11	리펑 총리 방일
1998. 4. 21	후진타오 부주석 방일
1998. 11. 25	장쩌민 국가주석 방일(중국 지도자로서 최초 방일)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호협력동반자 관계”
1999. 7. 8	오부치 수상 방중
2000. 5. 10	탕자쉬안 외무장관 방일
2000. 5. 29	일본 집권당 당수들 방중
2000. 6. 7	중국 부총리 중국정부 특사로 오부치 전 수상 장례식 참석 attended
2000. 8. 28	요헤이 고노 외상 방일
2000. 10. 12	주룽지 총리 방일
2001. 7. 9	일본 집권연립당 당수 방중
2001. 10. 8	고이즈미 일본 수상 방중
2001. 11. 21	APEC 회의 참석시 일·중 정상회담 (Shanghai)
2002	고이즈미 수상 방중
2004. 4. 4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일본 외상회담
2004. 9. 12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가와구치 일 외상 회담
2004. 10. 9	일·중 외무장관 회담
2004. 11. 19	일·중 외무장관 회담
2004. 11. 23	일·중 정상회담
2005. 4. 18	탕자쉬안 국무위원-마치무라 일 외상 회담
2005. 4. 24	일·중 정상회담
2005. 5. 6	ASEAN+3 회의에서 일·중 외무장관회담

<표 III-54> 중·러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일자	주요 인사	주요 내용
1992. 3. 16~17	코지레프 외무장관 방중	『동부국경선 획정 협정』 비준서 교환
1992. 10. 26	쿠나제 외무차관 방중	서부국경선 문제 논의
1994. 1.	중·러 건설적 동반자관계	
1995. 5. 7~10	장쩌민 국가주석 방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1995. 6. 25~28	이봉 총리 방러	쌍무관계, 국제정세, 경험문제 협의
1995. 9. 21~23	전기침 외교부장 방러	군사와 경험 문제 논의
1996. 4. 25	엘친 대통령 방중	전략적 동반자관계 확립
1999. 6. 1~3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중	코스보 문제 논의
1999. 12. 9~10	엘친 대통령 방중	정상회담 개최, 대미 공동대응 합의
2000. 7. 17~19	푸틴 대통령 방중	『베이징 공동선언』 채택
2001. 7. 15~18	장쩌민 주석 방러	정상회담 개최, 『중·러 선린 우호협력조약』 체결
2001. 10. 20	푸틴 대통령 방중(상하이)	APEC 정상회의에서 회동,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체첸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 SCO의 역할과 기능확대 등 합의
2002. 6. 6	장쩌민 국가주석 방러(상트페테르부르크)	협력확대 방안, 국제현안 논의
2002. 12. 1~3	푸틴 대통령 방중	송유관 문제 협의
2003. 2. 26~28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러	북핵 문제 논의
2003. 5. 26~28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러	북핵, 경험 문제 협의
2003. 7. 4	다이빙귀 외교부 부부장 방러	북핵 문제 논의
2004. 10. 14~16	푸틴 대통령 방중	『러·중간 동부국경에 관한 추가협정』 체결
2005. 5. 9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러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식 참석
2005. 6. 2	리자오싱 외교부장 방러(블라디보스톡)	러·중·인도 3국 외무장관 회담 참석
2005. 6. 18	후진타오-러시아 국가두마 대변인과 회담	
2005. 7. 1	정상회담(모스크바)	
2005. 7. 2	후진타오- Mikhail Fradkov 러시아 수상 회담	

<표 III-55> 중·몽 정치교류 현황

방중	방몽
1990. 오치르바트 국가대회의 의장 방중	1991. 양상군 주석 방몽
1991. 곤척도르지 국가소회의 의장 겸 부통령 방중	1994. 4. 리펑 총리 방몽
1992. 5. 밤바수렌 총리 방중	1997. 차오스 전인대 상임위원장 방몽
1994. 4. 곰보수렌 외무부장관 방중	1997. 천지첸 외교부장 방몽
1994. 8. 바가반디 국가대회의 의장 방중	1999. 6. 장쩌민 주석 방몽
1996. 자르라이 총리 방중	2000. 6. 외무부 대표단 방몽
1998. 12. 반가반디 대통령 방중	2000. 10. 웨이쥔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999. 아마르자르갈 총리 방중	정치국 비서 방몽
2000. 2. 볼드 국가안보회의의장 방중	2001. 4. 왕유시 내몽고자치구 정치협상 회의
2000. 3. 몽골 외무부 대표단 방중	비서 방몽
2000. 3. 곤척도르지 국가대회의 의장	2001. 7. 탕자첸 외교부장관 방몽
2000. 4. 토야 외무부장관 방중	2003. 6. 후진타오 주석 방몽
2001. 6. 바트볼드 외무부 차관 방중	
2002. 1. 옹호바야르 총리 방중	
2002. 4. 투무르-오치르 국가대회의의장 방중	
2004. 1. 외무부장관 방중	
2004. 7. 바가반디 대통령 방중	

<표 III-56> 중·북 정치교류현황

1991년 이후 중국 고위층의 방북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방문성격	주요 의제
1991. 5. 3~6	李鵬 총리	공식우호방문	-
1991. 6. 17~20	錢其沈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공식우호방문	
1992. 4. 12~17	楊尙昆 국가주석	공식우호방문	
1993. 7. 26~29	胡錦濤 정치국상무위원, 서기처서기	중국당정대표단	
1996. 7. 10~13	羅干 국무위원 겸 국무원비서장	중국당정대표단	
1999. 10. 5~9	唐家璇 외교부장	우호방문	북·중수교 50주년 기념
2000. 10. 22~26	池浩田 군사위부주석,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	중국고급군사대표단	한국전 참전 50주년 기념
2001. 7. 9~13	姜春元 전국인대부위원장	중국우호대표단	북·중 상호원조조약 40주년 기념, 김정일 면담
2001. 9. 3~5	江澤民 국가주석	공식우호방문	김정일, 김영남, 홍성남 면담, 대북무상원조(식량20만톤, 중유3만톤)
2002. 5. 6~10	賈慶林 정치국위원, 북경시서기	중공당대표단	
2003. 3. 8~9	錢其沈 전부총리	비공식방문	3자회담 참여 설득
2003. 10. 29~31	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공식우호방문	김정일 면담, 6자회담및 경제지원 논의
2004. 9. 10~13	李長春 당 정치국 상무위원	공식우호방문	경제지원 논의
1991년 이후 북한 고위층의 방중			
방문시기	방문인사 및 직위	방문성격	주요 의제
1991. 10. 4~13	김일성 주석	공식우호방문	-
1999. 6. 3~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공식우호방문	관계회복 및 경제원조
2000. 3. 18~22	백남순 외무상	공식우호방문	북·중 정상회담문제
2000. 5. 29~31	김정일위원장	비공식방문	남북정상회담, 북한개혁 개방지원
2001. 1. 15~20	김정일 위원장	비공식방문	江澤民, 朱鎔基면담, 상해시찰, 개혁개방지원

2001. 7. 10~14	김윤혁	우호방문	북·중상호원조조약 기념
2002. 10. 15~19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공식방문	李鵬, 胡錦濤 접견, 대내외 정책 협력
2004. 2. 9	김계상 외무상 부상	공식방문	6자회담논의
2004. 4. 19~21	김정일 위원장	비공식방문	胡錦濤 등 정치국상무위 원 전원접견, 전통우호협 력관계 재확인
2004. 10. 19	김영남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장	우호방문	胡錦濤 접견, 경제원조, 6자회담 논의
2005. 3. 22~27	박봉주 내각총리	공식우호방문	6자회담 및 북·중투자협 정체결
2005. 4. 5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공식우호방문	唐家璇, 戴秉國 면담, 북· 중친선관계, 핵문제

출처: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 이동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실증연구,” 중국의 대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전경련, 2005), pp. 144~145.

<표 III-57> 중·미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일시	주요 내용
1990. 11. 31~12. 1	첸치천 중국 외무장관 방미
1991. 11. 1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 방중
1993. 11. 19	장쩌민 주석-빌 클린턴 대통령 정상회담(시애틀 APEC 정상회담)
1996. 11. 24	정상회담
1997. 9	정상회담
1997. 11~12	장쩌민 주석 방미, 정상회담
1998. 1	윌리엄 코엔 미 국무장관 방중
1998. 4. 29~5. 1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중, 외무장관회담
1998. 6. 1~2	Samuel Burger(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방중
1998. 6. 25~7. 3	클린턴 방중, 정상회담
1998. 7. 27	탕자쉬안 외무장관-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회담(마닐라 ARF 회담 중)
1998. 9. 27~29	탕자쉬안 외무장관 방미
1998. 11. 16	장쩌민 주석 -알 고어 미 부통령 회담 (칼리쿰프르 APEC 정상회담 중)
1999. 3. 1~2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중료
1999. 4. 4~14	주룽지 중국 총리 방미,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알 고어 부통령과 회담
1999. 6. 16	Thomas Pickering(U.S. Under Secretary of State) 특사 방중
1999. 7. 25	외무장관회담(싱가포르 ARF 회의 참석차)
1999. 9. 9	탕자쉬안 외무장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회담
1999. 9. 11	정상회담(오클랜드 APEC 정상회담 참석차)
1999. 9. 12	첸치천 부주석-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사무엘 버거 안보보좌관과 회담
1999. 9. 23	외무장관회담(뉴욕, 제 54차 UN 총회참석 차)
2002. 10. 28	정상회담
2003. 12. 30	후진타오-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 회담
2004. 10. 1	리자오싱 외무장관-파월 국무장관 회담
2004. 10. 25	리자오싱 외무장관 -파월 국무장관 회담(APEC 회담) 원자바오 총리-파월 국무장관 회담 후진타오 주석-파월 국무장관 회담
2004. 11. 18	리자오싱 외무장관 - 파월 국무장관 회담
2004. 11. 21	후진타오- 부시 정상회담
2004. 12. 1~3	다이빙귀 중국 특사 방미,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보좌관, 량스펄드 국방장관과 회담 온가보 수상-라이스 국무장관 회담
2005. 3. 20	리자오싱 외무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회담,
2005. 3. 21	우이 부총리-라이스 국무장관 회담 탕자쉬안 국무위원- 라이스 회담 우이 부총리- Randt 주중미대사 회담
2005. 5. 13	후진타오 주석-조지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
2005. 7. 8	외무장관 회담
2005. 7. 10	원자바오 총리-라이스 회담 탕자쉬안 - 라이스 회담 후진타오-라이스 회담

<표 III-58> 러·일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일자	고위급 인사	주요 내용
1991.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방일	
1992. 1. 31	옐친 대통령 방미(뉴욕)	러·일 정상회담, 북방영토 문제 등 논의
1993. 10. 13	옐친 대통령 방일	『도쿄선언』 채택
1994. 11. 27	소스커베츠 제1부총리 방일	‘법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북방영토 문제 계속 논의
1997. 11. 1	하시모토 총리 방러 (크라스노야르스크)	옐친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0년 말까지 영토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 합의
1998. 11. 12	오부치 총리 방러	정상회담 개최, 『모스크바 선언』 발표
1999. 5.	고무라 외상 방러	
1999. 9. 1	흐리스텐코 제1부총리 방일	일본의 대러 11억 달러 차관 제공
2000. 2. 10~11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일	건설적 동반자관계 유지에 관한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친서 전달, 외무회담
2000. 4. 16~20	일본 국회의원협회 대표단 방러	국가두마 의원들과 접촉하여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 논의
2000. 4. 29	모리 총리 방러(상트 페테르부르크)	푸틴 대통령당선자와 비공식 정상회담, 평화조약 체결 희망
2000. 4.	러·일 정상회담(G8회담)	
2000. 7.	러·일 정상회담(오키나와), 일·러 외무장관회담	
2000. 9. 3~5	푸틴 대통령 방일	모리 총리와 정상회담, 양국간 통상과 경험 강화, 국제무대에서 양국 공조,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 협의
2000. 11.	고노 외상 방러	
2000. 11. 15	APEC 회의를 계기로 일러 정상회담	

일자	고위급 인사	주요 내용
2001. 1. 16	고노 일본 외상 방러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회담, 양국관계 발전·국제현안·평화조약 체결 등 3개 분야 논의
2001. 3.	모리 일 총리 방러	푸틴-모리 이르쿠츠크 성명
2001. 10. 21	푸틴-고이즈미 정상회담 (상하이 APEC 정상회의)	하보마이와 시코탄에 대해서는 반환협상을, 구나시리와 예토로후에 대해서는 귀속협상 병행 합의
2002. 6. 13	러·일외무장관회담	
2002. 8.	ARF와 ASEAN 외무장관회담 계기로 러·일 외무장관회담	
2002. 9.	유엔총회 계기로 일러 외무장관회담	
2002. 10. 11~14	가와구치 외상 방러	정상회담 준비, 평화조약 문제 논의
2002. 12. 17~19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일	정상회담 준비
2003. 1. 10	고이즈미 총리 방러	한반도 상황 및 양국현안 협의, '행동계획' 채택
2003. 4. 23	로슈코프 외무차관 방일	북핵 3자회담 협의
2003. 5.	러·일 정상회담	
2003. 6.	요리코 가와구치 외상 방러	
2003. 10. 20	APEC 회담 계기로 일러 정상회담	
2003. 12. 15~17	카시아노프 러시아연방 총리 방일	대러 투자확대 방안 협의
2004. 6.	일러 정상회담 일·러 외무장관회담	
2004. 11. 21	푸틴·고이즈미 정상회담 (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 러·일 외무장관회담	평화조약, 북방영토 문제 협의
2005. 1. 14	마치무라 외상 방러	러·일 외무장관회담, 북방영토 문제 협의
2005. 5. 9	푸틴-고이즈미 정상회담	
2005. 9. 14	유엔총회 러·일 외무장관 회담	푸틴 대통령 방일, 통상·경제·투자 협력 논의

<표 III-59> 일·몽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방몽	방일
1991. 5. 우노 외상	1990. 3. 소드눔 총리
1991. 8. 가이후 수상	1992. 3. 곰보수렌 외무부장관
1992. 5. 오사다 참의원 의장	1992. 5. 밤바수렌 총리
1993. 8. 참의원 의원단	1993. 2. 축트 무역산업부장관
1997. 7. 중의원 의원단	1993. 9. 프렘도르지 부수상(지원국회의 참석)
1997. 8. 고이즈미 후생상	1993. 11. 자스라이 수상
1999. 7. 오부치 수상, 노다 자치 대신, 수즈키 내각 관방 부상(副相), 노다 우정상	1994. 2. 다바삼보 재무부장관
1999. 8. 참의원 의원단	1994. 2. 다시운돈 인민혁명당 당수
2000. 5. 에사키 외무 부상	1994. 10. 반가반디 국가대회의(국회) 의장
2003. 6. 시야 외무 부상	1995. 1. 푸레브도르지 부수상
2004. 8. 가와구치 외상	1995. 2. 자담바 국방부장관
2004. 8. 하시모토 전 수장	1995. 5. 직지드 에너지-광업부장관
2004. 9. 참의원 의원단	1995. 11. 곰보수렌 외무부장관
	1997. 2. 옹호사이한 수상
	1998. 5. 반가반디 대통령
	1999. 3. 곤칙도르지 국가대회의 의장
	1999. 5. 토야 외무부장관
	2000. 6. 아마르자르갈 외무부 장관
	2000. 9. 에르덴출로 외무부장관
	2001. 2. 옹호바야르 총리
	2002. 2. 투무르-오치르 국가대회의 의장
	2002. 7. 에르덴출론 외무부장관
	2003. 11. 옹호바야르 총리
	2003. 12. 반가반디 대통령

<표 III-60> 일·북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일자	내용
1990.	3차례 북·일 수교 예비회담
1992~1997.	제 1차-8차 북·일 수교회담
2000. 4.	제 9차 북·일 수교회담
2002. 9. 17	고이즈미 방북 북·일 정상회담
2002. 10. 29~30	북·일수교회담(Kuala Lumpur, Malaysia)
2004. 5. 22	고이즈미 방북 북·일 정상회담
2004. 7. 1	북·일 외무장관 회담
2004. 8. 9	북·일 실무자 협의회

<표 III-61> 미·일 정치관계 및 고위급 관료회담

일시	내용
2000. 5. 5	미·일정상회담
2000. 9.	미·일외무장관회담
2001. 7.	미·일정상회담
2001. 10. 20	미·일정상회담
2002. 2.	미·일외무장관회담
2002. 2.	미·일정상회담
2002. 6. 13	미·일외무장관회담
2002. 6.	미·일정상회담
2002. 8.	미·일외무장관회담
2002. 9.	미·일외무장관회담
2002. 9.	미·일정상회담
2002. 9.	가와구치 외상-럼스펠스 국방장관 회담
2003. 10.	미·일정상회담
2003. 12.	고이즈미 수상-제임스 베이커 미대통령 특사 회담
2004. 4.	고이즈미 수상-체니 부통령 회담
2004. 5.	가와구치 외상-파월 국무장관 회담
2004. 6.	미·일정상회담
2004. 7.	가와구치 외상-파월 국무장관 회담
2004. 7.	고이즈미 수상, 가와구치 외상-라이스 안보보좌관과 회담
2004. 9.	미·일정상회담
2004. 11.	미·일정상회담
2005. 6.	미·일외무장관회담

<표 III-62> 러·몽 정치인사교류 현황

방러	방몽
1992. 3. 밤바수렌 총리 방러	1992. 4. 압둘라티포프 최고회의민족위원회 의장
1993. 1. 오치르바트 대통령 방러	1993. 2. 레베데프 연방대법원장 방몽
1994. 3. 뎀베렐체렌 대법원장 방러	1995. 5. 국가안보회의 부비서 방몽
1994. 3. 울지호탁 교육과학부장관 방러	1995. 10. 사라파노프 경제-대외무역부장관 방몽
1994. 11. 바가반디 국가대회의 의장 방러	1995. 11. 다브도프 경제-대외무역부장관 방몽
1995. 4. 자스라이 총리 방러	1996. 6. 벤게로프스키 연방의회부의장 방몽
1995. 5. 오치르바트 대통령 방러	1998. 10. 프로션 외무부장관 방몽
2000. 1. 바트후 하부구조발전장관 방러	2000. 9. 고보린 이르크초크주지사 방몽
2001. 10. 에르덴출론 외무부장관 방러	2000. 10. 무력참모본부 아나톨리 크바쉬닌 장군
2002. 2. 투무르-오치르 국가대회의의장 방러	2000. 11. 푸틴 대통령 방몽
2002. 4. 볼드 국가안보회의 비서 방러	2001. 3. 포타포프 부랴트공화국(러시아 연방) 대통령
2002. 5. 간보릭 산업-무역부장관 방러	2001. 5. 쇼이구 재난방제청장 방몽
2002. 9. 찬지드 교육문화과학부장관 방러	2002. 3. 카샤노프 러시아 총리 방몽
2003. 5. 밤바도르지 국가대회의 부의장 방러	2002. 6. 그르즈로프 내무부장관 방몽
2003. 6. 옹흐바야르 총리 방러	2002. 7. 미라노프 연방회의 의장 방몽
2003. 6. 잡즈마 감사원장 방러	2003. 10. 슈브드코이 러시아연방 문화부장관 방몽
2005. 5. 바가반디 대통령 방러	2003. 11. 마카로프 러시아 시베리아 군구 사령관
	2004. 1. 이바노프 외무부장관 방몽

<표 III-63> 러·북 정치인사교류 현황

일자	고위급 인사	주요 내용
1993. 8. 6~16	김정주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방러	경제발전, 나진항 개발 문제 등 협의
1994. 5. 12~13	이인규 외교부 부부장 방러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8자회담지지 촉구
1994. 9. 20~24	파노프 대통령 특사 방북	정치관계 복원, 국회간 교류, 경험 확대 등 합의
1995. 3. 21~24	라첸코 연해주 주지사 방북	관세와 국경선 문제, 경제·무역 증진문제 논의
1996. 4. 10~12	이그나텐코 부총리 방북	제1차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개최
1996. 5. 26~29	셀레즈노프 연방하원 의장 방북	국제문제와 한반도문제 논의, 의회관계 증진 합의
1997. 1. 21~24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	신조약 논의, 여행협정 체결
1997. 4. 29~5. 3	루킨 연방하원 국제문제위원장 방북	의회간 회담 개최
1999. 3. 17	카라신 외무차관 방북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가조인
2000. 2. 9~10	이바노프 외무장관 방북	백남순 외상과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 공식조인
2000. 7. 19~20	푸틴 대통령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2001. 7. 26~8. 18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2. 2. 10~12	폴리코프스키 대통령 특사 방북	한반도문제와 양국 현안 논의
2002. 5. 20~24	백남순 외무상 방러	한반도문제와 양국 현안 논의, 경제·무역 관계 증진 합의
2002. 8. 22~24	김정일 위원장 방러(블라디보스톡)	정상회담
2002. 10. 29	파데예프 철도장관 방북	TKR 구간 실사 합의
2002. 12. 22~24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 방북	평양-모스크바 협력의정서 체결
2003. 1. 20	로슈코프 대통령 특사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북핵문제 등 협의
2003. 9. 8~11	폴리코프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령전권대표 방북	푸틴 대통령의 9·9절 축하 메시지 전달, 김정일 위원장 등 면담
2004. 7. 4~5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	『외무부간 2005~2006년도 교류계획서』 조인, 채무탕감, 북한노동자 문제 등 협의
2004. 9. 12~14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의장 방북	김정일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과 중요한 양국 현안 논의
2005. 1. 20	밀레르 가스프롬사 이사장 방북	가스 에너지 문제 협의
2005. 8. 15	폴리코프스키 극동연방지구 대통령령전권대표 방북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김정일 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면담

<표 III-64> 러·미 정치인사교류 현황

일자	주요 고위인사	주요 내용
1990. 5. 30~6. 5	고르바초프 서기장 방미	정상회담
1990. 9. 9	정상회담(헬싱키)	
1990. 9. 15~19	로널드 레이건 전 미대통령 부부 방러	-
1990. 10. 4	외무장관 회담	-
1991. 6. 18~20	열린 방미	-
1991. 7. 17	G7 회담(런던)	-
1991. 7. 31	정상회담(모스크바)	-
1991. 10. 30	정상회담(마드리드 중동평화회의 참석차)	-
1991. 11. 19~21	고르바초프-로널드 레이건 회담(모스크바)	-
1992. 2. 2	열린 대통령 방미	『캠프 데이비드 선언』 통해 동반자관계 선언
1992. 4. 13~15	쿠나제 외무차관 방미	아태지역 문제에 관한 양국 간 첫 협의
1992. 6. 15~19	열린 방미	정상회담
1993. 1. 3	정상회담(모스크바)	START II 체결
1993. 4. 5	러·미 정상회담(벤쿠버)	'새로운 민주적 동반자관계' 수립 내용의 『벤쿠버선언』 채택, 서방의 러시아 경제지원확정
1993. 7. 10	정상회담(도쿄 G7 회의참석 차)	
1994. 1. 12~15	클린턴 방러	정상회담
1994. 3. 9	러시아 국가두마 사절단 방미	-
1994. 7. 10	정상회담(이탈리아 나폴리)	-
1994. 9. 27~28	열린 대통령 방미	경제발전을 위한 동반자 협정 조인
1995. 5. 10	모스크바 정상회담	-
1995. 6. 16~17	정상회담(G7 회의 참석차)	-
1995. 10. 23	러·미 정상회담(뉴욕)	유엔 정상회담 참석, 미국의 대러 개혁정책 지원 재확인

일자	주요 고위인사	주요 내용
1996. 3. 13	정상회담(이집트)	-
1996. 4. 19~21	정상회담(G8 회의 참석시)	-
1996. 4. 21	클린턴 대통령 방러	NATO 동구확대, 보스니아 사태, 쿠바, 중동 문제 논의
1997. 3. 20~21	러·미 정상회담(헬싱키)	군축과 경제 관련 공동성명 채택
1997. 6. 20~22	정상회담(G8 회의 참석시)	
1998. 9. 1~2	클린턴 대통령 방러	『21세기의 공동 안보도전에 관한 공동성명서』 채택, 민간차원의 교역·투자 확대 등 6개항 합의
1999. 1. 25~27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러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출통제 문제 등 논의
1999. 6. 20	정상회담(독일)	-
1999. 11. 1	정상회담(노르웨이)	-
2000. 1. 31~2. 2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러	NMD 체제 구축의 불가피성, ABM 조약 개정 필요성 강조, 체첸사태의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해결 촉구
2000. 4. 24~27	이바노프 외방미	NMD 구상의 ABM조약 및 NPT 합의 위배 지적
2000. 6. 3~5	클린턴 대통령 방러	ABM 조약·NMD 구상 논의, 플루토늄 폐기·미사일 및 위성발사 자료교환센터 설립 등 합의
2000. 9. 6	뉴욕 정상회담	-
2001. 6. 17	정상회담(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	동반자관계 확인 및 MD구축, ABM 조약, NATO 확대문제 등 협의
2001. 11. 13~15	푸틴 대통령 방미	군축·대테러 공조·경제협력 등 현안 논의, 핵무기 대폭 감축 합의, MD체제 구축 논란
2001. 12	정상회담	
2002. 5. 23~26	부시 대통령 방러	경협 확대, 러시아의 WTO 가입, 미국의 석유 수입 방안 등 논의

일자	주요 고위인사	주요 내용
2002. 11. 22	부시 대통령 방러(푸쉬킨시)	NATO 확대, 체첸 사태, 에너지 분야 등 경험 문제 논의
2003. 5. 13~15	파월 국무장관 방러	대테러 투쟁, 전후 이라크 처리, 북핵,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협의
2003. 6. 1	부시 대통령 방러(상트 페테르 부르크)	시 건설 300주년 기념축제 참석, 전략적 동반자관계 지속 합의
2003. 9. 24~27	푸틴 대통령 방미	21세기 공동의 도전에 대한 양국의 협력관계, 이라크 재건, 이란 핵개발, 원유 등 논의
2004. 6. 8	정상회담(G8 정상회담 계기)	-
2004. 11. 20	정상회담(산티아고 APEC정상회담 계기)	-
2004. 11. 26	파월 국무장관 방러	이라크 재건, 유엔 참여 확대 문제 등 협의
2005. 4. 19~20	라이스 국무장관 방러	-
2004. 5. 28	에이브러햄 에너지부 장관 방러	원유공급 확대 요청
2005. 2. 24	러·미 정상회담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	핵무기비확산, 대테러전쟁,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이란, 북한, 중동, 구소련공화국, 러시아 WTO가입, 교역과 경제관계 문제 등 논의
2005. 5. 9	부시 대통령 방러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식 참가

<표 III-65> 몽·북 정치인사교류 현황

방북	방몽
1992. 4. 오르트나산 국가대회의 의장 방북	1992. 6. 지역산업부장관 방몽
1998. 1. 알탄게렐 외무부장관 방북	1998. 4. 외무부 부상 방몽
2003. 11. 영호바야르 총리 방북	2002. 8. 백남순 외상 방몽
2003. 11. 간조릭 산업-무역부장관	
2004. 11. 바가반디 대통령 방북	

<표 III-66> 몽·미 정치인사교류 현황

방미	방몽
1991. 1. 오치르바트대통령 방미	1991. 7. 베이커 국무장관 방몽
1991. 2. 국가소회의 의원단 방미	1995. 9. 힐러리여사 방몽
1991. 6. 밤바수렌 총리 방미	1998. 5.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방몽
1992. 4. 곤칙도르지 국가소회의 의장 방미	1999. 10. 국무부 차관 방몽
1993. 6. 자스라이 총리 방미	2000. 7. 국방성 부장관 방몽
1995. 9. 자담바 국방부장관 방미	2000. 9. 연방대법원 관사 방몽
1995. 9. 엔비시 부총리 방미	2000. 12. 국방성 차관 방몽
2000. 2. 토야 외무부장관 방미	2004. 1. 합동참모본부장 방몽
2000. 9. 에르덴출론 외무부장관 방미	2004. 1. 아미티지 국무부 차관 방몽
2001. 11. 영흐바야르 총리 방미	2004. 10.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 방몽
2002. 5. 남도르지 법무-내무부장관 방미	
2002. 9. 에르덴출론 외무부장관 방미	
2003. 2. 바가반디 대통령 방미	
2003. 4. 토고 무력참모본부장 방미	
2003. 11. 투무르-오치르 국가대회의 의장 방미	
2004. 6. 바가반디 대통령 방미	

<표 III-67> 북·미 정치인사교류 현황

일자	내용
1992. 1. 22	아놀드 캔터 국무차관-김용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 회담(뉴욕)
1993. 6~1994. 10	북·미 핵협상
1994. 1. 4	북한, 국제원자력발전소 사찰단 수용
1994. 6.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방북
1994. 10. 21	북·미 핵 협상 타결(제네바)
1995. 12.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경수로공급협정 체결
1996. 4. 20~21	제1차 북·미 미사일회담(베를린)
1997. 6. 11~13	제2차 북·미 미사일회담(베를린)
1998. 10. 1~2	제3차 북·미 미사일회담(베를린)
1998. 11. 17	제1차 북·미 협상(평양)
1999. 3. 29~30	제4차 북·미 미사일회담(베를린)
1999. 5. 25~28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 북한 방문
1999. 9. 7~12	북·미 고위급회담(베를린)
1999. 11. 15~19	북·미 고위급회담(베를린)
2000. 1. 22~28	북·미 고위급회담(베를린)
2000. 3. 8~15	북·미 고위급회담 준비회담, 북미 테러회담(뉴욕)
2000. 5. 24~30	북·미 핵문제 회담(로마)
2000. 7. 10~12	제 5차 북·미 미사일 회담(칼라룸프르)
2000. 7. 28	북·미 첫 외무장관회담(방콕)
2000. 8. 9~10	북·미 테러회담(평양)
2000. 10. 10	북한 조영록 특사 워싱턴 방문
2000. 10. 23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평양 방문
2000. 11. 1~3	제6차 북미 미사일전문가회담(칼라룸푸르)
2001. 1. 18	북·미 비공식실무회담(뉴욕)
2001. 2. 27~3. 3	북한경제시찰단(단장 한성렬) 사상 첫 미국 방문
2002. 10. 3~5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 방북
2003. 4. 23~25	핵협상을 위한 북·미·중 3자 회담(베이징)
2003. 8. 27~29	제1차 6자회담(베이징)
2004. 2. 24~27	제2차 6자회담(베이징)
2004. 6. 23~26	제3차 6자회담(베이징)
2005. 7.	제4차 6자회담(베이징)

4. 국가별 문화지표

가. 통신

<표 III-68> 동북아국가의 통신 현황

	전화가입자			휴대전화가입자			인터넷 가입자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1993	1998	2003
한국	13.28	16.6	23.26	-	-	32.34	-	-	26.27
중국	11	105	214.42	-	-	206.62	-	-	45.8
일본	64	64	71.15	-	-	81.12	-	-	57.1
러시아	24	23.8	35.5	-	-	17.61	-	-	18
몽골	0.063	0.094	0.128	-	-	0.216	-	-	0.05
북한	-	0.03	1.1	-	-	-	-	-	-
미국	182.56	182.56	186.23	7.56	-	140.77	-	-	159
전세계	843,923,500 (2003)						604,111,719 (2002 est.)		

Source: CIA World Factbook

나. 교통·항공

<표 III-69> 중국의 운수

(단위: 만km)

년도	철로	도로(고속도로)	내륙하운	항로(국제선)
1993	5.86	108.35(0.11)	11.02	96.08(27.87)
1997	6.60	122.64(0.48)	10.98	142.50(50.44)
2003	7.30	180.98(2.97)	12.40	174.95(71.53)

Source: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05년 8월 15일).

<표 III-70> 한국과 동북아국가들간의 항공기 운항횟수

	1993			1998			2002		
	도착	출발	합계	도착	출발	합계	도착	출발	합계
중국	647	649	1,296	5,241	5,244	10,485	14,552	14,466	29,018
일본	15,897	15,879	31,776	16,557	16,657	33,254	22,119	22,124	44,243
북한	-	-	-	-	-	-	18	18	36
몽골	-	-	-	111	112	223	253	251	504
러시아	1,044	1,052	2,096	2,068	2,267	4,335	2,358	2,591	4,949
미국	11,885	11,674	23,559	15,089	14,811	29,900	16,018	18,274	34,292
동북아1	16,544	16,528	33,072	21,909	22,013	43,962	36,942	36,859	73,801
동북아2	29,473	29,254	58,727	39,066	39,091	78,197	55,318	57,724	113,042
전세계	34,319	34,296	68,615	45,465	46,335	90,801	79,852	83,480	163,332

자료: 한국공항공사.

3. 교육시설 · 유학생현황

<표 III-71> 한국의 국내의 유학생 현황

	국외 유학생 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1999	2001	2003	2004	1999	2000	2001	2003	2004
일본	12,746	14,925	17,339	16,992	1,648	1,692	3,595	2,486	2,232
중국	9,204	16,372	18,267	23,772	1,182	1,601	3,221	5,607	8,677
미국	42,890	58,457	49,047	56,390	785	559	1,297	575	586
러시아	942	1,212	954	1,114	198	151	358	304	314
몽골	19	24	21	31	64	72	201	208	356
동북아합계	65,801	90,990	85,628	98,299	3,877	4,075	8,672	9,180	12,165
전체합계	120,170	149,933	159,903	187,683	6,279	6,160	11,646	12,314	16,832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표 III-72> 중국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현황

각급 학교 수					
년도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0	172,322	766,072	71,593	15,678	1,075
1995	180,438	668,685	67,029	13,991	1,054
2000	175,836	553,622	62,704	14,564	1,041
2002	111,752	456,903	64,661	15,406	1,396
2003	116,390	425,846	63,711	15,779	1,552
대학원생 및 유학생 수					
년도	대학원생	출국 유학생	귀국 유학생		
1993	106,771	10,742	5,128		
1997	176,353	22,410	7,130		
2003	651,260	7,307	20,152		

출처: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05. 8. 15).

<표 III-73> 일본의 학교 수 및 유학생 수

각급 학교 수 *					
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90	15,076	24,827	11,275	5,506	507
2000	14,451	24,106	11,209	5,478	649
2002	14,279	23,080	11,159	5,472	686
2003	14,174	23,633	11,134	5,450	702
2004	14,061	23,420	11,102	5,429	709
유학생 추이 **					
년도	유학생 총수			대학원 유학생	
1990	41,347			12,574	
2000	64,011			23,585	
2003	109,508			28,542	

*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 출처: 주한 일본대사관

<표 III-74> 몽골의 교육기관 수 및 학생 수

(단위: 천명)

	2000		2001		2002		2003	
	교육 기관	학생수						
보편교육 기관(총계)	683	494.6	700	510.3	688	527.9	686	537.4
초등학교	113	250.0	107	241.3	100	237.8	72	232.4
중학교	219	195.5	216	212.4	217	224.5	193	232
고등학교	351	49.1	377	56.6	371	65.6	421	73.0
노동자를 위한 교육 기관	106	3.6	124	4.9	170	6.8	232	11
고등교육 기관	208	99.1	210	107.3	216	119.5	215	131.8
국립	70	68.8	71	75.3	72	86.5	77	95.3
직업학교	32	11.9	30	14.9	30	19.3	31	21.3
전문대/칼리지	30	18.2	33	23	34	23.7	38	25.6
대학	8	38.7	8	37.4	8	43.5	8	48.3
사립	138	28.3	139	30	144	31.4	138	34.8
직업학교	3	0.3	2	0.1	1	0.2	1	0.2
전문대/칼리지	131	24.5	134	26	140	26.9	134	30.2
대학	3	3.5	3	3.9	3	4.3	3	4.4
유학생	-	2	-	2	-	1.6	-	1.7

Source: 몽골국 통계연감 2003, (울란바토르, 2004).

4. 관광

<표 III-75> 한국의 관광통계

(단위: 명)

	1993		1998		2003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중국	99,957	110,585	210,662	484,009	512,768	1,569,245
일본	1,492,069	956,407	1,954,416	822,358	1,802,542	1,427,331
북한	6	18	0	3317	1023	15,280
몽골	480	1,064	7,393	1,064	14,361	15,938
러시아	116,821	20,930	135,401	18,306	168,038	42,982
미국	325,366	420,177	405,735	425,330	421,602	679,195
동북아1	1,592,512	1,068,074	2,172,471	1,310,748	2,330,694	3,027,794
동북아2	1,709,345	1,509,181	2,713,607	1,754,384	2,920,334	3,749,971
전세계	3,331,232	2,419,948	3,936,221	3,070,343	4,655,254	7,101,413

자료: 한국관광공사, 북한자료는 통일부.

<표 III-76> 중국의 관광 현황 및 입국 관광객 추이

중국의 관광현황							
년도	여행사수	출국인(만 명)	입국 외국인(만 명)	여행소득(억\$)			
2000	8,993	1,047.26	1,016.04	162.24			
2001	10,532	1,213.44	1,122.64	177.92			
2002	11,552	1,660.23	1,343.95	203.85			
2003	13,361	2,022.19	1,140.29	174.06			
중국입국 관광객의 국가별 구성 단위: 만 명							
년도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몽골	북한	총 관광객
2000	220.15	134.47	108.02	89.62	39.91	7.84	1,016.04
2001	238.57	167.88	119.62	94.92	38.71	7.71	1,122.64
2002	292.56	212.43	127.16	112.12	45.31	7.93	1,343.95
2003	225.48	194.55	138.07	82.25	41.83	7.71	1,140.29

출처: 中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검색일: 2005. 8. 15).

<표 III-77> 일본의 관광현황 및 입국 관광객 추이

일본의 관광현황							
년도	출국인			입국외국인			
2001	16,215,657			4,771,555			
2002	16,522,804			5,238,963			
2003	13,296,330			5,211,725			
2004	16,831,112			6,137,905			
일본입국 관광객 국가별 구성 (단위: 명)							
년도	한국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영국	총 관광객
2001	653,370	377,109	72,118	708,065	226,862	101,122	2,717,422
2002	756,991	412,845	101,299	769,074	255,294	124,244	3,095,326
2003	917,590	350,674	95,991	681,490	228,073	110,510	3,055,340
2004	1,037,483	445,840	189,692	962,168	271,492	122,947	3,839,661

출처: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표 III-78> 몽골 입국 외국인 통계

	2000	2001	2002	2003
미국	6,451	6,653	6,860	5,570
한국	8,039	10,098	1,4536	17,205
중국	57,546	67,360	92,657	91,934
러시아	49,456	66,415	71,368	53,330
일본	11,392	11,565	13,708	7,757
기타	25,321	29,984	36,036	29,049
총계	158,205	192,075	235,165	204,845

Source: 몽골국 통계연감 2003 . (울란바토르 2004).

<부록 IV>

분야별 동북아협력 인프라
실태 지표

1. 경제분야

<표 IV-1> ASEAN + 한·중·일 경제장관회의 합의 사업

개최 년도	주요 합의 사업
제1회(2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IT, 메콩강 개발, 인재 육성, 업종별 비즈니스 포럼, 농업, 관광, 중소기업 및 기반산업, 과학기술, 국제기관·지역기관 협력 등 9분야 합의
제2회(200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의 9분야 중 3분야를 우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기술이전 가속화 노력의 강화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기술협력 촉진 - 중소기업·기반산업의 강화
제3회(200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분야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스킬 표준화(일본 제안) - 공업표준화 적합성 평가개발 프로그램(한국 제안) - ASEAN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말레이시아, 미얀마 제안) - 환경보호기술에 관한 연수(중국 제안) - 메콩강 지역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태국) - 환경 조사를 위한 ASEAN 위성화상 Archive(태국 제안) ○ e-ASEAN+3 Working Group 개최 합의
제4회(200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ia e-Learning Initiative(인재육성 차원) 합의
제5회(200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가지 신규 프로젝트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터테인먼트 산업촉진(태국 제안) - 동아시아 IT협력 Initiative(한국 제안) - ASEAN+ 3중소기업 정보 네트워크(한국 제안) - 경제기술·개발 특구 세미나(중국 제안)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백서 2003년판 (2003).

2. 안보분야

<표 IV-2> ARF 연례회의 주요 의제

회의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의제	기타 사항
1차	1994. 7. 25	태국 방콕	남중국해 · 캄보디아 · 북핵 · 중국 문제, 신뢰구축방안 문제	한국: 동북아안보대화 (NEASED) 제의 북한: 참여가능성 타진
2차	1995. 8. 1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회의 운영체제, 남중국해 · 한반도 · 캄보디아 · 핵확산금지 문제	캄보디아 가입
3차	1996. 7. 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도원칙, 기준, 동남아 비핵지대화 · CTBT · 대인지뢰 금지 · 남중해 · 한반도 문제	인도, 버마 가입
4차	1997. 7. 27	말레이시아 수방 자야	미얀마 · 동남아 비핵지대화 · CTBT · WMD · 남중해 · 캄보디아 · 한반도 · 핵폐기물 문제	
5차	1998. 7. 27	필리핀 마닐라	지역금용위기 · 한반도 4자 회담 · 남중해 · 캄보디아 · 대인지뢰금지 · 동남아 비핵지대화 · CTBT 문제	
6차	1999. 7. 26	싱가폴	지역금용위기 · 코소보 · 동남아 비핵지대화 · 남중해 · 한반도 · WMD · 대인지뢰 금지 · 불법무기 문제	몽골 가입
7차	2000. 7. 27	태국 방콕	세계화 · 동남아 비핵지대화 · 인도네시아 · 동티모르 · 남중해 · 미얀마 · 한반도 · 태평양 도서정부 · WMD · 국제범죄 문제	북한 가입

회의	개최일	개최장소	주요 의제	기타 사항
8차	2001. 7. 25	베트남 하노이	세계화 · 한반도 · 남중해 · 동남아 비핵지대 · 인도네시아 · 동티모르 · 미얀마 · 태평양 도서정부 · WMD · 국제범죄 문제	3개 운영문서의 채택
9차	2002. 7. 31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	국제테러 · 국제범죄 · 한반도 · 남중해 · 인도네시아 · 동남아 비핵지대 · 동티모르 · 미얀마 · 인도-파키스탄 · 태평양 도서정부 · 아프가니스탄 · WMD · NPT · CTBT · 생화학무기 문제	
10차	2003. 6. 18	캄보디아 프놈펜	한반도비핵화 · 국제테러 · 해상안전 · 국제범죄 · 밀수 · 남중해 · 티모르 · 미얀마 · 인도네시아 · 인도-파키스탄 관계, 파푸아 뉴기니아, WMD, 무기밀매 문제	정부차원 동북아안보대화 필요성 언급
11차	2004. 7. 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자회담 · 남북관계 · 남중해 · 미얀마 · 인도네시아 · 국제범죄 · 밀수 · 국제테러 · WMD · NPT · 무기밀매 문제	파키스탄 가입
12차	2005. 7. 29	라오스 비엔티엔	쓰나미 등 자연재앙 대비 · 북핵 6자회담 · 남북대화 · 미얀마 · 남중해 · 팔레스타인 · 이라크 · 국제테러 · 해상안전 · WMD · NPT · 무기밀매 · 조류독감 · 유엔개혁 문제	티모르-레스테

출처: ARF(ASEAN Regional Forum)

<<http://www.dfat.gov.au/arf/statements/index.html>> 에서 자체 작성.

<표 IV-3> 북핵문제에 대한 6개국의 기본입장과 정책

국 가	미 국
제2차 핵위기 발발시 (02. 10)	-제네바합의 무효화 -다자회담으로 해결 -보상없는 핵개발 포기 -경제·군사 제재 가능
3자회담시 (03. 4. 23~25)	-선 핵개발 포기, 후 체제보장 -3자회담은 다자회담 -평화적 해결부터 북한 정권 교체까지 가능 -한·일의 참가 필요
제1차 6자회담시 (03. 8. 27~29)	-핵개발 포기 검증 이후 체제보장과 기타 현안 논의
제2차 6자회담시 (04. 2. 25~28)	-모든 핵활동에 대한 CVID -CVID 이후 대북 안전보장, 북·미 관계개선 -HEU 폐기, 관련 정보 공유 -핵동결 대체 에너지 제공 이해
제3차 6자회담시 (04. 6. 23~26)	-핵폐기를 위한 3개월 준비기간 이후 국제사찰, 이후 반대급부 제공 반대급부는 중유제공, 대북 불가침 안전보장,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경제제재 해제 -북한의 에너지 수요 조사 -CVID 표현 자제 -HEU 프로그램 시인, 동결, 폐기
제4차 6자회담시 (05. 7. 26~8. 7, 9. 13~19)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유연성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국 가	북한
제2차 핵위기 발발시 (02. 10)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 -선 체제보장, 후 핵개발 포기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NPT 탈퇴
3자회담시 (03. 4. 23~25)	-선 체제보장, 불가침조약 체결 -3자회담은 양자회담 -한·일 배제 원칙
제1차 6자회담시 (03. 8. 27~29)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시 핵개발 계획 폐기 -불균형적 '4단계 동시행동안' 제의
제2차 6자회담시 (04. 2. 25~28)	-핵동결 대 에너지 제공 -핵무기 폐기, 핵의 평화적 이용권 보유 -HEU 존재 부정, 증거제시 요구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 불가침 확약, 북·미 외교관계 수립, 경제제재 해제
제3차 6자회담시 (04. 6. 23~26)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 동결 -반대급부로 200만kw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경제제재 해제 요구 -HEU 프로그램 존재 부인
제4차 6자회담시 (05. 7. 26~8. 7, 9. 13~19)	-핵포기와 보상 -NPT 복귀이전 평화적 핵 이용권 보유 -북·미간 신뢰조성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핵우산 제공 철폐

국 가	중국
제2차 핵위기 발발시 (02. 10)	-한반도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3차회담시 (03. 4. 23~25)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충실한 중개자 역할
제1차 6차회담시 (03. 8. 27~29)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 -현 상태 유지
제2차 6차회담시 (04. 2. 25~28)	-핵동결 대 에너지 제공 동참 -CVID -미국의 HEU 증거제시 경우 논의 가능 -다자안전보장 및 중·러의 별도 안전보장
제3차 6차회담시 (04. 6. 23~26)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시 중유지원과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
제4차 6차회담시 (05. 7. 26~8. 7, 9. 13~19)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대북 보상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부여
국 가	한국
제2차 핵위기 발발시 (02. 10)	-제네바 합의 틀 유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에 의한 핵개발 포기 유도 -북·미 양자대화 → 다자대화 속에서 양자 대화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3차회담시 (03. 4. 23~25)	-북핵문제 해결의 3대원칙(한국의 적극적 역할)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3차회담은 다자회담의 예비회담
제1차 6차회담시 (03. 8. 27~29)	-3단계 상호 병행조치 제안 -핵문제 해결시 과감한 지원
제2차 6차회담시 (04. 2. 25~28)	-핵동결 대체 에너지 지원 동참 -CVID 등의, 핵폐기 이후 핵의 평화적 이용 검토 +HEU 폐기 -3단계 안전보장: 의사표명, 잠정적 안전보장, 항구적 안전보장
제3차 6차회담시 (04. 6. 23~26)	-모든 핵프로그램의 일정기간 내 신고, 국제적 감시하의 동결, 단기간 내 핵 폐기 -핵동결과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에너지 지원, 안전보장, 경험 본격화 등) +HEU 프로그램 시인, 동결, 폐기
제4차 6차회담시 (05. 7. 26~8. 7, 9. 13~19)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대북 보상(전력제공, 평화체제 구축,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등) -NPT 복귀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부여 -상호 공약의 공동문건 채택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국 가	일본
제2차 핵위기 발발시 (02. 10)	-경수로 사업 일시동결 검토
3차회담시 (03. 4. 23~25)	-핵개발 포기시 한·미·일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제1차 6차회담시 (03. 8. 27~29)	-핵, 미사일, 남북 일본인 문제 해결시 경제지원과 국교정상화
제2차 6차회담시 (04. 2. 25~28)	-핵동결 대 에너지 제공 이해 -CVID -HEU 폐기 -미사일, 납치문제 해결이후 다자안전보장
제3차 6차회담시 (04. 6. 23~26)	-모든 핵 프로그램 동결시 에너지 지원 동참 -CVID 표현 차제 -HEU 프로그램 시인, 동결, 폐기
제4차 6차회담시 (05. 7. 26~8. 7, 9. 13~19)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미사일과 남북 일본인문제 전면 해결 -이후 관계 정상화
국 가	러시아
제2차 핵위기 발발시 (02. 10)	-제네바 합의 이행 촉구
3차회담시 (03. 4. 23~25)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해결 -다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안전과 불가침 보장
제1차 6차회담시 (03. 8. 27~29)	-북·미의 우려사항 동시해소 -중·러의 북한체제 보장
제2차 6차회담시 (04. 2. 25~28)	-핵동결 대 에너지 지원 동참 -CVID 등의, 핵폐기 이후 핵의 평화적 이용 -핵동결 과정에서 HEU 논의 -다자안전보장 및 중·러의 별도 안전보장
제3차 6차회담시 (04. 6. 23~26)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시 중유지원과 잠정적인 다자안전보장
제4차 6차회담시 (05. 7. 26~8. 7, 9. 13~19)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부여 -대북 에너지제공과 한국의 대러 자금 지원 -9월 중순 이전 실무그룹회의 개최

<표 IV-4> 역내 국가의 무기판매 및 구매 액수

(단위: 백만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2004
러시아	판매액	4,016	5,516	5,541	5,655	6,197	26,925(1)
	구매액	-	-	-	-	-	-
미국	판매액	6,400	5,079	4,470	4,528	5,453	25,930(2)
	구매액	129	164	359	575	533	1,760(12)
중국	판매액	157	349	415	390	125	1,436(8)
	구매액	1,797	3,018	2,586	2,038	2,238	11,677(1)
한국	판매액	6	198	-	59	50	313(19)
	구매액	873	475	308	362	737	2,755(7)
대만	판매액	-	6	-	-	-	6(51)
	구매액	536	411	293	101	230	1,571(18)
일본	판매액	-	-	-	-	-	-
	구매액	174	217	180	209	195	975(23)
북한	판매액	-	64	32	-	-	96(29)
	구매액	14	24	5	5	5	53(86)

출처: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05*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449~454 참조.

주: ()안 수자는 세계전체 순위

<표 IV-5> 남북한 대립 현황

분쟁 유형	혼합형
당사자	한국 : 북한
개입세력	미국, 중국, UN, 소련
원인	영토/이념/통일/식민유산
원인발생	1945
대립개시	1948
대립종료	대립중
원인소멸	진행중
충돌연도	1948C(3) 1949C(8) 1950A(7) 1951A(12) 1952A(12) 1953A(7) 1999C(6) 2002C(6)
충돌강도	전면전
분쟁단계	후기대립
현국면	현상유지
인명피해	중공군 1백만, 민간인 1백만, 남북한군 각 50만, 미군 및 UN군 5.3만명
충돌위험	보통(북한의 국제적 지원확보 곤란 및 국내사정 불투명으로 전면전 가능성은 낮음)
국제영향	고(세계 및 동북아시아평화의 전략요충)
유엔활동	참여(UNC; 정전협정 감시)
해결주체	당사자, UN, 미국 등 주변 4국(중국, 러시아, 일본)
해결방법	당사자 협상(정상회담), 압력제제, 평화유지
주요일지	45.8 해방이후 미국과 소련, 한반도 양분 점령통치; 48.8-9 남북한 정권수립후 통일협상 실패; 48-50 간헐적 국경 총격전 및 남한내 게릴라전 발생; 50.6 소련 지원하에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한국전쟁 발발(50.6-53.7); 50.6 UN, 북한의 침략규정 및 철퇴결의; 50.7 UN 지상군, 한반도 작전 개시; 50.10 중공군 개입; 53.7 휴전협정 체결(UN군, 북한군, 중공군) 이후 남북 체제경쟁 돌입; 65-71 북한, 대남 게릴라 침투, 공작 활동 격화; 70년대 간헐적 남북대화 무산; 91.12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채택; 93.3 북한, NPT 탈퇴 선언; 93-94 북한의 핵무기 개발관련 미-북한간 고위급회담 개최; 94.7 김일성 사망(이후 남북기본합의서 사실상 무효화); 94.10 미-북 제네바 핵 합의; 96.9, 98.6 북한, 잠수정 납파; 98.8 북한, 로켓 발사 실험; 98.12 남한, 여수해역에서 북한 반잠수정 격침; 99.6 서해상 남북한 교전 발생; 99.7; 미 사찰단, 금강리 핵의혹 시설 방문; 99.9 미-북, 베를린 합의 타결; 00.3 북한,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 00.6 남북정상회담(평양); 00.8 이산가족상봉(1차) 00.9 남북국방장관회담; 00.9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00.12 이산가족상봉(2차); 01.6 북한상선, 한국 영해 침범; 02.6 서해교전(6명사망,19명부상); 02.10 북, 핵개발 시인; 02.11 KEDO, 대북중유공급 중단 발표; 03-05 북핵 6차회담

출처: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표 IV-6> 중·대만 대립 현황

분쟁유형	혼합형
당사자	중국: 대만
개입세력	미국(대만관계법 해석에 따른 군사개입 가능성)
원인	영토/이념/통일
원인발생	1921
대립개시	1945
대립종료	대립중
원인소멸	진행중
충돌연도	1945(5) 1946(6) 1947(12) 1948(12) 1949(10) 1954B(6) 1958B(1)
충돌강도	국지전-전면전
분쟁단계	대립-위기
현국면	현상유지
인명피해	국민당군, 공산당군, 민간인 총 수백만
충돌위험	보통(중국의 위협적 군사훈련, 무력시위, 양측의 군비경쟁 상황지속)
국제영향	고:SER(무력분쟁 발생시 세계적 영향)
유엔활동	없음
해결주체	당사자(미국의 역할 핵심적이나 직접 중재는 회피)
해결방법	협상, 제소호소
주요일지	49.10 중국공산당 정권수립 이후에도 국민당 정권과의 무력투쟁 지속; 50.5 중공, 해남도 점령; 52.10 대만, 한국전 기간중 미국의 지원하에 대륙침공전 계획; 54-55. 58.9 중공, 금문도와 마조도에 대규모 포격; 69.7 이후 양측의 무력충돌 중단; 70년대 이래 체제경쟁 돌입; 71.11 중국, 대만의 유엔대표권 접수; 90.12 중국, 1국2체제 방안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결정; 대만, 1국2지구 방안(90.8) 및 불가침조약 제의(92.5); 94.6 중국, 대만의 동시승인 외교정책(2개 중국의 영구화) 비난; 95.1 중국, 통일 8개항 발표, 대만, 통일 6개항 발표; 95.7 대만해역에 대한 미사일 연습 및 양측 접촉창구 단절; 96.3 대만해역에서 중국의 육해공 합동훈련 및 미사일 연습으로 긴장고조; 96.3 대만, 최초의 총통직선 실시; 99.7 홍콩의 중국 반환; 99.7 이등휘 총통의 · 양국론 · 발언으로 해협간 긴장 고조; 00.3 대만총통 첸수이비엔 당선이후 '주권문제' 논쟁 가열화; 01.5 대만총통, 미국 방문; 01.11 중국-대만 대만의 대중투자 활성화정책 발표; 02.3 중국, 대만해협 미사일배치 강화; 02.4 대만, 중국군 상륙저지훈련; 02.6 대만, 대중 소3통 확대 방침; 02.7 대만부총통, '일국양제' 수용불가 천명

출처: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표 IV-7> 북방영토/남쿠릴 분쟁 현황

분쟁유형	국제형
당사자	일본 : 러시아
개입세력	없음
원인	영토/식민유산
원인발생	1951
대립개시	1951
대립종료	대립중
원인소멸	진행중
총돌연도	없음
총돌강도	없음(외교적 주장 차원)
분쟁단계	잠재
현국면	진정
인명피해	없음
총돌위험	낮음 (현상유지와 단계적 해결모색)
국제영향	고 (양국공히 전략적 및 경제적 가치 인식, 분쟁시 지역파급효과)
유엔활동	없음
해결주체	당사자
해결방법	협상
주요일지	45.2 소련, 참전조건으로 남사할린의 반환과 쿠릴열도의 양도를 보장받음; 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러시아의 구영토(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와는 별개인 하보마이, 시코탄을 차지; 56.9 일·소 수교시 2개 도서(하,시) 반환 명기후, 소련, 2개 도서반환과 주일 전외국군 철수연계·주장으로 양국간 교섭중단; 92.7 러,도서문제와 경협연계 불가 표명; 전략요충으로 상호양보 곤란, 2개 도서와 경협연계 가능성 (60 미·일안보조약 개정 에 대한 반발로 소련이 대일 합의 파기로 문제장기화; 93.10 도쿄선언시 동문제 최초 공식논의; 95.3 러 외무부, 동지역 주둔군 철수 불가 발표; 97.11, 98.4 일-러 정상회담과 평화협정 추진시 주요문제로 거론; 99.3 일측은 쿠나시리와 시코탄에 디젤연료 제공; 00.9 및 01.3 양차 일·러 정상회담시 동문제협약에 합의; 01.7 G-8회의과정중 양국정상회담에서 쿠릴문제 논의; 01.10 정상회담에서 2개섬 반환 및 2개섬 귀속 협상 병행에 합의; 04.11 APEC 정상회담시 일본은 4개섬 반환요구

출처: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표 IV-8> 센카쿠/조어도 분쟁 현황

분쟁유형	국제형
당사자	일본 : 중국 : 대만
가입세력	없음
원인	영토/패권추구/식민유산 * 영유권, 석유
원인발생	1969
대립개시	1972
대립종료	대립중
원인소멸	진행중
충돌연도	없음
충돌강도	없음
분쟁단계	잠재-대립
현국면	현상유지
인명피해	없음
충돌위험	낮음(당사자 동 문제로 인한 외교적, 역내 파문 불원)
국제영향	고(국제해상교통로, 석유자원, 유사 도서분쟁사례에 영향)
유엔활동	없음
해결주체	당사자
해결방법	협상
주요일지	69년 UN의 동지역 석유가능성 발표 이후 영유권 본격 주장; 78, 88년, 일본 극우단체의 등대설치; 90.10 대만인의 국기계양 기도에 대한 일본의 무력저지; 92.2 중국의 영해법 제정과 일본의 공식항의; 92.2 대만, 조어대 주권보유와 어민권익보호 성명; 일본, 동 열도 순시강화 등 실효적 지배 축적 노력; 95.5 중국 해양조사선 동해역 자원탐사 실시; 95.6 중국공군기 (Su-27 혹은 J-8II) 동 지역 접근, 일자대 F-15 2대 발진; 96.7 일본 우익 집단 분쟁도서어 등대설치; 96.10 중국해군 동지역 북서쪽 해상훈련 실시; 96.11 미국, 어느 분쟁당사국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발표; 97.11 일, 중 영유권 보류, 새어업협정 합의; 98.6 홍콩의 시민단체 시위선박 (100톤) 시위중 침몰; 00. 5 일본 우익세력의 동 도서 상륙 및 영유권 주장; 02.9 대만 전총통 리덩희의 센카쿠 일본영토 발언 파문

출처: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표 IV-9> 중·러 국경분쟁 현황

분쟁유형	국제형
당사자	중국 : 러시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즈스탄 : 타지키스탄
가입세력	없음
원인	영토/이념/패권추구
원인발생	1960
대립개시	1969
대립종료	1997
원인소멸	1997
총돌연도	1969(1)
총돌강도	게릴라전-국지전
분쟁단계	양측 약 1000명
현국면	종결
인명피해	-
총돌위험	낮음(당사국의 조약, 안정추구이외에도 재정적인 이유가 주요 원인)
국제영향	고 (중·러의 국가잠재력, 역내 위상, 대미 영향)
유엔활동	없음
해결주체	당사자
해결방법	협상
주요일지	69.3 중·소 우수리강 2회 총돌, 69.8 소련군 신강국경 침범; 72.2 중·미 국교정상화 발표; 82년 중·소 국경회담 재개; 89.5 중·소 정상회담; 89.6 천안문사태 발생; 91.12 소연방 와해; 90.4 이봉 방소시 “중·소국경지역에서의 군사력감축 및 신뢰구축에 대한 기본원칙 조약” 합의; 91.3 중·소의 동부 국경에 대한 잠정적 합의; 91.5 강택민 방소시 동부국경 획정; 92.2 중국 전인대, 소련 두마 동 조약 비준; 92.12 옌친의 방중시 동조약 서명; 96.4 중·러 및 중앙아시아 3국은 “국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협정”(일명 “상해협정”) 체결; 97.4 강택민의 방러시 “국경지역 군사력 상호감축협정”체결; 97.11 옌친 중국방문시 우수리강/아무르강 국경협정 체결; 99.12 국경안보관련자회의 연례화 합의; 00.1 중·러간 국경획정 3개 후속합의 체결; 00.7 푸틴대통령 방중; 01.7 강택민 주석 방러; 04. 10 동부국경 3개 섬 통제권문제 완전해결

출처: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3. 정치분야

<표 IV-10> 한·중·일 3국 공동선언 요지('03. 10. 7, 인도네시아 발리)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 정상은 세 나라간 양자관계 및 3국 협력의 긍정적 발전을 평가하고,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선언을 발표, 세 정상은 3국간 협력심화가 세 나라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 3국협력은 동아시아 협력 강화, 지역·세계 평화와 번영 수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세 정상은 아래 기본적 견해에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국 협력은 유엔 헌장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 따라 추구 ② 상호 신뢰, 존중, 호혜를 바탕으로, 포괄적 미래지향적 협력 추구 ③ 3국간 경제계, 학계 및 NGO의 역할 수행 권장 ④ 3국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일부로서, 아세안 통합과정 지원 ⑤ 3국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으로 추진 - 실질적 협력의 진전을 위해 3국 정상들은 아래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의 확대 및 심화 필요성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역 및 투자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 협상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 관세 및 수송 당국간 무역축진을 위한 대화 및 협력 강화 -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 3국 연구기관의 FTA 공동연구 진전 평가 / 3국간 보다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의 방향 모색 - 국제항공운송 발전을 위한 3국 당국간 대화·협력 증진 - 한·중·일 투자협정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 개시 - 무역분쟁 최소화를 위한 협의 강화 ② IT 산업간 협력 : 브로드밴드 통신, 이동통신, e-business 등 ③ 환경보호 협력 : 황사 등 공통 관심사 협의 ④ 태풍, 홍수 지진, 폭풍 등 재해의 피해방지과 관리 협력 ⑤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⑥ 역내 금융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 ⑦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⑧ 3국간 관광인프라 개발 등 관광확대를 위한 협력 ⑨ 어족자원의 지속가능 활용 및 보존을 위한 협력 ⑩ 국민 교류·접촉, 문화, 교육, 인적자원개발, 뉴스 미디어, 공공위생, 스포츠 및 지자체간 교류·협력 강화 ⑪ 국제문제에서 협력 강화, 유엔의 역할지지·강화 및 개혁 ⑫ EASG 권고조치의 이행 촉진 등 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노력 ⑬ 안보대화 강화 및 국방 또는 군 인사항 교류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축 대화·협력 강화, WMD 및 운반수단 확산 억제 -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 추구를 위해 협력 ⑭ SARS 등 전염병, 테러, 해적, 인신매매, 마약거래, 돈 세탁, 국제경제 및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방지 협력 강화
----	-----------------------------------------------------------------------------------------------------------------------------------------------------------------------------------------------------------------------------------------------------------------------------------------------------------------------------------------------------------------------------------------------------------------------------------------------------------------------------------------------------------------------------------------------------------------------------------------------------------------------------------------------------------------------------------------------------------------------------------------------------------------------------------------------------------------------------------------------------------------------------------------------------------------------------------------------------------------------------------------------------------------------------------------------------------------------------------------------------------------------------------------------------------------------------------------------------------------------------------------------------------------------------------------------------------------------------------------------------------------------------------------------------------------------------------------------------------------------------------------------------------------------------------------------------------------------------------------------------------------------------------------------------------------------------------------------------------------------------------------------------------------------------------------------------

4. 문화분야

<표 IV-11> 한국과 동북아국가간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근거	최 초 시행 년도	약정내용 (인원·기간)	2004까지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 원
일본(내각부)	정상회담공동선언('84)	'87	40명 15일간	513명	606명	1,119 명
중국(중화전국 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20명씩 10일간 (98년부터 연2회)	353명	418명	771명
러시아(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30명씩 기간 미명시	65명	69명	134명
몽골 (사회복지 노동부)	청소년협력약정서(01)	'00 사전 합의	10명 10일간	54명	54명	108명

자료: 문화관광부.

<표 IV-12> 동북아 3국의 문화교류 담당 기관

관점	담당기관 및 업무내용		비고
한국	외교통상부	대외관계총괄	홍보에 관해서는 국정홍보처와 협의의 혹은 지원을 받아함
	문화외교국	문화관련 국제기구 활동참여, 교육·학술·민간 문화교류활동 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제협력단(문예제외)	국제교류가 목적, 문화교류지원 재외동포의 문화·예술·체육·학술활동 지원 및 교류사업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관련 국제문화교류담당	
	정책국 국제문화협력과 한국문화원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지원·협력·조정 한국의 문화소개, 사업개최 및 지원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국제교류, 해외시장진출지원 조항별도 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중국사무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정책의 수립·개발, 문화사업활성화지원·시설설치 및 기반조성, 전문인력양성지원	
중국	문화부	대외문화교류 주관부서 중국정부의 문화예술 기본노선과 정책 수립, 집행 외국과 문화협정 체결과 정부간 문화교류계획서 서명권 보유	중앙부 소속
	대외문화연락국	해외공간의 문화기구 업무지도	
	중외문화교류중심	대외문화교류기구	
	중국대외연출중심 (중국국가연출공사)	공연예술 교류 총괄	
	중국대외예술전람중심 (중국국가예술전람공사)	전시교류 전담	
	문화청		성 및 자치구 소속
	문화국		직할시소속
일본	외무성		
	문화교류부	정책의 기획·입안·조정·시행 문화교류, 인적교류 개도국에 대한 문화협력사업	외무부장관비서실에 설치
	국제교류기금	국제문화교류 목적 해외의 일본문화회관, 일본문화센터운영	
	문부과학성		
	문화청	문화정책행정기관 국제교류 및 해외문화홍보활동 문화예술활동 장려와 보조, 일반대중 문화활동기회 확대	* 문화산업은 경제산업성에서 관장

출처: 문화관광부,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 계획

<표 IV-13> 한국의 유학생 교류 현황(2004)

한국 내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 (명, %)		한국 유학생의 국가별 구성 (명, %)	
중국	8,960(53.2)	미국	56,390(30.0)
일본	2,418(14.4)	중국	23,722(12.6)
미국	725(4.3)	호주	17,847(9.5)
대만	693(4.1)	일본	16,992(9.1)
베트남	458(2.7)	캐나다	13,307(7.1)
몽골	356(2.1)	뉴질랜드	13,297(7.1)
기타	3,222(19.1)	기타	46,128(24.6)
총계	16,832(100)	총계	187,683(100)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표 IV-14> 중국의 유학생 교류 현황(2003)

중국 내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명)		중국 유학생의 국가별 구성(%)	
한국	35,353	미주	36.45
일본	12,765	유럽	28.06
미국	3,693	아시아	22.01
러시아	1,224	대양주	12.89
몽골	1,060	아프리카	0.59
북한	638	총계	100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표 IV-15> 일본의 유학생 교류 현황

일본 내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명, 2002년)		일본 유학생의 국가별 구성(명, 년도)	
중국	58,533	미국	46,497(2000)
한국	15,846	중국	14,692(2001)
대만	4,266	영국	6,150(1999)
말레이시아	1,855	캐나다	2,371(2001)
태국	1,504	한국	2,324(2001)
인도네시아	1,441	독일	2,182(2000)
미국	1,217	호주	1,913(2000)
베트남	1,115	프랑스	1,566(2000)
방글라데시	823	뉴질랜드	1,182(2000)
몽골	544	오스트리아	302(2000)
기타	8,376		
총계	95,550		

출처: 한만길, 최영표, 이현영,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84, 89.

<표 IV-16> 광역지자체 동일 교류형태의 지역별 비교

교류형태	국가		동북아국가		동북아국가 외 아시아국가		기타 국가		합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행정	40	59.7	7	10.4	20	29.9	67	100.0		
우호	118	70.7	21	12.6	28	16.8	167	100.0		
회의	11	61.1	4	22.2	3	16.7	18	100.0		
경제	33	80.5	1	2.4	7	17.1	41	100.0		
청소년	19	82.6	2	8.7	2	8.7	23	100.0		
문화	19	67.9	2	7.1	7	25.0	28	100.0		
관광	5	83.3	1	16.7	-	0.0	6	100.0		
스포츠	15	93.8	-	0.0	1	6.3	16	100.0		
민간	47	88.7	2	3.8	4	7.5	53	100.0		
계	307	73.3	40	9.5	72	17.2	419	100.0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표 IV-17> 광역지자체의 동일 지역내 교류형태 비교

교류형태	국가		동북아국가 외 아시아국가		기타 국가		합계	
	동북아국가		동북아국가 외 아시아국가		기타 국가		합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행정	40	13.0	7	17.5	20	27.8	67	16.0
우호	118	38.4	21	52.5	28	38.9	167	39.9
회의	11	3.6	4	10.0	3	4.2	18	4.3
경제	33	10.7	1	2.5	7	9.7	41	9.8
청소년	19	6.2	2	5.0	2	2.8	23	5.5
문화	19	6.2	2	5.0	7	9.7	28	6.7
관광	5	1.6	1	2.5	-	0.0	6	1.4
스포츠	15	4.9	-	0.0	1	1.4	16	3.8
민간	47	15.3	2	5.0	4	5.6	53	12.6
계	307	100.0	40	100.0	72	100.0	419	100.0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표 IV-18> 기초지자체 동일 교류형태의 지역별 비교

교류형태	국가		동북아국가 외 아시아국가		기타 국가		합계	
	동북아국가		동북아국가 외 아시아국가		기타 국가		합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행정	121	84.0	5	3.5	18	12.5	144	100.0
우호	393	87.7	9	2.0	46	10.3	448	100.0
회의	6	60.0	-	0.0	4	40.0	10	100.0
경제	90	88.2	6	5.9	6	5.9	102	100.0
청소년	90	86.5	-	0.0	14	13.5	104	100.0
문화	71	81.6	1	1.1	15	17.2	87	100.0
관광	6	75.0	-	0.0	2	25.0	8	100.0
스포츠	46	90.2	-	0.0	5	9.8	51	100.0
민간	76	97.4	-	0.0	2	2.6	78	100.0
계	899	87.1	21	2.0	112	10.9	1,032	100.0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표 IV-19> 기초지자체의 동일 지역내 교류형태 비교

교류형태	국가		동북아국가 외 아시아국가		기타 국가		합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행정	121	13.5	5	23.8	18	16.1	144	14.0
우호	393	43.7	9	42.9	46	41.1	448	43.4
회의	6	0.7	-	0.0	4	3.6	10	1.0
경제	90	10.0	6	28.6	6	5.4	102	9.9
청소년	90	10.0	-	0.0	14	12.5	104	10.1
문화	71	7.9	1	4.8	15	13.4	87	8.4
관광	6	0.7	-	0.0	2	1.8	8	0.8
스포츠	46	5.1	-	0.0	5	4.5	51	4.9
민간	76	8.5	-	0.0	2	1.8	78	7.6
계	899	100.0	21	100.0	112	100.0	1,032	100.0

출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표 IV-20> 한국의 공연예술교류 현황(2000-2002)

구분	전체		중국		일본	
	해외공연	내한공연	중국공연	내한공연	일본공연	내한공연
2000년	341	423	25	16	49	70
2001년	300	377	17	12	67	45
2002년	386	433	33	9	132	51
계	1,027	1,233	75	37	245	166
비중(%)	100	100	7	3	23	13

출처: 정정숙 외, 동북아시아대 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p. 100.

<표 IV-21> 엘리트체육 국제 교류 현황(국민생활체육회 및 가입단체 중심)

교류형태 국가	2002						2003					
	파견		초청		합계		파견		초청		합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동북아국가*	148	28.1	25	4.8	173	26.6	136	24.2	28	29.3	164	24.9
동북아 외 아시아국가	164	31.2	46	44.2	210	32.3	165	29.3	29	30.2	194	29.4
기타국가	214	40.7	53	51.0	267	41.1	262	46.5	39	40.6	301	45.7
합계	526 ¹	100.0	124 ²	100.0	650	100.0	563 ³	100.0	96 ⁴	100.0	659	100.0

*동북아국가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제외함.

**1: 45개 종목 2: 39개 종목 3: 42개 종목 4: 31개 종목

<표 IV-22> 생활체육 국제 교류 현황(국민생활체육회 및 가입단체 중심)

교류형태 국가	2004						2005					
	파견		초청		합계		파견		초청		합계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동북아국가*	22	57.9	21	72.4	43	64.2	13	76.5	6	54.5	19	67.9
동북아 외 아시아국가	10	26.3	7	24.1	17	25.4	4	23.5	5	45.5	9	32.1
기타국가	6	15.8	1	3.4	7	10.4	-	0.0	-	0.0	-	0.0
합계	38 ¹	100.0	29 ²	100.0	67	100.0	17 ³	100.0	11 ⁴	100.0	28	100.0

*동북아국가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제외함.

**1: 18개 종목 2: 13개 종목 3: 10개 종목 4: 11개 종목

<표 IV-23> 동북아 문화산업 현황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국내총생산 1)	4,767억 달러	39,934억 달러	12,371억 달러	2,815억 달러
1인당 GDP 1) (2002)	10,006 달러	31,343 달러	963 달러	12,452 달러
GDP 성장률 1) (96-02)	5.0%	1.1%	8.1%	0.1%
문화산업 규모 (2001년)	157억 달러 3) (111억 달러) 2)	820억 달러 4) (976억 달러) 2)	312억 달러 5) (164억 달러) 2)	67억 달러 2)
문화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2)	1.2%	10.4%	1.7%	0.7%
문화산업 연평균 성장률	21.1% 6) (1999-2003년)	-0.8% 4) (1996-2002년)	14.9% 5) (1995-2001년)	2.9% 2) (1997-2001년)
문화산업 평균 성장률전망(02-06) 2)	6.5%	2.3%	13.1%	5.2%

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동북아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서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3), p. 2.

- 1)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의 경제지표, Main Economic Indicators(OECD) GDP는 당해 년 가격 기준.
- 2) 출처: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2~2006*.
문화산업의 범위: 영화, TV네트워크, TV송출, 음반, 인터넷광고 및 접속, 잡지출판, 신문출판, 일반서적, 교육·전문서적 및 학습, 라디오/옥외 광고.
- 3) 출처: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음반 산업협회, 2003 한국인터넷백서 자료.
문화산업 범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음반, 게임, 모바일콘텐츠, 방송, 영화.
1달러 = 1,186.2원(2002년 말 기준).
- 4) 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2 캐릭터산업백서, 2003.
문화산업의 범위: 영화, 음악, 게임, 출판, 신문, 방송.
1달러 = 130,12엔(2001년 말 기준).
- 5) 출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해외진출가이드북 - 중국문화산업, 2003.
1달러 = 8,2771위엔(2001년 말 기준).
- 6) 출처: 문화관광부, 2002 문화산업백서, 2002<한류>.

<표 IV-24> 아시아 4국 한국드라마, 영화, 음반 수출액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일본	32,069	30,675	33,279	52,409
중국	1,856	7,106	12,797	16,379
대만	-	7,003	15,956	14,380
홍콩	-	1,389	2,762	1,357

출처: 문화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표 IV-25> 한국의 국가별 방송콘텐츠 수출 현황(2004)

(단위: 천 달러)

구분	총계				지상파방송사				케이블TV 등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총계	62,867 (18,194)	100	31,096 (7,490)	100	55,154 (15,284)	100	14,298 (1,508)	100	7,713 (2,910)	100	16,798 (5,982)	100
일본	36,084 (5,403)	57.4	2,662 (1,646)	8.5	33,490 (4,833)	60.7	529 (132)	3.6	2,594 (570)	33.6	2,133 (1,514)	12.7
중국	6,803 (2,358)	10.8	231 (226)	0.7	5,495 (1,946)	9.9	45 (3)	0.3	1,308 (412)	17.0	186 (223)	1.1
홍콩	1,496 (1,003)	2.4	350 (169)	1.1	991 (710)	1.8	245 (9)	1.7	505 (293)	6.5	105 (160)	0.6
대만	9,616 (2,495)	15.3	6 (2)	0.1	8,490 (2,162)	15.4	6 (2)	0.1	1,126 (333)	14.6	-	-
미국	1,396 (1,503)	2.2	24,144 (3,162)	77.6	1,082 (1,362)	1.9	11,722 (555)	82.0	314 (141)	4.1	12,422 (2,607)	73.9

출처: 문화관광부(2005.2).

수출분은 해외교포방송 및 비디오판매분(8,594천달러) 제외 / ()은 편수임.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희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항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례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